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이윤경

변수정·김은정·진화영·주보혜·남궁은하·김주현·정윤경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진화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윤경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0-2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발|간|사

우리 사회는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구 정책은 인구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의 인구 변동에 대하여 사회가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 정책의 기초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 정책의 방향과 세부 정책 개발 및 성과를 위해서는 국민의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구의 연령 구성, 수명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연령규범 및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연령과 세대에 대한 가치관, 인구 변동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윤경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변수정 연구위원, 김은정 부연구위원, 주보혜 부연구위원, 남궁은하 부연구위원, 진화영 연구원과 함께 원외 충남대학교 김주현 교수, 한남대학교 정운경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조사 수행은 전문 조사업체인 칸타코리아 퍼블릭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진은 자문을 주신 본원의 박종서 연구위원과 원외의 대구대학

교 양난주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연구의 틀과 조사 내용에
귀중한 의견을 주신 자문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부록 3. 자문위원
명단 참조).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3절 조사 내용의 기본 방향과 문항 구성	14
제4절 표본 설계 및 조사 수행	27
제2장 이론적 배경	41
제1절 인구 변동 현상	43
제2절 가족 관련 인식 및 가치관	46
제3절 연령과 세대 관련 인식 및 가치관	59
제3장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75
제1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	77
제2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별 세부 분석	80
제4장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분석	93
제1절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95
제2절 인구 규모와 지역 간 분포에 대한 인식	131
제3절 소결	150

제5장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분석	153
제1절 가족 기능 및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155
제2절 결혼과 가족 형성 및 구성에 대한 가치관	200
제3절 소결	249
 제6장 연령과 세대에 대한 가치관 분석	257
제1절 연령기준과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가치관	259
제2절 세대갈등에 대한 가치관	305
제3절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325
제4절 소결	367
 제7장 결론	377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379
제2절 조사의 함의 및 한계	391
 참고문헌	397
 부 록	409
부록 1 조사표	409
부록 2 사후 검증용 전화조사표	423
부록 3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424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25
〈표 1-2〉 모집단 총화	28
〈표 1-3〉 표본 배분 현황	29
〈표 1-4〉 시도별 집계구 수	29
〈표 1-5〉 17개 시도별 분포 비교: 가중 전후	33
〈표 1-6〉 성별 분포 비교: 가중 전후	33
〈표 1-7〉 연령별 분포 비교: 가중 전후	34
〈표 2-1〉 노인 외 연령집단에 대한 인식 측정문항	64
〈표 2-2〉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관련 인식 측정문항	66
〈표 2-3〉 주관적 연령 인식에 대한 측정문항	69
〈표 2-4〉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측정문항	72
〈표 2-5〉 노인복지정책 관련 인식 측정문항	73
〈표 3-1〉 응답자의 일반 특성	79
〈표 3-2〉 응답자의 성별 일반 특성	81
〈표 3-3〉 응답자의 연령별 일반 특성	84
〈표 3-4〉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일반 특성	86
〈표 3-5〉 응답자의 혼인 상태별 일반 특성	89
〈표 3-6〉 응답자의 가구 형태별 일반 특성	92
〈표 4-1〉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1순위)	98
〈표 4-2〉 출생아 수 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101
〈표 4-3〉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103
〈표 4-4〉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106
〈표 4-5〉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110
〈표 4-6〉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113
〈표 4-7〉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116
〈표 4-8〉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119
〈표 4-9〉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122

〈표 4-10〉 아동 돌봄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125
〈표 4-11〉 노인 돌봄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126
〈표 4-12〉 청년 소득보장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128
〈표 4-13〉 노인 소득보장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130
〈표 4-14〉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132
〈표 4-15〉 수도권외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135
〈표 4-16〉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에 대한 적절성 판단	138
〈표 4-17〉 현 거주지역이 젊은 세대의 생활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141
〈표 4-18〉 현 거주지역이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에 부적절한 이유	144
〈표 4-19〉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의 생활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146
〈표 4-20〉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이유	149
〈표 5-1〉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한 생각	155
〈표 5-2〉 응답자의 특성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한 생각	157
〈표 5-3〉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158
〈표 5-4〉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1: 육아	159
〈표 5-5〉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2: 의사결정권	161
〈표 5-6〉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3: 가사노동	163
〈표 5-7〉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4: 경제적 부양 책임	165
〈표 5-8〉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5: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167
〈표 5-9〉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169
〈표 5-10〉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1: 의사결정권	170
〈표 5-11〉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2: 재산에 대한 권리	172
〈표 5-12〉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3: 경제적 부양 책임	174
〈표 5-13〉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4: 육아 부담	176
〈표 5-14〉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5: 가사노동	178
〈표 5-15〉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179
〈표 5-16〉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1: 대학교육 비용 지원	180



〈표 5-17〉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2: 경제적 독립 지원	182
〈표 5-18〉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3: 미혼 자녀 주거공간 마련	184
〈표 5-19〉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4: 결혼준비 비용 지원	185
〈표 5-20〉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5: 손자녀 돌봄 지원	187
〈표 5-21〉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6: 결혼 후 경제적 지원	188
〈표 5-22〉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190
〈표 5-23〉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1: 정기적 교류	191
〈표 5-24〉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2: 경제적 부양	193
〈표 5-25〉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3: 돌봄 비용 부담	195
〈표 5-26〉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4: 모시고 살기	197
〈표 5-27〉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5: 직접 돌보기	199
〈표 5-28〉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견해	202
〈표 5-29〉 '결혼을 전제로 성인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한 견해	205
〈표 5-30〉 '결혼과 무관하게 성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한 견해	207
〈표 5-31〉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에 대한 견해	209
〈표 5-32〉 '인생에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한 견해	212
〈표 5-33〉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방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에 대한 견해	214
〈표 5-34〉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에 대한 견해	217
〈표 5-35〉 '대체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에 대한 견해	219
〈표 5-36〉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생각	222
〈표 5-37〉 부모의 혼인 상태에 따른 아동 지원에 대한 생각	224
〈표 5-38〉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1: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227
〈표 5-39〉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2: 젊은 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229

〈표 5-40〉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3: 고령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	232
〈표 5-41〉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4: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경우	234
〈표 5-42〉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1: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237
〈표 5-43〉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2: 젊은 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239
〈표 5-44〉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3: 고령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241
〈표 5-45〉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4: 동성 커플(연인) 둘이 함께 사는 경우	244
〈표 5-46〉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247
〈표 5-47〉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정도	248
〈표 6-1〉 아동기의 상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260
〈표 6-2〉 청년기의 상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262
〈표 6-3〉 노년기(노인)의 하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265
〈표 6-4〉 연령규범(연령대별 기대되는 역할, 행동)에 대한 동의 정도	267
〈표 6-5〉 연령규범 동의 정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수행은 중요하다	269
〈표 6-6〉 연령규범 동의 정도: 연령에 맞는 생애·진로경력 개발이 중요하다	271
〈표 6-7〉 연령규범 동의 정도: 직장에서 연령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73
〈표 6-8〉 연령규범 동의 정도: 노인의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기술,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다	275
〈표 6-9〉 연령규범 동의 정도: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지식)을 배우기에는 늦은 나이이다	277
〈표 6-10〉 연령규범 동의 정도: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278
〈표 6-11〉 연령규범 동의 정도: 젊을 때 고생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280
〈표 6-12〉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질문	282
〈표 6-13〉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283



〈표 6-14〉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직장에서 성과 대비 낮은 대우를 받는다	285
〈표 6-15〉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286
〈표 6-16〉 노인차별 실태: 노인의 가족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받는다	288
〈표 6-17〉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290
〈표 6-18〉 노인차별 실태: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292
〈표 6-19〉 젊은 사람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294
〈표 6-20〉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295
〈표 6-21〉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는다	297
〈표 6-22〉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299
〈표 6-23〉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의 가족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된다	301
〈표 6-24〉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302
〈표 6-25〉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304
〈표 6-26〉 우리 사회 직장상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305
〈표 6-27〉 우리 사회 직장상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이 심각한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308
〈표 6-28〉 우리 사회 가족 내에서의 세대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310
〈표 6-29〉 우리 사회 가족 내에서의 세대갈등이 심각한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312
〈표 6-30〉 노인과 젊은 사람의 세대갈등에 대한 동의 정도	314
〈표 6-31〉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은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315
〈표 6-32〉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젊은 세대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317
〈표 6-33〉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으로 인해 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318
〈표 6-34〉 세대갈등 동의 정도: 고령 근로자는 젊은 사람,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320
〈표 6-35〉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인구 증가로 선거에 젊은 사람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	322
〈표 6-36〉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인구 증가가 젊은 사람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324
〈표 6-37〉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	326
〈표 6-38〉 노인 정책의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	328

〈표 6-39〉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330
〈표 6-40〉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교차분석)	331
〈표 6-41〉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332
〈표 6-42〉 중장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334
〈표 6-43〉 청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336
〈표 6-44〉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338
〈표 6-45〉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340
〈표 6-46〉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교차분석)	341
〈표 6-47〉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342
〈표 6-48〉 중장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344
〈표 6-49〉 청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346
〈표 6-50〉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348
〈표 6-51〉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350
〈표 6-52〉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1: 현금수당	351
〈표 6-53〉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2: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353
〈표 6-54〉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3: 주택지원	355
〈표 6-55〉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4: 고용지원	357
〈표 6-56〉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359
〈표 6-57〉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1: 노인 정책	360
〈표 6-58〉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2: 중장년 정책	362
〈표 6-59〉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3: 청년 정책	364
〈표 6-60〉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4: 아동 정책	366
〈표 7-1〉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380



〈표 7-2〉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	381
〈표 7-3〉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인식과 현실에 대한 생각 차이	382
〈표 7-4〉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인식과 현실에 대한 생각 차이(성별)	383
〈표 7-5〉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인식과 현실에 대한 생각 차이(연령별)	383
〈표 7-6〉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387
〈표 7-7〉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정도	388
〈표 7-8〉 연령규범(연령대별 기대되는 역할, 행동)에 대한 동의 정도	389
〈표 7-9〉 노인과 청년(젊은 사람)의 상황별 차별과 고정관념	390
〈표 7-10〉 노인과 젊은 사람의 세대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	391

그림 목차

[그림 1-1] 조사 진행도	35
[그림 1-2] 조사 설계·준비·실시 과정	36
[그림 2-1] 출생아 수·사망자 수·자연 증가(1985~2067년)	44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7~2067년)	45
[그림 7-1] 법적 결혼과 그 외의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385
[그림 7-2] 결혼과 자녀의 인생에서의 가치와 행복과의 연관성에 대한 생각	386
[그림 7-3] 성별에 의한 다양한 결합 방식에 대한 가족 인정 및 동반자 등록제도 동의	387



Abstract

A Survey of the values and perceptions on Demographic Change, Family, Age and Generation

Project Head: Yunkyung, Le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public's perceptions of family values, age norms and generational conflicts related to the "population" changes. We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of 8,000 general citizens aged 19 and over,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 The survey period is from September 11 to October 22, 2020, and was conducted in a total of 801 output areas in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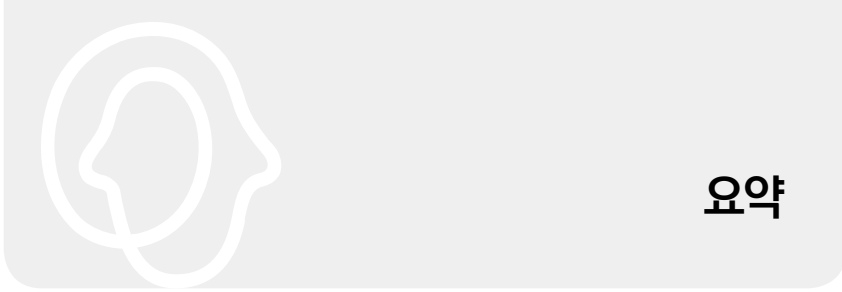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raditional family values are gradually changing. It is important notice the wide gap between family values and the realities of life, and the differences in values across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These conflicts, inherent in society,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s in views held by people of different age groups and to situations in which people in their family life find the values they hold as "right" go unrealized. Therefore, future population policies should consider ways to foster institutions and cultures that are more re-

Co-Researchers: Soojung, Byoun · Eunjung, Kim · Hwayoung, Chin · Eunha, Namkung · Bohye, Joo · Juhyun, Kim · Yunkyung, Jung

ceptive to social diversity and individual choices and ideas.

Second, the traditional perception and values of age is strongly maintained in our society, and this leads to rigid age norms and generational conflicts. In particular, among the various norms based on age, age norms according to the labor market and family development tasks, and stereotypes about age were rigid, and age discrimination in society was highly preval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the future population, for,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gradually increases, the median age increases, and the ag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have a different shape than what it looks like today. To this end, we should achieve an age-integrated society with high 'age flexibility' and high 'age diversity', where people of different ages can mingle together.

*Key words: Family values, Age norms, Generational conflicts,
Demographic change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변화 현상인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는 그 원인은 상이하지만 파급효과는 교육, 노동, 경제, 산업 등의 사회 정책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국민들의 출산과 가족 가치관의 영향에 의한 결과이며, 평균수명과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연령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세대갈등 등의 인식과 가치관 변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구’ 현상과 관련된 가족 가치관과 연령 규범과 세대갈등의 국민 인식을 파악하여 인구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을 활용하여 총 130명의 조사원이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1일~10월 22일이며, 전국 17개 사·도의 801개 집계구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1) 결혼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족 기능, 결혼과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2) 연령 및 세대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령집단 기준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인식,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3)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등이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인구 규모의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나

타나는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90.0% 이상은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5.8%, 87.7%이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56.5%, 80.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나. 결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정서적 기능 49.1%, 사회화 기능 26.2%로 조사되었고, 도구적 기능인 경제적 기능, 출산을 통한 재생산 기능의 중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정도에 대한 현실 평가에서는 가족 내 역할에서 성평등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과 현실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의 의사결정권이나 재산권의 동등한 권리에서는 인식과 현실의 차이가 적은 반면, 여성의 가사와 육아, 남성의 경제활동의 분리는 성평등 의식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성평등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현재의 법정 혼인만을 유일하게 결혼 제도로 다루는 것에 대해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법적 혼인제도 바깥에 있는 ‘동거’에 대해서는 결혼을 전제한 동거는 65.0% 이상이 동의, 결혼과 무관한 동거는 40.0% 미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녀의 다양한 결합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도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은 50.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젊은 동성 친구, 고령 동성 친구, 젊은 동성 연인 간의 결합은 가

족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20.0%대로 차이를 보였다. 동반자 등록제를 통한 제도적 보호에 대한 생각에서는 성인 남녀의 결합 형태와 고령 동성 친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61.9%와 48.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젊은 동성 친구 또는 연인에 대해서는 동반자 등록제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비율은 약 30.0%대로 나타났다.

가족의 기능과 성평등 역할, 가족 구성 등에서 전통적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적 가족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에서 여전히 가정 내 여성과 남성의 우선시하는 역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자녀의 핵가족의 모습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이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다. 연령과 세대 관련 가치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할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연령규범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총 7개 중 5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0.0%가 동의하는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령별 과업 수행과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은 적정 연령기에 결혼, 출산 등 가족발달과업에 대한 동의, 취업, 승진 그리고 직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 청년(젊은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대부분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과 청년에 대한 연령차별에서는 취업 영역에서 특히 노인과 청년 모두 차별 현상이 두드러졌다. 약 88.0%가 노인은 능력에 맞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였고, 약 79.0%가 취업 영역에서 청년의 차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항에는 모두 절반 미만이 동의하여, 사회·가정·직장에서의 기여 및 인정 부문보다는 연령차별이 낮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노인차별에 대한 동의 비율이 청년차별에 대한 동의 비율에 비해 약 11.0%포인트(가정 내 돌봄)에서 18.0%포인트(이혼) 정도 높게 나타나, 청년보다는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젊은 사람들의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동의하며, 직장 내에서도 고령자 증가가 젊은 사람에게 업무 부담을 주며 전체적 성과에도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55.7%, 선거에서도 젊은 사람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나타났다. 즉, 인구 고령화는 세대 간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세대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사 결과에 대한 함의

본 연구의 주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관과 현실의 괴리, 사회 구성원의 연령별 가치관의 차이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및 가족 생활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가족의

변화에 대한 연령에 따른 견해 차이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 문화는 더디게 변화하면서, 결혼과 출산에서 당사자의 생각과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희망하는 출산과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인구 정책은 개인의 선택과 생각이 자유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적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연령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가치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규범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대 간 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연령규범 중 노동시장과 가족 발달과업에 따른 연령규범,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며, 연령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차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평균수명 및 중위 연령이 증가하며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는 미래 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연령에 의해 개개인의 선택에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연령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연령 다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연령통합적 사회로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주요 용어: 가족 가치관, 연령 가치관, 세대 가치관, 인구 변동 현상 인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조사 내용의 기본 방향과 문항 구성

제4절 표본 설계 및 조사 수행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할 때 가장 큰 변수는 ‘인구 변동’이다. 출생아 수의 감소, 총인구 규모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해 연령별 비율(인구 피라미드) 변화는 대표적인 인구 변동 현상이다. 이에 더해 인구의 지역별 분포 변화도 인구 변동 현상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변동의 대표적 현상이며, 각 현상의 원인은 상이하지만 파급효과는 교육, 노동, 경제, 산업 등의 사회 정책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출산의 급격한 감소는 출산억제 정책의 효과적 설계와 집행과 함께 자녀를 적게 출산하고자 한 국민들의 강한 욕구에 따른 것이다(우해봉, 2020). 혼인과 출산, 가족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하며, 저출산의 결과라고도 보여진다. 인구 고령화는 출산을 감소로 인한 고령화율의 증가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가 원인이다. 이러한 출산 감소와 고령화는 아동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동연령 규모의 감소, 학령기 인구 감소, 후기 고령자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령구분의 변화, 세대갈등, 노후 경제 및 건강 돌봄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출산을 저하가 발생한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인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이 추진되었다. 인구 정책은 2005년 수립된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바탕으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른 인구 정책이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지난 약 15년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은 인구 변동에 대한 완화적 접근으로 인구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아이의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인구 변동 완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의 인구 변동에 대해 사회가 적응하고 대응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18년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이와 같은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변동 완화 정책과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를 위해서는 인구 변동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구 변동은 교육, 노동, 문화, 복지 등의 구조적 측면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혼인, 출산, 가족 형성 등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혼인, 출산, 가족 형성 등은 국민 개인의 선택이며, 개인별 인식과 가치관, 여러 상황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인식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인구 변동에 대한 완화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고령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 증가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 변화, 세대 간 갈등, 연령구분의 변화 등을 초래하며, 이는 인구 변동에 대한 적응적 측면에서의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인구 변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적 연대 의식, 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인구 변동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인구 변동의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그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인구 변동 완화 정책(저출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서 가족의 기능, 가족 내 성역할, 가족 형성과 구성에 대한 가치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 인구 고령화와 길어진 삶(장수)과 관련하여 연령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생애주기 구분 기준과 연령규범, 연령차별과 세대갈등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가족 가치관, 연령 관련 가치관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타 조사에서 이루어진 조사 문항과 연구진이 새롭게 구성한 문항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 및 설계는 본 장의 3절에서 기술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국민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표본 설계 및 조사 진행은 본 장 4절에서 기술하였다.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 파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 설계 및 조사 내용 구성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구, 가족, 사회학, 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17명이 자문하였으며 이

를 반영하여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부록 3.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참조).

조사 자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을 분석하고, 연령, 성, 지역, 계층별 인식과 가치관을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이슈에 대한 정책 수요와 그에 따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절 조사 내용의 기본 방향과 문항 구성

본 조사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인구 변동 현상과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둘째, 가족 기능과 구성, 가족관에 대한 가치관, 셋째, 생애주기 연령기준과 연령규범,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해당 영역별로 문항을 만들었다. 마지막 영역에서는 응답자의 일반 특성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종사상 지위), 주관적 사회계층, 경제수준, 혼인 상태, 자녀 여부, 가구원 수와 가구 형태를 구성하였다. 일반 특성의 내용은 앞서 구성된 3개 영역의 인식과 가치관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구성되었다.

본 조사의 주제인 인구, 가족, 연령에 대한 가치관 조사의 기본 방향과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인구 변동은 출산, 이동, 사망에 의해 결정되며, 출생아 수 변화, 사망자 수 변화, 국내외 이동을 통해 총 인구 규모, 출산율, 연령별 인구 구성

비 변화, 지역별 인구 비중 등의 인구 변동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 규모,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 등의 인구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구 변동 현상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할 때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과 같은 인구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해 사회문제로 인식하는지,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의 효과성 및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서 중요시되는 돌봄과 소득보장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별 책임 분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인구변동 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과 연관된다(우해봉, 신화연, 박인화, 김선희, 2014). 결혼과 출산이 필수로 여겨지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려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이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구 불균형이 발생한다. 젊은 세대들의 농촌 이탈과 도시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이 누적되면서 심각한 지역 쇠퇴와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의 사회적 문제 인식 정도와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 적절성에 관한 세대별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거주지역 결정 시 체감하는 주요 요건 등 인구 규모 및 지역 간 분포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비롯한 인구 변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기

존 조사 문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성이 높은 문항을 선별하였고,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2. 가족 관련 인식 및 가치관

가.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

본 영역의 조사 설계 기본 방향은 기본적인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과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 성평등,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가족 기능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경제적 기능, 보호 기능, 교육 기능, 종교적 기능, 지위부여 기능, 성적 통제 기능, 생식 기능, 애정의 기능, 자녀 양육과 사회화 기능, 종교적 기능 등으로 논의된다(권복순, 2000). 본 조사에서는 강홍렬 외(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가족의 기능 범주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 기능의 범주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재생산 기능, 정서적 기능, 교육 기능, 경제적 기능, 복지 기능의 5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다. 재생산 기능은 성적 기능과 함께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녀 출산과 같은 재생산의 기능 없이 성적 기능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생산 기능과 성적 욕구 해소 기능을 구별하여 조사하고 있다. 정서적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한 가족 기능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결혼의 가장 큰 이점으로 ‘정신적 의지(44.5%)’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음(31.4%)’으로 조사된 바 있다(김은정 외, 2019). 가족의 교육 기능은 생활양식 및 사회규범을 교육하고 자녀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기

능은 가족의 생활 전반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소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가족의 복지 기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안전 및 보호(돌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가족 기능도 변화하게 된다.

가족 기능의 하나인 아동 및 노인 등 가족원 돌봄에 대한 인식을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가족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역할 및 책임,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동안 가족 기능이나 가족 가치관 관점에서 다수의 연구와 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실태조사(5년 주기, 여성가족부),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3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있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설계되었기에 일부는 유사한 척도이고 일부는 새롭게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기존 조사와 유사한 문항의 경우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변화 정도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하며, 새롭게 설계된 문항은 가족 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가족 내 성역할과 관련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해당 영역에 대한 가족 내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현재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밖에 자녀 돌봄과 부모 돌봄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등을 제공한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족 기능에 대한 5가지 기본 범주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고, 경제적 기능과 복지 기능 관점에서 가족의 성역할과 책임, 가족의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성역할과 책임 영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가족 부양 책임과 돌봄 책임, 가족의 법

적 대표성과 의사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성역할 및 책임과 동일한 영역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가치관과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성평등 실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 관점에서 자녀와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문항을 포함하였다.

나. 가족 형성과 구성에 대한 가치관

가족 형성 및 구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결혼과 가족 형성에 대한 생각을 여러 측면에서 알아본다. ‘결혼제도와 동거에 대한 견해’에서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관대해진 측면이 있지만 결국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동거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 현 시점의 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괜찮다고 여기는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결혼을 전제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그러한 인식이 적용되는가와 동거가 향후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동거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활발하지만 이에 대한 의식은 세대 또는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현시점에서 조사는 여전히 필요하여, 본 조사에서는 기존 동거 관련 질문에서 나아가 결혼을 전제한 동거와 그렇지 않은 동거로 질문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동거를 택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인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존 결혼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에서 대안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결혼제도에 대한 생각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대’ 관련 질문을 통해서는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통계 수치로 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시대인 만큼 결혼은 선택이 되었지만,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편견 또는 결혼에 대한 환상 등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우리 사회이지만, 최근에는 아이를 적게 낳거나 무자녀로 살아가는 가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아이를 기르기 힘든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족 내 아이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아보려 한다.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한 사회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은 터부시되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하거나 선택으로 여기는 동시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거나 기르는 것에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통해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이나 남성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여성이 혼자 입양하는 것, 남성이 혼자 입양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모든 아동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결혼을 전제한 출산이 주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 많이 집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의 인권 측면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아동의 가족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에 대한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이제 성인의 결합은 이성 간의 결합을 넘어서 동성 간의 결합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회적·시대적 상황이다. 따라서 동거의 개념을

넘어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인 2인이 함께 사는 경우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이성 간의 결합과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젊은 동성 친구, 고령층의 동성 친구, 동성애 커플과 같이 동성이 함께 지내는 생활모습에 대해서 가족이라 생각하는지를 세대에 따른 구분과 친구/동성애를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생각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다양한 결합에 대해 가족이라 생각하는지 동반자 등록제(결혼은 아니지만 성인 간의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보호자 역할이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 방식을 통해 사회적 인정과 보호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아 향후 동반자 등록제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의 수용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 가족에 대한 생각에서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과 다양한 가족 모습에 대한 편견에 대해 알아보아 한국 사회의 가족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가족 모습인 3대 가족, 3대 가족 이외의 가족 중에서는 맞벌이/외벌이 기준, 한부모와 양부모가족 기준을 통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한부모를 혼인 경험 및 성별 기준으로 구분하고, 국제결혼 및 동거가족 등 여러 가족 모습에 대한 편견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족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생각은 꾸준히 변화해 온 것이 이전 조사를 통해 여러 번 확인되었고, 최근 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 문항들을 통해 가장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자 한다.

3. 연령과 세대 관련 인식 및 가치관

연령 증가, 노화는 모든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연령 정보는 특정 연령대를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령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이로 인한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현상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통적 가치 기반인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가족주의, 연장자 우선주의가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자리 잡힌 상태에서 산업화,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난 ‘사회 급변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더해진 것이다.

연령주의가 연령에 따른 사회적 고정관념과 차별을 의미한다고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는 해당 연령에 기대되는 행동과 과업을 요구하는 ‘생애주기’식 연령주의(연령규범)와 연령이 차별의 근거가 되는 ‘연소자/연장자 우선주의’로 나타난다(정희진, 2003). 이 지점에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으로 핵가족화 등의 다양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인식적 기반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가 거친 압축적 경제성장은 사회 급변기로 이어지면서 세대 간 경험과 인식, 사고방식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연장자 우선주의, 정형화된 연장자 공경의식 대신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과 진취적 자세, 능력과 생산성에 따라 인정받는 문화가 새로운 사회의 가치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연령에 근거한 권위주의는 변화된 사회적 인식과 조화되지 못하면서 노인은 한편으로 생산성과 인식적 측면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연장자에게 호의적인 연령주의와 노인을 경시하는 연령주의가 사회에 공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박종우, 1999).

이처럼 사회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세대별 서로 다른 경험과 인식 격차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의견 충돌로 이어지고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경숙, 서이종, 장세훈(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을 촉발하고 조성하는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 세대 간 경제적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 가치관, 정치 성향 등으로 설명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힌 가치관이나 유교주의 등의 인식적 측면과 한정된 자원 배분에 대한 경쟁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대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갈등의 고착화는 세대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령 간 차이와 차별을 완화하고 세대 간, 나아가 사회적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국민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연령규범,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노인이나 청년 등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 등 부정적 경험 위주로 다루었던 것에서 나아가 전반적인 연령집단에 대한 인식, 여러 생활 영역에서의 연령규범과 세대 간 갈등,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기존 여러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 연령규범 및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어 왔다.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시행한 2018년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에서는 연령통합, 세대통합, 노인차별/연령규범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연령규범 인식과 관련해서는 취업, 결혼, 은퇴 등에 적합한 연령과 청년, 중년, 노년 연령의 범위를 질문하였다. 원영희, 이금룡, 김옥, 최혜지, 한은주(2006)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제도적, 규범적 차별 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최유석(2014)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09) 조사를 참고하여 세대 간 연대의

식을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등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 또한 시행되었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발간한 ‘세대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박경숙 외, 2012)에서는 가족, 경제, 문화, 정치 부문의 세대갈등 현상을 바탕으로 세대 소통과 화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조사해 왔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관용성(사회적 포용)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 사회갈등의 원인, 갈등 정도에 대한 생각,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별 노력 정도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 역할 집단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조사 문항들을 참고하고, 조사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은 물론 젊은 사람의 차별 경험과 세대 간 갈등, 세대별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령규범, 연령차별과 관련해서는 가족, 사회, 직장 등 생활 영역별로 구분하여 인식과 경험을 질문하였고,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소와 영역에서 노인층과 젊은 사람이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노인 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연령집단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연령집단별 인식 차이를 확인함은 물론, 전체 사회 구성원을 세대 연대와 통합의 주체로 포함하기 위한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에 대한 조사 문항은 ‘연령집단의 기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세대갈등’,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령집단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세대 구분에 적합한 연령기준과 정책 지원 기준 판단을 위한 집단 구분을 질문하였다. 아동, 청년, 노인을 정의하는 적합한 연령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질문하고 향후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이어서 청년과 노인 정책의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대상별 지원정책에서 연령과 함께 어떤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에 대한 문항은 먼저 여러 생활 영역(가족, 사회, 직장)에서의 노인 및 청년에 관한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이어 연령차별 관련 문항에서는 노인 또는 젊은 사람이 연령으로 인해 능력, 기여, 성과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직장, 사회, 가정의 경우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문항에서는 세대갈등 전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원인을 함께 질문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 최근 세대갈등은 한정된 기회나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기회와 자원으로 인해 노인과 젊은 사람이 대립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는 생애주기별 정책의 중요도와 실제 지원의 충분성을 질문하여 현재 지원 수준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다. 이어서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연령우대제도와 혜택에 대해 질문하여 정책 수단별로 국민 정서적으로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추가 부담 의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연령별 정부 정책 각각에 대한 추가 납세 의향을 질문한다.

〈표 1-1〉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

구분	조사 내용	
일반 특성	성	
	출생연도(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 종사상 지위	
	주관적 사회계층	
	경제수준	
	혼인 상태	
	자녀 여부	
	-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수		
가구원 수		
가구 형태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고령화 인구 현상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 현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효과성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 1~2순위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고령화 현상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효과성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1~2순위	
	아동과 노인의 돌봄, 청년과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주체별 책임 분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 규모와 지역 간 분포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인식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한 인식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 적절성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하기에 부적절한 이유 1순위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		
-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이유 1순위		
가족 관련 인식 및 가치관	가족 기능과 가족 내 성역할 인식과 실태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가치관
		-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
		-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
		- 경제적 부양 책임은 남성이 주로 담당
	-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 담당	
	-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보유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인식	
	- 남녀가 육아를 공평히 분담	
	-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평히 분담	
- 남녀가 경제적 부양 책임을 공평히 분담		
- 남녀가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유		
-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 보유		
가족의 자녀 및 노부모 부양 인식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 자녀의 대학교육비 책임	
	- 미혼 자녀의 주거공간 마련	
	- 미혼 자녀의 경제적 독립까지 지원	
	-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 책임	
- 결혼 후에도 경제적 지원		
- 손자녀 돌봄 지원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기		
- 필요한 경우 직접 돌보기		
- 필요한 경우 돌봄 비용 부담		
-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		
- 부모와 정기적으로 교류		

2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구분	조사 내용
가족 형성(결혼 등)에 대한 가치관	결혼 및 동거에 대한 생각 - 결혼제도의 시대 적절성 - 결혼 전제 동거 - 결혼 무관 동거 - 결혼 생활에 있어 동거의 영향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대 - 인생에서 결혼의 중요성 - 결혼에 있어 타협 - 결혼과 행복의 연관성 - 아이와 행복의 연관성 무배우자 상태에서의 입양에 대한 견해 부모의 혼인 상태에 따른 아동 지원에 대한 생각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합 - 젊은 동성 친구의 결합 - 고령 동성 친구의 결합 - 동성(연인) 결합 다양한 결합에 대한 동반자 등록 인정 정도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
	연령기준, 생애주기 기준에 대한 인식 아동, 청년,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기준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 노인 정책의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연령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 - 가정에서 기대되는 연령 과업 - 사회에서 기대되는 연령 과업 - 직장에서 연령에 적합한 역할 - 노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 노년기에 새로운 직업, 배움에 대한 인식 - 청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에 대한 인식 - 청년기 고생에 대한 인식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 노인의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 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우 -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 - 노인의 가족 내 돌봄 활동의 저평가 - 노인의 이혼, 재혼에 대한 생각 - 젊은 사람의 연령차별에 대한 동의 정도
연령과 세대 관련 인식 및 가치관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 심각성 -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가족 내에서의 세대갈등 심각성 - 가족 내에서 세대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노인과 젊은 사람의 세대갈등에 대한 동의 정도 - 노인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노인과 젊은 사람의 교류 기회 감소 - 노인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젊은 사람의 일자리 감소 - 직장 내 고령자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 - 노인들의 증가로 인해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 반영 어려움 -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 증가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연령대별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연령대별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 특정 세대의 지원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 현금수령(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 주택지원(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 - 고용지원(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중장년 고용장려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표본 설계 및 조사 수행

1. 표본 설계 개요

가. 모집단 및 표본 추출 틀

모집단은 조사 목적에 의해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표본 조사에 의해 표본을 직접 추출하여 대상을 규정하는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이 있다.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0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다. 본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집계구 중 기숙사, 특수시설 집계구, 섬 지역 집계구를 제외한 집계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층화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표본 설계에서는 각 시·도별 통계생산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1차 층화하고,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7개 특별·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할 수 있으며, 9개 도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의 동부는 중소도시, 9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차 층화가 끝난 다음에는, 각 층의 집계구를 아파트 집계구(아파

트 비율 50% 이상)와 일반 집계구(아파트 비율 50% 미만)로 나누는 3차 층화를 실시하였다.

〈표 1-2〉 모집단 층화

1차	2차		3차	총 수
17개 시·도	서울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남동부	아파트/비아파트 집계구	8
	경기	경기남부 동부, 경기남부 읍면부, 경기북부 동부, 경기북부 읍면부	아파트/비아파트 집계구	8
	부산/대구/ 인천/울산	구부, 군부	아파트/비아파트 집계구	16
	광주/대전	해당 없음	아파트/비아파트 집계구	4
	그 외 도지역 및 세종 동부, 읍면부의 2개 권역으로 층화		아파트/비아파트 집계구	36
		계		72

다. 표본 규모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는 예산 및 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표본 규모인 8,000여 명을 산정하였다. 각 17개 시·도별 표본 배분은 2020년 7월 말 주민등록통계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하였고, 17대 시·도별로 안정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200표본씩 배분되도록 변형비례배분을 적용하였다. 17개 시·도 내 층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표본 배분 시에는 단순비례배분을 적용하였다.

〈표 1-3〉 표본 배분 현황

(단위: 명)

시도	모집단 수				표본 배분 결과 (변형비례배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특별시	8,378,491	8,378,491	-	-	1,484
부산광역시	2,924,916	2,924,916	-	-	518
대구광역시	2,044,686	2,044,686	-	-	362
인천광역시	2,467,675	2,467,675	-	-	437
광주광역시	1,192,217	1,192,217	-	-	211
대전광역시	1,221,869	1,221,869	-	-	217
울산광역시	940,066	940,066	-	-	200
세종특별자치시	261,332	-	183,056	78,276	200
경기도	11,009,537	-	9,168,646	1,840,891	1,950
강원도	1,311,022	-	766,139	544,883	232
충청북도	1,339,851	-	764,501	575,350	237
충청남도	1,763,578	-	798,131	965,447	312
전라북도	1,521,008	-	1,045,184	475,824	270
전라남도	1,570,062	-	652,290	917,772	278
경상북도	2,249,644	-	1,143,512	1,106,132	399
경상남도	2,782,945	-	1,749,996	1,032,949	493
제주특별자치도	547,925	-	385,999	161,926	200
계	43,526,824	19,169,920	16,657,454	7,699,450	8,000

자료: 행정안전부. (2020). 7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 8. 19. 인출.

〈표 1-4〉 시도별 집계구 수

(단위: 명, 개)

시도	표본 배분 결과				집계구 수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서울특별시	1,484	1,484	-	-	148	148	-	-
부산광역시	518	518	-	-	52	52	-	-
대구광역시	362	362	-	-	36	36	-	-
인천광역시	437	437	-	-	44	44	-	-
광주광역시	211	211	-	-	21	21	-	-
대전광역시	217	217	-	-	22	22	-	-
울산광역시	200	200	-	-	20	20	-	-
세종특별자치시	200	-	140	60	20	-	14	6
경기도	1,950	-	1,624	326	195	-	162	33
강원도	232	-	136	96	24	-	14	10
충청북도	237	-	135	102	24	-	14	10
충청남도	312	-	141	171	31	-	14	17
전라북도	270	-	186	84	27	-	19	8
전라남도	278	-	115	163	28	-	12	16
경상북도	399	-	203	196	40	-	20	20
경상남도	493	-	310	183	49	-	31	18
제주특별자치도	200	-	141	59	20	-	14	6
계	8,000	3,429	3,131	1,440	801	343	314	144

라. 표본 추출

1) 집계구 추출

집계구는 내재적 층화변수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추출 방식에 의한 확률추출을 실시하는 층화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내재적 층화변수는 아파트 비율, 1인 가구 비율, 가구 수, 노령화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추출된 총 801개 집계구를 추출하였다.

2) 표본 가구 추출

각 집계구에서는 10표본 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계구별 등간을 배정한 후 등간별로 가구를 추출, 집계구별 등간은 해당 집계구별 가구 수를 집계구별 조사 가구 수(10)로 나눈 값을 사용하여 집계구별 등간을 배정하였다. 아파트 집계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집계구 내 모든 아파트의 동별 가구 수 및 동/호수를 파악한 후 가구 명부를 사전에 작성한 이후 배정된 등간을 이용하여 원표본 가구를 추출하였고, 사전에 원표본 가구 및 대체 가구를 명시한 가구 명부를 조사원에게 제공하였다. 일반 집계구는 사전에 지정한 시작점(건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건물에서 최초 가구를 선정한 다음 가구 선정 규칙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집계구별로 정해진 등간에 따라 다음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였다.

재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집계구가 조사 불가능인 경우, 동일 층 내에서 예비 집계구로 대체하여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최초 표본 집계구에서 대체된 집계구는 총 17개이며, 코로나-19로 인하

여 해당 지역에서 외부인 출입금지인 곳이 7개,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거나 재개발 지역이 8개 지역, 2개 지역은 접근성이 어려운 섬 지역으로 인해 대체하였다. 실제 완료된 총 집계구 수는 801개이며, 조사 완료 표본 수는 8,000명이다.

3) 적격 응답자 선정

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의 적격자를 응답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격 응답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생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마. 가중치 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추출틀이 가지고 있는 결함, 표본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무응답에 의한 결측을 보완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가중치는 표본 설계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를 보정하는 단계(설계 가중치),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고, 무응답을 보정하는 단계(사후 보정 가중치)를 거치게 된다.

가중치 산정을 위한 모집단은 2020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무응답 가구의 경우 해당 집계구 내에서 대체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는 계산하지 않았다.

1) 설계 가중치

설계 가중치는 각 표본 가구가 선택될 확률의 역수를 계산한 것으로, 동일 집계구 내의 모든 가구는 그 설계 가중치가 같고, 층 내에서의 집계구 선택 확률을 계산할 때에는 각 층의 집계구 총 수를 분모로 한다.

h 층에서 i 번째 집락(집계구)을 추출하고, 추출된 집락 내에서 j 번째 가구의 추출 확률을 고려한 설계 가중치는 추출 확률의 역수이다.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 i 번째 집계구의 모집단 가구 수

$m_{hi} = h$ 층, i 번째 집계구의 표본 가구 수

$$\text{설계 가중치} = \frac{N_h}{n_h} \times \frac{M_{hi}}{m_{hi}}$$

2) 사후 보정 가중치

사후 보정 가중치는 ‘2020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의 지역(시·도 × 도시 규모), 성, 연령 변수를 이용하였다. 지역은 17개 시·도와 3개의 도시 규모를 고려한 27개 구간이고, 성은 2개 구간, 연령은 5세 단위의 13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3가지 변수를 이용해 래킹비 조정방법으로 사후 보정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사후 보정 가중치}$$

〈표 1-5〉 17개 시도별 분포 비교: 가중 전후

(단위: %)

시도	가중 전	가중 후	모집단 ¹⁾
서울특별시	18.6	19.2	19.2
부산광역시	6.5	6.7	6.7
대구광역시	4.5	4.7	4.7
인천광역시	5.5	5.7	5.7
광주광역시	2.6	2.7	2.7
대전광역시	2.7	2.8	2.8
울산광역시	2.5	2.2	2.2
세종특별자치시	2.5	0.6	0.6
경기도	24.4	25.3	25.3
강원도	2.9	3.0	3.0
충청북도	3.0	3.1	3.1
충청남도	3.9	4.1	4.1
전라북도	3.4	3.5	3.5
전라남도	3.5	3.6	3.6
경상북도	5.0	5.2	5.2
경상남도	6.2	6.4	6.4
제주특별자치도	2.5	1.3	1.3

자료: 행정안전부. (2020). 7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 8. 19. 인출.

〈표 1-6〉 성별 분포 비교: 가중 전후

(단위: %)

시도	가중 전	가중 후	모집단 ¹⁾
남성	49.6	49.6	49.6
여성	50.4	50.4	50.4

자료: 행정안전부. (2020). 7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 8. 19. 인출.

〈표 1-7〉 연령별 분포 비교: 가중 전후

(단위: %)

시도	가중 전	가중 후	모집단 ¹⁾
19~29세	16.9	17.0	17.0
30대	16.2	16.0	16.0
40대	19.3	19.2	19.2
50대	19.9	19.9	19.9
60대	15.0	15.0	15.0
70대	8.4	8.4	8.4
80세 이상	4.4	4.5	4.5

자료: 행정안전부. (2020). 7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 8. 1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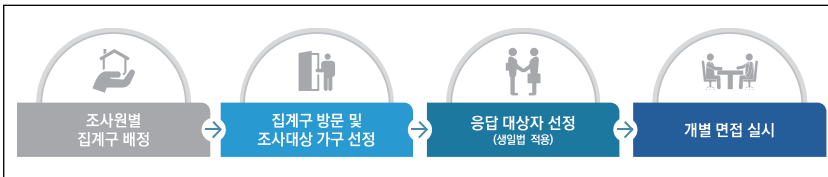
2. 조사 수행

가.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연구진과 조사기관에 의해 사전에 훈련된 전문조사원 130명이 2020년 9월 11일~2020년 10월 22일 기간 중 사전에 표본 추출된 조사지역의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태블릿을 활용한 TAPI(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치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비대면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초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시점이었으나, 조사대상자의 외부인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조사의 응답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비대면 조사는 유치조사와 온라인 조사 방식을 병행하였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보여주며 전체

적인 응답 방법을 설명한 다음 설문지를 제공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회수 시에는 응답자와 함께 설문지를 넘기면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로직 있는 문항들을 제대로 응답했는지 빠르게 현장 에디팅을 실시하고 설문지를 보완한 후 답례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추가 확인 사항을 위해 2일 이내 조사원 본인이 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전화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표 유치조사의 경우 회수된 설문지는 조사원이 2일 이내 TAPI에 직접 입력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TAPI 시스템에 생성된 해당 가구의 설문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고, 응답자는 개별 링크를 통해 설문 시스템에 접속하여 TAPI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현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원은 해당 가구의 설문 진행 현황을 확인하며 독려하였다. 이를 통해 대면면접조사는 8,000명 중 3,604명(45.0%), 유치조사는 4,322명(54.0%), 온라인 조사는 74명(1.0%)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1-1] 조사 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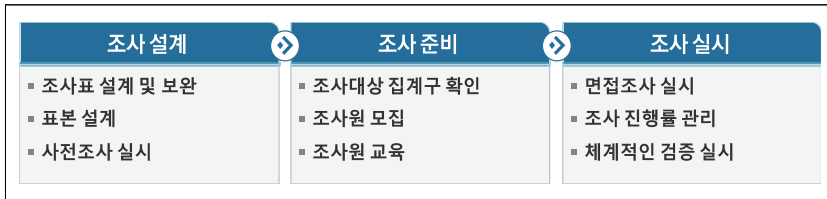
또한 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구를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현장 조사 준비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는 [그림 1-2]

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조사 준비과정은 크게 조사 설계, 조사 준비, 조사 실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조사 설계·준비·실시 과정



1) 조사표 설계 및 보완

개발한 조사표의 현장 적합성 검증을 위해 사전조사를 하였다. 사전조사는 2020년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연령은 다양하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각 5명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소요시간은 평균 32.2분(최소 15분~최대 70분)으로 설문 항목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가구 방문을 통한 대인면접조사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자기기입식 방식(유치조사 및 온라인 조사)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 외에도 질문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역 및 영역 내 질문 문항의 순서를 조정하였고, 추가해야 할 보기 항목들을 조정하였다.

2) 기관생명연구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2013년 2월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 자율적 심의 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동 법에 따라 조사 수행에 앞서 본 기관 내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및 기타 연구 관련 문서에 대한 심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는 2020년 8월 20일에 IRB를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8월 27일 IRB 승인(승인번호: 제2020-63호)을 받았다.

3)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안정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기존에 각종 전국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특히 TAPI를 통한 가구 방문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숙련된 조사원을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조사원은 추출된 801개 집계구를 담당하기 위해 최소 100명(1인당 평균 8개 집계구 배정)이 필요하지만, 예비 조사원을 포함하여 총 130명의 조사원을 확보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교육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집체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조사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다. 온라인 교육은 물리적으로 대면만 하지 않을 뿐 집체 교육과 동일한 방식인 줌(Zoom)을 통한 양방향 화상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9월 7일, 9월 9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은 조사 전반에 대한 개요 및 현장조사 요령, 구체적인 설문 내용 및 조사 시 유의

사항, TAPI 작성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고, 조사기관 담당자와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3) 조사 실시 및 관리

조사 실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원과 응답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조사 거부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감염 예방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조사업체는 주기적인 소독 실시, 회사 및 조사원의 대응 규칙 매뉴얼화, 회사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1) 감염 예방키트 제공(제공 물품: 조사원 및 응답자 마스크, 조사원 위생캡, 스프레이 소독제, 1회용 젤타입 소독제, 응답가구 내에서 바로 활용할 물티슈), 2) 조사원 동선일지 작성(조사구 투입부터 퇴장까지의 동선은 가구명부 관리대장을 통해 파악하며, 그 외 시간에 조사 목적으로 인한 이동상의 특이사항 발생 시 수기 기록 및 보관), 3) 가구명부 관리대장은 조사구 조사 완결 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전반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록, 전수 본사에서 회수 및 보관, 4) 가구방문 시 코로나 관련 방역 준비 상태에 대한 사전 설문 진행 후 본 설문으로 착수(조사원 및 응답 대상자 모두 14일 이내 해외방문 등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있는지 확인 후 발생 시 조사 철회), 5) 발열 상태 확인(조사원 선발 전 2주간 해외 출입국 증명서 내역을 포함한 자가진단서 제출)을 통해 조사 과정의 안전과 안전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통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사 관리는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조사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원-수퍼바이저-연구진 간의 실시

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별로 주별, 월별 목표 진행률을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추세를 지역별로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진행률을 조율하였으며, TAPI 방식이 아닌 유치조사의 경우 설문지 유치 후 2일 내에 회수 및 입력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였다.

조사 품질 확보를 위해 조사 기간 중 현장 점검과 사후 전화 검증을 계획하였으나, 조사원 및 응답자의 안전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현장 점검 계획은 취소하고, 사후 전화 검증만 진행하였다. 사후 전화 검증은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완료된 응답자의 약 62.0%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후 전화 검증 대상은 조사원별로 비례배분하여 선정하였으며, 조사 실시 사실 확인 항목(연령, 가구 형태, 조사 시간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2. 사후 검증용 전화조사표 참조).

4) 자료 처리 및 결과 제시

본 조사는 TAPI를 원칙으로 하여 별도의 에디팅 및 자료 입력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유치조사로 진행된 설문지도 회수 즉시 조사원이 직접 태블릿에 입력하였기 때문에 실사 완료 후 3일 이내 모든 데이터는 전산화되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 조사 결과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므로 백분율 및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또 각 집계구별 조사 완료율의 차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반영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전체 ‘계’의 수치가 ‘소계’의 합과 차이를 보이거나 각 행의 ‘계’의 수치가 각 행의 개별 수치의 합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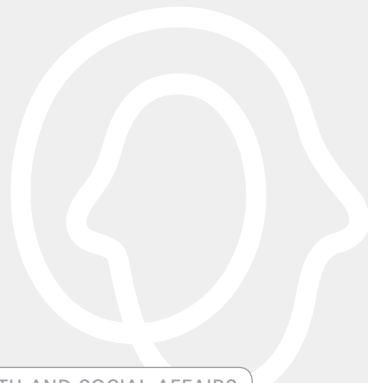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수 있다. 이는 가중치 부여에 따르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해석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분석은 기본적으로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주관적 사회계층, 경제수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등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두고 실시하였다. 다만, 분석 내용에 따라 일반 특성 항목을 세분화 또는 통합(예, 혼인 상태의 경우 기혼/미혼 또는 미혼/유배우/무배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구 변동 현상

제2절 가족 관련 인식 및 가치관

제3절 연령과 세대 관련 인식 및 가치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구 변동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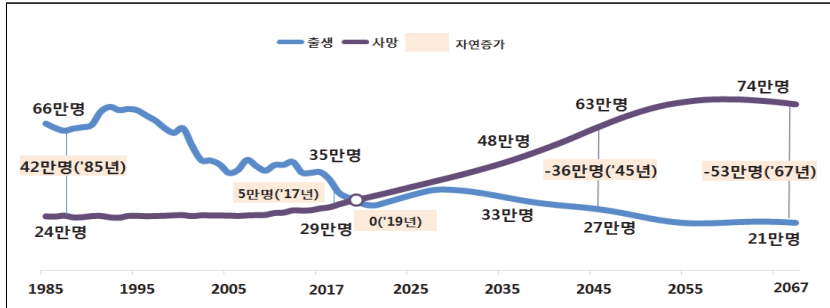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감소, 평균수명 증가,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 수도권 중심 인구 집중화 등의 다양한 인구 변동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00년에 64만 명이었으나 2017년 35만 명에서 2021년 29만 명, 2067년에는 2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통계청, 2019b)¹⁾. 기대수명은 1970년 남성 58.7세, 여성 65.8세였으나 점차 상승하여 2020년 현재 남성 80.3세, 여성 86.1세로 추정되며, 2095~2100년에는 92.6세로 일본의 93.5세보다 약 1세 정도 낮은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급속한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총인구는 2028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현재 총인구 수는 5,178만 명이고,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이며, 2067년에 3,929만 명으로 2020년의 75.9%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총인구 규모의 감소와 함께 인구 변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구조의 변화이다. 인구 규모 감소 자체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령구조 변화 정도가 급격하여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는 명확하다.

1) 통계청. (2019b).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위가정에 의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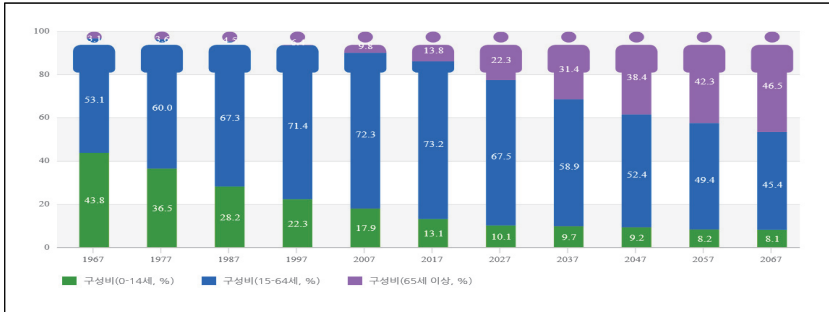
[그림 2-1] 출생아 수·사망자 수·자연 증가(1985~2067년)



자료: 통계청. (2019. 3. 28.).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보도자료. p. 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에서 2020. 12. 9. 인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5.7%(812만 5천 명)에서 2067년 46.5%(1,872만 1천 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50년 1,901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2060년에 1,184만 명으로 정점에 다다를 것이며,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67년 512만 명으로 가장 높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7년 유소년 인구(0~14세)의 비중은 10.1%,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2.3%이며, 15~64세의 비중은 67.5%이다. 하지만 206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46.5%로 15~64세의 45.4%보다 높아지게 된다. 과거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의 구성이 정삼각형(△)이었다면 점차적으로 2067년에 고연령층이 많은 윗 방향 화살표(⇑)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그림 2-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7~2067년)



자료: 통계청. (2020).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추계인구.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4&themaid=D01에서 2020. 12. 9. 인출.

출생아 수 감소, 연령구조 변화, 총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 변동 현상 중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점차 가속화하고, 지방의 인구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0%를 초과하였으며, 인구 5만 명 이하 지자체 수는 2020년 51개 지자체에서 2038년 78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의 확대 및 고령화율 증가,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규모의 감소,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화 현상 등의 인구 변동은 경제, 산업, 노동, 사회보장, 공공행정을 비롯하여 국방, 교육, 국토와 주거, 도시 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및 경제정책을 비롯한 많은 정책 영역에서 변화와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변화는 국민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삶에서 생애주기의 변화, 연령구분의 변화, 그리고 사회에서는 세대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가족 관련 인식 및 가치관

1. 가족 가치관의 변화

가족 가치관은 가족의 형성 및 유지 등 가족에 관한 다수의 가치관을 모두 포함하며, 출산과 양육, 결혼, 이혼, 성에 관한 가치 및 태도를 총칭한다(김규원, 1995; 은기수, 이윤석, 2005; 손승영, 김은정, 2010에서 재인용). 한국의 가족 가치관은 크게 가족중심주의(collectivism)와 개인중심주의(individualism)라는 축과 가부장제와 양성평등이라는 중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김규원, 1995; 손승영, 김은정, 2010에서 재인용). 가족중심주의적 가치에서는 개인보다 가족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 간의 관계는 가족 집단 내의 의무, 책임, 규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에서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가족, 지역, 집단과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적인 바를 성취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가부장제와 양성평등 측면은 가정 내 모든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와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와 권한을 중시하는 가치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손승영, 김은정, 2010).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논의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과 문화유산이론(Cultural Heritage Theory)으로 대별된다. 근대화 이론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등장하여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약화될 것으로 주장하고, 문화유산이론은 경제발전과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일성 하에서도 일부 사회에서는 문화적 영향으로 전통적 가족관이 유지되는 측면을 주장한다.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족 형성 및 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관찰되지만

일부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Hamamura, 2012).

한국의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가부장 권력의 약화와 세대관계의 민주화(정기선, 박수미, 2007), 가족 내 양성평등 의식의 증가(김혜영, 2005; 유계숙, 2010; 김승권 외, 2005), 가족과 결혼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권 증가(이삼식, 2006; 김혜영, 선보영, 2011)로 이념적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이다(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전통적 시각에서 가족을 이루는 첫 단계인 결혼은 일생 동안 한 번만 경험해야 하는 것이며, 결혼 후에는 그 틀을 깨지 않아야 한다(홍성희, 2020). 한국 사회에서 혼인에 관한 가치 기반은 가계계승이라는 규범적인 가치에서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인 가치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혼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박민자, 2004; 호정화, 2014에서 재인용). 이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가족을 구성하는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결혼과 가족, 자녀의 중요성 등이 약화되고 이혼과 동거에 대한 허용도는 높아졌으며 가족 형성이나 행태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변화와 달리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 및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aymo, Park, Xie, & Yeung, 2015). 가족 형성에서 관찰되는 인식의 변화는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주의적 가치관과 사회적, 제도적 지원의 미비로 인하여 젊은 여성들이 가족 형성에 부담을 느끼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되었다(Chang & Song, 2010).

결혼 가치관이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발달에 기반하여 변화한 것인지, 신자유주의 속에서 가족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발달한 가족주의 대응방식인지에 대한 것인지 결

혼 가치관의 변화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호정화, 2014). 한국 사회의 결혼 외 가족 행위의 증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유럽 또는 북미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 문제를 단지 가족주의 가치관의 회피나 개인주의 가치관의 발달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Jones, 2007; Lesthaeghe, 2010; 호정화, 2014에서 재인용). 오히려 개인과 가족의 성취를 동일시함으로써 한국 사회 고유의 가족주의를 강화시켰다(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따라서 결혼과 출산 회피 또는 지연은 가족이 지니는 가치의 약화보다 오히려 사회의 위험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회피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가족 형성 후 가족 확대의 주요 행위인 출산에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상반된 논의도 전개되었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생활수준의 향상, 개인주의 등 의식 구조의 변화로 유교적 가치관이 근대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고 그 결과 가족 규범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결혼 및 출산의 감소 경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이삼식, 2006). 다른 입장은 호정화(2014)의 주장처럼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하여 결혼 및 출산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임신, 출산, 양육이 어려운 인프라와 사회구조 등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하지 않게 된다. 두 입장을 포괄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겪거나 혹은 사회구조의 대응방식으로서 결혼과 출산 행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가치관은 결혼, 출산, 자녀, 성역할 분담, 양육관 등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정책과 관련된 주관적 태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혼, 출산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연숙, 김하늬, 이정우(2016)는 지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가치관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항목들을 정리했는데, 그 구성요소는 가의식(가부장권 및 친족의식), 친자관계(가족 우선성, 가족 결속력, 남아선호사상), 조상 숭배의식, 효도관(부모 공경, 효 및 부양 의식), 가통의 계승과 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가족 가치관의 하위개념으로 결혼, 이혼, 재혼, 동거 등에 대한 견해, 적정 결혼 연령 등의 결혼 가치관과 출산의 필요성, 성별 선호, 자녀수 등을 포괄하는 개인적 의식의 자녀 가치관이 포함된다. 총체적으로 가족 가치관은 결혼과 가족, 출산, 이혼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태도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혼과 1인 가구 청년층(25~39세)의 2008년과 2012년 사이의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호정화, 2014)에서 2008년보다 2012년으로 갈수록 탈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였는데 탈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제일 크게 보여준 집단은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기혼-가족 가구원’이었다. 이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탈전통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연구(유계숙 외, 2018)에서도 2001년 당시 미혼 청년 세대(1979~1982년)와 2017년 당시 미혼 청년 세대(1991~1995년)의 가족 개념을 비교함으로써 가족 개념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했다. 2017년 20대 미혼 청년들이 2001년 20대 미혼 청년들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동성 부부, 펫팸족, 비혈연 가구, 동거하는 사촌 형제 혹은 친구와 동거 가구 등)를 가족으로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청년 세대 모두 1997년 IMF를 경험하였지만 2001년 청년 세대의 경우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가

족주의가 오히려 강화되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경험한 반면, 2017년 청년 세대는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쟁주의로 인해 가족 우선성의 전통적 성향을 약화시키는 사회를 경험했다는 점이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청년층을 중심으로 점차 비전통적, 탈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출산이나 비혼화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은영, 추주희(2020)는 통계자료를 통해 청년층의 결혼, 가족 가치관을 분석, 정리했다. 2030세대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비전통적 결혼과 비전통적 남성성 의식의 증가로 인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었다. 이는 청년 남성 세대의 인식 변화를 시사한다.

여자 대학생들이 가족 가치관과 자녀 양육 부담을 성별(남자 대학생)과 연령집단(어머니 세대)에 따라 어떻게 인식하는지 비교함으로써 변화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여자 대학생들의 결혼 가치관과 출산 가치관은 남자 대학생보다 비전통적(진보적)이며 특히, 자녀 양육 부담감을 남자 대학생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어머니 세대는 동세대의 남성들(아버지)과 가족 가치관의 차이가 나지 않고, 딸 세대인 여자 대학생들은 어머니 세대에 비해 결혼, 출산, 자녀 가치관에서 모두 비전통적인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손승영, 김은정, 2010).

부모와의 관계가 가족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이순미(2013)의 연구는 한국 사회가 가족중심주의와 개인화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미혼, 청년층일수록 아들과 딸 모두 부모와 물리적, 기능적, 감정

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나 기혼, 중장년층일수록 아들은 정서적 애착이 낮아지지만 유대관계는 지속되는 동시에 자녀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딸은 세대 관계 자체가 분리된다고 보았다. 아들은 대체로 자녀 중심성과 세대 관계 모두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딸은 아들과 달리 세대 관계 및 가족주의와 관련되는 정도가 약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즉 세대 관계의 성별 차이는 가족주의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아들은 자녀 중심성이 강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딸의 경우는 그 반대 성향을 보여 부계 중심성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 구성 관련 가치관

최근의 가족 가치관 연구는 가족 구성과 해체와 관련하여 저출산 시대의 극복에 초점을 두고 결혼 의향, 희망자녀수 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 가치관, 자녀 가치관, 성역할 태도 등을 연관시켜 가족을 구성하고 확대하고 해체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회구성원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작동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결혼의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녀나 대학생들의 결혼 의향과 출산 의향을 파악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거나 현재의 청년층으로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세대별 특성을 살펴보기도 한다. 이삼식(2006)은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 및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가치관을 살펴보면,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결혼 가치관이 부정적이며,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한편, 나이가 어릴수록 성역할 분업에 덜 순응적이고 남성 생계부양의식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젊은 층 여성의 성평등 의식의 고취는 성역할 규범과 충돌하여 결혼 포기 또는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또 다른 연구(김중백, 2013)에서는 이삼식(2006)의 연구에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추가시켜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을 분석했다. 남녀의 가족 배경을 통제하고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하려는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수 중 ‘취업 여부’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취업한 자’가 ‘취업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결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은 취업 여부와는 달리 결혼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 가치관을 연결하여 살펴본 연구(김미예, 송영숙, 2012; 김지유, 조희선, 2014)에서는 결혼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 가치관이 긍정적이었고, 성역할 가치관이 낮을수록 결혼 가치관 및 자녀 가치관이 긍정적임을 보였으며, 자녀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결혼 가치관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별 요인은 결혼 의향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자녀 가치관, 결혼 태도, 성역할 태도 모두 전통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제에 의해 결혼이 여성에게 부담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주희, 2016;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 2017). 남성은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강할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비공식적 지지(주로 가족)에 대한 기대수준이 결혼 의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원하며,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가족 환경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여성은 고용 지위가 있을 때, 남성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

혼 의향이 높았다.

여성들만의 결혼 의향에 집중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고용 상태에 있는 미혼 여성일수록 결혼 의향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그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일련의 연장선이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결혼지연 가설’이 한국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이 보고된다(문선희, 2012; 김중백, 2013; 박주희, 2016; 권소영 외, 2017). 그러나 고용 상태일수록 비혼율을 높인다는 오은영, 추주희(2020)의 연구도 있어서 결혼 의향과 실제 결혼 행위인 혼인율의 영향 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에 따른 결혼 의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한 미혼 여성은 결혼을 ‘여성의 일에 대한 성취를 지양하며 자신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족 내 성역할이 긍정적일수록 결혼 의향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롭다(김은정, 2018).

연구들을 통해 성별의 영역에서 여성은 출산 가치관, 자녀 가치관은 비 전통적인 인식을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며 특히 출산, 자녀 가치관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성별 간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충돌이 나아가 사회문제로 지속될 우려가 있다.

최근 청년층의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에 따른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 의향에 대한 연구(홍성희, 2020)에서는 향후 가족 가치관의 큰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남녀 모두 자녀 필요성이 낮을수록 높은 결혼 의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결혼과 자녀 출산이 분리된 맥락이며 이전과는 달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가치가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족 확대와 관련하여 출산 의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 자녀수는 일반적 또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

는 자녀수로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기대자녀수는 기혼 여성 자신의 현존자녀수에 향후 계획한 자녀수를 합산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정의내린다(배혜원, 2017). 이 정의를 통해 이상 자녀수와 기대자녀수의 차이로 출산의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기혼 여성의 경우 만혼화에 따라 출산연령이 25~29세에서 30~34세로 늦춰지고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했는데, 여성의 개인적인 인식(기대수준)은 높으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미혼 남녀의 희망자녀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응답자(25~39세 기혼 남녀) 중 전통적 가치관 집단이 더 많은 자녀수를 희망했지만, 전통적 가치관 집단이 비전통적 가치관 집단보다 정작 희망자녀수를 출산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배광일, 김경신, 2012). 이는 많은 자녀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 가치관 중 남아선호관, 효도관이 비전통적 가치관으로 변화할수록 희망자녀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이연숙 외(2016)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 가치관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출산 의향을 살펴보았다. ‘가족중시형’, ‘개인중시형’, ‘가족중시 복합형’으로 응답자를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봤는데 희망자녀수, 계획자녀수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경향이 있는 ‘가족중시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통해 출산 의향이 있고 희망자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산과 양육의 현실적인 문제와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의 충돌 및 성역할 태도 등의 가치관의 문제로 계획자녀수가 적을 수 있다는 함의가 나타난다(이연숙 외, 2016; 배광일, 김경신, 2012).

가족 가치관의 하위 문항에서 ‘동거, 이혼, 혼전 출산,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미혼 여성들이 결혼 전 성관계 또는 동거 여부에 부정적일수록,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수록(결혼 가치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할수록(가족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선희, 2012). 대부분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결혼에 긍정적인 미혼 여성일수록 개방적인 결혼 가치관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거나 비혼의 경우에는 개방적인 결혼 가치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가구 단위로 비혼 가구를 분석한 호정화(2014)는 비혼-1인가구원이 다른 가구(비혼-가족가구, 기혼-가족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이혼, 비혼 출산, 동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미혼 여성도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아이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고 비혼 성관계, 비혼 동거가 가능하다는 개방적인 결혼 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18).

3. 가족 내 성역할 가치관

가족 내 주요 구성원인 남성(남편)과 여성(부인)이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성역할 태도는 주요한 가치관으로 작동한다. ‘성역할 태도(sex role attitudes, gender role attitudes)’란 가족과 사회 체계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는 성역할이나 성역할 규범에 대해 형성한 태도로,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태도, 성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규범에 반응한다(임정빈, 정혜정, 1997; 유계숙, 2010). 사회 내에서 성별 역할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 제약적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대한 순응적 또는 저항적인 태도를 가리키기도 한다(문지선, 2017).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인 태도와 현대적인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태도는 남성은 가족의 생계 부양을 책임지며,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우위를 점하고, 여성은 전업주부 또는 가족 돌봄의 담당자로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에서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성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의미한다. 반면 현대적인 태도는 남녀 간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에 반대하며 가족 돌봄이나 가사노동,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성역할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본다(Osmond & Martin, 1975; 이진숙, 최원석, 2012; 심미혜, Yu Mi Endo, 2013; Hobson, Lewin, & Slim, 2002; 김은경, 심준섭, 2016에서 재인용).

가정 내 성역할 태도는 먼저 남성 생계 부양자(male bread-winner)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는 성역할을 공사 영역으로 나누어 이분적 구분(public-private dichotomy)을 하며, 이는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로 나타난다(O' Connor, Orloff, & Shaver, 1999; Crompton, 2001; Lewis, 2001; 원숙연, 2005; 원숙연, 2014에서 재인용).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공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성별화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 문제로 이어졌다. 이처럼 여성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남성이 점유한 공적 영역의 자원과 권력이 여전히 남성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유지되었고(Crompton, 2001; Lewis, 2001; 원숙연, 2014에서 재인용), 사회적으로 공고화되어 성별에 따라 일과 권리를 분배하는 일련의 규범과 규칙으로 정의되는 젠더 레짐 논의와도 연결되었다(Sainsbury, 1999).

한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의 본질적 정체성이며, 자녀 양육에서 '모성애'라는 생물학적·태생적 본성을 지닌 여성은 남성과 역할이 다

르다는 ‘모성 이데올로기’도 성역할 태도의 중요한 영역을 설명하는 논의이다(홍지아, 2014). ‘모성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성원을 생산해내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연결됨으로써 매우 근본적인 규범으로 강조되었다(김복순, 2007). 이것은 자녀의 성장이 어머니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모성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신념체계로 발전한다(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최근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경제적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출산이 감소하고 자녀 양육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모성 박탈(maternal deprivation) 논리가 등장하였다(Elvin-Nowak & Thomsson, 2001; 원숙연, 2014).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학력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대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원숙연, 2014).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정 경제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졌다(최선영, 2020). 사회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고 남성이 집안의 생계비를 버는 (breadwinner) 노동시장과 가정 간의 이분법적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약화되었다(원숙연, 2014; 김수정, 조효진, 2016).

성역할 태도의 인식 변화는 가족의 형성, 확대, 해체라는 일련의 과정에 나타나는 결혼, 출산, 양육, 동거, 이혼 등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 위기 이후 평생 노동이 강조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환기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이상림 외, 2016). 또 성역할 태도의 변화는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높아진 성평등 의식을 지닌 젊은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 내 성역할 태도에 대한 연구는 성역할 태도의 집단 간 차이와 성

역할 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난다. 가부장제와 양성평등의 가치가 혼재한 상태에서 남녀 간 성역할 차이와 갈등이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 내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는 높은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여성의 동의 정도가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김혜영, 2005; 이은희, 2002).

흥미로운 부분은 성별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남성은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자녀 양육에 관하여 아내의 전통적 역할을 기대하고, 여성은 부부의 공평한 육아 및 가사 분담을 매우 지지하지만 남편이 가계 경제에 더 많은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태도가 나타나서 한국 사회의 성역할 태도가 변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공선희, 2009; 유계숙, 2010).

성역할 태도에서 여성이 취업한 경우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의 직종과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모두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집단별 성역할 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경우, 기혼의 경우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이미숙, 2000; 김혜영, 2005; 백주희, 2009).

한국의 사회 가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한국인의 성역할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학력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이상림 외, 2016).

성역할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보고하는 연구도 나타났다(김혜영, 2005; 은기수, 이윤석, 2005).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전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완화되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1996년과 2010년 모두 성별화되어 남성 가족 부양자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모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1996년에 비해 2010년에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원숙연, 2014).

성역할 태도의 세대별 차이에서 노년기 여성의 가족 의식은 아직 보수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성역할 인식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비전통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김경신, 2002). 하지만 세대별 성역할 인식은 여전히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남, 윤옥경, 2000).

제3절 연령과 세대 관련 인식 및 가치관

본 절에서는 연령규범과 관련된 인식이나 세대 가치관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검토하였다. 연령규범(age norms)은 연령에 적합한 행동이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으로, 특정한 연령대의 사회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생활양식 및 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며 반응이다(Settersten, 2003).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한 세대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기점으로 논의되어 왔다(박재홍, 2010). 세대 혹은 연령집단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 돌봄이나 노후소득보장의 주체 등 고령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령집단 간 상이한 인식을 다루거나(공선희, 2013; 이상록, 김형관, 2013;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 2012) 세대별 이념적 성향 등(윤민재, 2017; 허석재, 2017)에 대해 다룬 반면, 연령규범 관련 인식 및 세대 가치관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행동양식과 태도에 대한 사회의 규범적 인식은 연령으로 구분된 집단들에 대한 거시적 영향력이자 통제의 기반이 되며(Butler, 2005; 조성미, 김경미, 2016에서 재인용), 연령집단에 속한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중돈, 손의성, 2010; 임정숙, 정세미, 정순돌, 2019; 조성희, 김경미, 2016).

본 연구에서는 연령규범적 인식과 세대 관련 가치관을 연령주의, 세대갈등, 노인 및 노후에 대한 인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항목과 문항을 살펴보았다.

1. 연령 관련 가치관

가. 연령주의적 인식

연령주의(ageism)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편견이나 차별로 정의할 수 있다(Iversen, Larson, & Solem, 2009). 연령주의는 개념적으로 모든 생애주기에 해당하지만(Bytheway, 2005), 문헌에서 주로 논의되는 연령주의는 나이 들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인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와 행동, 노인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인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중 노인에 대한 차별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행동, 태도, 정서적 반응, 그리고 제도 및 문화적 차별 등을 바탕으로 측정하고 있다. 원영희(2005)가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는 노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무시 경험(‘노인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말이나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아플 때 남들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기피 경험(‘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한 적이 있다’, ‘카페, 식당 등에 있을 때 노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간 적이 있다’), 그리고 소외 경험(‘극장 등 문화시설 분위기가 젊은이들 위주여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글씨가 작아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의 3가지 하위 요소를 바탕으로 20개 문항으로 노인의 차별 경험을 측정하였다.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2012)은 Cherry & Palmore(2008)의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척도를 바탕으로 노인차별을 정서적 회피(‘노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종종 노인과 눈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차별(‘노인은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노인에게 사실상 지역 스포츠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 고정관념(‘대부분의 노인은 과거 속에 갇혀 산다’)의 3가지 하위 요소에 기반한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노인차별주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비노인 집단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혹은 태도를 의미분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들이 있다. 의미분화 척도는 부정적, 긍정적인 느낌과 관련된 쌍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를 통해 대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이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Rosencranz & McNevin(1969)의 척도와 Sanders, Montgomery, Pittman Jr, & Balkwell(1984)의 의미분화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문항이 많이 사용되었다(한정란, 2004; 김옥, 2014). 연구의 초점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2004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04)에서는 ‘정정하다-노쇠하다’, ‘현명하다-독단적이다’, ‘낙천적이다-비관적이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의 4쌍의 형용사를 통해 노인들이 인식하는 노인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의미분화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의 구체적인 초점을 반영하여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한 선행연구도 있다.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은 사회에 쓸모가 있다’,

‘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노인은 젊은 세대의 존경을 받고 있다’ 등을 포함하는 8개 문항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하여 청년들과 노인들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김기현, 하형성, 신인철(2016)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39세의 조사대상자에게 40~50대로 규정된 기성세대와 60대 이상으로 규정된 노인 세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성세대의 이미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등의 4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고, 노인 세대의 이미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다’ 등 4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최유석(2014)은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개발한 세대 간 연대를 측정하는 문항을 수정하여 ‘가족, 친척을 돌보는 노인의 활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한다’ 등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는 연령주의를 노인에 대한 태도, 정서적 반응 및 행동뿐 아니라 정책이나 기관의 행정에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다. 국외의 대표적인 척도로는 Palmore(2001)의 The Ageism Survey, Cherry & Palmore(2008)의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Fraboni, Saltstone, & Hughes(1990)의 Fraboni Ageism Scale 등이 있고, 이들은 김주현(2012)의 연구와 같은 국내의 포괄적 연령주의 척도 개발의 기초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김주현(2012)은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다루어진 노인에 대한 기피나 회피, 편견, 차별행동뿐 아니라 노화 불안, 외모 변화, 노화 긍정, 분리를 하위 요소로 포함하는 총 7가지 구성요소와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포괄적 연령주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지은정(2017)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일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생산성 인식(‘노인은 능력이 떨어지므로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언어폭력(‘노인에게 손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명령조로 말한다’), 기피(‘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자주 가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정관념(‘노인은 실력보다는 나이, 경력, 직위 등으로 권위를 세우려 한다’)의 4가지 차원의 20개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노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연령주의에 대한 개념화와 척도 개발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반면, 다른 연령 집단 혹은 세대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한정란(2004)은 의미분화 척도를 개발하여 청년, 중년, 노인에 대해 각각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동부터 중장년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젊은 세대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개성이 강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배려가 부족하다’ 등의 묘사가 사용되었다.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를 묘사하는 ‘개성이 강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창의적이다’, ‘도전정신이 강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의 5개 문항에 대해 노인 세대,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로 구분된 다른 연령 집단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박경숙 외(2012)는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된 연령집단에 대해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묘사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인식하는지 노인 집단과 비노인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다. 한편, 이종원 외(2016)의 연구에서는 다른 세대가 청년 세대를 인식하는 이미지에 대해 청년들 스스로가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전국적

으로 표집된 20~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한다’, ‘인내력이 부족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등 기성세대의 청년관에 대해 청년 스스로가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2-1〉 노인 외 연령집단에 대한 인식 측정문항

구분	연구(연도)	구성요소 및 문항
젊은 세대 이미지	한정란(2004)	- 의미분화 척도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2010)	- 개성이 강하다 - 인내심이 부족하다 - 창의적이다 - 도전정신이 강하다 -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연령집단 이미지	박경숙, 서이종, 장세훈(2012)	-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 생산적이지 못하다 -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 -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 고집이 세다 - 의존적이다 - 폐쇄적이다
	이종원 외(2016)	-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한다 - 현실세계에 안주하고 도전정신이 약하다 - 내실보다 겉치레에 치중한다 - 인내력이 부족하다 -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정치/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 -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 현실보다 가상세계에 몰두한다

자료: 1) 박경숙, 서이종, 장세훈. (2012).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이종원, 한영근, 유한구, 채창균, 오승근, 김윤나. (2016).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한정란. (2004).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 24, 197-210.

나. 연령규범

노인 혹은 노년기의 행동이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노년기의 이성교제, 이혼과 재혼, 사회활동 등에 대한 노인 집단과 비노인 집단의 인식에 대해 조사되었다. 이금룡(2006)은 사회적 노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일, 가족, 성과 혼인, 세대교류, 사회활동, 그리고 성역할의 6개 영역에 대해 노인과 비노인 집단의 규범적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에게 기대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규범적 인식을 ‘노인도 시대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연령집단 간에 비교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2014년과 2017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4; 정경희 외, 2017)에서 노인의 재혼, 일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이 수행하는 사회조사의 일부로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중 2015년 조사부터 희망하는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취미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응답 범주로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노인들에 대하여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년기의 모습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노년기가 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선행연구에서 다룬 연령주의 관련 개념과 측정도구의 구성요소 및 문항을 아래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 관련 인식 측정문항

구분	연구(연도)	구성요소 및 문항
노인차별	원영희(2005)	- 무시 경험, 기피 경험, 소외 경험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2012)	- 정서적 회피, 차별, 고정관념
	한정란(2004)	- 의미문화 척도 - 정당하다-노쇠하다 - 현명하다-독단적이다 - 낙천적이다-비관적이다 -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정경희 외(2004)	- 노인은 건강하다 - 노인은 지혜롭다 - 노인은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 노인은 사회에 쓸모가 있다
	박경숙 외(2009)	- 노인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다 - 노인은 젊은 세대의 존경을 받는다 - 노인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인정받고 있다 - 노인은 가난하다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2010) ¹⁾	-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노인의 기여에 대한 인식	최유석(2014)	- 부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 노인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한다 - 가족, 친척을 돌보는 노인의 활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 노인과 젊은 층은 함께 일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 노인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포괄적 연령주의	김주현(2012)	- 노화 불안, 편견, 노인에 대한 기피나 회피, 외모변화, 차별행동, 노화공정, 분리
	지은정(2017)	- 일하는 노인에 대한 생산성 인식, 언어폭력, 기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노인 및 노년기의 행동과 태도에 대 한 규범적 인식	이금룡(2006)	- 일, 가족, 성과 혼인, 세대교류, 사회활동, 성역할 - 노년기 재혼, 이혼,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2010) ²⁾	- 노인도 시대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경희 외(2014, 2017)	-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 -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생각
	사회조사(2015, 2017, 2019)	-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에 대한 생각

주: 1) 별표(*)로 표시된 문항들은 기성세대(40, 50대)에 대한 인식 문항임.

2) 설문이 이루어진 5개 문항 중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의 두 문항을 제외하고 규범적 인식을 묻는 질문만 소개함.

자료: 1) 김기현, 하형성,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김주현. (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연구학, 35(1), 53-75.

3)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4) 박경숙, 김주현, 이상림, 최인희, 손정인. (2009). 2009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5)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319-339.
- 6) 이금룡. (2006).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143-159.
- 7)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8) 정경희 외.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 정경희 외.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정경희 외.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지은정.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2) 최유석. (2014).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인구학, 37(4), 61-87.
- 13) 통계청. (2015). 사회조사.
- 14) 통계청. (2017). 사회조사.
- 15) 통계청. (2019a). 사회조사.
- 16) 한정란. (2004).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 24, 197-210.

다.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대한 연령기준을 규정하려면 주로 역연령이 사용되지만 특정한 생애주기의 구체적 시작 연령 혹은 기간에 대한 문화적, 규범적, 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연령기준 인식은 연령에 대한 주관적 생각을 의미하는 주관적 연령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Kotter-Grühn, Kornadt, & Stephan, 2016; 최은영, 조성은, 오영삼, 장의수, 김영선, 2017). 연령기준 인식은 다차원적 척도로 측정되기도 하지만(김원경, 윤진, 1991; Kleinspehn-Ammerlahn, Kotter-Grühn, & Smith,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노후 인식, 노후 시작 인식 혹은 노후 시작 연령, 노령 인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노년기가 시작되는 연령에 대한 인식이나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4; 정경희 외, 2017)에서는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하여 설문하여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실제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연구(권혁창 외, 2012; 송현주, 이은영, 임란, 김호진, 2014;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6; 2018)에서는 노후 시작 연령에 대한 인식,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노후의 시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생애사건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는데 노후 시작을 퇴직, 손자녀의 출생, 건강상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노인이라고 불렀을 때 등이 응답 범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주로 노년기의 시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다룬 반면, 다른 연령대의 연령기준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김기현

외, 2016;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에 대해 설문한 바 있다.

〈표 2-3〉 주관적 연령 인식에 대한 측정문항

구분	연구(연도)	구성요소 및 문항
주관적 연령지각	김원경, 윤진(1991)	- 자신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가 - 외적인 모습은 얼마나 나이가 든 것으로 보고 있는가 - 자신이 원하는 나이를 선택할 수 있다면 몇 살이 되고 싶은가 - 타인이 자신을 몇 살로 보는가
	권혁창 외(2012) 송현주 외(2014, 2016, 2018)	- 노후 시작 연령 - 현재 본인의 노후시기 해당 여부 - 노후 시작 인식 계기
노령 인지	지은정(2017)	- 노후 시작 연령 - 정부지원 수급 적정 연령 - 노후 시작 인식 계기
	KGSS(2011)	- 노인이라 생각하는 연령 -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정경희 외(2014, 2017)	-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연령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2010)	- 노후 시작 연령 - 노후 시작 인식 계기
연령집단의 시작과 끝 연령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2016~2019)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 범위

자료: 1)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임란, 박소현, 정희수. (2012). 제4차(201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기초 분석보고서.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김원경, 윤진. (1991). 성인 노인기의 주관적 연령지각에 따른 심리적 적응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4(1), 157-168.

5) 김지범 외.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6)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 송현주, 이은영, 임란, 김호진. (2014).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5차(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9)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6).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10)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11)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 정경희 외.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정경희 외.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지은정.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 세대 관련 가치관

선행연구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의 여러 갈등 영역 중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거나, 연금이나 일자리와 같은 특정한 정책 영역에 대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갈등적 관계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설문하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06~2019)가 3년 주기로 수행하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는 ‘부유층과 서민층’, ‘남성과 여성’, ‘수도권과 지방’ 등 우리 사회에서 갈등적 관계에 있다고 인식되는 여러 집단 간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는데 그 중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 정도를 묻는 한 문항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일련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연구(김미곤 외, 2014; 정해식 외, 2016; 정해식 외, 2018)와 한국행정연구원(2013~2019)에서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선행연구는 고령사회의 정부 정책이나 세대 간 자원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갈등적 인식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일자리의 분배, 각 세대의 사회에 대한 기여와 배분의 당위성,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계약을 바탕으로 둔 사회보장 정책의 유지와 세대 간 형평성,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와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 등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룬 주제였다.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 연금의 수혜율을 낮추는 것, 정년과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대갈등을 측정하였다. 최유석(2014)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젊은 층의 일자리의 관계, 노인이 많아지는 것과 선거에서 젊은 층의 의견 반영이 어려움, 언론에

의해 세대갈등의 위험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는가 등을 포함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수정되어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연구(정해식 외, 2018)에도 사용하였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세대갈등적 관점에서 조사되기도 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최유석(2014)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노인 돌봄에 필요한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인이 퇴직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등의 5개 문항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노인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2014)는 젊은 세대에 대한 노인 세대의 위협을 정치적 위협 인식, 가치관 위협 인식, 그리고 경제적 위협 인식을 반영하는 9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중 정치적 위협 인식과 가치관 위협 인식은 세대 간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등한 분배나 일반적인 가치관의 유사성 및 합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고, 경제적 위협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에 의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편, 노인복지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다룬 조사들도 있다. 이는 2007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정부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혹은 축소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는데 이 중 2개 문항에 국민연금(기초연금), 노인생활지원에 대한 인식이 각각 포함되었다. 세대갈등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의 측정문항 <표 2-4>와 <표 2-5>에 정리하였다.

〈표 2-4〉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측정문항

구분	연구(연도)	구성요소 및 문항
세대갈등 인식 정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006, 2013, 2016, 2019)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2014~2018)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3~2019)	-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
노인 세대 세대 위협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 정치적 위협 인식 · 노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필요 이상으로 높다 · 노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위협적이다 · 노인 세대는 우리 세대에 비해 불공평할 정도로 많은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다 - 가치관 위협 인식 · 노인 세대는 우리 세대의 의견을 무시한다 · 노인 세대는 우리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 노인 세대는 우리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 경제적 위협 인식 · 노인 세대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었다 · 노인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에 세금이 과도하게 쓰인다 · 노인 세대의 지하철 무료 이용 정책은 우리 세대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본배와 관련된 세대갈등	최유석(2014) 김지범 외(2018) 정해식 외(2018)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원영희 외(2017)	- 청년층과 노인층은 사회문제에 합의하기 어렵다 - 언론은 세대 간 갈등의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 -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다 - 노인들이 많아져서 선거에서 청년층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 - 젊은 층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둔다¹⁾ - 노인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²⁾ - 현재의 연금제도는 젊은 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층의 수혜율을 낮추어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수급 연령(현행 60세)을 약간 더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 노인층과 청년층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 노인층과 청년층의 갈등이 심하다 -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 노인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향후 세대갈등의 추세 인식
10년 후 갈등 인식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 향후 심각해질 세대갈등의 영역 · 가족에 대한 가치관/가족 부양/일자리와 노동정책/국민연금, 복지서비스 등 복지정책/문화 및 사회참여

주: 1), 2) 김지범 외(2018), 정해식 외(2018)에서는 삭제됨.

자료: 1)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45-72.

3) 김지범 외.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4)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5) 원영희, 최해지, 김주현, 김성호, 김지혜.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6)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II)-사회통합 국민 인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최유석. (2014).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인구학, 37(4), 61-87.

10)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공표용 보고서).

〈표 2-5〉 노인복지정책 관련 인식 측정문항

구분	연구 및 자료(연도)	문항
노인복지 정책 관련 인식	최유석(2014) KGSS(2018)*1)	- 정부는 국민연금과 노인 돌봄에 필요한 돈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노인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 정부는 원하는 노인이 퇴직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노인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야 한다) - 정부는 수십 년 후에 국민연금과 노인 돌봄을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근로자들은 노인 지원을 위한 세금과 분담금 지급을 점차 꺼려 할 것이다* - 노인들은 근로 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 현재의 연금제도는 젊은 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층의 수혜율을 낮추어야 한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년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수급 연령(현행 60세)을 약간 더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2007, 2010, 2013, 2016)	- 국민연금(기초연금), 노인생활지원에 대해 정부의 지출이 늘거나 줄어든가를 바라는 인식

주: 1) 2018년 KGSS에서는 별표(*)의 문항만 설문하였으며, 괄호 안의 문장이 사용됨.

자료: 1) 김지범 외.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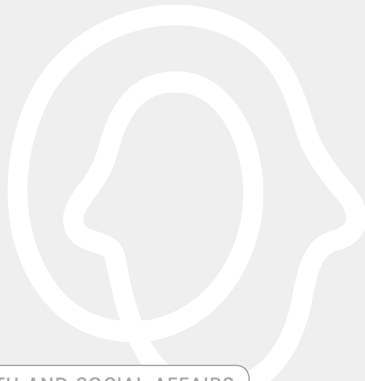
2)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최유석. (2014).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인구학, 37(4), 61-87.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노인이 연령을 이유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논의의 연장선에서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정경희, 황남희, 이선희, 김주현, 정순돌, 2015). 정순돌, 기지혜, 이은진, 최혜지(2015)는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연구들이 연령통합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교류와 사회참여 기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려는 연구는 없음을 지적하며 연령통합인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정순돌 외(2015)의 연령통합 척도는 연령 유연성과 연령 다양성의 개념에 기반하여 가구 및 가족 구성 형태, 주거 형태, 교통시설 이용, 여가문화, 대중매체, 지역사회 환경, 교육, 노동시장,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과 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 제도, 연령과 무관한 사회

참여 기회, 가족 내 세대 교류, 그리고 공간적 고령친화 인프라의 5가지 구성요소와 33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제3장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제1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

제2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별 세부 분석

제3장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

제1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

본 장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영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 현황에 포함되는 성별, 연령, 지역과 같은 인구학적 특징과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및 종사상 지위, 주관적 사회계층, 경제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징을 증점적으로 살펴본다.

본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8,00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 49.6%, 여성 50.4%이며, 연령 분포는 19~29세 17.0%, 30~39세 16.0%, 40~49세 19.2%, 50~59세 19.9%, 60~69세 15.0%, 70~79세 8.4%, 80세 이상이 4.5%이다. 본 조사의 특성상 연령에 따라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10세 분위별 조사 설계를 통해 연령대별 인구 분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은 17개 시·도의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 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서울 19.2%, 인천/경기 31.0%, 부산/경남/울산이 15.3%, 대구/경북이 9.9%, 광주/전라가 9.8%, 대전/세종/충청이 10.5%, 제주/강원이 4.3%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대도시는 44.0%, 도 지역의 시, 구 지역은 중소도시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38.3%, 도 지역의 군과 광역시의 일부 군 지역은 농어촌으로 17.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15.1%, 고졸 37.0%, 초대졸 이상이

47.9%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9.0%이며,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 53.4%, 임시직 9.8%, 일용직 2.9%, 자영업자 31.8%, 무급가족종사자가 2.1%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은 1(저)~10(고)점으로 조사하였으며, 1~4로 응답한 비율이 35.3%, 5~6으로 응답한 비율은 52.3%, 7~10으로 응답한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수준은 상(상-중상) 7.8%, 중 50.9%, 하(중하-하) 41.3% 비율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혼인 상태와 가구 형태를 가족 가치관과 연령 및 세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고려하여 이에 대해 질문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혼인 상태는 미혼 23.6%, 동거/사실혼 15.6%, 유배우 상태의 법률혼 49.2%, 이혼/별거 3.5%, 사별 8.2%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로 구분하여 비율을 살펴보면 무배우 35.3%, 유배우 64.7%이다. 무배우는 미혼, 이혼/별거, 사별 상태이며, 유배우는 동거/사실혼, 법률혼을 의미한다. 혼인 여부로 살펴보면 기혼 76.4%, 미혼 23.6%로 나타났다. 기혼은 동거/사실혼, 법률혼, 이혼/별거, 사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69.4%이며, 무자녀는 30.5%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를 가구 구성 세대별로 살펴보면 1세대 가구가 40.0%, 2세대 57.6%, 3세대 이상이 2.3%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18.7%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비율	(명)	특성	비율	(명)
전체 ¹⁾	100.0	(8,000)	전체 ¹⁾	100.0	(8,000)
성별			주관적 사회계층		
남성	49.6	(3,965)	상(7-10)	12.2	(975)
여성	50.4	(4,035)	중(5-6)	52.3	(4,186)
연령			하(1-4)	35.5	(2,840)
19~29세	17.0	(1,360)	경제수준		
30~39세	16.0	(1,279)	상(상-중상)	7.8	(620)
40~49세	19.2	(1,533)	중(중)	50.9	(4,075)
50~59세	19.9	(1,590)	하(중하-하)	41.3	(3,304)
60~69세	15.0	(1,204)	혼인 상태 1		
70~79세	8.4	(675)	미혼	23.6	(1,886)
80세 이상	4.5	(360)	동거/사실혼	15.6	(1,248)
지역 1			법률혼(유배우)	49.2	(3,932)
서울	19.2	(1,540)	이혼/별거	3.5	(280)
인천/경기	31.0	(2,477)	사별	8.2	(654)
부산/경남/울산	15.3	(1,222)	혼인 상태 2		
대구/경북	9.9	(789)	무배우	35.3	(2,820)
광주/전라	9.8	(787)	유배우	64.7	(5,180)
대전/세종/충청	10.5	(843)	혼인 상태 3		
제주/강원	4.3	(342)	기혼	76.4	(6,114)
지역 2			미혼	23.6	(1,886)
대도시	44.0	(3,523)	자녀 유무		
중소도시	38.3	(3,062)	예	69.5	(5,561)
농어촌	17.7	(1,415)	아니오	30.5	(2,439)
교육수준			가구 형태 1		
중졸 이하	15.1	(1,211)	1세대	40.0	(3,200)
고졸	37.0	(2,961)	2세대	57.6	(4,605)
초대졸 이상	47.9	(3,829)	3세대 이상	2.3	(184)
경제활동 여부			기타	0.1	(12)
예	69.0	(5,520)	가구 형태 2		
아니오	31.0	(2,480)	1인	18.7	(1,499)
종사상 지위 ²⁾			1세대	21.3	(1,701)
상용직	53.4	(2,947)	2세대	57.6	(4,605)
임시직	9.8	(540)	3세대 이상	2.3	(184)
일용직	2.9	(161)	기타	0.1	(12)
자영업자	31.8	(1,758)			
무급가족종사자	2.1	(11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5,520명에 대한 결과임.

제2절 응답자의 일반 특성별 세부 분석

1. 응답자의 성별 일반 특성 분석

응답자의 성별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분포는 남성의 경우 50~59세 연령군이 20.5%로 가장 많고, 40~49세가 19.5%, 19~29세는 17.8%, 30~39세는 16.8% 순으로 높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어 나타나는 인구 분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성별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별 차이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성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은 고졸, 초대졸 이상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19.6%가 중졸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70대 이후의 고령자에서 중졸 이하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별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남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82.0%이며, 여성은 56.3%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이 56.0%, 자영업자는 34.0%, 그 외 임시직과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는 약 7.0% 이하로 나타났다. 여성은 상용직이 49.6%, 자영업자 28.8%, 임시직 14.4% 순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임시직의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의 차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반적으로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성별에 관계없이 법률혼(유배우), 미혼, 동거/사실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 상태에서는 법률혼(유배우)의 비중이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동거/사실혼의 비중 또한 남녀 모두 15.3%와

15.9%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사별은 여성이 12.3%로 남성(4.0%)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일찍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과 연관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남녀 모두 50.0%를 초과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성은 자녀가 있는 비율이 74.5%로 남성에 비해 10.0%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가구 형태는 2세대 가구, 1세대 가구, 1인 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세대 가구는 남녀 모두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은 남성 17.7%, 여성 19.8%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표 3-2〉 응답자의 성별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성별		특성	성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종사상 지위		
19~29세	17.8	16.2	상용직	56.0	49.6
30~39세	16.8	15.2	임시직	6.5	14.4
40~49세	19.5	18.8	일용직	3.1	2.7
50~59세	20.5	19.3	자영업자	34.0	28.8
60~69세	14.8	15.3	무급가족종사자	0.4	4.5
70~79세	7.6	9.2	주관적 사회계층		
80세 이상	3.0	6.0	상(7-10)	12.3	12.0
지역 1			중(5-6)	54.0	50.7
서울	18.8	19.7	하(1-4)	33.7	37.3
인천/경기	31.2	30.8	경제수준		
부산/경남/울산	15.3	15.3	상(상-중상)	8.4	7.2
대구/경북	9.9	9.9	중(중)	51.8	50.1
광주/전라	9.9	9.8	하(중하-하)	39.8	42.8
대전/세종/충청	10.7	10.4	혼인 상태		
제주/강원	4.4	4.2	미혼	28.0	19.2
지역 2			동거/사실혼	15.3	15.9
대도시	43.5	44.6	법률혼(유배우)	49.7	48.7
중도소시	38.3	38.2	이혼/별거	3.1	3.9
농어촌	18.2	17.1	사별	4.0	12.3
교육수준			자녀 유무		
중졸 이하	10.6	19.6	예	64.4	74.5
고졸	37.5	36.6	아니오	35.6	25.5
초대졸 이상	52.0	43.8	가구 형태		
경제활동 여부			1인 가구	17.7	19.8
예	82.0	56.3	1세대 가구	22.2	20.4
아니오	18.0	43.7	2세대 가구	58.0	57.1
			3세대 이상 가구	1.9	2.7
			기타	0.2	0.1
계	100.0	100.0	계	100.0	100.0
(명)	(3,965)	(4,035)	(명)	(3,965)	(4,03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응답자의 연령별 일반 특성 분석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별 성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까지의 응답자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근소하게 높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특히 70대 이후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별 성별 인구의 분포 특성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 인천/경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높게 나타나며, 19~29세의 경우 54.2%, 30~39세는 54.9%, 40~49세는 51.9%인 반면, 70~79세는 43.1%, 80세 이상은 40.3%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 구분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 집중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촌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중졸 이하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60대에서는 28.1%, 70대는 72.3%, 80대에서는 88.6%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사회 발전 속에서 교육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연령별 교육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30~39세는 초대졸 비율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경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30대 이후부터 50대까지는 80.0% 이상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이며, 60대 이후부터 감소하여 70대는 32.9%, 80대에서는 12.4%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40대까지는 상용직 비율이 약 65.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50대부터는 자영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후부터는 상용직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일용직이 증가, 70대부터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은 경제활동 참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60대까지는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0% 정도로 높았으나, 70세부터는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하’로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혼인 상태는 연령별 특성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29세의 젊은 층은 미혼이 92.2%로 월등히 높고,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30~39세는 법률혼(유배우)이 50.8%로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보였고, 미혼이 32.2%, 동거/사실혼이 15.5% 순으로 나타났다. 40대부터 50대까지는 법률혼(유배우)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60대부터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70대 이후에서는 사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는 50대까지 2세대 가구가 과반수를 넘는 주류 가구 형태로 나타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1세대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70대 이후부터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기에 따라 30대의 자녀 출산으로 2세대 가구로 진입하고 60대 이후의 자녀 독립으로 다시 1세대 가구 형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 응답자의 연령별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연령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성별							
남성	51.9	52.1	50.5	51.0	48.7	44.9	33.3
여성	48.1	47.9	49.5	49.0	51.3	55.2	66.7
지역 1							
서울	20.8	21.5	19.0	17.9	18.7	18.6	15.8
인천/경기	33.4	33.4	32.9	31.8	27.5	24.5	24.5
부산/경남/울산	14.1	14.0	14.8	15.6	17.5	16.3	15.7
대구/경북	9.0	8.4	9.4	10.2	11.0	11.4	12.7
광주/전라	8.7	8.8	9.3	9.7	10.1	13.4	13.3
대전/세종/충청	10.2	10.4	10.6	10.3	10.7	10.7	12.4
제주/강원	3.8	3.6	4.1	4.4	4.6	5.2	5.6
지역 2							
대도시	46.4	45.3	43.6	42.8	44.7	43.0	37.6
중도소시	41.0	41.2	40.7	39.2	34.4	30.5	30.6
농어촌	12.6	13.4	15.7	18.0	20.9	26.5	3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0.1	0.0	0.3	3.8	28.1	72.3	88.6
고졸	35.4	13.4	30.0	57.7	61.0	24.4	8.6
초대졸 이상	64.5	86.7	69.7	38.5	10.9	3.2	2.8
경제활동 여부							
예	60.2	81.4	82.3	82.7	67.9	32.9	12.4
아니오	39.9	18.6	17.8	17.3	32.1	67.1	87.6
종사상 지위							
상용직	71.0	77.8	64.5	43.0	18.7	9.7	6.6
임시직	22.4	4.1	6.0	8.3	1.9	11.4	17.5
일용직	1.6	0.7	1.4	2.6	6.9	11.2	17.2
자영업자	4.4	16.5	26.7	44.1	58.5	58.4	56.3
무급가족종사자	0.5	0.9	1.5	2.1	4.1	9.4	2.4
주관적 사회계층							
상(7-10)	13.2	12.8	15.1	14.8	10.4	3.9	4.3
중(5-6)	53.9	54.9	57.9	56.1	50.2	39.7	27.6
하(1-4)	32.9	32.3	27.1	29.2	39.4	56.4	68.1
경제수준							
상(상-중상)	7.7	7.7	9.9	9.9	6.6	2.7	2.8
중(중)	52.7	54.8	58.5	56.3	48.8	30.9	19.6
하(중하-하)	39.5	37.5	31.7	33.8	44.6	66.4	77.7
혼인 상태							
미혼	92.2	32.2	9.7	3.3	1.4	0.3	0.0
동거/사실혼	2.5	15.5	21.2	20.6	19.9	14.6	6.5
법률혼(유배우)	5.1	50.8	65.6	66.2	60.9	45.4	32.3
이혼/별거	0.2	1.5	2.8	7.6	5.5	3.6	0.7
사별	0.0	0.0	0.6	2.3	12.3	36.1	60.5
자녀 유무							
예	5.0	54.0	85.8	91.5	91.9	89.4	90.0
아니오	95.0	46.0	14.2	8.5	8.2	10.6	10.0
가구 형태							
1인 가구	18.7	20.9	11.1	12.5	16.9	33.1	50.5
1세대 가구	4.8	13.7	6.0	20.6	47.8	51.1	34.0
2세대 가구	74.1	63.4	80.3	65.1	32.9	12.4	11.2
3세대 이상 가구	2.0	1.9	2.5	1.7	2.3	3.4	4.3
기타	0.4	0.1	0.1	0.1	0.3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60)	(1,279)	(1,533)	(1,590)	(1,204)	(675)	(36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3.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일반 특성 분석

조사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7개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성 분포는 7개 지역군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 분포는 서울, 인천/경기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청년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권, 제주/강원권에서는 60대 이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연령 분포와 연관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고졸 이상과 초대졸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관한 특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지역에 관계없이 과반수를 넘는 약 6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상용직, 자영업자, 임시직의 순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자영업자가 39.6%로 상용직(27.9%)에 비해 약 1.7%포인트 가량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은 교육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하’로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으로 인식하는 비율과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는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으로 높게 인식하는 비율은 낮게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 역시 지역별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7개 지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법률혼(유배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미혼이 법률혼(유배우)보다 2배 정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동거/사실

혼의 비중은 서울, 경기, 대전/세종/충청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사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약 63.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2세대 가구 또한 7개 지역 모두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부산/경남/울산과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지역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제주/강원
성별	남성	48.4	49.9	49.5	49.7	49.9	50.1	50.5
	여성	51.6	50.2	50.5	50.4	50.1	49.9	49.5
연령	19~29세	18.4	18.4	15.7	15.5	15.1	16.4	15.1
	30~39세	17.8	17.3	14.6	13.5	14.2	15.8	13.4
	40~49세	18.9	20.4	18.6	18.2	18.1	19.2	18.3
	50~59세	18.4	20.4	20.4	20.6	19.7	19.5	20.7
	60~69세	14.6	13.4	17.2	16.7	15.4	15.3	16.3
	70~79세	8.1	6.7	9.0	9.7	11.5	8.5	10.3
	80세 이상	3.7	3.6	4.6	5.8	6.1	5.3	5.9
지역	대도시	100.0	18.3	58.1	47.7	27.8	26.7	0.0
	중도시	-	68.0	26.4	26.6	39.6	38.0	62.0
	농어촌	-	13.6	15.5	25.7	32.5	35.3	38.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2	9.0	18.2	22.0	26.8	18.4	20.2
	고졸	35.4	37.0	40.8	35.5	35.1	38.1	33.5
	초대졸 이상	54.4	54.0	41.0	42.5	38.1	43.4	44.3
경제활동 여부	예	67.0	69.1	67.7	68.9	63.9	78.6	70.0
	아니오	33.0	30.9	32.3	31.1	36.2	21.4	3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58.4	54.9	51.6	37.9	53.1	59.6	45.4
	임시직	6.8	11.9	9.3	11.9	7.2	9.2	11.7
	일용직	2.1	2.5	3.3	4.4	2.8	3.7	3.0
	자영업자	31.9	29.9	33.0	39.6	32.9	26.1	37.0
	무급가족종사자	0.8	0.8	2.8	6.2	3.9	1.4	2.9
	주관적 사회계층							
경제수준	상(7-10)	14.6	6.0	19.6	13.7	9.8	15.5	13.7
	중(5-6)	56.1	53.2	51.2	52.5	42.1	52.2	56.1
	하(1-4)	29.3	40.8	29.2	33.9	48.0	32.4	30.2
	상(상-중상)	11.1	6.4	3.9	8.9	10.5	6.4	10.5
	중(중)	55.8	49.4	50.3	50.7	42.8	55.0	51.6
	하(중하-하)	33.1	44.2	45.8	40.4	46.6	38.7	37.9

특성	지역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제주/강원
혼인 상태							
미혼	26.7	24.6	21.7	22.7	20.3	22.7	20.2
동거/사실혼	19.9	16.5	12.1	13.6	13.6	16.5	9.2
법률혼(유배우)	45.3	50.4	50.2	48.9	51.0	47.4	55.0
이혼/별거	2.2	3.2	5.1	4.1	2.9	3.7	5.6
사별	5.9	5.3	11.0	10.7	12.1	9.7	10.0
자녀 유무							
예	68.2	69.3	71.1	75.1	62.3	69.4	75.4
아니오	31.8	30.7	28.9	24.9	37.7	30.6	24.6
가구 형태							
1인 가구	15.9	14.2	23.1	21.7	24.7	23.6	18.7
1세대 가구	17.2	18.3	22.2	23.7	28.1	25.6	21.3
2세대 가구	64.0	64.9	53.5	52.4	44.8	49.2	57.6
3세대 이상 가구	2.6	2.6	1.3	2.1	1.7	1.6	2.3
기타	0.3	0.0	0.0	0.0	0.8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40)	(2,477)	(1,222)	(789)	(787)	(843)	(34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4. 응답자의 혼인 상태별 일반 특성 분석

응답자의 혼인 상태별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혼인 상태별로 미혼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58.9%이며, 이혼/별거와 사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75.8%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 연령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은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6.5%, 2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거/사실혼과 법률혼(유배우)은 40~49세와 50~59세에서, 이혼/별거는 50~59세와 60~69세에서, 사별은 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혼인 상태에 따른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별을 제외한 혼인 상태에서 인천/경기 지역의 비율이 약 30.0% 이상의 1/3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서울과 부산/경남/울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별은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20.5%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천/경기 지역(20.3%)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혼인 상태

별 지역 특성은 응답자의 지역별 연령 구성의 차이 등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도 혼인 상태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혼과 법률혼(유배우)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별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혼인 상태는 연령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어 혼인 상태별 교육수준은 연령별 교육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혼인 상태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사별을 제외한 혼인 상태에서 모두 약 7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별을 제외한 혼인 상태에서 상용직, 자영업자, 임시직의 순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별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0%로 참여한다는 응답(32.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 또한 혼인 상태별로 명확한 차이가 발견된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미혼과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에서, ‘하’로 인식하는 비율은 이혼/별거, 사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의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과 유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혼과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약 6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이혼/별거와 사별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약 70.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미혼은 2세대 가구 다음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33.5%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 응답자의 혼인 상태별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혼인 상태				
		미혼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이혼/별거	사별
성별	남성	58.9	48.5	50.1	43.8	24.2
	여성	41.1	51.5	49.9	56.2	75.8
연령	19~29세	66.5	2.8	1.8	1.0	0.0
	30~39세	21.8	15.9	16.5	6.8	0.0
	40~49세	7.9	26.1	25.6	15.5	1.3
	50~59세	2.8	26.3	26.8	43.4	5.5
	60~69세	0.9	19.2	18.7	23.8	22.7
	70~79세	0.1	7.9	7.8	8.7	37.3
	80세 이상	0.0	1.9	3.0	0.9	33.3
지역 1	서울	21.8	24.5	17.7	12.1	14.0
	인천/경기	32.3	32.8	31.7	28.1	20.3
	부산/경남/울산	14.1	11.8	15.6	22.1	20.5
	대구/경북	9.5	8.6	9.8	11.6	12.9
	광주/전라	8.5	8.6	10.2	8.1	14.6
	대전/세종/충청	10.2	11.1	10.2	11.2	12.5
	제주/강원	3.7	2.5	4.8	6.9	5.2
지역 2	대도시	46.8	52.6	40.6	40.7	41.8
	중도소시	40.1	36.9	38.9	40.0	31.1
	농어촌	13.0	10.4	20.5	19.3	27.1
교육수준	중졸 이하	0.4	13.1	12.9	18.3	73.7
	고졸	31.8	43.8	38.5	54.2	22.5
	초대졸 이상	67.9	43.1	48.6	27.5	3.8
경제활동 여부	예	71.7	71.9	72.0	82.3	32.0
	아니오	28.3	28.1	28.0	17.7	68.0
종사상 지위	상용직	71.4	53.9	49.0	35.0	13.8
	임시직	15.6	7.6	6.6	14.7	19.5
	일용직	2.0	2.4	2.2	7.1	16.3
	자영업자	10.5	33.7	39.5	41.8	47.4
	무급가족종사자	0.5	2.5	2.7	1.4	3.0
	주관직 사회계층					
경제수준	상(7-10)	12.7	13.3	13.0	9.6	5.0
	중(5-6)	51.4	51.0	57.8	39.7	30.2
	하(1-4)	35.9	35.7	29.3	50.7	64.8
자녀 유무	상(상-중상)	7.6	7.9	8.8	5.2	2.6
	중(중)	50.3	49.4	57.8	60.7	23.4
	하(중하-하)	42.0	42.7	33.5	64.1	74.0
가구 형태	예	0.5	92.4	91.5	77.1	89.7
	아니오	99.5	7.6	8.5	23.0	10.3
가구 형태	1인 가구	33.5	2.5	3.1	70.1	79.1
	1세대 가구	2.4	27.2	32.7	4.1	3.2
	2세대 가구	61.9	68.6	62.0	22.1	12.8
	3세대 이상 가구	2.0	1.5	2.3	3.3	4.5
	기타	0.3	0.3	0.0	0.5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886)	(1,248)	(3,932)	(280)	(654)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5. 응답자의 가구 형태별 일반 특성 분석

응답자의 가구 형태에 따른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 형태별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는 여성의 비중이 53.2%, 58.3%로 남성에 비해 높았다. 고령의 여성의 경우 혼자 살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구 형태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9~39세의 비율이 17.0% 이상으로, 1세대 가구는 60~79세의 비율이 20.0%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는 40~49세, 50~59세, 19~29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는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서울 순으로 높은 반면,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는 인천/경기 다음으로 서울이 부산/경남/울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제주/강원이 10.7%로 서울의 21.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1세대 가구는 중졸 이하 31.2%, 고졸 44.6%, 초대졸 이상은 24.2%로 역U자형 분포를 보인 반면, 다른 가구 형태에서는 우상향 직선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2세대 가구는 중졸 이하 4.1%, 고졸 36.7%로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증가폭이 9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동에 관한 특성은 가구 형태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 이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상용직, 자영업자, 임시직 순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와 2세대 가구에서 상용직이 50.0%를 넘는 높은 비율을, 1인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에서는 임시직이 10.0%대를 기록하였고, 자영업자 다음

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1세대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와는 달리 자영업자가 36.2%로 상용직(44.2%)과 임시직(12.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은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 형태에서 ‘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는 자신의 사회계층을 ‘하(1-4)’로 인식하는 비율이 54.5%, 경제수준을 ‘하(중하-하)’로 인식하는 비율이 62.1%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높아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혼인 상태는 가구 형태별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미혼 42.1%, 사별 34.5%로 법률혼(유배우)이 가장 높은 다른 가구 형태와 차이가 있다. 법률혼(유배우)이 높은 가구 형태 중에서도 1세대 가구는 동거/사실혼이 법률혼(유배우)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 형태에서 자녀가 있는 비율이 7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응답자의 가구 형태별 일반 특성

(단위: %, 명)

특성	가구 형태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성별				
남성	46.8	51.7	50.0	41.7
여성	53.2	48.3	50.0	58.3
연령				
19~29세	17.0	3.8	21.9	15.0
30~39세	17.8	10.3	17.6	13.5
40~49세	11.4	5.4	26.7	20.8
50~59세	13.3	19.2	22.5	15.0
60~69세	13.6	33.8	8.6	14.7
70~79세	14.9	20.3	1.8	12.5
80세 이상	12.1	7.2	0.9	8.5
지역 1				
서울	16.3	15.6	21.4	21.7
인천/경기	23.4	26.7	34.9	35.3
부산/경남/울산	18.8	15.9	14.2	8.5
대구/경북	11.4	11.0	9.0	9.2
광주/전라	13.0	13.0	7.7	7.4
대전/세종/충청	13.3	12.7	9.0	7.4
제주/강원	3.8	5.1	3.9	10.7
지역 2				
대도시	43.9	38.7	46.2	39.1
중도소시	35.6	35.9	40.1	38.0
농어촌	20.5	25.4	13.7	22.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9.8	31.2	4.1	23.3
고졸	30.2	44.6	36.7	31.0
초대졸 이상	40.1	24.2	59.2	45.8
경제활동 여부				
예	68.7	63.7	71.5	57.9
아니오	31.3	36.3	28.5	42.1
종사상 지위				
상용직	53.1	36.7	59.2	44.2
임시직	14.6	9.0	8.5	12.1
일용직	5.0	4.1	1.9	2.9
자영업자	26.4	45.6	28.9	36.2
무급가족종사자	0.8	4.6	1.6	4.5
주관적 사회계층				
상(7-10)	8.4	9.9	14.3	11.3
중(5-6)	37.1	49.2	58.3	58.2
하(1-4)	54.5	40.9	27.5	30.5
경제수준				
상(상-중상)	4.0	6.1	9.6	7.9
중(중)	33.9	47.2	57.6	58.4
하(중하-하)	62.1	46.8	32.8	33.7
혼인 상태				
미혼	42.1	2.7	25.3	20.2
동거/사실혼	2.1	19.9	18.6	10.1
법률혼(유배우)	8.2	75.5	52.9	48.7
이혼/별거	13.1	0.7	1.3	5.0
사별	34.5	1.2	1.8	16.0
자녀 유무				
예	49.1	75.4	73.7	79.2
아니오	50.9	24.6	26.3	20.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449)	(1,698)	(4,605)	(18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 중 기타 응답자 18명을 제외한 7,982명을 대상으로 함.



제4장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분석

제1절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제2절 인구 규모와 지역 간 분포에 대한 인식

제3절 소결

제4장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분석

제1절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같은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지 살펴본 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부 대응 정책의 효과성과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우선순위를 질문하였다.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영역 1순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 부담 증가’(42.2%)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1.8%)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국방력 약화’(8.2%),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6.4%),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6.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인구 변화의 영향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 예상되는 영역을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경제수준, 혼인 상태에서 유의미한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성별로는 남성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2.1%), ‘국방력 약화’(8.6%)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사회보장 부담 증

가’(42.5%),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6.8%), ‘내/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3.2%)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44.0%)와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2.5%)의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70~79세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3.4%)의 응답률이 높았고 80세 이상은 ‘국방력 약화’(10.3%), ‘세대 간 갈등 증가’(9.8%), ‘내/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3.5%),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7.1%)의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보장 부담 증가’(43.1%), ‘국방력 약화’(9.3%)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2.2%), ‘내/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3.1%),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2.7%)의 응답률이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8.2%),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6.5%)의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국방력 약화’(9.6%),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8.8%), ‘내/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3.3%),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6.3%), ‘진학/취업의 어려움 감소’(0.8%)에서 인구 변화로 인한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의 응답률이 32.6%로 나타났다. 초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43.3%),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2.0%)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에서는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인식하는 경우 ‘국방력 약화’(12.0%), ‘내/외국인 사회갈등 증가’(4.7%),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8.7%)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중

(5-6)'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3.2%)를, '하(1-4)'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42.8%),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6.9%),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2.2%)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2.5%), '국방력 약화'(8.4%),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6.7%), '내/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3.0%)가 인구 변화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44.5%),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6.5%),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2.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의 응답률이 7.1%로 높았고, 1세대 가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의 응답이 6.7%로 높게 나타났다. 2세대 가구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의 응답이 43.0%로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29.4%)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세대 이상 가구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의 응답이 41.3%로 높았고,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는 '내/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12.4%),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16.0%)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1순위)

특성	(단위: %, 명)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방력 약화	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	내·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	진학/취업의 어려움 감소	기타 ³⁾	계 (명)
전체 ¹⁾	31.8	42.2	8.2	6.4	2.8	6.2	1.8	0.6	0.0	100.0 (8,000)
성별($\chi^2=15.042$)										
남성	32.1	42.0	8.6	6.0	2.4	6.4	2.0	0.5	0.0	100.0 (3,965)
여성	31.4	42.5	7.8	6.8	3.2	5.9	1.5	0.8	0.0	100.0 (4,035)
연령($\chi^2=53.194$)										
19~29세	31.3	44.0	7.5	5.4	2.3	6.3	2.5	0.8	0.0	100.0 (1,360)
30~39세	31.2	43.8	7.8	6.1	2.3	6.2	2.0	0.6	0.0	100.0 (1,279)
40~49세	31.4	41.9	8.2	6.9	3.2	6.0	1.5	0.8	0.0	100.0 (1,533)
50~59세	32.3	43.0	8.3	4.9	3.2	6.3	1.7	0.4	0.0	100.0 (1,590)
60~69세	32.5	40.7	8.4	7.8	2.5	5.6	1.6	0.6	0.1	100.0 (1,204)
70~79세	33.4	39.6	8.7	6.9	3.4	6.4	0.9	0.7	0.0	100.0 (675)
80세 이상	29.1	38.3	10.3	9.8	3.5	7.1	1.2	0.7	0.0	100.0 (360)
지역($\chi^2=58.417^{***}$)										
대도시	31.6	43.1	9.3	5.4	2.9	6.1	1.1	0.4	0.0	100.0 (3,523)
중소도시	32.2	41.4	7.1	6.7	3.1	6.1	2.7	0.8	0.0	100.0 (3,062)
농어촌	31.1	41.8	7.8	8.2	2.1	6.5	1.5	0.9	0.0	100.0 (1,415)
교육수준($\chi^2=29.006^*$)										
중졸 이하	31.1	38.9	9.6	8.8	3.3	6.3	1.2	0.8	0.0	100.0 (1,211)
고졸	32.6	42.2	7.8	6.2	2.8	6.2	1.6	0.6	0.0	100.0 (2,961)
초대졸 이상	31.3	43.3	8.1	5.8	2.7	6.2	2.0	0.7	0.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2.661$)										
예	31.6	42.3	8.3	6.2	2.7	6.5	1.9	0.5	0.0	100.0 (5,520)
아니오	32.2	42.1	8.1	6.8	3.2	5.4	1.4	0.9	0.0	100.0 (2,480)
총사상 지위($\chi^2=55.911^{**}$)										
상용직	30.1	43.0	8.5	6.1	3.2	6.5	2.2	0.6	0.0	100.0 (2,947)
임시직	33.1	46.9	5.9	5.6	0.9	4.9	1.9	0.7	0.0	100.0 (540)
일용직	28.2	50.6	10.0	4.5	1.3	4.4	0.6	0.4	0.0	100.0 (161)
자영업자	34.5	39.4	8.2	6.3	2.3	7.1	1.7	0.4	0.1	100.0 (1,758)
무급가족봉사자	23.9	37.4	12.2	10.7	4.4	9.7	0.9	0.7	0.0	100.0 (115)

특성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	국방력 약화	세대 간 생활양식 증가	내/외국인 간 생활양식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	진화/직업의 어려움 감소	기타 ³⁾	계 (명)
주관적 사회계층 ($\chi^2=72.886^{***}$)										
상(7-10)	26.8	39.6	12.0	6.0	4.7	8.7	1.7	0.5	0.0	100.0 (975)
중(5-6)	33.2	42.4	8.2	6.1	2.3	5.6	1.4	0.6	0.0	100.0 (4,186)
하(1-4)	31.3	42.8	6.9	6.9	3.0	6.1	2.2	0.7	0.0	100.0 (2,840)
경제수준($\chi^2=22.238$)										
상(상-중상)	28.6	40.2	9.5	8.2	3.6	7.1	2.5	0.2	0.0	100.0 (620)
중(중)	31.7	42.1	8.5	6.3	3.0	6.1	1.6	0.6	0.0	100.0 (4,075)
하(중하-하)	32.4	42.8	7.6	6.1	2.5	6.1	1.8	0.8	0.0	100.0 (3,304)
혼인 상태($\chi^2=10.677$)										
무배우	31.5	43.3	8.1	6.1	2.5	5.9	2.1	0.5	0.0	100.0 (2,820)
유배우	31.9	41.6	8.3	6.5	3.0	6.3	1.6	0.7	0.0	100.0 (5,180)
자녀 유무($\chi^2=20.811^{**}$)										
예	32.5	41.2	8.4	6.7	3.0	6.0	1.5	0.6	0.0	100.0 (5,561)
아니오	30.1	44.5	7.9	5.5	2.5	6.5	2.3	0.6	0.0	100.0 (2,439)
가구 형태($\chi^2=57.417^{***}$)										
1인 가구	30.2	42.5	9.6	7.1	3.0	5.6	1.8	0.2	0.0	100.0 (1,499)
1세대 가구	33.2	40.3	7.7	6.9	2.8	6.7	1.4	1.0	0.1	100.0 (1,701)
2세대 가구	31.4	43.0	8.1	6.0	2.8	6.3	1.8	0.7	0.0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1.3	38.8	5.9	5.1	1.8	3.9	2.6	0.6	0.0	100.0 (184)
기타	29.6	29.4	7.2	5.3	12.4	0.0	16.0	0.0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 *p < .01, *p < .05

3) 기타 0.0% (고령인구 일자리 수 부족으로 빈곤이 가속화 1건)

4)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2.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94.5%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5.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압도적으로 문제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70~79세인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다소 문제이다+매우 문제이다)이 9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0~59세인 경우 97.4%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50대 미만에서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수준은 50대 이후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95.1%로 높았고,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일 때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9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졸은 95.1%, 초대졸 이상은 93.0%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직에 비해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무배우에 비해 유배우일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1인 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6.2%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 출생아 수 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단위: %, 명)

특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이다	다소 문제 이다	매우 문제 이다	계 (명)
전체 ¹⁾	5.5	0.3	5.2	94.5	48.9	45.5	100.0 (8,000)
성별($\chi^2=6.674$)							
남성	5.6	0.4	5.2	94.4	47.7	46.8	100.0 (3,965)
여성	5.5	0.3	5.2	94.5	50.2	44.3	100.0 (4,035)
연령($\chi^2=193.658^{***}$)							
19~29세	10.7	0.7	10.0	89.3	53.0	36.3	100.0 (1,360)
30~39세	7.7	0.4	7.3	92.3	50.7	41.6	100.0 (1,279)
40~49세	5.9	0.3	5.6	94.1	49.8	44.3	100.0 (1,533)
50~59세	2.6	0.2	2.4	97.4	47.7	49.6	100.0 (1,590)
60~69세	3.3	0.2	3.1	96.7	44.4	52.3	100.0 (1,204)
70~79세	2.3	0.0	2.3	97.7	45.9	51.8	100.0 (675)
80세 이상	3.2	0.3	2.9	96.8	50.0	46.8	100.0 (360)
지역($\chi^2=33.213^{***}$)							
대도시	5.3	0.5	4.9	94.7	50.4	44.2	100.0 (3,523)
중소도시	6.0	0.3	5.8	94.0	49.7	44.2	100.0 (3,062)
농어촌	4.9	0.1	4.8	95.1	43.5	51.6	100.0 (1,415)
교육수준($\chi^2=50.507^{***}$)							
중졸 이하	2.5	0.2	2.3	97.5	46.4	51.1	100.0 (1,211)
고졸	4.9	0.3	4.6	95.1	49.4	45.6	100.0 (2,961)
초대졸 이상	7.0	0.4	6.6	93.0	49.3	43.7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471$)							
예	5.7	0.3	5.4	94.3	48.6	45.7	100.0 (5,520)
아니오	5.1	0.3	4.8	94.9	49.7	45.2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38.993^{***}$)							
상용직	6.7	0.3	6.3	93.3	50.4	43.0	100.0 (2,947)
임시직	6.6	1.0	5.6	93.4	43.1	50.3	100.0 (540)
일용직	2.8	0.6	2.2	97.2	46.0	51.1	100.0 (161)
자영업자	4.3	0.2	4.2	95.7	47.7	48.0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0	0.0	3.0	97.0	46.8	50.2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48.526^{***}$)							
상(7-10)	4.9	0.2	4.7	95.1	47.6	47.5	100.0 (975)
중(5-6)	5.9	0.4	5.5	94.1	52.1	42.0	100.0 (4,186)
하(1-4)	5.2	0.3	4.9	94.8	44.7	50.1	100.0 (2,840)
경제수준($\chi^2=43.064^{***}$)							
상(상-중상)	6.1	0.4	5.6	93.9	42.0	52.0	100.0 (620)
중(중)	5.4	0.3	5.1	94.6	52.3	42.3	100.0 (4,075)
하(중하-하)	5.6	0.3	5.2	94.4	46.1	48.3	100.0 (3,304)
혼인 상태($\chi^2=4072.056^{***}$)							
무배우	7.4	0.5	6.9	92.6	49.6	42.9	100.0 (2,820)
유배우	4.5	0.2	4.3	95.5	48.6	46.9	100.0 (5,180)
자녀 유무($\chi^2=97.903^{***}$)							
예	4.2	0.3	4.0	95.8	47.4	48.4	100.0 (5,561)
아니오	8.5	0.5	8.1	91.5	52.5	39.0	100.0 (2,439)
가구 형태($\chi^2=46.714^{***}$)							
1인 가구	5.7	0.3	5.3	94.3	46.5	47.9	100.0 (1,499)
1세대 가구	3.8	0.1	3.7	96.2	46.5	49.7	100.0 (1,701)
2세대 가구	6.1	0.4	5.7	93.9	50.9	43.0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3	0.7	4.7	94.7	44.6	50.0	100.0 (184)
기타	25.2	0.0	25.2	74.8	24.0	50.8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4.2%인 반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85.8%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인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89.5%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0~49세(88.5%), 60~69세(86.8%)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80세 이상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5.6%이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4.4%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 비율이 87.2%로 대도시와 농어촌(8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초대졸 이상일 때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87.1%로 인식하는 반면, 고졸은 86.9%, 중졸 이하는 79.5%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86.7%는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83.9%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별로는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약 88.0%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는 유배우인 경우 본인의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한 응답이 87.8%,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87.0%로 무배우, 무자녀의 경우보다 출생아 수 감소가 본인의 삶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인 경우에서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6.0%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세대 가구(87.2%), 1세대 가구(85.9%)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8.5%로 높았다.

〈표 4-3〉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계 (명)
전체 ¹⁾	14.2	1.1	13.1	85.8	60.3	25.5	100.0 (8,000)
성별($\chi^2=1.913$)							
남성	14.2	0.9	13.2	85.8	60.0	25.8	100.0 (3,965)
여성	14.2	1.2	13.0	85.8	60.5	25.3	100.0 (4,035)
연령($\chi^2=94.054^{***}$)							
19~29세	16.6	1.1	15.5	83.4	59.9	23.5	100.0 (1,360)
30~39세	15.3	1.0	14.4	84.7	58.8	25.8	100.0 (1,279)
40~49세	11.5	1.1	10.5	88.5	62.1	26.4	100.0 (1,533)
50~59세	10.5	0.7	9.8	89.5	61.8	27.8	100.0 (1,590)
60~69세	13.2	0.8	12.4	86.8	62.0	24.8	100.0 (1,204)
70~79세	18.0	1.0	17.0	82.0	58.0	24.0	100.0 (675)
80세 이상	24.4	3.6	20.9	75.6	51.3	24.2	100.0 (360)
지역($\chi^2=36.735^{***}$)							
대도시	15.0	1.4	13.6	85.0	59.0	26.0	100.0 (3,523)
중소도시	12.8	0.5	12.3	87.2	63.7	23.5	100.0 (3,062)
농어촌	15.0	1.3	13.7	85.0	56.1	28.9	100.0 (1,415)
교육수준($\chi^2=53.049^{***}$)							
중졸 이하	20.5	2.1	18.5	79.5	56.2	23.3	100.0 (1,211)
고졸	13.1	0.8	12.3	86.9	61.7	25.1	100.0 (2,961)
초대졸 이상	12.9	0.9	12.0	87.1	60.5	26.6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4.583^{**}$)							
예	13.3	0.9	12.4	86.7	61.4	25.4	100.0 (5,520)
아니오	16.1	1.4	14.8	83.9	57.9	26.0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4.749^*$)							
상용직	12.1	1.0	11.2	87.9	62.3	25.5	100.0 (2,947)
임시직	17.7	1.7	15.9	82.3	59.7	22.6	100.0 (540)
일용직	14.2	0.0	14.2	85.8	62.7	23.1	100.0 (161)
자영업자	13.7	0.6	13.1	86.3	60.7	25.6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3.5	0.8	12.7	86.5	52.2	34.3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31.869^{***}$)							
상(7~10)	12.0	1.6	10.4	88.0	58.3	29.7	100.0 (975)
중(5~6)	13.3	0.8	12.5	86.7	62.0	24.7	100.0 (4,186)
하(1~4)	16.1	1.2	15.0	83.9	58.4	25.4	100.0 (2,840)

특성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계 (명)	
경제수준($\chi^2=53.041^{***}$)								
상(상-중상)	11.6	1.4	10.2	88.4	52.7	35.7	100.0	(620)
중(중)	13.0	0.9	12.1	87.0	62.2	24.8	100.0	(4,075)
하(중하-하)	16.1	1.2	14.9	83.9	59.3	24.6	100.0	(3,304)
혼인 상태($\chi^2=52.999^{***}$)								
무배우	17.8	1.6	16.2	82.2	59.0	23.2	100.0	(2,820)
유배우	12.2	0.8	11.4	87.8	61.0	26.8	100.0	(5,180)
자녀 유무($\chi^2=27.323^{***}$)								
예	13.0	0.9	12.1	87.0	60.3	26.7	100.0	(5,561)
아니오	16.8	1.4	15.4	83.2	60.3	22.9	100.0	(2,439)
가구 형태($\chi^2=31.941^{**}$)								
1인 가구	17.8	1.4	16.4	82.2	59.0	23.2	100.0	(1,499)
1세대 가구	14.1	0.9	13.2	85.9	59.4	26.5	100.0	(1,701)
2세대 가구	12.8	0.9	11.9	87.2	61.2	25.9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8.5	1.6	16.9	81.5	56.7	24.8	100.0	(184)
기타	4.0	0.0	4.0	96.0	53.3	42.7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다.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인식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효과가 있다(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56.5%, ‘효과가 없다(전혀 효과가 없다+별로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3.5%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13.0%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인식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65.0%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9~40대까지의 연령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20~40대가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에서 보다 수요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59.3%로 대도시(55.6%)와 중소도시(5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의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대응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4.4%로 중소도시(43.8%)와 농어촌(4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중졸 이하인 경우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은 58.1%, 초대졸 이상은 52.1%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초대졸 이상의 경우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7.9%로 다소 높았으며, 고졸은 41.9%, 중졸 이하는 33.8%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직 종사자가 일용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 또는 하(1-4)로 생각한 응답자의 경우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0.4%와 58.9%로 중(5-6)의 응답자의 5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응답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인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52.7%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있는 경우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62.9%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세대 가구,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에서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9.8%, 56.8%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3세대 이상 가구(51.1%)에서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은 5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세대 가구(46.5%)와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43.2%)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단위: %, 명, 점)

특성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계(명)	평균
전체 ¹⁾	43.5	4.8	38.7	56.5	49.4	7.1	100.0 (8,000)	2.6
성별($\chi^2=6.524$)								
남성	44.5	5.4	39.2	55.5	48.4	7.1	100.0 (3,965)	2.6
여성	42.6	4.3	38.2	57.4	50.4	7.1	100.0 (4,035)	2.6
연령($\chi^2=101.041^{***}$)								
19~29세	48.2	6.7	41.5	51.8	46.8	5.1	100.0 (1,360)	2.5
30~39세	46.5	6.7	39.7	53.5	47.8	5.7	100.0 (1,279)	2.5
40~49세	46.3	4.5	41.7	53.7	45.9	7.9	100.0 (1,533)	2.6
50~59세	42.4	3.8	38.7	57.6	49.6	7.9	100.0 (1,590)	2.6
60~69세	41.7	4.9	36.8	58.3	50.5	7.8	100.0 (1,204)	2.6
70~79세	34.4	1.9	32.5	65.6	58.0	7.7	100.0 (675)	2.7
80세 이상	32.2	2.7	29.6	67.8	59.3	8.5	100.0 (360)	2.7
지역($\chi^2=86.052^{***}$)								
대도시	44.4	6.3	38.1	55.6	49.8	5.8	100.0 (3,523)	2.6
중소도시	43.8	3.2	40.6	56.2	49.5	6.6	100.0 (3,062)	2.6
농어촌	40.7	4.8	35.9	59.3	48.0	11.4	100.0 (1,415)	2.7
교육수준($\chi^2=94.029^{***}$)								
중졸 이하	33.8	2.5	31.2	66.2	57.1	9.2	100.0 (1,211)	2.7
고졸	41.9	4.2	37.7	58.1	50.6	7.6	100.0 (2,961)	2.6
초대졸 이상	47.9	6.1	41.8	52.1	46.0	6.0	100.0 (3,829)	2.5
경제활동 여부($\chi^2=9.372^*$)								
예	43.3	5.1	38.2	56.7	49.2	7.6	100.0 (5,520)	2.6
아니오	44.2	4.3	39.9	55.8	49.8	6.0	100.0 (2,480)	2.6

특성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계(명)	평균
종사상 지위($\chi^2=20.523$)								
상용직	43.5	5.4	38.2	56.5	49.4	7.1	100.0 (2,947)	2.6
임시직	41.8	4.8	37.0	58.2	49.7	8.5	100.0 (540)	2.6
일용직	35.5	6.7	28.9	64.5	52.7	11.8	100.0 (161)	2.7
자영업자	44.4	4.5	39.9	55.6	48.1	7.4	100.0 (1,758)	2.6
무급가족종사자	35.8	6.3	29.5	64.2	52.4	11.8	100.0 (115)	2.7
주관적 사회계층 ($\chi^2=428.431^{***}$)								
상(7-10)	39.6	6.3	33.4	60.4	51.7	8.7	100.0 (975)	2.6
중(5-6)	46.1	4.9	41.2	53.9	47.8	6.1	100.0 (4,186)	2.6
하(1-4)	41.1	4.3	36.8	58.9	51.0	7.9	100.0 (2,840)	2.6
경제수준($\chi^2=16.766^*$)								
상(상-중상)	43.9	7.3	36.6	56.1	46.7	9.4	100.0 (620)	2.6
중(중)	44.0	4.9	39.1	56.0	49.0	6.9	100.0 (4,075)	2.6
하(중하-하)	42.9	4.3	38.5	57.1	50.3	6.8	100.0 (3,304)	2.6
혼인 상태($\chi^2=11.68^{**}$)								
무배우	43.6	4.9	38.7	56.4	50.6	5.8	100.0 (2,820)	2.6
유배우	43.5	4.8	38.7	56.5	48.7	7.8	100.0 (5,180)	2.6
자녀 유무($\chi^2=32.142^{***}$)								
예	41.9	4.2	37.7	58.1	50.5	7.6	100.0 (5,561)	2.6
아니오	47.3	6.3	41.0	52.7	46.8	5.8	100.0 (2,439)	2.5
가구 형태($\chi^2=60.291^{***}$)								
1인 가구	37.1	3.6	33.5	62.9	55.4	7.5	100.0 (1,499)	2.7
1세대 가구	40.2	4.3	35.9	59.8	51.9	7.9	100.0 (1,701)	2.6
2세대 가구	46.5	5.3	41.2	53.5	46.8	6.6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51.1	7.6	43.5	48.9	42.5	6.4	100.0 (184)	2.5
기타	43.2	0.0	43.2	56.8	37.1	19.6	100.0 (12)	2.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라.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향후 출생아 수 감소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청년들의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원인 해소’(37.1%)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및 문화 조성’(25.6%)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17.7%)과 ‘육아시설 확충 및 좋은 육아서비스 제공’(14.3%) 정책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법률

결혼 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 정책'은 3.9%와 1.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특성별 우선순위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이 청년들의 '결혼 기피 및 지원의 원인 해소'가 가장 높으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및 문화조성',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육아시설 확충과 좋은 육아서비스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별 차이를 보면, 전반적인 정책 순서는 유사하지만, 연령별로 눈에 띄는 결과는 19~29세인 경우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 지원 정책'(2.3%)의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으며, 40~49세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등 조성 정책'(27.0%)의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 특성을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정책'(20.5%)과 '육아시설 확충 및 육아서비스 제공 정책'(14.9%)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등 조성 정책'(28.2%)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결혼 지연 원인 해소 정책'(38.7%)과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 지원 정책'(1.5%)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결혼 지연 원인 해소 정책'(30.5%)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등 조성 정책'(29.1%)과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정책'(16.9%), '육아시설 확충 및 육아서비스 제공 정책'(16.5%),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지원 정책'(5.2%),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 지원 정책'(1.5%)이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중(5-6)'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정책'(19.0%)을, '하(1-4)'로 인식하는 경

우에는 ‘청년층의 결혼 지연 원인 해소 정책’(39.1%)이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별로는 무배우의 경우는 ‘청년층의 결혼 지연 원인 해소’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지원’,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한 지원’ 정책이 유배우에 비해 높으며, 유배우의 경우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등 조성’,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육아시설 확충’ 정책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를 보면, 1인 가구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등 조성 정책’(27.4%), 1세대 가구는 ‘청년층의 결혼 지연 원인 해소 정책’(39.1%), 3세대 이상 가구는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정책’(19.2%)과 ‘육아시설 확충 및 육아서비스 제공 정책’(16.3%)이 타 가구 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5〉 출생아 수 감소 현상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

특성	청년층의 결혼 원인 해소 정책	일 가계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정책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정책	육아시설 확충 및 육아서비스 제공 강화 정책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의 자원 정책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 지원 정책	기타 ³⁾	계(명)	(단위: %, 명)
	37.1	25.6	17.7	14.3	3.9	1.2	0.2	100.0	(8,000)
성별($\chi^2=5.898$)									
남성	37.7	24.8	18.1	14.0	4.1	1.2	0.2	100.0	(3,965)
여성	36.5	26.4	17.4	14.7	3.7	1.2	0.1	100.0	(4,035)
연령($\chi^2=56.046^*$)									
19~29세	38.5	24.4	17.3	13.4	4.0	2.3	0.1	100.0	(1,360)
30~39세	35.8	26.1	19.9	13.9	3.2	0.9	0.1	100.0	(1,279)
40~49세	34.0	27.0	17.8	15.5	4.6	1.0	0.1	100.0	(1,533)
50~59세	37.4	26.0	16.9	15.0	3.5	1.0	0.3	100.0	(1,590)
60~69세	38.8	25.9	17.5	13.0	3.5	1.0	0.3	100.0	(1,204)
70~79세	39.6	23.6	15.2	16.5	4.0	0.9	0.2	100.0	(675)
80세 이상	37.6	23.6	20.3	12.1	5.9	0.5	0.0	100.0	(360)
지역($\chi^2=62.213^{***}$)									
대도시	36.4	23.7	20.5	14.9	3.1	1.1	0.3	100.0	(3,523)
중소도시	37.1	28.2	15.2	13.7	4.5	1.2	0.1	100.0	(3,062)
농어촌	38.7	24.8	16.2	14.2	4.5	1.5	0.1	100.0	(1,415)
교육수준($\chi^2=9.715$)									
중졸 이하	38.8	24.5	17.3	14.5	3.7	1.0	0.2	100.0	(1,211)
고졸	37.5	24.8	17.3	14.8	4.2	1.2	0.2	100.0	(2,961)
초대졸 이상	36.2	26.6	18.2	13.9	3.8	1.3	0.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0.998$)									
예	36.1	26.0	18.2	14.4	4.0	1.1	0.2	100.0	(5,520)
아니오	39.2	24.6	16.7	14.1	3.6	1.5	0.2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6.33$)									
상용직	36.6	26.2	17.2	14.1	4.4	1.3	0.1	100.0	(2,947)
임시직	35.3	25.8	20.6	14.2	3.3	0.8	0.0	100.0	(540)
임용직	40.3	22.0	13.4	16.7	5.5	1.3	0.9	100.0	(1,61)
자영업자	35.7	26.0	19.2	14.7	3.4	0.8	0.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29.3	28.6	21.2	16.6	4.4	0.0	0.0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45.667^{***}$)									
상(7~10)	30.5	29.1	16.9	16.5	5.2	1.5	0.3	100.0	(975)
중(5~6)	37.3	24.7	19.0	14.4	3.3	1.2	0.1	100.0	(4,186)
하(1~4)	39.1	25.7	16.2	13.5	4.3	1.1	0.2	100.0	(2,840)
경제수준($\chi^2=35.531^{***}$)									
상(상·중상)	32.9	28.8	16.1	16.5	4.4	1.2	0.0	100.0	(620)
중(중)	34.9	26.3	18.6	14.8	3.9	1.3	0.2	100.0	(4,075)
하(중하-하)	40.5	24.1	17.0	13.4	3.7	1.1	0.2	100.0	(3,304)

특성	청년층의 결혼 지연 원인 해소 정책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정책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 정책	육아시설 확충 및 육아서비스 제공 정책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지원 정책	가정 및 사회의 성평등 지원 정책	기타 ³⁾	계(명)
혼인 상태($\chi^2=18.914^{***}$)	39.0 36.0	25.3 25.8	16.7 18.3	13.1 15.0	4.3 3.7	1.5 1.0	0.1 0.2	100.0 (2,820) 100.0 (5,180)
자녀 유무($\chi^2=14.642^*$)	36.9 37.6	25.8 25.1	17.8 17.6	14.7 13.5	3.7 4.4	1.0 1.7	0.2 0.1	100.0 (5,561) 100.0 (2,439)
가구 형태($\chi^2=49.729^{***}$)	36.5 39.1 36.6 36.9 22.3	27.4 23.4 25.8 25.2 30.0	15.5 18.9 18.0 19.2 8.4	14.5 13.7 14.5 16.3 0.0	4.9 3.6 3.7 1.4 28.1	1.1 1.0 1.2 1.0 11.2	0.0 0.3 0.2 0.0 0.0	100.0 (1,499) 100.0 (1,701) 100.0 (4,605) 100.0 (184)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기타 0.2%(지원절차 2건, 교육 1건, 무상교육·사교육 정비 및 돌봄 서비스 1건,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자기를 편안하려고 안 함 1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본인들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함 1건, 아무리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효과 없음 1건, 아무리 지원을 해도 효과 없음 1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기 1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유를 느낀다고 예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라 정부 지원보다 저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 하는 게 효과적일 듯 1건,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기보다는 부부가 편하게 살라는 생각이 강해서 돈과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1건, 육아가정 직장에서 탄력근무제 정책 마련 1건, 젊은이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변해야 함 1건, 취업 1건)

3. 고령인구 증가(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가.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출생아 수 감소 현상과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91.2%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8.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아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인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93.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0~49세(91.9%)와 70~79세(91.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0.5%로, 60~69세(10.4%)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93.4%로 중소도시(89.6%)와 농어촌(8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10.7%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본인의 경제수준을 ‘중(중)’으로 생각하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는 비율이 91.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의 경제수준을 ‘상(상-중상)’ 또는 ‘하(중하-하)’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9.0%로 비교적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2.0%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0.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이상 가구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92.5%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2세대 가구(91.6%)와 1세대 가구(90.8%)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6〉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단위: %, 명)

특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이다	다소 문제가 있다	매우 문제가 있다	계 (명)
전체 ¹⁾	8.8	0.6	8.2	91.2	57.5	33.7	100.0 (8,000)
성별($\chi^2=2.453$)							
남성	8.8	0.7	8.2	91.2	57.0	34.2	100.0 (3,965)
여성	8.7	0.4	8.3	91.3	58.0	33.3	100.0 (4,035)
연령($\chi^2=46.167^{***}$)							
19~29세	10.1	0.4	9.6	89.9	59.6	30.4	100.0 (1,360)
30~39세	8.9	0.5	8.4	91.1	57.1	33.9	100.0 (1,279)
40~49세	8.1	0.8	7.2	91.9	58.6	33.3	100.0 (1,533)
50~59세	6.7	0.3	6.4	93.3	56.8	36.5	100.0 (1,590)
60~69세	10.4	0.3	10.0	89.6	54.8	34.8	100.0 (1,204)
70~79세	8.6	0.4	8.2	91.4	58.2	33.2	100.0 (675)
80세 이상	10.5	2.0	8.5	89.5	56.8	32.6	100.0 (360)
지역($\chi^2=90.857^{***}$)							
대도시	6.6	0.6	6.1	93.4	57.2	36.1	100.0 (3,523)
중소도시	10.4	0.4	9.9	89.6	60.8	28.8	100.0 (3,062)
농어촌	10.7	0.8	9.9	89.3	50.9	38.4	100.0 (1,415)
교육수준($\chi^2=10.483$)							
중졸 이하	10.1	0.8	9.3	89.9	54.5	35.3	100.0 (1,211)
고졸	9.2	0.6	8.6	90.8	57.2	33.6	100.0 (2,961)
초대졸 이상	8.0	0.4	7.6	92.0	58.6	33.3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4.425$)							
예	8.5	0.4	8.1	91.5	57.7	33.8	100.0 (5,520)
아니오	9.3	0.8	8.6	90.7	57.1	33.6	100.0 (2,480)

특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이다	다소 문제가 있다	매우 문제가 있다	계 (명)
종사상 지위($\chi^2=28.221^{**}$)							
상용직	7.9	0.6	7.3	92.1	60.1	32.1	100.0 (2,947)
임시직	10.7	0.3	10.4	89.3	55.5	33.8	100.0 (540)
일용직	7.4	0.0	7.4	92.6	48.4	44.2	100.0 (161)
자영업자	9.3	0.4	8.9	90.7	55.3	35.4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1	0.0	5.1	94.9	55.2	39.6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10.968$)							
상(7-10)	7.3	0.6	6.7	92.7	59.4	33.3	100.0 (975)
중(5-6)	9.0	0.5	8.5	91.0	58.3	32.7	100.0 (4,186)
하(1-4)	9.0	0.6	8.3	91.0	55.6	35.4	100.0 (2,840)
경제수준($\chi^2=26.076^{***}$)							
상(상-중상)	9.1	1.4	7.7	90.9	53.9	37.0	100.0 (620)
중(중)	8.6	0.4	8.2	91.4	59.5	32.0	100.0 (4,075)
하(중하-하)	9.0	0.6	8.3	91.0	55.7	35.3	100.0 (3,304)
혼인 상태($\chi^2=7.238$)							
무배우	9.9	0.6	9.3	90.1	57.4	32.8	100.0 (2,820)
유배우	8.2	0.5	7.6	91.8	57.6	34.3	100.0 (5,180)
자녀 유무($\chi^2=59.796^{***}$)							
예	8.0	0.6	7.4	92.0	56.8	35.3	100.0 (5,561)
아니오	10.6	0.5	10.1	89.4	59.2	30.2	100.0 (2,439)
가구 형태($\chi^2=9.287$)							
1인 가구	9.7	0.7	9.0	90.3	58.1	32.2	100.0 (1,499)
1세대 가구	9.2	0.7	8.5	90.8	57.1	33.7	100.0 (1,701)
2세대 가구	8.4	0.4	7.9	91.6	57.7	34.0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7.5	0.7	6.9	92.5	51.8	40.7	100.0 (184)
기타	11.2	0.0	11.2	88.8	54.0	34.9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나.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2.3%인 반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87.7%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인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89.7%로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0~49세와 60~69세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영향을 인식하는 응답률이 88.8%로 나타났다. 그러나 80세 이상은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9.9%로 높게 나타났다. 70~79세의 응답률 또한 16.3%로 높아 고령층일수록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미 고령기에 접어든 노인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심화가 미래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 비율이 89.2%로 중소도시(86.4%)와 농어촌(8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초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일 때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88.8%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졸은 88.1%, 중졸 이하는 83.1%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영향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인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각각 90.3%, 90.2%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을 '상'으로 생각하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각각 88.7%, 89.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약 14.0%로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에서는 유배우, 유자녀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영향 정도를 각각 88.8%, 88.4%로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무배우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14.4%, 14.0%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를 보면, 2세대 가구 및 비친족 가구를 포함한 기타 가구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각각 15.6%, 13.8%로 높았다.

〈표 4-7〉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계 (명)
전체 ¹⁾	12.3	0.7	11.6	87.7	63.6	24.1	100.0 (8,000)
성별($\chi^2=2.714$)							
남성	12.3	0.8	11.5	87.7	64.0	23.7	100.0 (3,965)
여성	12.4	0.6	11.8	87.6	63.2	24.4	100.0 (4,035)
연령($\chi^2=60.448^{***}$)							
19~29세	13.1	0.4	12.7	86.9	62.9	24.0	100.0 (1,360)
30~39세	12.3	0.9	11.4	87.7	62.6	25.1	100.0 (1,279)
40~49세	11.2	0.4	10.8	88.8	63.9	24.9	100.0 (1,533)
50~59세	10.3	0.8	9.4	89.7	65.0	24.7	100.0 (1,590)
60~69세	11.2	0.4	10.7	88.8	66.4	22.4	100.0 (1,204)
70~79세	16.3	0.7	15.6	83.7	62.0	21.8	100.0 (675)
80세 이상	19.9	2.6	17.3	80.1	55.7	24.4	100.0 (360)
지역($\chi^2=389.271^{***}$)							
대도시	10.8	0.9	9.9	89.2	63.4	25.8	100.0 (3,523)
중소도시	13.6	0.5	13.1	86.4	65.9	20.5	100.0 (3,062)
농어촌	13.4	0.6	12.8	86.6	59.2	27.3	100.0 (1,415)
교육수준($\chi^2=39.703^{***}$)							
중졸 이하	16.9	1.3	15.6	83.1	60.3	22.7	100.0 (1,211)
고졸	11.9	0.6	11.3	88.1	65.7	22.4	100.0 (2,961)
초대졸 이상	11.2	0.6	10.6	88.8	63.0	25.8	100.0 (3,829)

특성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계 (명)
경제활동 여부($\chi^2=8.161^*$)							
예	11.7	0.7	11.1	88.3	63.6	24.7	100.0 (5,520)
아니오	13.7	0.8	12.9	86.3	63.7	22.6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43.356^{***}$)							
상용직	10.6	0.7	9.8	89.4	64.7	24.8	100.0 (2,947)
임시직	19.6	1.1	18.5	80.4	58.3	22.0	100.0 (540)
일용직	9.8	0.0	9.8	90.2	66.4	23.8	100.0 (161)
자영업자	11.6	0.6	11.0	88.4	63.2	25.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9.7	0.0	9.7	90.3	61.9	28.3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1.299^{**}$)							
상(7-10)	11.3	1.2	10.1	88.7	61.8	26.9	100.0 (975)
중(5-6)	11.5	0.7	10.8	88.5	64.6	23.9	100.0 (4,186)
하(1-4)	13.9	0.6	13.4	86.1	62.7	23.4	100.0 (2,840)
경제수준($\chi^2=60.089^{***}$)							
상(상-중상)	10.5	1.8	8.6	89.5	56.0	33.5	100.0 (620)
중(중)	11.4	0.7	10.7	88.6	65.2	23.3	100.0 (4,075)
하(중하-하)	13.8	0.5	13.3	86.2	63.0	23.2	100.0 (3,304)
혼인 상태($\chi^2=18.838^{***}$)							
무배우	14.4	0.8	13.6	85.6	62.9	22.7	100.0 (2,820)
유배우	11.2	0.7	10.6	88.8	64.0	24.8	100.0 (5,180)
자녀 유무($\chi^2=17.24^{***}$)							
예	11.6	0.8	10.8	88.4	63.5	24.9	100.0 (5,561)
아니오	14.0	0.5	13.5	86.0	63.8	22.3	100.0 (2,439)
가구 형태($\chi^2=26.727^{**}$)							
1인 가구	15.6	0.7	14.8	84.4	61.9	22.5	100.0 (1,499)
1세대 가구	12.4	0.8	11.6	87.6	64.4	23.3	100.0 (1,701)
2세대 가구	11.2	0.7	10.5	88.8	64.1	24.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3.8	0.3	13.5	86.2	58.4	27.8	100.0 (184)
기타	11.2	0.0	11.2	88.8	67.9	20.9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정부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고령화 대응 정

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이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효과가 있다(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0.5%, ‘효과가 없다(전혀 효과가 없다+별로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9.5%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에 비해 6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된다. 여성은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1.8%로 높은 반면, 남성은 79.2%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80세 이상 85.7%)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22.7%)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의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83.8%로 대도시(79.3%)와 중소도시(8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의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20.7%로 중소도시(19.7%)와 농어촌(16.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일 때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6.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졸은 81.6%, 초대졸 이상은 77.9%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하’로 낮게 생각하는 경우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 83.0%로 나타났다. 주관

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의 고령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낮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를 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1.7%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77.8%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를 보면, 1인 가구의 경우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이 82.5%로 타 가구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단위: %, 명, 점)

특성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계 (명)	평균
전체 ¹⁾	19.5	1.5	18.0	80.5	69.2	11.3	100.0 (8,000)	2.9
성별($\chi^2=10.182^*$)								
남성	20.8	1.4	19.4	79.2	68.2	11.0	100.0 (3,965)	2.9
여성	18.2	1.5	16.7	81.8	70.3	11.5	100.0 (4,035)	2.9
연령($\chi^2=171.206^{***}$)								
19~29세	22.7	1.9	20.8	77.3	69.1	8.2	100.0 (1,360)	2.8
30~39세	21.7	1.6	20.1	78.3	70.5	7.7	100.0 (1,279)	2.8
40~49세	19.9	1.4	18.5	80.1	70.5	9.7	100.0 (1,533)	2.9
50~59세	18.6	1.4	17.3	81.4	71.0	10.3	100.0 (1,590)	2.9
60~69세	17.2	1.1	16.1	82.8	69.3	13.6	100.0 (1,204)	3.0
70~79세	16.8	1.3	15.5	83.2	65.7	17.5	100.0 (675)	3.0
80세 이상	14.3	1.7	12.6	85.7	58.6	27.1	100.0 (360)	3.1
지역($\chi^2=84.785^{***}$)								
대도시	20.7	1.9	18.7	79.3	69.0	10.3	100.0 (3,523)	2.9
중소도시	19.7	1.1	18.6	80.3	70.9	9.4	100.0 (3,062)	2.9
농어촌	16.2	1.1	15.1	83.8	66.2	17.7	100.0 (1,415)	3.0
교육수준($\chi^2=162.82^{***}$)								
중졸 이하	13.8	1.6	12.2	86.2	65.3	20.8	100.0 (1,211)	3.1
고졸	18.4	1.3	17.2	81.6	70.9	10.6	100.0 (2,961)	2.9
초대졸 이상	22.1	1.6	20.5	77.9	69.2	8.7	100.0 (3,829)	2.9
경제활동 여부($\chi^2=8.098^*$)								
예	19.5	1.4	18.1	80.5	69.9	10.7	100.0 (5,520)	2.9
아니오	19.5	1.7	17.8	80.5	67.9	12.6	100.0 (2,480)	2.9

특성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계 (명)	평균
중상상 지위($\chi^2=38.208^{***}$)								
상용직	20.5	1.5	19.0	79.5	70.6	8.8	100.0 (2,947)	2.9
임시직	18.5	1.0	17.5	81.5	70.1	11.4	100.0 (540)	2.9
일용직	18.6	3.2	15.4	81.4	64.8	16.5	100.0 (161)	2.9
자영업자	18.5	1.1	17.4	81.5	68.9	12.5	100.0 (1,758)	2.9
무급가족종사자	12.9	1.3	11.5	87.1	70.0	17.1	100.0 (115)	3.0
주관적 사회계층 ($\chi^2=37.917^{***}$)								
상(7-10)	18.3	1.9	16.3	81.7	70.6	11.2	100.0 (975)	2.9
중(5-6)	21.4	1.5	20.0	78.6	68.6	9.9	100.0 (4,186)	2.9
하(1-4)	17.0	1.3	15.7	83.0	69.7	13.2	100.0 (2,840)	2.9
경제수준($\chi^2=40.297^{***}$)								
상(상-중상)	24.2	2.8	21.5	75.8	62.4	13.3	100.0 (620)	2.9
중(중)	20.5	1.3	19.2	79.5	69.4	10.0	100.0 (4,075)	2.9
하(중하-하)	17.3	1.4	15.9	82.7	70.3	12.4	100.0 (3,304)	2.9
혼인 상태($\chi^2=4.975$)								
무배우	20.1	1.8	18.3	79.9	69.0	10.9	100.0 (2,820)	2.9
유배우	19.1	1.3	17.9	80.9	69.4	11.5	100.0 (5,180)	2.9
자녀 유무($\chi^2=51.976^{***}$)								
예	18.3	1.2	17.1	81.7	69.5	12.2	100.0 (5,561)	2.9
아니오	22.2	2.1	20.1	77.8	68.7	9.1	100.0 (2,439)	2.8
가구 형태($\chi^2=66.678^{***}$)								
1인 가구	17.5	1.9	15.7	82.5	68.1	14.4	100.0 (1,499)	2.9
1세대 가구	18.9	1.5	17.3	81.1	66.8	14.3	100.0 (1,701)	2.9
2세대 가구	20.3	1.3	19.0	79.7	70.7	9.0	100.0 (4,605)	2.9
3세대 이상 가구	20.2	2.8	17.4	79.8	65.6	14.2	100.0 (184)	2.9
기타	28.1	0.0	28.1	71.9	51.9	20.0	100.0 (12)	2.9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라.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향후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노후 소득보장'(39.3%)과 '노년기 의료보장'(20.2%) 지원 정책, '고

령자 고용지원'(13.5%)과 '노년기 돌봄'(12.8%)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노인의 '고령친화 환경조성' 정책과 '여가활동 지원' 정책은 각각 6.2%,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 마련은 1.7%로 나타났다. 여전히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는 노년기의 소득, 건강, 돌봄, 고용 정책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 주관적 사회계층, 가구 형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노년기 돌봄'(15.4%)과 '고령자 고용지원'(13.6%) 정책을, 중소도시에서는 '노후 소득보장'(40.7%)과 '노후 여가활동지원'(7.6%),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 마련'(1.9%) 정책을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년기 의료보장'(22.9%)과 '고령친화 환경 조성'(7.1%) 정책에 대한 응답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에서는 본인이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14.9%)과 '노후여가 활동지원'(10.3%), '고령친화 환경 조성'(9.0%) 정책을, '중(5-6)'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노년기 의료보장'(21.1%)과 '노년기 돌봄'(13.5%) 정책의 필요성을 타 집단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하(1-4)'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노후 소득보장'(40.8%) 정책의 필요성을 타 집단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

가구 형태를 보면, 2세대 가구는 '노년기 돌봄'(13.0%)과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 마련'(1.8%) 정책을, 3세대 이상 가구는 '노후 소득보장'(48.2%)의 응답률이 타 가구 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성	노년기 소득보장	노년기 의료보장	노년기 돌봄	고령자 고용지원	고령친화 환경조성	노후여가 활동지원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 마련	기타 ³⁾	계(명)
경제수준($\chi^2=17.821$)									
상(상-중상)	36.3	18.2	14.8	14.4	8.5	6.1	1.7	0.0	100.0 (620)
중(중)	39.2	20.3	12.7	13.1	6.2	6.8	1.7	0.1	100.0 (4,075)
하(중하-하)	40.1	20.4	12.5	13.8	5.8	5.5	1.7	0.1	100.0 (3,304)
혼인 상태($\chi^2=9.714$)									
무배우	41.3	20.2	12.4	12.8	5.9	5.9	1.5	0.1	100.0 (2,820)
유배우	38.3	20.2	13.0	13.9	6.4	6.4	1.8	0.1	100.0 (5,180)
자녀 유무($\chi^2=3.197$)									
예	39.1	20.1	12.7	13.8	6.1	6.4	1.7	0.1	100.0 (5,561)
아니오	39.8	20.3	13.0	12.8	6.5	5.8	1.8	0.1	100.0 (2,439)
가구 형태($\chi^2=46.595^*$)									
1인 가구	40.2	19.2	12.8	12.9	6.9	6.4	1.3	0.2	100.0 (1,499)
1세대 가구	41.9	20.0	12.3	11.2	7.2	5.6	1.7	0.0	100.0 (1,701)
2세대 가구	37.8	20.5	13.0	14.7	5.7	6.4	1.8	0.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8.2	20.7	12.2	9.9	3.6	4.3	1.0	0.0	100.0 (184)
기타	20.9	30.7	5.3	19.9	16.0	7.2	0.0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기타 0.1%(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 1건,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므로 더 이상 혜택을 주는 정책을 안 했으면 좋겠다 1건, 노후자금 1건, 안락사 법적 허용 1건, 직업 알선, 정년 연장 1건, 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1건

마. 아동·노인 돌봄 및 청년·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책임 분담 인식

생애주기별 돌봄과 소득보장을 위해 개인, 가족, 기업과 정부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4개 주체(개인, 가족, 기업, 정부)의 책임 분담의 합이 10점이 되도록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돌봄 및 소득보장의 모든 문항에서 정부의 역할 분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또는 노인 돌봄의 경우 가족이 그 뒤를 이었다. 청년 또는 노인 소득보장의 경우에는 기업과 개인의 역할 분담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1) 아동·노인 돌봄

아동 돌봄의 경우 응답자 평균 점수는 정부가 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가족이 2.4점, 기업 2.1점, 개인 2.0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개인 스스로 돌봄의 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가족과 개인의 비율은 보호자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보호자의 점수가 4.4점으로 가장 높으며, 정부 3.5점, 기업 2.1점의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아동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라고 보는 경향이 보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을 높게 보았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업보다는 정부 및 개인의 책임을 높게 보았으며,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정부 및 가족,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책임을 높게 보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특히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는데, 동거/사실혼, 사별인 경우 개인의 책임이 높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무자녀 응답자에 비해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기업의 책임은 낮고, 가족의 책임은 높게 보았다.

〈표 4-10〉 아동 돌봄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특성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명)	
전체 ¹⁾	3.5	2.1	2.4	2.0	10.0	(8,000)
성별	(t=0.297)	(t=-0.098)	(t=1.429)	(t=-1.763)		
남성	3.5	2.1	2.5	2.0	10.0	(3,965)
여성	3.5	2.1	2.4	2.0	10.0	(4,035)
연령	(F=2.546*)	(F=1.548)	(F=1.443)	(F=2.565*)		
19~29세	3.5	2.1	2.4	1.9	10.0	(1,360)
30~39세	3.6	2.1	2.4	2.0	10.0	(1,279)
40~49세	3.5	2.1	2.4	2.0	10.0	(1,533)
50~59세	3.5	2.1	2.4	2.0	10.0	(1,590)
60~69세	3.5	2.1	2.4	2.0	10.0	(1,204)
70~79세	3.5	2.0	2.5	2.0	10.0	(675)
80세 이상	3.3	2.0	2.6	2.2	10.0	(360)
지역	(F=0.372)	(F=12.661****)	(F=8.802****)	(F=0.818)		
대도시	3.5	2.1	2.4	2.0	10.0	(3,523)
중소도시	3.5	2.0	2.5	2.0	10.0	(3,062)
농어촌	3.5	2.1	2.5	2.0	10.0	(1,415)
교육수준	(F=4.72**)	(F=3.883*)	(F=1.511)	(F=8.783****)		
중졸 이하	3.4	2.0	2.5	2.1	10.0	(1,211)
고졸	3.5	2.1	2.4	2.0	10.0	(2,961)
초대졸 이상	3.5	2.1	2.4	1.9	10.0	(3,829)
경제활동 여부	(t=-0.158)	(t=3.069**)	(t=-1.615)	(t=-0.677)		
예	3.5	2.1	2.4	2.0	10.0	(5,520)
아니오	3.5	2.0	2.5	2.0	10.0	(2,480)
종사상 지위	(F=0.398)	(F=2.38*)	(F=1.022)	(F=2.988*)		
상용직	3.5	2.1	2.4	2.0	10.0	(2,947)
임시직	3.5	2.1	2.4	1.9	10.0	(540)
일용직	3.6	1.9	2.3	2.2	10.0	(161)
자영업자	3.5	2.1	2.4	2.0	1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5	2.0	2.2	2.3	1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F=12.925****)	(F=6.44**)	(F=2.444)	(F=11.632****)		
상(7-10)	3.7	2.0	2.5	1.8	10.0	(975)
중(5-6)	3.5	2.1	2.4	2.0	10.0	(4,186)
하(1-4)	3.5	2.1	2.4	2.0	10.0	(2,840)
경제수준	(F=8.205****)	(F=11.644****)	(F=8.477****)	(F=4.782**)		
상(상-중상)	3.4	2.3	2.3	2.1	10.0	(620)
중(중)	3.5	2.1	2.5	2.0	10.0	(4,075)
하(중하-하)	3.6	2.0	2.4	2.0	10.0	(3,304)
혼인 상태	(F=1.486)	(F=7.605****)	(F=0.153)	(F=7.594****)		
미혼	3.5	2.1	2.4	1.9	10.0	(1,886)
동거/사실혼	3.5	2.0	2.4	2.1	10.0	(1,248)
법률혼(유배우)	3.5	2.1	2.4	1.9	10.0	(3,932)
이혼/별거	3.4	2.2	2.4	2.0	10.0	(280)
사별	3.4	2.0	2.5	2.1	10.0	(654)
자녀 유무	(t=0.099)	(t=-4.544****)	(t=2.147*)	(t=1.443)		
예	3.5	2.0	2.5	2.0	10.0	(5,561)
아니오	3.5	2.2	2.4	2.0	10.0	(2,439)
가구 형태	(F=0.073)	(F=0.642)	(F=1.533)	(F=0.594)		
1세대 가구	3.5	2.1	2.4	2.0	10.0	(3,200)
2세대 가구	3.5	2.1	2.4	2.0	1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5	2.0	2.6	1.9	10.0	(184)
기타	3.4	2.3	2.3	2.0	1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노인 돌봄의 경우에도 응답자 평균 점수는 정부가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가족이 2.5점, 개인 1.9점, 기업 1.8점으로 나타났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책임을 높게 보았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중소도시에서는 가족의 책임을 특히 높게 보았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책임을 높게 보았고,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무급 가족종사자는 가족보다 기업, 임시직의 경우 기업보다 가족의 책임을 높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타 항목과 마찬가지로 노인 돌봄에 대해서도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였고,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4-11〉 노인 돌봄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특성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 (명)	
전체 ¹⁾	3.8	1.8	2.5	1.9	10.0	(8,000)
성별	(t=1.926)	(t=-0.563)	(t=-0.742)	(t=-1.136)		
남성	3.8	1.8	2.5	1.9	10.0	(3,965)
여성	3.8	1.8	2.5	2.0	10.0	(4,035)
연령	(F=0.236)	(F=0.899)	(F=0.227)	(F=0.048)		
19~29세	3.8	1.8	2.5	1.9	10.0	(1,360)
30~39세	3.8	1.7	2.5	1.9	10.0	(1,279)
40~49세	3.8	1.8	2.5	1.9	10.0	(1,533)
50~59세	3.8	1.7	2.5	2.0	10.0	(1,590)
60~69세	3.8	1.7	2.5	1.9	10.0	(1,204)
70~79세	3.8	1.8	2.5	1.9	10.0	(675)
80세 이상	3.8	1.8	2.5	2.0	10.0	(360)
지역	(F=0.356)	(F=23.75***)	(F=21.555***)	(F=6.952***)		
대도시	3.8	1.8	2.4	2.0	10.0	(3,523)
중소도시	3.8	1.7	2.6	1.9	10.0	(3,062)
농어촌	3.8	1.9	2.4	1.9	10.0	(1,415)
교육수준	(F=0.009)	(F=0.277)	(F=2.277)	(F=3.245*)		
중졸 이하	3.8	1.8	2.5	1.9	10.0	(1,211)
고졸	3.8	1.8	2.5	2.0	10.0	(2,961)
초대졸 이상	3.8	1.8	2.5	1.9	10.0	(3,829)
경제활동 여부	(t=-0.853)	(t=0.937)	(t=0.012)	(t=0.176)		
예	3.8	1.8	2.5	1.9	10.0	(5,520)
아니오	3.8	1.7	2.5	1.9	10.0	(2,480)

특성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 (명)	
종사상 지위	(F=1.924)	(F=2.449*)	(F=2.843*)	(F=0.716)		
상용직	3.8	1.8	2.5	1.9	10.0	(2,947)
임시직	3.6	1.7	2.6	2.0	10.0	(540)
일용직	3.9	1.6	2.5	2.0	10.0	(161)
자영업자	3.8	1.7	2.5	2.0	1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8	1.9	2.4	1.9	1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F=8.198***)	(F=10.561***)	(F=16.765***)	(F=3.442*)		
상(7-10)	4.0	1.8	2.4	1.9	10.0	(975)
중(5-6)	3.8	1.8	2.5	1.9	10.0	(4,186)
하(1-4)	3.7	1.7	2.6	2.0	10.0	(2,840)
경제수준	(F=7.692***)	(F=37.449***)	(F=4.838***)	(F=0.377)		
상(상-중상)	3.6	2.0	2.4	1.9	10.0	(620)
중(중)	3.8	1.8	2.5	2.0	10.0	(4,075)
하(중하-하)	3.9	1.7	2.5	1.9	10.0	(3,304)
혼인 상태	(F=1.113)	(F=15.079***)	(F=6.577***)	(F=2.359)		
미혼	3.8	1.8	2.5	2.0	10.0	(1,886)
동거/사실혼	3.8	1.5	2.6	2.0	10.0	(1,248)
법률혼(유배우)	3.8	1.8	2.4	1.9	10.0	(3,932)
이혼/별거	3.7	1.8	2.5	1.9	10.0	(280)
사별	3.8	1.8	2.5	1.9	10.0	(654)
자녀 유무	(t=1.119)	(t=-3.345***)	(t=1.659)	(t=0.073)		
예	3.8	1.7	2.5	1.9	10.0	(5,561)
아니오	3.8	1.8	2.5	1.9	10.0	(2,439)
가구 형태	(F=0.777)	(F=1.084)	(F=1.125)	(F=0.605)		
1세대 가구	3.8	1.8	2.5	1.9	10.0	(3,200)
2세대 가구	3.8	1.7	2.5	1.9	1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0	1.7	2.5	1.8	10.0	(184)
기타	3.6	1.8	2.6	1.9	1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2) 청년·노인 소득보장

청년 소득보장의 경우 응답자 평균 점수는 정부가 3.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기업과 개인이 2.6점으로 동일하며, 마지막으로 가족은 1.7점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책임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의 경우 정부의 책임을 낮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의 책임을 높게

보았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개인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높게 보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보다는 정부, 기업의 책임을 높게 보았다. 혼인 상태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 특히 이혼/별거 응답자의 경우 기업의 책임을 크게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고(평균 2.8점), 동거/사실혼 응답자인 경우 가족(1.8점) 및 개인(2.7점)의 책임을 크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보다는 가족 및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표 4-12〉 청년 소득보장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특성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 (명)	
전체 ¹⁾	3.2	2.6	1.7	2.6	10.0	(8,000)
성별	(t=0.812)	(t=1.546)	(t=-0.423)	(t=-1.564)		
남성	3.2	2.6	1.7	2.6	10.0	(3,965)
여성	3.2	2.6	1.7	2.6	10.0	(4,035)
연령	(F=3.107 ^{***})	(F=1.072)	(F=0.537)	(F=4.499 ^{***})		
19~29세	3.3	2.6	1.7	2.5	10.0	(1,360)
30~39세	3.2	2.6	1.7	2.5	10.0	(1,279)
40~49세	3.2	2.6	1.7	2.6	10.0	(1,533)
50~59세	3.1	2.6	1.6	2.7	10.0	(1,590)
60~69세	3.1	2.6	1.7	2.6	10.0	(1,204)
70~79세	3.1	2.6	1.7	2.5	10.0	(675)
80세 이상	3.1	2.5	1.7	2.7	10.0	(360)
지역	(F=9.831 ^{***})	(F=12.641 ^{***})	(F=6.618 ^{**})	(F=2.276)		
대도시	3.1	2.6	1.6	2.6	10.0	(3,523)
중소도시	3.2	2.5	1.7	2.6	10.0	(3,062)
농어촌	3.2	2.6	1.6	2.5	10.0	(1,415)
교육수준	(F=1.424)	(F=0.321)	(F=0.58)	(F=3.799 [*])		
중졸 이하	3.1	2.6	1.7	2.6	10.0	(1,211)
고졸	3.1	2.6	1.7	2.6	10.0	(2,961)
초대졸 이상	3.2	2.6	1.7	2.5	10.0	(3,829)
경제활동 여부	(t=0.392)	(t=-0.212)	(t=-0.348)	(t=0.088)		
예	3.2	2.6	1.7	2.6	10.0	(5,520)
아니오	3.2	2.6	1.7	2.6	10.0	(2,480)
종사상 지위	(F=1.69)	(F=0.512)	(F=2.623 [*])	(F=2.839 [*])		
상용직	3.2	2.6	1.7	2.5	10.0	(2,947)
임시직	3.1	2.5	1.7	2.7	10.0	(540)
일용직	3.3	2.6	1.5	2.7	10.0	(161)
자영업자	3.1	2.6	1.6	2.6	1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2	2.6	1.5	2.6	1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F=44.804 ^{***})	(F=22.395 ^{***})	(F=9.538 ^{***})	(F=23.451 ^{***})		
상(7-10)	3.5	2.3	1.8	2.3	10.0	(975)
중(5-6)	3.1	2.6	1.7	2.6	10.0	(4,186)
하(1-4)	3.1	2.6	1.6	2.6	10.0	(2,840)

특성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 (명)
경제수준	(F=2.695)	(F=6.207**)	(F=0.539)	(F=3.245*)	
상(상-중상)	3.2	2.7	1.7	2.4	10.0 (620)
중(중)	3.1	2.6	1.7	2.6	10.0 (4,075)
하(중하-하)	3.2	2.5	1.7	2.6	10.0 (3,304)
혼인 상태	(F=6.998***)	(F=3.963**)	(F=3.209*)	(F=5.522***)	
미혼	3.2	2.6	1.7	2.5	10.0 (1,886)
동거/사실혼	3.0	2.5	1.8	2.7	10.0 (1,248)
법률혼(유배우)	3.2	2.6	1.6	2.6	10.0 (3,932)
이혼/별거	3.1	2.8	1.6	2.5	10.0 (280)
사별	3.1	2.5	1.7	2.6	10.0 (654)
자녀 유무	(t=-3.912***)	(t=-2.376*)	(t=1.675)	(t=4.07***)	
예	3.1	2.6	1.7	2.6	10.0 (5,561)
아니오	3.3	2.6	1.6	2.5	10.0 (2,439)
가구 형태	(F=1.002)	(F=0.591)	(F=0.088)	(F=1.933)	
1세대 가구	3.2	2.6	1.7	2.5	10.0 (3,200)
2세대 가구	3.1	2.6	1.7	2.6	1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2	2.6	1.6	2.6	10.0 (184)
기타	3.1	3.0	1.6	2.3	1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마지막으로 노인 소득보장의 경우 응답자 평균 점수는 정부가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개인(2.2점)과 기업(2.1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부와 가족의 책임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경우 개인의 책임을, 농어촌의 경우 기업의 책임을 높게 보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기업의 책임을 높게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정부의 책임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책임을 특히 높게 인식하였다. 혼인 상태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 미혼 및 동거/사실혼인 경우 개인의 책임을, 법률혼(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의 경우 기업의 책임을 타 집단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다.

〈표 4-13〉 노인 소득보장의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특성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명)	
전체 ¹⁾	3.8	2.1	1.9	2.2	10.0	(8,000)
성별	(t=1.697)	(t=0.69)	(t=-3.164**)	(t=0.187)		
남성	3.8	2.1	1.9	2.2	10.0	(3,965)
여성	3.7	2.1	2.0	2.2	10.0	(4,035)
연령	(F=0.956)	(F=1.035)	(F=0.885)	(F=0.131)		
19~29세	3.7	2.2	1.9	2.2	10.0	(1,360)
30~39세	3.7	2.1	2.0	2.2	10.0	(1,279)
40~49세	3.8	2.1	1.9	2.2	10.0	(1,533)
50~59세	3.8	2.1	1.9	2.2	10.0	(1,590)
60~69세	3.8	2.1	1.9	2.2	10.0	(1,204)
70~79세	3.7	2.1	2.0	2.1	10.0	(675)
80세 이상	3.9	2.0	2.0	2.1	10.0	(360)
지역	(F=1.466)	(F=12.812****)	(F=6.165**)	(F=2.792)		
대도시	3.8	2.1	1.9	2.2	10.0	(3,523)
중소도시	3.8	2.1	2.0	2.1	10.0	(3,062)
농어촌	3.7	2.2	1.9	2.1	10.0	(1,415)
교육수준	(F=0.034)	(F=3.616*)	(F=2.437)	(F=0.553)		
중졸 이하	3.8	2.1	2.0	2.2	10.0	(1,211)
고졸	3.8	2.1	1.9	2.2	10.0	(2,961)
초대졸 이상	3.8	2.2	1.9	2.2	10.0	(3,829)
경제활동 여부	(t=-1.549)	(t=2.01*)	(t=-0.976)	(t=0.935)		
예	3.8	2.1	1.9	2.2	10.0	(5,520)
아니오	3.8	2.1	2.0	2.1	10.0	(2,480)
종사상 지위	(F=1.084)	(F=1.144)	(F=1.794)	(F=2.362)		
상용직	3.8	2.2	1.9	2.1	10.0	(2,947)
임시직	3.7	2.1	1.9	2.3	10.0	(540)
일용직	3.9	2.0	1.7	2.4	10.0	(161)
자영업자	3.8	2.1	1.9	2.2	1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7	2.2	1.9	2.2	1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F=6.943****)	(F=8.232****)	(F=0.116)	(F=8.521****)		
상(7-10)	3.9	2.1	1.9	2.1	10.0	(975)
중(5-6)	3.7	2.2	1.9	2.1	10.0	(4,186)
하(1-4)	3.7	2.1	1.9	2.2	10.0	(2,840)
경제수준	(F=12.586****)	(F=20.648****)	(F=1.561)	(F=1.102)		
상(상-중상)	3.5	2.4	2.0	2.1	10.0	(620)
중(중)	3.7	2.2	1.9	2.2	10.0	(4,075)
하(중하-하)	3.8	2.1	1.9	2.2	10.0	(3,304)
혼인 상태	(F=2.472*)	(F=5.958****)	(F=3.443**)	(F=3.225*)		
미혼	3.7	2.2	1.9	2.2	10.0	(1,886)
동거/사실혼	3.7	2.0	2.0	2.3	10.0	(1,248)
법률혼(유배우)	3.8	2.2	1.9	2.1	10.0	(3,932)
이혼/별거	3.8	2.2	1.9	2.1	10.0	(280)
사별	3.8	2.0	2.0	2.1	10.0	(654)
자녀 유무	(t=0.729)	(t=-3.522****)	(t=1.301)	(t=1.124)		
예	3.8	2.1	1.9	2.2	10.0	(5,561)
아니오	3.8	2.2	1.9	2.1	10.0	(2,439)
가구 형태	(F=1.103)	(F=0.32)	(F=1.97)	(F=1.466)		
1세대 가구	3.8	2.1	1.9	2.1	10.0	(3,200)
2세대 가구	3.8	2.1	1.9	2.2	1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9	2.1	2.0	2.1	10.0	(184)
기타	3.2	2.2	2.6	2.0	1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제2절 인구 규모와 지역 간 분포에 대한 인식

1. 인구 감소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

국민들이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지 질문한 결과, 인구 감소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94.1%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가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별, 경제활동 여부, 가구 형태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60~79세인 경우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96.3%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50~59세 95.6%, 80세 이상이 94.5%를 차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으며,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 감소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94.5%로 대도시(94.1%)와 농어촌(93.5%)에 비해 높았다. 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률이 6.0%로 대도시(5.9%)와 중소도시(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일 때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96.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졸은 94.5%, 초대졸 이상은 93.2%로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조사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6.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졸은 5.5%, 중졸 이하는 3.9%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94.7%, 94.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경제수준을 ‘상(상-중상)’ 또는 ‘중(중)’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6.8%, 6.0%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를 보면, 유배우와 유자녀의 경우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94.9%와 95.0%로 나타나 무배우, 무자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에서 인구 감소 현상을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95.3%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단위: %, 명)

특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이다	다소 문제 이다	매우 문제 이다	계 (명)
전체 ¹⁾	5.9	0.4	5.5	94.1	60.7	33.4	100.0 (8,000)
성별($\chi^2=3.084$)							
남성	6.3	0.4	5.9	93.7	60.6	33.1	100.0 (3,965)
여성	5.5	0.5	5.1	94.5	60.8	33.7	100.0 (4,035)
연령($\chi^2=75.527^{***}$)							
19~29세	9.2	1.0	8.2	90.8	59.6	31.2	100.0 (1,360)
30~39세	7.0	0.3	6.7	93.0	61.6	31.4	100.0 (1,279)
40~49세	6.4	0.2	6.1	93.6	61.6	32.1	100.0 (1,533)
50~59세	4.4	0.4	4.0	95.6	60.1	35.5	100.0 (1,590)
60~69세	3.7	0.5	3.3	96.3	60.5	35.8	100.0 (1,204)
70~79세	3.7	0.3	3.4	96.3	61.8	34.5	100.0 (675)
80세 이상	5.5	0.0	5.5	94.5	59.1	35.5	100.0 (360)

특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이다	다소 문제 이다	매우 문제 이다	계 (명)	
지역($\chi^2=47.051^{***}$)								
대도시	5.9	0.7	5.2	94.1	61.8	32.2	100.0	(3,523)
중소도시	5.5	0.2	5.4	94.5	62.4	32.0	100.0	(3,062)
농어촌	6.5	0.1	6.4	93.5	54.2	39.3	100.0	(1,415)
교육수준($\chi^2=25.279^{***}$)								
중졸 이하	3.9	0.3	3.6	96.1	58.9	37.2	100.0	(1,211)
고졸	5.5	0.4	5.0	94.5	60.5	34.1	100.0	(2,961)
초대졸 이상	6.8	0.5	6.4	93.2	61.4	31.7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7.278$)								
예	6.3	0.5	5.8	93.7	61.0	32.7	100.0	(5,520)
아니오	5.0	0.3	4.7	95.0	60.0	34.9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51.601^{***}$)								
상용직	7.1	0.6	6.5	92.9	63.4	29.5	100.0	(2,947)
임시직	8.2	0.6	7.6	91.8	51.9	39.9	100.0	(540)
일용직	3.2	0.0	3.2	96.8	57.3	39.5	100.0	(161)
자영업자	4.9	0.3	4.5	95.1	60.3	34.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2.7	0.0	2.7	97.3	57.9	39.4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50.981^{***}$)								
상(7-10)	6.8	0.3	6.6	93.2	63.0	30.2	100.0	(975)
중(5-6)	6.0	0.6	5.5	94.0	63.0	30.9	100.0	(4,186)
하(1-4)	5.3	0.2	5.1	94.7	56.5	38.2	100.0	(2,840)
경제수준($\chi^2=54.126^{***}$)								
상(상-중상)	6.1	0.4	5.7	93.9	58.6	35.3	100.0	(620)
중(중)	6.1	0.6	5.5	93.9	64.1	29.8	100.0	(4,075)
하(중하-하)	5.6	0.2	5.4	94.4	56.9	37.5	100.0	(3,304)
혼인 상태($\chi^2=17.486^{***}$)								
무배우	7.2	0.7	6.6	92.8	59.6	33.1	100.0	(2,820)
유배우	5.1	0.3	4.9	94.9	61.3	33.6	100.0	(5,180)
자녀 유무($\chi^2=38.289^{***}$)								
예	5.0	0.3	4.6	95.0	60.2	34.8	100.0	(5,561)
아니오	8.0	0.6	7.4	92.0	61.8	30.2	100.0	(2,439)
가구 형태($\chi^2=15.471$)								
1인 가구	6.3	0.7	5.6	93.7	58.1	35.6	100.0	(1,499)
1세대 가구	4.7	0.3	4.4	95.3	61.2	34.1	100.0	(1,701)
2세대 가구	6.2	0.4	5.8	93.8	61.3	32.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6.3	0.5	5.8	93.7	63.1	30.6	100.0	(184)
기타	8.7	0.0	8.7	91.3	55.2	36.1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화되는 현상에 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92.7%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인 7.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인구 감소 현상

의 ‘사회적 문제’ 인식 문항과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인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60~69세인 경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9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79세인 경우 93.9%, 50~59세는 93.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9~29세인 경우에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1.7%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93.4%로 대도시(92.0%)와 농어촌(92.7%)에 비해 높았다.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률이 8.0%로 중소도시(6.6%)와 농어촌(7.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인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9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는 92.7%, 초대졸 이상은 91.9%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하’로 낮게 인식하는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93.6%, 93.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상’으로 높게 생각할수록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8.1%, 9.6%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 여부와 주관적 사회계층, 경제수준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의 응답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를 보면, 유배우, 유자녀의 경우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93.7%, 93.6%로 높았다. 반면, 무배우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

중되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9.2%, 9.7%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 차이를 보면, 1인 가구를 제외한 1세대 가구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94.6%로 타 가구 형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표 4-15〉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단위: %, 명)

특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이다	다소 문제 이다	매우 문제 이다	계 (명)
전체 ¹⁾	7.3	0.3	7.0	92.7	62.8	29.9	100.0 (8,000)
성별($\chi^2=2.622$)							
남성	7.6	0.4	7.1	92.4	62.9	29.5	100.0 (3,965)
여성	7.0	0.2	6.8	93.0	62.7	30.2	100.0 (4,035)
연령($\chi^2=71.296^{***}$)							
19~29세	11.7	0.4	11.2	88.3	61.7	26.6	100.0 (1,360)
30~39세	7.1	0.5	6.7	92.9	64.8	28.0	100.0 (1,279)
40~49세	6.8	0.4	6.4	93.2	65.0	28.2	100.0 (1,533)
50~59세	6.4	0.3	6.0	93.6	62.1	31.6	100.0 (1,590)
60~69세	5.3	0.2	5.1	94.7	60.8	34.0	100.0 (1,204)
70~79세	6.1	0.0	6.1	93.9	61.7	32.2	100.0 (675)
80세 이상	6.8	0.2	6.6	93.2	62.3	30.8	100.0 (360)
지역($\chi^2=62.628^{***}$)							
대도시	8.0	0.5	7.4	92.0	63.8	28.2	100.0 (3,523)
중소도시	6.6	0.2	6.4	93.4	65.2	28.2	100.0 (3,062)
농어촌	7.3	0.1	7.1	92.7	55.0	37.7	100.0 (1,415)
교육수준($\chi^2=17.699^{**}$)							
중졸 이하	7.3	0.1	7.2	92.7	59.6	33.1	100.0 (1,211)
고졸	6.3	0.4	5.9	93.7	64.1	29.6	100.0 (2,961)
초대졸 이상	8.1	0.4	7.7	91.9	62.8	29.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4.263$)							
예	7.0	0.4	6.6	93.0	63.3	29.6	100.0 (5,520)
아니오	8.0	0.3	7.7	92.0	61.6	30.4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81.633^{***}$)							
상용직	7.6	0.3	7.3	92.4	66.8	25.6	100.0 (2,947)
임시직	8.0	0.4	7.6	92.0	54.5	37.6	100.0 (540)
일용직	4.7	0.0	4.7	95.3	57.5	37.8	100.0 (161)
자영업자	6.0	0.4	5.5	94.0	61.1	32.9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6	0.0	5.6	94.4	58.4	36.0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57.994^{***}$)							
상(7-10)	8.1	1.0	7.0	91.9	65.7	26.3	100.0 (975)
중(5-6)	7.7	0.3	7.5	92.3	64.5	27.7	100.0 (4,186)
하(1-4)	6.4	0.2	6.2	93.6	59.3	34.3	100.0 (2,840)

특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별로 문제가 아니다	문제 이다	다소 문제 이다	매우 문제 이다	계 (명)
경제수준($\chi^2=61.641^{***}$)							
상(상-중상)	9.6	1.3	8.2	90.4	55.2	35.2	100.0 (620)
중(중)	7.5	0.3	7.2	92.5	65.6	26.9	100.0 (4,075)
하(중하-하)	6.6	0.1	6.5	93.4	60.8	32.6	100.0 (3,304)
혼인 상태($\chi^2=23.553^{***}$)							
무배우	9.2	0.5	8.7	90.8	61.5	29.3	100.0 (2,820)
유배우	6.3	0.3	6.0	93.7	63.5	30.2	100.0 (5,180)
자녀 유무($\chi^2=32.472^{***}$)							
예	6.3	0.2	6.0	93.7	63.1	30.7	100.0 (5,561)
아니오	9.7	0.6	9.1	90.3	62.2	28.1	100.0 (2,439)
가구 형태($\chi^2=25.296^*$)							
1인 가구	7.7	0.6	7.1	92.3	60.5	31.9	100.0 (1,499)
1세대 가구	5.4	0.1	5.3	94.6	62.5	32.0	100.0 (1,701)
2세대 가구	7.8	0.3	7.4	92.2	63.6	28.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9.2	0.7	8.5	90.8	65.4	25.4	100.0 (184)
기타	17.0	0.0	17.0	83.0	48.6	34.4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2.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

가.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 적절성 인식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적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매우 많은 편+많은 편)는 응답이 52.2%로, 인구 규모가 적다(매우 적은 편+적은 편)는 응답(47.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구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인 경우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39세의 비율이 55.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5.7%로 조사되

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경기는 63.0%, 부산/경남/울산은 49.7%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강원은 77.5%, 대구/경북은 73.8%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68.1%로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는 49.4%가 많다고 응답, 농어촌은 18.8%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농어촌의 경우 81.2%의 응답자가 현 거주지역의 인구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인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 이상인 경우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0.1%, 58.0%로 높았다. 반면,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다고 느끼는 비율이 60.5%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인 경우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68.4%, 53.5%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높게 생각하거나 경제수준을 중간으로 생각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5.5%, 54.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하'로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1.4%, 50.8%로 조사되었다.

가구 형태를 보면, 2세대 가구에서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6.2%로 높았으며, 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5.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6〉 현 거주지역의 인구 규모에 대한 적절성 판단

(단위: %, 명, 점)

특성	많다	매우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적다	적은 편이다	매우 적은 편이다	계(명)	평균
전체 ¹⁾	52.2	4.5	47.8	47.8	41.7	6.0	100.0 (8,000)	2.5
성별($\chi^2=6.395$)								
남성	51.4	4.6	46.8	48.6	42.0	6.6	100.0 (3,965)	2.5
여성	53.1	4.3	48.8	46.9	41.4	5.5	100.0 (4,035)	2.5
연령($\chi^2=77.926^{***}$)								
19~29세	57.6	4.8	52.8	42.4	37.6	4.8	100.0 (1,360)	2.4
30~39세	55.1	5.3	49.8	44.9	40.3	4.6	100.0 (1,279)	2.4
40~49세	52.7	3.6	49.1	47.3	42.3	5.0	100.0 (1,533)	2.5
50~59세	50.0	4.7	45.4	50.0	44.2	5.8	100.0 (1,590)	2.5
60~69세	51.1	4.6	46.5	48.9	40.2	8.6	100.0 (1,204)	2.5
70~79세	46.3	4.4	41.9	53.7	46.5	7.2	100.0 (675)	2.6
80세 이상	44.3	3.0	41.2	55.7	45.2	10.5	100.0 (360)	2.6
지역								
지역 1($\chi^2=2312.132^{***}$)								
서울	88.1	15.2	72.9	11.9	10.7	1.2	100.0 (1,540)	2.0
인천/경기	63.0	2.4	60.7	37.0	35.0	2.0	100.0 (2,477)	2.4
부산/경남/울산	49.7	4.0	45.7	50.3	46.5	3.9	100.0 (1,222)	2.5
대구/경북	26.2	0.6	25.6	73.8	64.5	9.3	100.0 (789)	2.8
광주/전라	17.5	0.6	16.9	82.5	63.5	19.1	100.0 (787)	3.0
대전/세종/충청	27.7	0.2	27.5	72.3	59.2	13.2	100.0 (843)	2.9
제주/강원	22.5	1.5	21.0	77.5	67.5	10.0	100.0 (342)	2.9
지역 2($\chi^2=1283.117^{***}$)								
대도시	68.1	8.6	59.5	31.9	29.4	2.4	100.0 (3,523)	2.3
중소도시	49.4	1.4	48.0	50.6	45.5	5.1	100.0 (3,062)	2.5
농어촌	18.8	0.8	18.0	81.2	64.0	17.1	100.0 (1,415)	3.0
교육수준($\chi^2=178.612^{***}$)								
중졸 이하	39.5	3.7	35.8	60.5	49.6	10.9	100.0 (1,211)	2.7
고졸	50.1	3.5	46.6	49.9	43.3	6.6	100.0 (2,961)	2.5
초대졸 이상	58.0	5.5	52.4	42.0	38.0	4.1	100.0 (3,829)	2.4
경제활동 여부($\chi^2=13.229^{**}$)								
예	51.0	4.3	46.7	49.0	42.6	6.4	100.0 (5,520)	2.5
아니오	55.1	4.8	50.2	44.9	39.7	5.2	100.0 (2,480)	2.5
종사상 지위($\chi^2=57.831^{***}$)								
상용직	53.8	4.5	49.3	46.2	41.0	5.2	100.0 (2,947)	2.5
임시직	54.8	4.2	50.6	45.2	39.2	6.0	100.0 (540)	2.5
일용직	49.3	6.0	43.3	50.7	42.9	7.7	100.0 (161)	2.5
자영업자	46.5	4.2	42.3	53.5	45.3	8.2	100.0 (1,758)	2.6
무급가족종사자	31.6	0.0	31.6	68.4	59.0	9.4	100.0 (115)	2.8
주관적 사회계층($\chi^2=41.91^{***}$)								
상(7-10)	55.5	6.1	49.4	44.5	37.2	7.2	100.0 (975)	2.5
중(5-6)	53.9	4.2	49.7	46.1	41.1	5.0	100.0 (4,186)	2.5
하(1-4)	48.6	4.3	44.4	51.4	44.2	7.1	100.0 (2,840)	2.5
경제수준($\chi^2=57.696^{***}$)								
상(상-중상)	53.9	9.1	44.9	46.1	40.0	6.1	100.0 (620)	2.4
중(중)	54.5	4.3	50.2	45.5	40.3	5.2	100.0 (4,075)	2.5
하(중하-하)	49.2	3.8	45.3	50.8	43.8	7.0	100.0 (3,304)	2.5
혼인 상태($\chi^2=0.179$)								
무배우	52.1	4.4	47.7	47.9	42.0	5.9	100.0 (2,820)	2.5
유배우	52.3	4.5	47.8	47.7	41.6	6.1	100.0 (5,180)	2.5
자녀 유무($\chi^2=2.059$)								
예	51.8	4.5	47.3	48.2	42.0	6.2	100.0 (5,561)	2.5
아니오	53.3	4.4	48.9	46.7	41.0	5.7	100.0 (2,439)	2.5
가구 형태($\chi^2=110.356^{***}$)								
1인 가구	46.9	3.7	43.1	53.1	45.2	7.9	100.0 (1,499)	2.6
1세대 가구	47.0	3.9	43.1	53.0	43.9	9.2	100.0 (1,701)	2.6
2세대 가구	56.2	4.9	51.3	43.8	39.5	4.3	100.0 (4,605)	2.4
3세대 이상	44.7	4.5	40.1	55.3	48.8	6.5	100.0 (184)	2.6
기타	50.3	0.0	50.3	49.7	49.7	0.0	100.0 (12)	2.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나. 현 거주지역의 청년과 노년 세대 거주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에 관해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1) 현 거주지역의 청년 세대 거주 적합성에 대한 인식

현 거주지역이 청년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해 살기에 적절하다(적절한 편이다+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64.4%, 부적절하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한 편이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과 같이 인구 밀집이 심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이 가정을 꾸려 정착해 살기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72.5%, 71.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과 제주/강원 지역의 경우 현 거주지역이 청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4.4%, 51.9%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이 청년 세대에게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68.6%로 나타났으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52.2%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중심의 고용, 여가문화, 육아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청년 세대가 가족을 형성하며 거주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이다.

연령대별로는 19~49세에서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이 청년에게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5.0%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50대 이후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이 청년이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이 약 36.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초대졸 이상의 경우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이 생활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67.2%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은 63.5%, 중졸 이하는 57.4%로 나타났다. 반면, 현 거주지역이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31.4%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은 36.5%, 초대졸 이상은 32.8%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라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자인 경우 현 거주지역이 청년 세대의 생활여건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각각 51.5%, 41.3%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높게 생각하거나 경제수준을 중간으로 생각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70.4%, 67.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하’로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38.5%, 40.3%로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를 보면, 무배우와 무자녀의 경우 조사 응답자의 약 65.0%가 현 거주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기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배우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응답자의 약 36.0%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구 형태를 보면, 2세대 가구는 현 거주지역의 청년 세대 생활여건의 적절성에 관해 66.4%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세대 이상 가구와 1세대 가구에서는 현 거주지역이 젊은 세대가 생활여건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각각 42.5%, 38.6%로 높았다.

〈표 4-17〉 현 거주지역이 젊은 세대의 생활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단위: %, 명)

특성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편이다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계(명)
전체 ¹⁾	35.6	4.0	31.6	64.4	58.7	5.6	100.0 (8,000)
성별($\chi^2=6.179$)							
남성	36.7	4.5	32.2	63.3	58.0	5.3	100.0 (3,965)
여성	34.7	3.6	31.0	65.3	59.5	5.9	100.0 (4,035)
연령($\chi^2=39.573^{**}$)							
19~29세	33.2	4.9	28.3	66.8	60.6	6.2	100.0 (1,360)
30~39세	34.6	4.5	30.1	65.4	60.0	5.4	100.0 (1,279)
40~49세	35.0	2.7	32.3	65.0	60.1	4.9	100.0 (1,533)
50~59세	36.9	3.3	33.6	63.1	58.0	5.2	100.0 (1,590)
60~69세	36.4	3.9	32.5	63.6	56.8	6.8	100.0 (1,204)
70~79세	39.3	5.7	33.6	60.7	56.0	4.8	100.0 (675)
80세 이상	36.8	5.9	30.8	63.2	56.7	6.6	100.0 (360)
지역							
지역 1($\chi^2=503.456^{***}$)							
서울	27.5	4.3	23.3	72.5	66.9	5.5	100.0 (1,540)
인천/경기	28.7	1.3	27.5	71.3	66.7	4.6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38.4	4.8	33.6	61.6	56.9	4.8	100.0 (1,222)
대구/경북	54.4	4.6	49.8	45.6	42.4	3.2	100.0 (789)
광주/전라	48.8	10.7	38.1	51.2	41.6	9.6	100.0 (787)
대전/세종/충청	30.4	2.3	28.1	69.6	61.6	8.0	100.0 (843)
제주/강원	51.9	8.2	43.7	48.1	41.2	6.9	100.0 (342)
지역 2($\chi^2=247.134^{***}$)							
대도시	31.4	3.5	27.9	68.6	62.0	6.6	100.0 (3,523)
중소도시	32.9	2.6	30.2	67.1	62.0	5.1	100.0 (3,062)
농어촌	52.2	8.3	43.9	47.8	43.5	4.2	100.0 (1,415)
교육수준($\chi^2=55.203^{***}$)							
중졸 이하	42.6	6.0	36.6	57.4	51.0	6.4	100.0 (1,211)
고졸	36.5	3.7	32.8	63.5	58.8	4.7	100.0 (2,961)
초대졸 이상	32.8	3.7	29.1	67.2	61.1	6.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1.464^{**}$)							
예	35.9	3.6	32.3	64.1	58.6	5.5	100.0 (5,520)
아니오	35.0	5.0	30.1	65.0	59.0	5.9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76.917^{***}$)							
상용직	32.7	3.2	29.5	67.3	61.4	5.9	100.0 (2,947)
임시직	33.6	4.0	29.6	66.4	60.9	5.5	100.0 (540)
일용직	32.5	5.5	27.0	67.5	62.0	5.6	100.0 (161)
자영업자	41.3	3.6	37.7	58.7	53.9	4.9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1.5	9.2	42.3	48.5	44.4	4.0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38.345^{***}$)							
상(7-10)	29.6	4.1	25.5	70.4	62.1	8.2	100.0 (975)
중(5-6)	35.1	3.7	31.4	64.9	59.4	5.5	100.0 (4,186)
하(1-4)	38.5	4.5	33.9	61.5	56.7	4.9	100.0 (2,840)
경제수준($\chi^2=72.098^{***}$)							
상(상-중상)	33.0	5.4	27.6	67.0	58.9	8.1	100.0 (620)
중(중)	32.3	3.5	28.8	67.7	61.3	6.4	100.0 (4,075)
하(중하-하)	40.3	4.5	35.8	59.7	55.5	4.2	100.0 (3,304)
혼인 상태($\chi^2=6$)							
무배우	35.4	4.7	30.7	64.6	58.7	5.9	100.0 (2,820)
유배우	35.8	3.7	32.1	64.2	58.7	5.5	100.0 (5,180)
자녀 유무($\chi^2=2.393$)							
예	35.9	3.9	32.0	64.1	58.5	5.6	100.0 (5,561)
아니오	35.1	4.4	30.7	64.9	59.2	5.7	100.0 (2,439)
가구 형태($\chi^2=27.822^{**}$)							
1인 가구	37.8	4.7	33.1	62.2	56.3	5.9	100.0 (1,499)
1세대 가구	38.6	4.0	34.6	61.4	56.0	5.3	100.0 (1,701)
2세대 가구	33.6	3.8	29.7	66.4	60.7	5.8	100.0 (4,605)
3세대 이상	42.5	3.8	38.8	57.5	54.7	2.7	100.0 (184)
기타	36.2	10.0	26.2	63.8	63.8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현 거주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해 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부족해서’(39.9%),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25.5%),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18.1%),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13.0%),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2.4%), ‘기타’(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의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45.8%, 36.8%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라, 제주/강원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69.7%, 46.3%, 56.1%,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 돌봄의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는 부산/경남/울산이 타 지역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세종/충청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여가시설 부족’과 ‘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 세대가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의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수도권과 그 외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19~29세인 경우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0.5%로 높았다. 40~49세는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가 20.4%, 50~59세는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60~79세는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41.9%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80세 이상은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9.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46.5%로 높았고, 고졸은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9.1%, 15.1%로 높게 조사되었다. 초대졸 이

상은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9.0%로 높았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우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하’로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45.1%, 46.3%로 조사되었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중’으로 인식하는 경우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13.9%로 동일했고,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 상태를 보면, 무배우는 ‘일자리가 부족해서’(42.8%),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14.8%)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유배우는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26.1%),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19.9%),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2.8%)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자리가 부족해서’(40.1%),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19.6%),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2.9%)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4-18〉 현 거주지역이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에 부적절한 이유

(단위: %, 명)

특성	일자리가 부족해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문화여가시설 이 부족해서	병원 등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기타 ³⁾	계(명)
전체 ¹⁾ 정별($\chi^2=6.024$)	39.9	25.5	18.1	13.0	2.4	1.1	100.0 (2,852)
연령($\chi^2=63.016^{***}$)							
남성	39.5	27.2	17.8	12.2	2.2	1.2	100.0 (1,453)
여성	40.4	23.8	18.4	13.8	2.6	1.0	100.0 (1,398)
19~29세	40.5	22.5	13.6	20.5	0.9	2.1	100.0 (452)
30~39세	38.5	28.6	16.5	12.6	2.1	1.7	100.0 (442)
40~49세	36.2	28.4	20.4	11.5	2.7	0.8	100.0 (536)
50~59세	41.3	24.0	19.3	11.3	3.4	0.8	100.0 (586)
60~69세	41.9	22.7	20.4	11.3	3.2	0.5	100.0 (438)
70~79세	41.9	25.7	17.5	11.5	2.2	1.1	100.0 (265)
80세 이상	41.4	29.3	18.0	10.7	0.5	0.0	100.0 (132)
지역 지역 1($\chi^2=611.997^{***}$)							
서울	17.3	45.8	19.0	9.9	2.9	5.0	100.0 (424)
인천/경기	22.3	36.8	20.7	16.1	3.2	0.9	100.0 (711)
부산/경남/울산	46.3	13.6	22.7	15.1	2.3	0.0	100.0 (469)
대구/경북	69.7	10.6	11.9	6.7	1.2	0.0	100.0 (429)
광주/전라	56.1	16.9	17.9	8.3	0.7	0.0	100.0 (384)
대전/세종/충청	28.4	25.1	17.6	25.3	3.1	0.4	100.0 (257)
제주/강원	57.6	18.5	9.5	9.9	3.4	1.2	100.0 (177)
지역 2($\chi^2=54.126^{***}$)							
대도시	39.3	28.6	16.7	11.4	2.0	2.1	100.0 (1,107)
중소도시	41.1	26.5	16.1	12.9	2.8	0.6	100.0 (1,006)
농어촌	39.4	19.6	23.0	15.5	2.4	0.2	100.0 (739)
교육수준($\chi^2=29.278^{**}$)							
중졸 이하	46.5	21.8	18.8	9.9	2.4	0.6	100.0 (515)
고졸	39.0	23.2	19.1	15.1	2.5	1.1	100.0 (1,080)
초대졸 이상	38.0	29.0	16.9	12.4	2.3	1.3	100.0 (1,256)
경제활동 여부($\chi^2=2.217$)							
예	40.0	25.2	17.8	13.4	2.5	1.1	100.0 (1,983)
아니오	39.8	26.3	18.8	11.9	2.1	1.1	100.0 (869)
종사상 지위($\chi^2=34.675^*$)							
상용직	38.4	26.8	17.7	13.6	2.5	1.0	100.0 (965)
임시직	42.3	24.9	15.6	14.5	2.7	0.0	100.0 (181)
일용직	65.1	13.0	18.8	1.3	0.0	1.8	100.0 (52)
자영업자	39.9	24.9	17.4	13.9	2.5	1.5	100.0 (725)
무급가족종사자	38.5	14.0	30.2	11.8	5.6	0.0	100.0 (59)
주관적 사회계층 ($\chi^2=66.711^{***}$)							
상(7~10)	28.7	34.8	19.4	11.1	4.8	1.3	100.0 (289)
중(5~6)	38.4	28.2	16.0	13.9	2.4	1.1	100.0 (1,471)
하(1~4)	45.1	19.4	20.6	12.2	1.8	1.0	100.0 (1,092)
경제수준($\chi^2=74.341^{***}$)							
상(상~중상)	31.0	37.6	15.8	9.7	5.4	0.4	100.0 (205)
중(중)	34.9	28.9	18.4	13.9	2.7	1.2	100.0 (1,317)
하(중하~하)	46.3	20.3	18.1	12.6	1.6	1.0	100.0 (1,330)
혼인 상태($\chi^2=22.064^{***}$)							
무배우	42.8	24.5	14.8	14.8	1.7	1.5	100.0 (999)
유배우	38.4	26.1	19.9	12.0	2.8	0.8	100.0 (1,853)
자녀 유무($\chi^2=32.595^{***}$)							
예	40.1	25.2	19.6	11.5	2.9	0.8	100.0 (1,996)
아니오	39.5	26.3	14.7	16.4	1.3	1.8	100.0 (856)
가구 형태($\chi^2=24.845$)							
1인 가구	42.9	22.8	18.6	13.2	2.1	0.5	100.0 (566)
1세대 가구	43.3	24.0	18.6	10.7	2.5	0.9	100.0 (657)
2세대 가구	37.5	27.4	17.8	13.6	2.3	1.4	100.0 (1,546)
3세대 이상 가구	38.0	20.5	18.0	18.4	5.1	0.0	100.0 (78)
기타	65.8	34.2	0.0	0.0	0.0	0.0	100.0 (4)

주: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해 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 2,852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기타 1.1%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17건, 집값이 오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됨 2건, 노령인구가 많아서 1건, 노령인구가 많아서 젊은 세대와 융합이 어려움 1건,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쌌 1건, 문화 공간 문화 시설이 부족한 1건, 비싼 물가 1건, 부동산 가격 및 전체적 물가가 높아서 1건, 산업단지라 냄새남 1건,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생활 문화가 문란해짐 1건, 전반적으로 다 1건, 노후화된 주택 1건, 집값이 비싸서 생계유지가 어려움 1건)

2) 현 거주지역의 노년 세대 거주 적합성에 대한 인식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다(적절한 편이다+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84.3%, 부적절하다(매우 부적절하다+부적절한 편이다)는 응답이 15.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에서 현 거주지역의 생활여건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5.4%로 높았고, 70~79세는 85.2%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50~59세는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3%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49세와 60~69세가 16.1%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90.2%로 가장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 87.2%, 서울 86.2%, 부산/경남/울산 8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86.2%로 높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인천/경기 지역은 현 거주지역이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19.3%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제주/강원 16.7%, 부산/경남/울산 15.9%, 서울 13.8%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응답률이 17.7%로 대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85.1%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은 84.5%, 초대졸 이상은 83.9%로 나타났다. 반면,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초대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16.1%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은 15.5%, 중졸 이하가 14.9%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직인 경우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각각 23.6%, 18.6%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우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각각 87.5%, 87.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은 약 84.9%, '하'는 약 83.0%로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현 거주지역의 노년 세대 생활 여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거주하는 지역이 노년 세대의 생활여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는 무배우, 유자녀의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약 85.0%로 높았고, 유배우, 무자녀의 경우 부정적 응답률이 약 16.0%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특징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의 생활여건의 적절성에 관해 성별, 경제활동 여부, 혼인 상태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특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표 4-19〉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의 생활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단위: %, 명)

특성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편이다	적절 하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계 (명)	
전체 ¹⁾	15.7	0.7	15.0	84.3	71.6	12.7	100.0	(8,000)
성별($\chi^2=4.682$)								
남성	16.3	0.8	15.4	83.7	71.0	12.7	100.0	(3,965)
여성	15.1	0.5	14.6	84.9	72.2	12.7	100.0	(4,035)
연령($\chi^2=37.518^{**}$)								
19~29세	15.3	1.0	14.3	84.7	75.0	9.7	100.0	(1,360)
30~39세	15.1	0.5	14.7	84.9	72.6	12.3	100.0	(1,279)
40~49세	16.1	0.9	15.3	83.9	71.9	12.0	100.0	(1,533)
50~59세	16.3	0.6	15.7	83.7	70.3	13.4	100.0	(1,590)
60~69세	16.1	0.5	15.5	83.9	70.2	13.7	100.0	(1,204)
70~79세	14.8	0.5	14.3	85.2	70.9	14.4	100.0	(675)
80세 이상	14.6	0.9	13.7	85.4	66.1	19.2	100.0	(360)
지역 지역 1($\chi^2=229.869^{***}$)								
서울	13.8	1.5	12.3	86.2	71.1	15.1	100.0	(1,540)
인천/경기	19.3	0.5	18.8	80.7	70.4	10.3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15.9	0.5	15.4	84.1	73.3	10.8	100.0	(1,222)
대구/경북	16.1	0.7	15.4	83.9	76.6	7.3	100.0	(789)
광주/전라	9.8	0.0	9.8	90.2	64.7	25.5	100.0	(787)
대전/세종/충청	12.8	0.5	12.3	87.2	75.0	12.2	100.0	(843)
제주/강원	16.7	1.4	15.2	83.3	72.8	10.5	100.0	(342)

특성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계 (명)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편이다	적절하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지역 $2(x^2=61.267^{***})$								
대도시	13.8	0.9	12.9	86.2	72.6	13.5	100.0	(3,523)
중소도시	17.7	0.5	17.2	82.3	72.1	10.1	100.0	(3,062)
농어촌	15.7	0.4	15.3	84.3	68.0	16.3	100.0	(1,415)
교육수준 $(x^2=26.619^{***})$								
중졸 이하	14.9	0.5	14.4	85.1	67.9	17.2	100.0	(1,211)
고졸	15.5	0.7	14.8	84.5	72.6	11.9	100.0	(2,961)
초대졸 이상	16.1	0.8	15.3	83.9	72.0	11.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 $(x^2=1.885)$								
예	15.7	0.7	15.0	84.3	71.9	12.4	100.0	(5,520)
아니오	15.6	0.6	15.0	84.4	71.0	13.4	100.0	(2,480)
종사상 지위 $(x^2=23.507^*)$								
상용직	14.4	0.8	13.6	85.6	73.2	12.4	100.0	(2,947)
임시직	18.6	1.1	17.5	81.4	70.7	10.7	100.0	(540)
일용직	17.4	0.8	16.6	82.6	68.4	14.2	100.0	(161)
자영업자	16.3	0.5	15.9	83.7	71.2	12.5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23.6	0.0	23.6	76.4	59.6	16.8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x^2=23.974^{***})$								
상(7-10)	12.5	0.9	11.7	87.5	73.8	13.7	100.0	(975)
중(5-6)	15.1	0.7	14.5	84.9	72.9	11.9	100.0	(4,186)
하(1-4)	17.5	0.6	16.9	82.5	69.0	13.5	100.0	(2,840)
경제수준 $(x^2=19.31^{**})$								
상(상-중상)	12.9	0.9	11.9	87.1	70.4	16.8	100.0	(620)
중(중)	15.1	0.7	14.4	84.9	72.5	12.4	100.0	(4,075)
하(중하-하)	16.9	0.6	16.3	83.1	70.8	12.3	100.0	(3,304)
혼인 상태 $(x^2=2.227)$								
무배우	15.4	0.8	14.6	84.6	72.4	12.2	100.0	(2,820)
유배우	15.8	0.6	15.2	84.2	71.2	13.0	100.0	(5,180)
자녀 유무 $(x^2=8.935^*)$								
예	15.5	0.6	14.9	84.5	71.1	13.3	100.0	(5,561)
아니오	16.0	0.9	15.1	84.0	72.7	11.2	100.0	(2,439)
가구 형태 $(x^2=37.963^{***})$								
1인 가구	15.3	0.6	14.8	84.7	71.1	13.5	100.0	(1,499)
1세대 가구	16.7	0.5	16.2	83.3	69.8	13.5	100.0	(1,701)
2세대 가구	15.3	0.8	14.5	84.7	72.4	12.2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6.7	1.0	15.7	83.3	73.4	10.0	100.0	(184)
기타	28.9	0.0	28.9	71.1	55.2	16.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무배우: 미혼, 이혼, 별거, 사별 / 유배우: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 돌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25.3%),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20.3%),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19.1%),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17.8%), ‘일자리가 부족해서’(16.8%), ‘기타’(0.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설’과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8.6%, 24.8%

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가 23.2%, 광주/전라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31.4%의 응답률을 보였다. 제주/강원 지역은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3.6%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19~29세인 경우 ‘노인 돌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1.8%로 높았다. 40~49세는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22.9%),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25.0%)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60~69세는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가 23.4%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80세 이상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8.8%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2.2%, 23.1%로 높았고, 고졸의 경우에는 ‘노인 돌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8%로 나타났다. 초대졸 이상은 ‘병원 등 의료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1.8%, 18.9%로 높았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우 ‘일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1.6%로 높았다. 또 ‘중(5-6)’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노인 돌봄을 위한 시설’과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5.6%, 23.2%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을 ‘하(1-4)’로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1.2%, 21.7%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생활여건’(21.8%)과 ‘병원 등 의료시설’(19.3%), ‘일자리’(18.5%)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0〉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이유

(단위: %, 명)

특성	노인 돌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	임자리가 부족해서	기타 ³⁾	계(명)
전체 ¹⁾	25.3	20.3	19.1	17.8	16.8	0.7	100.0 (1,254)
성별($\chi^2=4.877$)							
남성	25.6	20.3	17.4	19.6	16.3	0.7	100.0 (645)
여성	24.9	20.3	20.8	15.9	17.2	0.8	100.0 (609)
연령($\chi^2=53.119^{**}$)							
19~29세	30.8	20.9	13.8	21.5	12.1	0.8	100.0 (208)
30~39세	28.3	16.7	20.4	14.7	19.1	0.8	100.0 (194)
40~49세	26.3	22.9	25.0	10.9	14.1	0.7	100.0 (247)
50~59세	27.6	20.4	13.8	20.6	16.7	0.9	100.0 (259)
60~69세	17.3	20.0	20.0	23.4	18.4	0.9	100.0 (193)
70~79세	17.5	22.7	23.8	17.0	19.0	0.0	100.0 (100)
80세 이상	19.6	15.7	21.1	14.9	28.8	0.0	100.0 (53)
지역							
지역 1($\chi^2=68.024^{***}$)							
서울	28.6	24.8	14.6	14.5	15.0	2.6	100.0 (212)
인천/경기	26.9	19.1	21.8	19.5	12.5	0.2	100.0 (479)
부산/경남/울산	21.6	19.8	18.5	23.2	15.6	1.2	100.0 (194)
대구/경북	26.2	21.4	17.9	11.8	22.7	0.0	100.0 (127)
광주/전라	13.8	15.2	18.3	20.5	31.4	0.8	100.0 (77)
대전/세종/충청	26.2	20.4	11.4	17.6	24.5	0.0	100.0 (108)
제주/강원	23.4	19.8	33.6	8.2	15.1	0.0	100.0 (57)
지역 2($\chi^2=87.356^{***}$)							
대도시	25.2	23.7	12.5	22.0	15.0	1.7	100.0 (488)
중소도시	28.5	17.5	18.3	18.6	16.9	0.2	100.0 (543)
농어촌	17.4	19.9	35.4	6.9	20.3	0.0	100.0 (223)
교육수준($\chi^2=22.086^*$)							
중졸 이하	18.8	22.2	17.8	17.3	23.1	0.7	100.0 (181)
고졸	26.8	20.6	15.9	16.6	19.5	0.7	100.0 (458)
초대졸 이상	26.0	19.6	21.8	18.9	12.8	0.8	100.0 (615)
경제활동 여부($\chi^2=5.72$)							
예	25.1	21.1	19.9	17.7	15.3	0.9	100.0 (867)
아니오	25.7	18.6	17.3	18.1	19.9	0.4	100.0 (387)
종사상 지위($\chi^2=34.855^*$)							
상용직	26.3	19.1	19.6	19.2	15.1	0.8	100.0 (425)
임시직	27.6	32.0	11.4	23.4	5.5	0.0	100.0 (100)
일용직	21.4	16.0	22.2	20.9	19.6	0.0	100.0 (28)
자영업자	23.7	20.5	23.4	13.8	17.0	1.5	100.0 (287)
무급가족종사자	14.9	21.8	16.7	12.9	33.8	0.0	100.0 (27)
주관적 사회계층($\chi^2=19.174^*$)							
상(7-10)	24.7	20.8	16.2	15.4	21.6	1.4	100.0 (122)
중(5-6)	25.6	23.2	18.0	15.3	17.3	0.6	100.0 (634)
하(1-4)	25.0	16.5	21.2	21.7	14.8	0.7	100.0 (498)
경제수준($\chi^2=6.569$)							
상(상-중상)	26.0	20.6	18.3	15.3	17.6	2.2	100.0 (80)
중(중)	26.1	19.1	18.7	17.7	17.7	0.7	100.0 (614)
하(중하-하)	24.2	21.6	19.6	18.3	15.6	0.6	100.0 (560)
혼인 상태($\chi^2=8.124$)							
무배우	25.8	20.7	17.5	21.1	14.3	0.6	100.0 (436)
유배우	25.0	20.1	19.9	16.1	18.1	0.8	100.0 (818)
자녀 유무($\chi^2=15.417^{**}$)							
예	23.5	21.8	19.3	16.3	18.5	0.7	100.0 (863)
아니오	29.2	17.0	18.7	21.3	13.0	0.9	100.0 (391)
가구 형태($\chi^2=28.122$)							
1인 가구	21.9	19.2	19.8	24.3	14.8	0.0	100.0 (230)
1세대 가구	25.5	19.5	22.1	14.8	17.1	1.0	100.0 (284)
2세대 가구	26.0	21.4	16.9	17.6	17.2	0.9	100.0 (706)
3세대 이상 가구	33.9	13.3	35.1	3.6	14.0	0.0	100.0 (31)
기타	0.0	0.0	38.7	18.5	42.9	0.0	100.0 (3)

주: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 1,254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기타 0.8% (집값이 비싸서 3건, 공기가 나쁘다 1건, 공장이 많아 공기 오염이 심해서 1건, 교통이 복잡하고 공기가 좋지 않아서 1건, 시골 대비 공기도 나쁘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서 1건,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생활문화가 문란해짐 1건,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와서 노인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생김 1건, 집값이 오르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됨 1건)

제3절 소결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인구 규모 감소, 지역별 인구 분포의 불균형의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94.5%로,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은 91.2%로 조사되었다.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85.8%와 87.7%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인구 규모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 또한 94.1%, 92.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인구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보장 부담 증가’(42.2%)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31.8%)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구 변화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보다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약간 높았다. 인구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평가에서는 고령 정책이 24.0포인트 높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의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및 지연의 원인 해소’(37.1%)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및 문화 조성’(25.6%) 정책이 높았고, ‘출산 및 양육 비용 절감’(17.7%)과 ‘육아시설 확충 및 좋은 육아서비스 제공’(14.3%) 정책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인구 정책에서의 청년 정책과 노동 정책의 중요성이 출산/양육 비용 지원이나 인프라 확대 정책과 함께 국민이 희망하는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노후 소득보장’(39.3%)과 ‘의료보장’(20.2%)지원 정책이 가장 높았고, ‘고령자 고용지원’(13.5%)과 ‘노년기 돌봄’(12.8%)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 거주지역에 대해 청년 세대가 가정을 형성하고 생활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와 부적절한 원인은 거주지역별로 선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지역이 청년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거주지역이 청년 세대가 가정 생활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과 자녀 돌봄 시설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 거주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적합하지에 대한 평가는 청년 세대에 대한 평가 결과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긍정적 평가 결과가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약 20년간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한 출산장려의 정책 기조에서 인구 변동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인구 정책에서는 인구 변동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확산보다는 인구 변동에 대한 정확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 국민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분석

제1절 가족 기능 및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제2절 결혼과 가족 형성 및 구성에 대한 가치관

제3절 소결

제5장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분석

제1절 가족 기능 및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1. 가족 기능

가족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1%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응답하였다. 뒤이어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26.2%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10.1%만이 ‘자녀 출산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4.3%에 불과하였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며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한 생각

(단위: %)

가족 기능	%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정서적 기능)	49.1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사회화 기능)	26.2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 (재생산 기능)	10.1
아동 및 노인 등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 (돌봄 기능)	5.7
결혼을 통해 남녀 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성적 기능)	4.7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과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기능 (경제적 기능)	4.3
계	1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응답자 특성에 따른 가족 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2>와 같다. 정서적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조를 형성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19~29세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응답 비율은 53.2%이나 80세 이상의 경우 40.4%로 차이를 보였다. 80세 이상 인구의 경우 재생산 기능에 대한 응답률이 17.6%로 19~29세의 7.4%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조를 형성한 경우에는 56.8%가 정서적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서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현대 사회의 청년층이 정서적 기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정서적 기능에 대한 응답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른 응답률을 고려할 때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정서적 기능에 대한 비율이 높은 대신 사회화 기능, 돌봄 기능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농어촌 지역의 돌봄, 양육과 교육 환경이 반영되었거나 문화적으로 정서적 기능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은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산을 통한 재생산 기능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젊은 층은 출산을 통한 재생산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기존 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혼의 경우에도 재생산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기혼의 1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 미혼의 경우 출산을 통한 재생산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2〉 응답자의 특성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정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재생산 기능	돌봄 기능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계 (명)
전체 ¹⁾	49.1	26.2	10.1	5.7	4.7	4.3	100.0 (8,000)
성별($\chi^2=3.379$)							
남성	49.2	26.6	9.5	5.6	4.9	4.2	100.0 (3,965)
여성	48.9	25.8	10.6	5.8	4.6	4.3	100.0 (4,035)
연령($\chi^2=73.861^{***}$)							
19~29세	53.2	24.8	7.4	5.3	4.9	4.5	100.0 (1,360)
30~39세	49.3	27.1	9.2	4.9	5.7	3.8	100.0 (1,279)
40~49세	49.4	27.0	9.2	5.1	4.7	4.7	100.0 (1,533)
50~59세	50.0	24.2	10.2	6.6	4.7	4.2	100.0 (1,590)
60~69세	46.2	27.7	12.1	5.4	4.1	4.4	100.0 (1,204)
70~79세	47.3	28.1	11.2	6.4	3.7	3.3	100.0 (675)
80세 이상	40.4	24.9	17.6	7.7	4.7	4.6	100.0 (360)
지역($\chi^2=74.731^{***}$)							
대도시	48.3	26.2	10.5	6.4	4.4	4.2	100.0 (3,523)
중소도시	45.9	28.1	9.9	5.5	5.8	4.8	100.0 (3,062)
농어촌	57.9	22.0	9.3	4.1	3.3	3.3	100.0 (1,415)
교육수준($\chi^2=54.267^{***}$)							
중졸 이하	44.5	26.6	15.3	6.0	3.8	3.8	100.0 (1,211)
고졸	49.1	25.5	9.8	5.9	5.0	4.7	100.0 (2,961)
초대졸 이상	50.5	26.5	8.6	5.4	4.9	4.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8.784^{**}$)							
예	49.5	26.2	9.4	5.3	5.1	4.4	100.0 (5,520)
아니오	48.1	26.2	11.5	6.5	3.9	3.9	100.0 (2,480)
주관적 사회계층 ($\chi^2=43.954^{***}$)							
상(7-10)	40.6	29.2	11.1	8.1	5.3	5.8	100.0 (975)
중(5-6)	50.8	25.6	9.4	5.4	4.9	3.9	100.0 (4,186)
하(1-4)	49.5	26.0	10.6	5.2	4.4	4.3	100.0 (2,840)
경제수준($\chi^2=28.084^{**}$)							
상(상-중상)	41.4	31.5	12.3	6.4	4.8	3.6	100.0 (620)
중(중)	49.3	25.5	9.5	5.9	5.2	4.5	100.0 (4,075)
하(중하-하)	50.2	26.0	10.3	5.2	4.1	4.1	100.0 (3,304)
혼인 상태($\chi^2=28.334^{***}$)							
기혼	47.9	26.8	10.8	5.7	4.5	4.2	100.0 (6,114)
미혼	52.8	24.0	7.6	5.6	5.4	4.5	100.0 (1,886)
자녀 유무($\chi^2=29.285^{***}$)							
예	47.8	27.0	10.7	5.9	4.3	4.3	100.0 (5,561)
아니오	52.1	24.3	8.5	5.2	5.8	4.2	100.0 (2,439)
가구 형태($\chi^2=35.933^{**}$)							
1세대 가구	46.9	26.6	11.6	5.9	4.9	4.21	100.0 (3,200)
2세대 가구	50.4	26.1	8.9	5.6	4.7	4.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6.8	21.3	12.2	4.2	2.7	2.8	100.0 (184)
기타	30.9	21.3	29.4	0.0	18.5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2.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5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5가지 항목 중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대한 동의 비율(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은 80.9%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4.0%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이처럼 육아에 대한 평등 의식은 상당히 높은 반면 여전히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3〉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명)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19.1	1.5	17.6	80.9	63.7	17.2	100.0 (8,000)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22.3	2.2	20.1	77.7	56.2	21.5	100.0 (8,000)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23.6	2.5	21.1	76.4	52.0	24.4	100.0 (8,000)
‘경제적 부양 책임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24.6	2.2	22.4	75.4	55.6	19.8	100.0 (8,000)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26.1	2.3	23.8	74.0	55.1	18.9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가. 육아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는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대해 동의(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80.9%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동의 비율은 81.4%로 남성의 80.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대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6.3%인 반면 80세 이상은 67.5%로 큰 차이를 보여 세대 간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경우 동의 비율은 72.0%로 초대졸 이상의 83.8%와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표 5-4〉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1: 육아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19.1	1.5	17.6	80.9	63.7	17.2	100.0 (8,000)	3.0
성별($\chi^2=145.796^{***}$)								
남성	19.5	1.2	18.3	80.5	65.5	15.0	100.0 (3,965)	2.9
여성	18.6	1.7	17.0	81.4	62.0	19.4	100.0 (4,035)	3.0
연령($\chi^2=259.929^{***}$)								
19~29세	13.7	1.6	12.1	86.3	62.1	24.2	100.0 (1,360)	3.1
30~39세	14.8	1.8	13.0	85.2	63.2	22.0	100.0 (1,279)	3.1
40~49세	15.9	1.5	14.4	84.1	66.8	17.3	100.0 (1,533)	3.0
50~59세	20.0	1.0	19.0	80.0	66.1	13.9	100.0 (1,590)	2.9
60~69세	22.5	1.7	20.8	77.5	62.9	14.6	100.0 (1,204)	2.9
70~79세	30.0	1.5	28.5	70.0	59.1	10.9	100.0 (675)	2.8
80세 이상	32.5	0.6	31.9	67.5	59.2	8.4	100.0 (360)	2.8
지역($\chi^2=16.845^{**}$)								
대도시	18.2	1.5	16.7	81.8	63.2	18.6	100.0 (3,523)	3.0
중소도시	20.2	1.4	18.8	79.8	64.6	15.1	100.0 (3,062)	2.9
농어촌	18.7	1.4	17.3	81.3	63.2	18.1	100.0 (1,415)	3.0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교육수준($\chi^2=123.378^{***}$)								
중졸 이하	28.0	1.4	26.7	72.0	60.4	11.5	100.0 (1,211)	2.8
고졸	19.1	1.4	17.7	80.9	65.2	15.7	100.0 (2,961)	3.0
초대졸 이상	16.2	1.5	14.7	83.8	63.6	20.1	100.0 (3,829)	3.0
경제활동 여부($\chi^2=5.844$)								
예	18.6	1.6	17.0	81.4	64.1	17.3	100.0 (5,520)	3.0
아니오	20.1	1.2	18.9	79.9	62.9	17.0	100.0 (2,480)	3.0
종사상 지위($\chi^2=53.763^{***}$)								
상용직	16.9	1.8	15.1	83.1	63.7	19.4	100.0 (2,947)	3.0
임시직	19.1	1.6	17.4	80.9	61.3	19.7	100.0 (540)	3.0
일용직	26.7	0.9	25.7	73.3	60.2	13.1	100.0 (161)	2.9
자영업자	20.1	1.1	19.0	79.9	66.4	13.5	100.0 (1,758)	2.9
무급가족종사자	25.4	3.2	22.3	74.6	56.8	17.8	100.0 (115)	2.9
주관적 사회계층 ($\chi^2=26.024^{***}$)								
상(7-10)	15.3	0.8	14.5	84.7	68.7	16.0	100.0 (975)	3.0
중(5-6)	18.5	1.6	16.8	81.5	63.9	17.7	100.0 (4,186)	3.0
하(1-4)	21.3	1.4	19.9	78.7	61.8	16.9	100.0 (2,840)	2.9
경제수준($\chi^2=22.249^{**}$)								
상(상-중상)	20.9	2.1	18.8	79.1	60.0	19.1	100.0 (620)	3.0
중(중)	17.3	1.1	16.2	82.7	65.0	17.7	100.0 (4,075)	3.0
하(중하-하)	20.9	1.7	19.2	79.1	62.9	16.2	100.0 (3,304)	2.9
혼인 상태($\chi^2=76.944^{***}$)								
기혼	20.6	1.4	19.2	79.4	63.9	15.5	100.0 (6,114)	2.9
미혼	14.2	1.6	12.6	85.8	63.3	22.6	100.0 (1,886)	3.1
자녀 유무($\chi^2=64.445^{***}$)								
예	20.5	1.4	19.1	79.5	64.2	15.2	100.0 (5,561)	2.9
아니오	15.8	1.5	14.3	84.2	62.5	21.7	100.0 (2,439)	3.0
가구 형태($\chi^2=58.632^{***}$)								
1세대 가구	22.4	1.7	20.7	77.6	62.6	15.0	100.0 (3,200)	2.9
2세대 가구	16.7	1.3	15.4	83.3	64.6	18.7	100.0 (4,605)	3.0
3세대 이상 가구	21.9	0.8	21.2	78.1	60.8	17.3	100.0 (184)	2.9
기타	5.3	5.3	0.0	94.7	77.9	16.7	100.0 (12)	3.1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나. 의사결정권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가져야 한다”는 사고는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대해 동의(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77.7%로 조사된 5가지 항목 중 육아 부분 다음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인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기타를 제외한 3세대 가구에서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동의 비율은 78.9%로 남성의 76.6%보다 높아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였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2.9%인 반면 80세 이상은 67.6%로 가족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동의 비율은 70.7%이며 초대졸 이상은 80.0%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3세대 가구의 동의 비율이 84.1%로 1세대 가구의 동의 비율 74.9%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5-5〉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2: 의사결정권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22.3	2.2	20.1	77.7	56.2	21.5	100.0 (8,000)	3.0
성별($\chi^2=55.875^{***}$)								
남성	23.4	2.1	21.3	76.6	58.5	18.1	100.0 (3,965)	2.9
여성	21.1	2.3	18.9	78.9	54.0	24.8	100.0 (4,035)	3.0
연령($\chi^2=147.763^{***}$)								
19~29세	17.1	1.9	15.2	82.9	56.3	26.5	100.0 (1,360)	3.1
30~39세	19.3	2.2	17.1	80.7	54.3	26.4	100.0 (1,279)	3.0
40~49세	21.4	1.2	20.2	78.6	55.8	22.8	100.0 (1,533)	3.0
50~59세	22.0	2.3	19.7	78.0	59.5	18.5	100.0 (1,590)	2.9
60~69세	26.0	2.1	23.9	74.0	55.1	18.9	100.0 (1,204)	2.9
70~79세	28.6	4.4	24.2	71.4	56.2	15.2	100.0 (675)	2.8
80세 이상	32.4	3.3	29.1	67.6	54.6	13.0	100.0 (360)	2.8
지역($\chi^2=44.445^{***}$)								
대도시	20.8	2.2	18.6	79.2	56.0	23.2	100.0 (3,523)	3.0
중소도시	24.7	1.7	23.0	75.3	56.2	19.1	100.0 (3,062)	2.9
농어촌	20.5	3.1	17.4	79.5	57.0	22.6	100.0 (1,415)	3.0
교육수준($\chi^2=71.139^{***}$)								
중졸 이하	29.3	3.7	25.6	70.7	55.6	15.1	100.0 (1,211)	2.8
고졸	22.3	2.0	20.4	77.7	56.0	21.6	100.0 (2,961)	3.0
초대졸 이상	20.0	1.9	18.1	80.0	56.6	23.4	100.0 (3,829)	3.0
경제활동 여부($\chi^2=6.828$)								
예	21.4	2.1	19.3	78.6	56.8	21.8	100.0 (5,520)	3.0
아니오	24.1	2.4	21.7	75.9	55.0	20.9	100.0 (2,480)	2.9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주관적 사회계층 ($\chi^2=6.944$)								
상(7-10)	20.3	2.1	18.2	79.7	57.9	21.8	100.0 (975)	3.0
중(5-6)	21.9	2.3	19.6	78.1	56.1	22.0	100.0 (4,186)	3.0
하(1-4)	23.5	2.1	21.4	76.5	55.9	20.6	100.0 (2,840)	3.0
경제수준($\chi^2=16.357^*$)								
상(상-중상)	19.9	1.8	18.1	80.1	55.1	25.0	100.0 (620)	3.0
중(중)	22.0	2.2	19.7	78.0	55.5	22.6	100.0 (4,075)	3.0
하(중하-하)	23.1	2.2	20.8	76.9	57.4	19.5	100.0 (3,304)	2.9
혼인 상태($\chi^2=32.823^{***}$)								
기혼	23.4	2.3	21.1	76.6	56.3	20.3	100.0 (6,114)	2.9
미혼	18.5	1.9	16.6	81.5	56.2	25.3	100.0 (1,886)	3.0
자녀 유무($\chi^2=23.589^{***}$)								
예	23.5	2.4	21.1	76.5	56.2	20.3	100.0 (5,561)	2.9
아니오	19.5	1.8	17.6	80.5	56.4	24.1	100.0 (2,439)	3.0
가구 형태($\chi^2=41.665^{***}$)								
1세대 가구	25.1	2.5	22.6	74.9	55.8	19.1	100.0 (3,200)	2.9
2세대 가구	20.6	2.0	18.6	79.4	56.4	23.1	100.0 (4,605)	3.0
3세대 이상 가구	15.9	2.2	13.7	84.1	60.2	23.8	100.0 (184)	3.1
기타	5.3	5.3	0.0	94.7	75.2	19.4	100.0 (12)	3.1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다. 가사노동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에 대해 동의(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76.4%로 육아에 대한 동의 비율 80.9%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어,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육아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인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동의 비율은

77.8%, 남성은 75.0%로 약 2.8%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동의 비율이 약 0.9%포인트 차이인 점을 고려하면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1.3%이며 80세 이상의 동의 비율은 65.4%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농어촌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향은 육아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6〉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3: 가사노동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23.6	2.5	21.1	76.4	52.0	24.4	100.0 (8,000)	3.0
성별($\chi^2=50.459^{***}$)								
남성	25.0	2.3	22.6	75.0	54.0	21.1	100.0 (3,965)	2.9
여성	22.2	2.7	19.5	77.8	50.2	27.6	100.0 (4,035)	3.0
연령($\chi^2=180.248^{***}$)								
19~29세	18.7	2.5	16.2	81.3	49.7	31.6	100.0 (1,360)	3.1
30~39세	20.2	2.3	17.9	79.8	51.4	28.4	100.0 (1,279)	3.1
40~49세	19.9	2.1	17.8	80.1	54.3	25.8	100.0 (1,533)	3.0
50~59세	23.9	2.5	21.4	76.1	53.0	23.1	100.0 (1,590)	3.0
60~69세	27.9	2.8	25.0	72.1	53.9	18.2	100.0 (1,204)	2.9
70~79세	33.9	3.4	30.5	66.1	48.2	17.9	100.0 (675)	2.8
80세 이상	34.6	2.3	32.3	65.4	50.1	15.3	100.0 (360)	2.8
지역($\chi^2=43.05^{***}$)								
대도시	22.2	2.5	19.6	77.8	53.2	24.6	100.0 (3,523)	3.0
중소도시	26.8	2.4	24.4	73.2	50.6	22.5	100.0 (3,062)	2.9
농어촌	20.0	2.7	17.3	80.0	52.1	27.9	100.0 (1,415)	3.1
교육수준($\chi^2=114.472^{***}$)								
중졸 이하	33.0	3.2	29.8	67.0	49.8	17.2	100.0 (1,211)	2.8
고졸	23.6	2.2	21.4	76.4	53.7	22.7	100.0 (2,961)	3.0
초대졸 이상	20.6	2.5	18.1	79.4	51.5	27.9	100.0 (3,829)	3.0
경제활동 여부($\chi^2=9.922^*$)								
예	23.1	2.7	20.3	76.9	52.1	24.9	100.0 (5,520)	3.0
아니오	24.7	2.0	22.7	75.3	52.0	23.3	100.0 (2,480)	3.0
종사상 지위($\chi^2=32.835^{**}$)								
상용직	21.8	2.8	19.0	78.2	51.2	27.1	100.0 (2,947)	3.0
임시직	23.8	2.3	21.5	76.2	50.7	25.5	100.0 (540)	3.0
일용직	29.4	2.2	27.1	70.6	50.8	19.8	100.0 (161)	2.9
자영업자	24.1	2.6	21.4	75.9	54.6	21.3	100.0 (1,758)	2.9
무급가족종사자	28.9	5.2	23.6	71.1	44.1	27.1	100.0 (115)	2.9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주관적 사회계층 ($\chi^2=137.307^{***}$)								
상(7-10)	25.4	2.4	23.0	74.6	47.2	27.3	100.0 (975)	3.0
중(5-6)	22.2	2.4	19.9	77.8	52.5	25.3	100.0 (4,186)	3.0
하(1-4)	24.9	2.7	22.2	75.1	53.1	22.1	100.0 (2,840)	2.9
경제수준($\chi^2=35.539^{***}$)								
상(상-중상)	24.6	2.8	21.8	75.4	48.4	26.9	100.0 (620)	3.0
중(중)	22.1	2.5	19.6	77.9	51.3	26.6	100.0 (4,075)	3.0
하(중하-하)	25.2	2.5	22.7	74.8	53.6	21.2	100.0 (3,304)	2.9
혼인 상태($\chi^2=55.148^{***}$)								
기혼	25.1	2.6	22.5	74.9	52.2	22.7	100.0 (6,114)	3.0
미혼	18.7	2.1	16.6	81.3	51.4	29.8	100.0 (1,886)	3.1
자녀 유무($\chi^2=41.537^{***}$)								
예	25.1	2.5	22.7	74.9	52.1	22.8	100.0 (5,561)	3.0
아니오	20.0	2.6	17.4	80.0	51.9	28.1	100.0 (2,439)	3.1
가구 형태($\chi^2=46.078^{***}$)								
1세대 가구	27.0	2.9	24.1	73.0	50.9	22.1	100.0 (3,200)	2.9
2세대 가구	21.2	2.2	19.0	78.8	52.6	26.1	100.0 (4,605)	3.0
3세대 이상 가구	23.3	2.1	21.2	76.7	55.8	20.9	100.0 (1,84)	3.0
기타	12.6	5.3	7.2	87.4	70.7	16.7	100.0 (12)	3.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한.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라. 경제적 부양 책임

“경제적 부양 책임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는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대해 동의(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75.4%로 육아에 대한 동의 비율(80.9%)과 가사노동에 대한 동의 비율(76.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남성인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중인 경우,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2세대 가구의 경우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동의 비율은 75.0%로 남성의 75.8%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부양 책임’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된 반면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동의 비율은 남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여성들 중 여전히 경제적 부양 책임은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다소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79.3%이며 80세 이상은 62.4%로 이들 간의 동의 비율의 차이는 16.9%포인트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가사노동 문항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동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4: 경제적 부양 책임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24.6	2.2	22.4	75.4	55.6	19.8	100.0 (8,000)	2.9
성별($\chi^2=4.165$)								
남성	24.2	2.3	22.0	75.8	55.1	20.7	100.0 (3,965)	2.9
여성	25.0	2.2	22.8	75.0	56.0	18.9	100.0 (4,035)	2.9
연령($\chi^2=118.831^{***}$)								
19~29세	20.7	2.1	18.6	79.3	55.5	23.7	100.0 (1,360)	3.0
30~39세	20.4	2.1	18.3	79.6	57.3	22.3	100.0 (1,279)	3.0
40~49세	21.5	1.5	20.0	78.5	58.2	20.3	100.0 (1,533)	3.0
50~59세	26.7	2.4	24.2	73.3	55.0	18.4	100.0 (1,590)	2.9
60~69세	26.2	2.3	23.9	73.8	56.0	17.8	100.0 (1,204)	2.9
70~79세	33.2	3.9	29.3	66.8	50.0	16.8	100.0 (675)	2.8
80세 이상	37.6	2.4	35.2	62.4	50.0	12.4	100.0 (360)	2.7
지역($\chi^2=47.897^{***}$)								
대도시	22.7	2.5	20.2	77.3	57.1	20.2	100.0 (3,523)	2.9
중소도시	27.4	1.7	25.7	72.6	54.7	17.9	100.0 (3,062)	2.9
농어촌	23.4	2.8	20.6	76.6	53.5	23.1	100.0 (1,415)	3.0
교육수준($\chi^2=67.443^{***}$)								
중졸 이하	31.8	2.9	29.0	68.2	52.2	16.0	100.0 (1,211)	2.8
고졸	26.2	2.3	23.9	73.8	54.0	19.7	100.0 (2,961)	2.9
초대졸 이상	21.1	2.0	19.2	78.9	57.8	21.1	100.0 (3,829)	3.0
경제활동 여부($\chi^2=7.793$)								
예	23.8	2.2	21.6	76.2	56.0	20.2	100.0 (5,520)	2.9
아니오	26.6	2.3	24.2	73.4	54.6	18.9	100.0 (2,480)	2.9
종사상 지위($\chi^2=14.034$)								
상용직	22.5	2.1	20.3	77.5	56.8	20.7	100.0 (2,947)	3.0
임시직	24.4	1.7	22.7	75.6	57.8	17.9	100.0 (540)	2.9
일용직	28.0	1.5	26.5	72.0	56.1	15.9	100.0 (161)	2.9
자영업자	25.4	2.5	22.9	74.6	54.0	20.6	100.0 (1,758)	2.9
무급가족종사자	24.2	3.6	20.6	75.8	57.0	18.7	100.0 (115)	2.9
주관적 사회계층 ($\chi^2=31.087^{***}$)								
상(7-10)	21.3	2.8	18.4	78.7	55.5	23.2	100.0 (975)	3.0
중(5-6)	23.5	2.0	21.5	76.5	56.6	19.9	100.0 (4,186)	2.9
하(1-4)	27.5	2.4	25.1	72.5	54.0	18.4	100.0 (2,840)	2.9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경제수준($\chi^2=26.892^{***}$)								
상(상-중상)	23.4	3.2	20.2	76.6	53.4	23.2	100.0 (620)	3.0
중(중)	23.2	1.9	21.3	76.8	55.8	20.9	100.0 (4,075)	3.0
하(중하-하)	26.6	2.5	24.2	73.4	55.6	17.8	100.0 (3,304)	2.9
혼인 상태($\chi^2=39.86^{***}$)								
기혼	26.0	2.3	23.7	74.0	55.5	18.5	100.0 (6,114)	2.9
미혼	20.4	2.1	18.3	79.6	55.7	23.9	100.0 (1,886)	3.0
자녀 유무($\chi^2=164.273^{***}$)								
예	26.0	2.2	23.8	74.0	55.7	18.2	100.0 (5,561)	2.9
아니오	21.5	2.3	19.2	78.5	55.1	23.4	100.0 (2,439)	3.0
가구 형태($\chi^2=26.744^{**}$)								
1세대 가구	27.3	2.8	24.5	72.7	54.4	18.3	100.0 (3,200)	2.9
2세대 가구	22.9	1.9	21.0	77.1	56.3	20.8	100.0 (4,605)	3.0
3세대 이상 가구	23.4	2.4	21.0	76.6	56.7	19.9	100.0 (184)	2.9
기타	30.0	5.3	24.7	70.0	48.8	21.2	100.0 (12)	2.9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마.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대해 동의(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하는 비율은 74.0%로 조사된 5가지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에 대한 동의 비율의 성별 차이가 타 항목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이한 편이다. 특히 여성의 동의 비율은 75.4%이며 남성은 72.4%로 3.0%포인트의 차이를 보여 5가지 항목 중 가장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전히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성보다 다소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9~29세의 동의 비율은 80.8%이며 80세 이상은 67.2%로 세

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5-8〉 가족 내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5: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26.0	2.3	23.8	74.0	55.1	18.9	100.0 (8,000)	2.9
성별($\chi^2=14.722^{**}$)								
남성	27.6	2.3	25.3	72.4	54.9	17.6	100.0 (3,965)	2.9
여성	24.6	2.3	22.3	75.4	55.3	20.2	100.0 (4,035)	2.9
연령($\chi^2=143.403^{***}$)								
19~29세	19.2	1.9	17.3	80.8	58.4	22.3	100.0 (1,360)	3.0
30~39세	22.5	1.5	21.0	77.5	55.2	22.3	100.0 (1,279)	3.0
40~49세	24.4	1.0	23.5	75.6	56.3	19.3	100.0 (1,533)	2.9
50~59세	27.2	1.9	25.3	72.8	55.3	17.4	100.0 (1,590)	2.9
60~69세	31.0	4.0	27.0	69.0	51.9	17.2	100.0 (1,204)	2.8
70~79세	35.0	4.1	30.8	65.0	51.4	13.7	100.0 (675)	2.7
80세 이상	32.8	4.5	28.4	67.2	53.2	13.9	100.0 (360)	2.8
지역($\chi^2=27.932^{***}$)								
대도시	25.2	2.5	22.7	74.8	57.0	17.8	100.0 (3,523)	2.9
중소도시	27.5	1.9	25.6	72.5	54.0	18.4	100.0 (3,062)	2.9
농어촌	24.9	2.5	22.3	75.1	52.6	22.5	100.0 (1,415)	3.0
교육수준($\chi^2=78.592^{***}$)								
중졸 이하	34.3	3.7	30.6	65.7	50.1	15.7	100.0 (1,211)	2.8
고졸	26.7	2.7	24.0	73.3	55.7	17.6	100.0 (2,961)	2.9
초대졸 이상	23.0	1.5	21.5	77.0	56.2	20.9	100.0 (3,829)	3.0
경제활동 여부($\chi^2=13.75^{**}$)								
예	25.4	1.9	23.4	74.6	55.2	19.5	100.0 (5,520)	2.9
아니오	27.6	3.1	24.5	72.4	54.9	17.5	100.0 (2,480)	2.9
종사상 지위($\chi^2=24.57^*$)								
상용직	23.7	1.7	22.0	76.3	56.2	20.1	100.0 (2,947)	2.9
임시직	25.1	1.4	23.8	74.9	52.4	22.4	100.0 (540)	3.0
일용직	25.5	1.4	24.0	74.5	50.2	24.3	100.0 (161)	3.0
자영업자	27.8	2.5	25.3	72.2	54.8	17.5	100.0 (1,758)	2.9
무급가족종사자	32.6	3.0	29.7	67.4	53.0	14.4	100.0 (115)	2.8
주관적 사회계층($\chi^2=12.538$)								
상(7-10)	23.7	1.9	21.8	76.3	54.3	22.0	100.0 (975)	3.0
중(5-6)	25.7	2.2	23.4	74.3	55.2	19.1	100.0 (4,186)	2.9
하(1-4)	27.4	2.5	24.9	72.6	55.1	17.5	100.0 (2,840)	2.9
경제수준($\chi^2=35.445^{***}$)								
상(상-중상)	22.3	2.7	19.6	77.7	51.8	25.9	100.0 (620)	3.0
중(중)	25.2	2.0	23.3	74.8	55.5	19.3	100.0 (4,075)	2.9
하(중하-하)	27.8	2.6	25.2	72.2	55.2	17.1	100.0 (3,304)	2.9
혼인 상태($\chi^2=51.109^{***}$)								
기혼	27.9	2.4	25.5	72.1	54.2	17.9	100.0 (6,114)	2.9
미혼	20.1	2.0	18.0	79.9	58.0	21.9	100.0 (1,886)	3.0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자녀 유무($\chi^2=43.893^{***}$)	예	28.1	2.4	25.6	71.9	54.2	17.7	100.0 (5,561)	2.9
	아니오	21.5	1.9	19.5	78.5	57.0	21.5	100.0 (2,439)	3.0
가구 형태($\chi^2=25.547^{**}$)	1세대 가구	28.2	3.0	25.2	71.8	54.3	17.5	100.0 (3,200)	2.9
	2세대 가구	24.6	1.8	22.8	75.4	55.7	19.7	100.0 (4,605)	2.9
	3세대 이상 가구	25.8	2.3	23.6	74.2	52.6	21.5	100.0 (184)	2.9
	기타	21.3	5.3	16.0	78.7	49.6	29.1	100.0 (12)	3.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3. 가족 내 성 평등 정도에 대한 동의

앞에서 분석된 문항은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반면 현재의 문항은 육아,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 책임 등의 영역에서 가족 내 성평등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동등한 의사결정권(동의 비율 77.3%),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동의 비율 70.7%), 공평한 경제적 부양 책임(동의 비율 59.4%), 공평한 육아 분담(동의 비율 55.6%), 공평한 가사노동(동의 비율 47.7%) 순으로 ‘가족 내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가지 영역 중 가사노동에 대한 성평등의 동의 비율은 47.7%로 5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분담의 경우에도 동의 비율이 55.7%에 불과하여,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9〉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 을 가지고 있다	22.7	2.2	20.5	77.3	62.6	14.7	100.0 (8,000)
남녀가 재산 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9.3	2.7	26.6	70.7	56.4	14.3	100.0 (8,000)
남녀가 경제적 부담 책임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40.6	3.4	37.2	59.4	48.3	11.1	100.0 (8,000)
남녀가 육아 를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44.4	3.0	41.4	55.6	48.2	7.4	100.0 (8,000)
남녀가 가사노동 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52.3	5.8	46.5	47.7	37.1	10.6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가. 의사결정권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77.3%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79.2%로 여성의 75.4%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들이 인식하는 만큼 여성들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40~49세의 경우 동의 비율이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타 연령층과 차이를 보였다.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동의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동의 비율이 78.4%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동의 비율 74.8%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동의 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동의 비율이 86.6%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혼인 상태나 자녀 유무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1: 의사결정권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22.7	2.2	20.5	77.3	62.6	14.7	100.0 (8,000)	2.9
성별($\chi^2=17.921^{***}$)								
남성	20.8	1.9	18.9	79.2	63.6	15.6	100.0 (3,965)	2.9
여성	24.6	2.5	22.1	75.4	61.6	13.9	100.0 (4,035)	2.9
연령($\chi^2=30.233^{*}$)								
19~29세	23.3	2.4	20.9	76.7	61.3	15.4	100.0 (1,360)	2.9
30~39세	22.3	2.2	20.1	77.7	60.9	16.8	100.0 (1,279)	2.9
40~49세	21.0	2.7	18.3	79.0	63.8	15.2	100.0 (1,533)	2.9
50~59세	22.5	2.3	20.3	77.5	64.9	12.6	100.0 (1,590)	2.9
60~69세	24.0	2.0	22.0	76.0	61.4	14.6	100.0 (1,204)	2.9
70~79세	23.2	1.9	21.4	76.8	61.7	15.1	100.0 (675)	2.9
80세 이상	24.5	0.6	24.0	75.5	64.1	11.4	100.0 (360)	2.9
지역($\chi^2=16.774^{*}$)								
대도시	23.1	2.9	20.3	76.9	62.2	14.7	100.0 (3,523)	2.9
중소도시	23.0	1.6	21.4	77.0	62.5	14.5	100.0 (3,062)	2.9
농어촌	20.9	1.9	19.1	79.1	63.7	15.3	100.0 (1,415)	2.9
교육수준($\chi^2=2.836$)								
중졸 이하	23.6	2.2	21.3	76.4	61.7	14.7	100.0 (1,211)	2.9
고졸	22.6	2.0	20.5	77.4	63.3	14.2	100.0 (2,961)	2.9
초대졸 이상	22.6	2.3	20.2	77.4	62.3	15.1	100.0 (3,829)	2.9
경제활동 여부 ($\chi^2=16.697^{***}$)								
예	21.6	2.3	19.3	78.4	63.8	14.6	100.0 (5,520)	2.9
아니오	25.2	2.1	23.1	74.8	59.9	14.9	100.0 (2,480)	2.9
종사상 지위($\chi^2=18.145$)								
상용직	20.8	2.5	18.2	79.2	63.9	15.4	100.0 (2,947)	2.9
임시직	26.5	2.3	24.2	73.5	59.5	14.0	100.0 (540)	2.9
일용직	20.1	1.5	18.6	79.9	66.9	13.0	100.0 (161)	2.9
자영업자	21.2	1.9	19.3	78.8	65.1	13.6	100.0 (1,758)	2.9
무급가족종사자	27.3	2.9	24.4	72.7	57.1	15.6	100.0 (115)	2.9
주관적 사회계층 ($\chi^2=38.294^{***}$)								
상(7-10)	26.9	4.4	22.5	73.1	61.3	11.7	100.0 (975)	2.8
중(5-6)	21.3	1.9	19.4	78.7	63.2	15.5	100.0 (4,186)	2.9
하(1-4)	23.4	2.0	21.4	76.6	62.1	14.6	100.0 (2,840)	2.9
경제수준($\chi^2=17.065^{**}$)								
상(상-중상)	24.9	2.6	22.4	75.1	57.9	17.2	100.0 (620)	2.9
중(중)	22.2	2.1	20.2	77.8	62.1	15.7	100.0 (4,075)	2.9
하(중하-하)	22.9	2.3	20.6	77.1	64.0	13.1	100.0 (3,304)	2.9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혼인 상태($\chi^2=1.058$)								
기혼	22.7	2.1	20.6	77.3	62.7	14.6	100.0 (6,114)	2.9
미혼	22.7	2.5	20.3	77.3	62.1	15.2	100.0 (1,886)	2.9
자녀 유무($\chi^2=4.719$)								
예	22.0	2.1	19.9	78.0	63.2	14.8	100.0 (5,561)	2.9
아니오	24.2	2.4	21.9	75.8	61.3	14.5	100.0 (2,439)	2.9
가구 형태($\chi^2=22.715^{**}$)								
1세대 가구	23.3	2.2	21.1	76.7	62.8	14.0	100.0 (3,200)	2.9
2세대 가구	22.6	2.2	20.4	77.4	62.3	15.1	100.0 (4,605)	2.9
3세대 이상 가구	13.4	1.8	11.6	86.6	67.7	18.9	100.0 (184)	3.0
기타	57.9	8.3	49.6	42.1	42.1	0.0	100.0 (12)	2.3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나. 재산에 대한 권리

‘남녀가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70.7%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72.3%로 여성의 69.1%보다 높았다. 이는 앞서 분석된 의사결정권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30~39세의 경우 동의 비율이 73.8%로 가장 높으며 80세 이상의 경우는 63.8%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동의 비율이 73.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16.2%로 높게 조사되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7-10)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의 비율이 67.6%로 중(71.6%)이나 하(70.4%)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동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경제수준이 하(중하-하)인 경우 동의 비율이 68.9%로 경제수준이 상이나 중인 경우 동의 비율인 71.9%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혼의 동의 비율은 73.6%로 기혼(69.8%)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72.8%)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69.8%)보다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동의 비율이 75.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5-11〉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2: 재산에 대한 권리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29.3	2.7	26.6	70.7	56.4	14.3	100.0 (8,000)	2.8
성별($\chi^2=11.937^{**}$)								
남성	27.7	2.3	25.4	72.3	57.4	14.9	100.0 (3,965)	2.8
여성	30.9	3.1	27.7	69.1	55.4	13.7	100.0 (4,035)	2.8
연령($\chi^2=51.996^{***}$)								
19~29세	26.9	2.6	24.4	73.1	55.7	17.4	100.0 (1,360)	2.9
30~39세	26.2	2.4	23.8	73.8	57.5	16.2	100.0 (1,279)	2.9
40~49세	28.5	1.9	26.6	71.5	57.8	13.7	100.0 (1,533)	2.8
50~59세	30.4	3.0	27.4	69.6	55.7	13.9	100.0 (1,590)	2.8
60~69세	31.3	3.8	27.5	68.7	55.5	13.2	100.0 (1,204)	2.8
70~79세	32.1	2.9	29.2	67.9	56.3	11.6	100.0 (675)	2.8
80세 이상	36.2	3.3	32.9	63.8	55.3	8.5	100.0 (360)	2.7
지역($\chi^2=32.279^{***}$)								
대도시	28.8	3.5	25.3	71.2	55.9	15.3	100.0 (3,523)	2.8
중소도시	28.8	1.6	27.1	71.2	57.5	13.7	100.0 (3,062)	2.8
농어촌	31.8	3.4	28.4	68.2	55.0	13.2	100.0 (1,415)	2.8
교육수준($\chi^2=28.669^{***}$)								
중졸 이하	33.0	3.2	29.8	67.0	55.7	11.2	100.0 (1,211)	2.7
고졸	30.5	2.5	28.0	69.5	55.6	13.9	100.0 (2,961)	2.8
초대졸 이상	27.2	2.8	24.4	72.8	57.2	15.6	100.0 (3,829)	2.9
경제활동 여부 ($\chi^2=21.428^{***}$)								
예	27.9	2.7	25.2	72.1	57.1	15.0	100.0 (5,520)	2.8
아니오	32.5	2.8	29.7	67.5	54.9	12.6	100.0 (2,480)	2.8
종사상 지위($\chi^2=21.774^*$)								
상용직	26.3	2.6	23.7	73.7	57.6	16.2	100.0 (2,947)	2.9
임시직	30.9	2.6	28.3	69.1	54.8	14.3	100.0 (540)	2.8
일용직	30.2	6.1	24.1	69.8	55.8	14.0	100.0 (161)	2.8
자영업자	29.4	2.6	26.8	70.6	57.0	13.6	100.0 (1,758)	2.8
무급가족종사자	30.0	4.3	25.7	70.0	57.6	12.4	100.0 (115)	2.8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명)	평균
주관적 사회계층 ($\chi^2=20.697^{**}$)								
상(7-10)	32.4	4.5	27.9	67.6	55.5	12.1	100.0 (975)	2.8
중(5-6)	28.4	2.2	26.2	71.6	56.9	14.7	100.0 (4,186)	2.8
하(1-4)	29.6	2.9	26.7	70.4	56.0	14.4	100.0 (2,840)	2.8
경제수준($\chi^2=22.53^{***}$)								
상(상-중상)	28.1	4.0	24.1	71.9	54.9	17.0	100.0 (620)	2.8
중(중)	28.1	2.4	25.6	71.9	56.8	15.1	100.0 (4,075)	2.8
하(중하-하)	31.1	2.9	28.2	68.9	56.2	12.8	100.0 (3,304)	2.8
혼인 상태($\chi^2=20.804^{***}$)								
기혼	30.2	2.8	27.4	69.8	56.4	13.4	100.0 (6,114)	2.8
미혼	26.4	2.7	23.8	73.6	56.5	17.1	100.0 (1,886)	2.9
자녀 유무($\chi^2=14.199^{**}$)								
예	30.2	2.7	27.6	69.8	56.2	13.5	100.0 (5,561)	2.8
아니오	27.2	2.9	24.3	72.8	56.8	16.0	100.0 (2,439)	2.9
가구 형태($\chi^2=17.576^*$)								
1세대 가구	30.3	3.1	27.2	69.7	56.8	12.8	100.0 (3,200)	2.8
2세대 가구	28.8	2.5	26.3	71.2	56.1	15.1	100.0 (4,605)	2.8
3세대 이상 가구	24.6	1.8	22.8	75.4	55.3	20.1	100.0 (184)	2.9
기타	32.9	0.0	32.9	67.1	58.6	8.4	100.0 (12)	2.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다. 경제적 부양 책임

‘남녀가 경제적 부양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59.4%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의 경우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57.6%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경우 동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상(7-10)인 경우 동의 비율이 55.7%로 낮으나 경제수준이 상(상-중상)인 경우 동의 비율은 64.4%로 높았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동의 정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앞서 분석된 의사결정권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성평등 정도가 낮은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5-12〉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3: 경제적 부양 책임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40.6	3.4	37.2	59.4	48.3	11.1	100.0 (8,000)	2.7
성별($\chi^2=3.749$)								
남성	40.8	3.1	37.7	59.2	47.7	11.5	100.0 (3,965)	2.7
여성	40.4	3.7	36.7	59.6	48.9	10.7	100.0 (4,035)	2.7
연령($\chi^2=14.451$)								
19~29세	38.5	3.6	34.9	61.5	48.6	12.8	100.0 (1,360)	2.7
30~39세	40.4	3.2	37.2	59.6	48.6	10.9	100.0 (1,279)	2.7
40~49세	39.9	3.1	36.9	60.1	49.0	11.1	100.0 (1,533)	2.7
50~59세	42.1	3.6	38.5	57.9	47.9	10.0	100.0 (1,590)	2.6
60~69세	42.5	3.4	39.1	57.5	47.3	10.2	100.0 (1,204)	2.6
70~79세	39.4	4.0	35.4	60.6	48.5	12.1	100.0 (675)	2.7
80세 이상	40.8	2.8	38.0	59.2	48.0	11.1	100.0 (360)	2.7
지역($\chi^2=35.525^{***}$)								
대도시	39.3	4.3	35.0	60.7	49.5	11.2	100.0 (3,523)	2.7
중소도시	42.4	2.3	40.1	57.6	47.1	10.5	100.0 (3,062)	2.7
농어촌	39.9	3.5	36.4	60.1	48.1	12.0	100.0 (1,415)	2.7
교육수준($\chi^2=4.201$)								
중졸 이하	39.0	3.0	36.0	61.0	49.1	11.9	100.0 (1,211)	2.7
고졸	41.6	3.5	38.1	58.4	47.2	11.2	100.0 (2,961)	2.7
초대졸 이상	40.3	3.4	36.9	59.7	48.9	10.8	100.0 (3,829)	2.7
경제활동 여부 ($\chi^2=11.489^{**}$)								
예	39.4	3.3	36.1	60.6	49.4	11.2	100.0 (5,520)	2.7
아니오	43.3	3.6	39.7	56.7	45.9	10.8	100.0 (2,480)	2.6
종사상 지위($\chi^2=22.544^*$)								
상용직	37.3	3.3	34.0	62.7	50.9	11.8	100.0 (2,947)	2.7
임시직	44.4	2.9	41.5	55.6	45.6	10.0	100.0 (540)	2.6
일용직	38.9	3.8	35.0	61.1	48.2	12.9	100.0 (161)	2.7
자영업자	41.1	3.0	38.0	58.9	48.5	10.4	100.0 (1,758)	2.7
무급가족종사자	41.5	6.8	34.7	58.5	45.2	13.3	100.0 (115)	2.6
주관적 사회계층 ($\chi^2=19.1^{**}$)								
상(7-10)	44.3	5.2	39.2	55.7	44.1	11.5	100.0 (975)	2.6
중(5-6)	39.5	3.1	36.5	60.5	48.9	11.6	100.0 (4,186)	2.7
하(1-4)	40.8	3.3	37.6	59.2	48.9	10.2	100.0 (2,840)	2.7
경제수준($\chi^2=32.503^{***}$)								
상(상-중상)	35.6	5.4	30.2	64.4	50.5	13.9	100.0 (620)	2.7
중(중)	39.8	3.3	36.5	60.2	48.5	11.7	100.0 (4,075)	2.7
하(중하-하)	42.5	3.1	39.4	57.5	47.6	9.8	100.0 (3,304)	2.6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혼인 상태($\chi^2=3.823$)								
기혼	40.9	3.5	37.5	59.1	48.3	10.7	100.0 (6,114)	2.7
미혼	39.5	3.2	36.3	60.5	48.3	12.3	100.0 (1,886)	2.7
자녀 유무($\chi^2=7.209$)								
예	41.1	3.5	37.6	58.9	48.3	10.5	100.0 (5,561)	2.7
아니오	39.3	3.0	36.3	60.7	48.3	12.4	100.0 (2,439)	2.7
가구 형태($\chi^2=14.47$)								
1세대 가구	41.2	2.9	38.3	58.8	47.3	11.5	100.0 (3,200)	2.7
2세대 가구	40.1	3.8	36.3	59.9	49.1	10.8	100.0 (4,605)	2.7
3세대 이상 가구	41.8	0.7	41.1	58.2	46.3	11.9	100.0 (184)	2.7
기타	34.7	0.0	34.7	65.3	56.8	8.5	100.0 (12)	2.7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라. 육아 부담

‘남녀가 육아를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55.6%로 나타났다. 남성의 동의 비율은 59.0%로 여성의 5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육아 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만큼 여성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 분담에 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57.8%로 가장 높고 대도시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53.7%로 가장 낮았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 비율은 57.8%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5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혼인 상태,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4: 육아 부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44.3	3.0	41.4	55.7	48.2	7.4	100.0 (8,000)	2.6
성별($\chi^2=56.376^{***}$)								
남성	41.0	1.9	39.1	59.0	51.4	7.6	100.0 (3,965)	2.6
여성	47.6	4.0	43.6	52.4	45.1	7.3	100.0 (4,035)	2.6
연령($\chi^2=21.811$)								
19~29세	41.4	3.4	38.0	58.6	50.5	8.1	100.0 (1,360)	2.6
30~39세	43.0	2.5	40.5	57.0	49.9	7.1	100.0 (1,279)	2.6
40~49세	44.1	2.7	41.4	55.9	47.8	8.2	100.0 (1,533)	2.6
50~59세	46.6	3.1	43.5	53.4	46.1	7.4	100.0 (1,590)	2.6
60~69세	46.4	2.9	43.6	53.6	47.2	6.4	100.0 (1,204)	2.6
70~79세	44.8	3.1	41.6	55.2	46.7	8.5	100.0 (675)	2.6
80세 이상	43.1	3.3	39.8	56.9	51.7	5.2	100.0 (360)	2.6
지역($\chi^2=35.271^{***}$)								
대도시	46.3	3.1	43.2	53.7	46.8	6.9	100.0 (3,523)	2.6
중소도시	42.2	2.6	39.6	57.8	51.1	6.8	100.0 (3,062)	2.6
농어촌	44.1	3.5	40.6	55.9	45.7	10.2	100.0 (1,415)	2.6
교육수준($\chi^2=7.589$)								
중졸 이하	41.9	2.8	39.1	58.1	50.7	7.4	100.0 (1,211)	2.6
고졸	45.1	2.7	42.4	54.9	47.9	7.0	100.0 (2,961)	2.6
초대졸 이상	44.5	3.2	41.3	55.5	47.7	7.8	100.0 (3,829)	2.6
경제활동 여부($\chi^2=4.513$)								
예	43.8	2.8	41.0	56.2	48.4	7.8	100.0 (5,520)	2.6
아니오	45.5	3.2	42.3	54.5	47.8	6.7	100.0 (2,480)	2.6
종사상 지위 ($\chi^2=39.798^{***}$)								
상용직	40.5	2.5	38.1	59.5	50.8	8.7	100.0 (2,947)	2.7
임시직	47.4	3.7	43.7	52.6	47.3	5.4	100.0 (540)	2.5
일용직	41.0	2.1	38.9	59.0	52.2	6.8	100.0 (161)	2.6
자영업자	48.1	3.1	45.0	51.9	44.9	7.0	100.0 (1,758)	2.6
무급가족종사자	48.6	5.4	43.3	51.4	41.1	10.3	100.0 (115)	2.6
주관적 사회계층 ($\chi^2=30.415^{***}$)								
상(7-10)	38.3	2.1	36.1	61.7	54.4	7.3	100.0 (975)	2.7
중(5-6)	44.1	2.6	41.6	55.9	48.2	7.7	100.0 (4,186)	2.6
하(1-4)	46.7	3.8	42.9	53.3	46.2	7.1	100.0 (2,840)	2.6
경제수준($\chi^2=27.337^{***}$)								
상(상-중상)	42.9	1.7	41.2	57.1	47.7	9.4	100.0 (620)	2.6
중(중)	42.3	2.6	39.7	57.7	49.9	7.8	100.0 (4,075)	2.6
하(중하-하)	47.1	3.6	43.5	52.9	46.3	6.6	100.0 (3,304)	2.6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혼인 상태($\chi^2=6.77$)								
기혼	45.1	2.9	42.1	54.9	47.5	7.4	100.0 (6,114)	2.6
미혼	41.9	3.1	38.9	58.1	50.6	7.5	100.0 (1,886)	2.6
자녀 유무($\chi^2=17.13^{***}$)								
예	45.2	2.7	42.6	54.8	47.1	7.7	100.0 (5,561)	2.6
아니오	42.2	3.5	38.7	57.8	50.9	6.9	100.0 (2,439)	2.6
가구 형태($\chi^2=4.176$)								
1세대 가구	44.6	3.1	41.5	55.4	48.4	7.0	100.0 (3,200)	2.6
2세대 가구	44.1	2.9	41.2	55.9	48.2	7.7	100.0 (4,605)	2.6
3세대 이상 가구	45.5	2.7	42.8	54.5	45.5	9.0	100.0 (184)	2.6
기타	41.9	0.0	41.9	58.1	58.1	0.0	100.0 (12)	2.6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마. 가사노동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7.7%로 5가지 조사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동의 비율은 50.3%로 여성의 동의 비율인 4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아 및 타 영역처럼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9세의 동의 비율은 약 51.0%이나 50~59세는 42.9%로 50~59세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동의 비율은 45.7%로 중소도시(49.1%), 농어촌(49.7%) 거주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는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동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혼의 동의 비율은 50.9%로 기혼의 46.7%보다 높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 비율은 50.4%로 자녀가 있는 경우 46.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교육수준,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5: 가사노동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52.3	5.8	46.5	47.7	37.1	10.6	100.0 (8,000)	2.5
성별($\chi^2=53.43^{***}$)								
남성	49.7	4.1	45.6	50.3	39.7	10.6	100.0 (3,965)	2.6
여성	54.8	7.4	47.4	45.2	34.6	10.6	100.0 (4,035)	2.5
연령($\chi^2=45.263^{***}$)								
19~29세	49.0	6.6	42.4	51.0	38.5	12.5	100.0 (1,360)	2.6
30~39세	48.9	5.2	43.7	51.1	40.8	10.3	100.0 (1,279)	2.6
40~49세	51.2	5.4	45.8	48.8	38.0	10.8	100.0 (1,533)	2.5
50~59세	57.1	6.5	50.7	42.9	32.5	10.4	100.0 (1,590)	2.5
60~69세	53.1	5.7	47.4	46.9	37.4	9.5	100.0 (1,204)	2.5
70~79세	53.3	4.1	49.2	46.7	36.6	10.1	100.0 (675)	2.5
80세 이상	55.2	6.8	48.5	44.8	35.4	9.3	100.0 (360)	2.5
지역($\chi^2=27.582^{***}$)								
대도시	54.3	6.7	47.5	45.7	35.2	10.6	100.0 (3,523)	2.5
중소도시	50.9	4.7	46.2	49.1	39.3	9.8	100.0 (3,062)	2.5
농어촌	50.3	5.7	44.7	49.7	37.3	12.4	100.0 (1,415)	2.6
교육수준($\chi^2=9.946$)								
중졸 이하	51.3	5.2	46.1	48.7	38.5	10.2	100.0 (1,211)	2.5
고졸	52.8	6.0	46.8	47.2	37.7	9.5	100.0 (2,961)	2.5
초대졸 이상	52.2	5.8	46.4	47.8	36.2	11.6	100.0 (3,829)	2.5
경제활동 여부($\chi^2=9.961^*$)								
예	52.1	5.3	46.9	47.9	37.0	10.9	100.0 (5,520)	2.5
아니오	52.6	6.9	45.7	47.4	37.4	9.9	100.0 (2,480)	2.5
종사상 지위 ($\chi^2=52.698^{***}$)								
상용직	49.3	4.6	44.7	50.7	38.5	12.2	100.0 (2,947)	2.6
임시직	53.5	7.7	45.7	46.5	39.2	7.3	100.0 (540)	2.5
일용직	51.4	2.0	49.4	48.6	37.2	11.4	100.0 (161)	2.6
자영업자	56.1	5.5	50.6	43.9	34.1	9.8	100.0 (1,758)	2.5
무급가족종사자	59.2	12.5	46.8	40.8	32.7	8.1	100.0 (115)	2.4
주관적 사회계층 ($\chi^2=44.634^{***}$)								
상(7-10)	50.8	6.6	44.2	49.2	34.5	14.8	100.0 (975)	2.6
중(5-6)	50.5	5.5	45.0	49.5	38.4	11.1	100.0 (4,186)	2.6
하(1-4)	55.4	5.9	49.5	44.6	36.2	8.4	100.0 (2,840)	2.5
경제수준($\chi^2=47.1^{***}$)								
상(상-중상)	52.5	6.7	45.8	47.5	32.6	14.9	100.0 (620)	2.6
중(중)	50.1	5.6	44.6	49.9	38.0	11.8	100.0 (4,075)	2.6
하(중하-하)	54.9	5.9	49.0	45.1	36.8	8.3	100.0 (3,304)	2.5
혼인 상태($\chi^2=10.905^*$)								
기혼	53.3	5.8	47.5	46.7	36.4	10.3	100.0 (6,114)	2.5
미혼	49.1	5.8	43.3	50.9	39.5	11.5	100.0 (1,886)	2.6
자녀 유무($\chi^2=16.513^{***}$)								
예	53.5	5.5	48.0	46.5	36.2	10.3	100.0 (5,561)	2.5
아니오	49.6	6.5	43.2	50.4	39.2	11.2	100.0 (2,439)	2.6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가구 형태($\chi^2=10.435$)								
1세대 가구	52.7	5.2	47.5	47.3	37.0	10.4	100.0 (3,200)	2.5
2세대 가구	52.1	6.2	45.9	47.9	37.2	10.8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50.6	4.6	46.0	49.4	39.8	9.6	100.0 (184)	2.5
기타	55.9	0.0	55.9	44.1	19.7	24.4	100.0 (12)	2.7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을 시기에 따라 6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6가지 항목 중 ‘대학교육까지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83.5%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 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 비율은 15.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미혼 자녀의 주거공간 마련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52.6%와 53.9%였다. 결혼 준비에 대한 지원과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49.9%, 36.7%로 나타났다.

〈표 5-15〉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까지 지원해야 한다	16.5	1.1	15.4	83.4	69.2	14.2	100.0 (8,000)
부모는 미혼 자녀가 독립을 원할 경우 주거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47.4	5.7	41.7	52.5	45.6	6.9	100.0 (8,000)
부모는 미혼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	46.2	7.0	39.2	53.8	48.7	5.1	100.0 (8,000)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50.1	7.6	42.5	49.9	46.3	3.6	100.0 (8,000)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84.4	29.5	54.9	15.5	14.1	1.4	100.0 (8,000)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 손자녀 돌봄 등을 지원해야 한다	63.0	13.9	49.4	36.8	34.2	2.6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가. 대학교육 비용 지원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까지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83.5%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79.4%로 경제수준이 중(84.1%)이나 하(83.5%)인 경우보다 낮았다.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1세대 가구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60대 이후 세대, 저학력, 낮은 경제수준인 경우 대학교육까지의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5-16〉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1: 대학교육 비용 지원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16.5	1.1	15.4	83.5	69.2	14.2	100.0 (8,000)	3.0
성별($\chi^2=2.549$)								
남성	17.1	1.1	16.0	82.9	68.6	14.3	100.0 (3,965)	3.0
여성	15.9	1.1	14.8	84.1	69.9	14.2	100.0 (4,035)	3.0
연령($\chi^2=45.094^{***}$)								
19~29세	17.9	0.7	17.2	82.1	67.2	14.9	100.0 (1,360)	3.0
30~39세	18.4	1.2	17.2	81.6	68.8	12.8	100.0 (1,279)	2.9
40~49세	17.1	1.4	15.8	82.9	69.7	13.2	100.0 (1,533)	2.9
50~59세	17.8	1.8	15.9	82.2	67.2	15.0	100.0 (1,590)	3.0
60~69세	13.5	0.4	13.2	86.5	70.9	15.6	100.0 (1,204)	3.0
70~79세	12.6	0.7	11.9	87.4	73.4	14.0	100.0 (675)	3.0
80세 이상	13.7	0.7	13.0	86.3	72.5	13.8	100.0 (360)	3.0
지역($\chi^2=41.611^{***}$)								
대도시	15.7	1.2	14.5	84.3	68.8	15.5	100.0 (3,523)	3.0
중소도시	18.5	0.9	17.6	81.5	69.8	11.7	100.0 (3,062)	2.9
농어촌	14.2	1.2	13.0	85.8	69.1	16.7	100.0 (1,415)	3.0
교육수준($\chi^2=28.768^{***}$)								
중졸 이하	12.6	0.6	12.0	87.4	70.9	16.6	100.0 (1,211)	3.0
고졸	15.7	1.1	14.6	84.3	70.2	14.1	100.0 (2,961)	3.0
초대졸 이상	18.4	1.2	17.1	81.6	68.0	13.6	100.0 (3,829)	2.9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경제활동 여부($\chi^2=0.61$)								
예	16.5	1.1	15.4	83.5	69.1	14.4	100.0 (5,520)	3.0
아니오	16.5	1.0	15.5	83.5	69.6	13.9	100.0 (2,480)	3.0
종사상 지위($\chi^2=25.579^*$)								
상용직	17.6	1.2	16.3	82.4	69.0	13.4	100.0 (2,947)	2.9
임시직	18.5	0.7	17.9	81.5	67.3	14.2	100.0 (540)	2.9
일용직	14.4	0.0	14.4	85.6	64.2	21.4	100.0 (161)	3.1
자영업자	14.6	1.1	13.5	85.4	70.1	15.3	100.0 (1,758)	3.0
무급가족종사자	12.8	2.9	9.9	87.2	70.1	17.1	100.0 (115)	3.0
주관적 사회계층 ($\chi^2=22.234^{**}$)								
상(7-10)	15.9	1.7	14.2	84.1	66.3	17.7	100.0 (975)	3.0
중(5-6)	16.6	1.1	15.5	83.4	70.5	13.0	100.0 (4,186)	3.0
하(1-4)	16.7	0.9	15.8	83.3	68.4	14.9	100.0 (2,840)	3.0
경제수준($\chi^2=27.788^{***}$)								
상(상-중상)	20.6	2.3	18.3	79.4	61.1	18.3	100.0 (620)	3.0
중(중)	15.9	1.0	14.9	84.1	70.6	13.5	100.0 (4,075)	3.0
하(중하-하)	16.5	1.0	15.5	83.5	69.1	14.4	100.0 (3,304)	3.0
혼인 상태($\chi^2=4.812$)								
기혼	16.3	1.2	15.1	83.7	69.5	14.2	100.0 (6,114)	3.0
미혼	17.2	0.8	16.5	82.8	68.4	14.4	100.0 (1,886)	3.0
자녀 유무($\chi^2=3.796$)								
예	16.1	1.1	14.9	83.9	69.5	14.4	100.0 (5,561)	3.0
아니오	17.5	1.0	16.6	82.5	68.6	13.9	100.0 (2,439)	3.0
가구 형태($\chi^2=27.856^{**}$)								
1세대 가구	14.4	0.9	13.5	85.6	70.6	15.0	100.0 (3,200)	3.0
2세대 가구	18.0	1.3	16.7	82.0	68.1	13.9	100.0 (4,605)	2.9
3세대 이상 가구	16.8	0.0	16.8	83.2	74.1	9.1	100.0 (184)	2.9
기타	31.3	0.0	31.3	68.7	61.4	7.2	100.0 (12)	2.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나. 미혼 자녀 경제적 독립 지원

‘부모는 미혼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53.9%이며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동의 비율이 57.8%로 중소도시(49.6%)와 농어촌(53.0%)보다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동의 비율이 각각 61.6%, 62.7%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 밖에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17〉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2: 경제적 독립 지원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46.1	7.0	39.2	53.9	48.7	5.1	100.0 (8,000)	2.5
성별($\chi^2=5.199$)								
남성	47.1	7.3	39.8	52.9	47.5	5.4	100.0 (3,965)	2.5
여성	45.2	6.6	38.6	54.8	49.9	4.9	100.0 (4,035)	2.5
연령($\chi^2=28.865$)								
19~29세	46.3	7.4	38.9	53.7	47.7	6.0	100.0 (1,360)	2.5
30~39세	46.5	7.0	39.5	53.5	48.4	5.1	100.0 (1,279)	2.5
40~49세	44.0	6.9	37.1	56.0	51.8	4.2	100.0 (1,533)	2.5
50~59세	49.3	7.3	41.9	50.7	45.0	5.7	100.0 (1,590)	2.5
60~69세	46.0	6.9	39.1	54.0	48.9	5.1	100.0 (1,204)	2.5
70~79세	42.8	5.3	37.5	57.2	51.5	5.7	100.0 (675)	2.6
80세 이상	46.1	6.4	39.8	53.9	51.3	2.6	100.0 (360)	2.5
지역($\chi^2=61.481^{***}$)								
대도시	42.2	5.9	36.3	57.8	51.8	6.1	100.0 (3,523)	2.6
중소도시	50.4	7.2	43.2	49.6	45.3	4.3	100.0 (3,062)	2.5
농어촌	47.0	9.1	37.8	53.0	48.5	4.6	100.0 (1,415)	2.5
교육수준($\chi^2=9.786$)								
중졸 이하	43.5	6.5	37.0	56.5	52.0	4.5	100.0 (1,211)	2.5
고졸	47.4	7.0	40.4	52.6	47.0	5.6	100.0 (2,961)	2.5
초대졸 이상	46.0	7.1	38.9	54.0	49.0	5.0	100.0 (3,829)	2.5
경제활동 여부 ($\chi^2=10.336^*$)								
예	46.9	7.3	39.5	53.1	47.7	5.4	100.0 (5,520)	2.5
아니오	44.6	6.1	38.4	55.4	50.9	4.5	100.0 (2,480)	2.5
종사상 지위($\chi^2=9.67$)								
상용직	45.8	6.8	39.1	54.2	48.8	5.4	100.0 (2,947)	2.5
임시직	48.6	7.1	41.5	51.4	45.8	5.7	100.0 (540)	2.5
일용직	52.2	6.4	45.8	47.8	42.0	5.8	100.0 (161)	2.5
자영업자	47.6	8.2	39.4	52.4	47.1	5.3	100.0 (1,758)	2.5
무급가족종사자	46.4	9.9	36.5	53.6	46.9	6.8	100.0 (115)	2.5
주관적 사회계층 ($\chi^2=54.275^{***}$)								
상(7-10)	38.4	4.9	33.5	61.6	52.7	8.8	100.0 (975)	2.7
중(5-6)	46.2	7.3	38.9	53.8	48.8	4.9	100.0 (4,186)	2.5
하(1-4)	48.7	7.1	41.5	51.3	47.2	4.2	100.0 (2,840)	2.5
경제수준($\chi^2=49.359^{***}$)								
상(상-중상)	37.3	7.7	29.6	62.7	54.9	7.8	100.0 (620)	2.6
중(중)	45.8	7.4	38.4	54.2	48.6	5.7	100.0 (4,075)	2.5
하(중하-하)	48.2	6.3	41.9	51.8	47.8	4.0	100.0 (3,304)	2.5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혼인 상태($\chi^2=5.526$)								
기혼	45.6	6.8	38.8	54.4	49.4	5.0	100.0 (6,114)	2.5
미혼	47.8	7.5	40.3	52.2	46.5	5.7	100.0 (1,886)	2.5
자녀 유무($\chi^2=10.054^*$)								
예	46.3	7.0	39.3	53.7	49.1	4.6	100.0 (5,561)	2.5
아니오	45.8	6.9	38.9	54.2	47.9	6.3	100.0 (2,439)	2.5
가구 형태($\chi^2=4801^{***}$)								
1세대 가구	46.8	6.4	40.3	53.2	47.8	5.4	100.0 (3,200)	2.5
2세대 가구	45.7	7.4	38.4	54.3	49.3	5.0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47.7	5.5	42.2	52.3	46.8	5.5	100.0 (184)	2.5
기타	9.4	0.0	9.4	90.6	90.6	0.0	100.0 (12)	2.9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다. 미혼 자녀 주거공간 지원

‘부모는 미혼 자녀가 독립을 원할 경우 주거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52.6%이며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경제적 독립 지원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는데 80세 이상은 6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의 경우 농어촌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55.7%로 중소도시(51.1%), 대도시(52.6%)보다 높았다. 중졸 이하의 동의 비율은 60.5%로 초대졸 이상의 5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경제활동 여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18〉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3: 미혼 자녀 주거공간 마련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47.4	5.7	41.7	52.6	45.6	6.9	100.0 (8,000)	2.5
성별($\chi^2=3.444$)								
남성	48.4	5.8	42.6	51.6	44.7	6.9	100.0 (3,965)	2.5
여성	46.4	5.5	40.9	53.6	46.6	7.0	100.0 (4,035)	2.6
연령($\chi^2=48.274^{***}$)								
19~29세	48.3	6.0	42.4	51.7	45.0	6.6	100.0 (1,360)	2.5
30~39세	50.7	6.0	44.8	49.3	41.0	8.2	100.0 (1,279)	2.5
40~49세	48.7	6.7	42.0	51.3	43.6	7.7	100.0 (1,533)	2.5
50~59세	47.7	4.8	43.0	52.3	45.7	6.6	100.0 (1,590)	2.5
60~69세	45.3	5.2	40.1	54.7	49.0	5.7	100.0 (1,204)	2.6
70~79세	43.6	4.9	38.7	56.4	48.8	7.6	100.0 (675)	2.6
80세 이상	39.4	6.1	33.3	60.6	55.9	4.7	100.0 (360)	2.6
지역($\chi^2=55.175^{***}$)								
대도시	47.4	3.9	43.5	52.6	45.2	7.4	100.0 (3,523)	2.6
중소도시	48.9	6.7	42.2	51.1	44.5	6.6	100.0 (3,062)	2.5
농어촌	44.3	7.8	36.4	55.7	49.1	6.6	100.0 (1,415)	2.5
교육수준($\chi^2=48.359^{***}$)								
중졸 이하	39.5	4.5	35.0	60.5	53.6	6.9	100.0 (1,211)	2.6
고졸	48.1	5.8	42.3	51.9	45.8	6.0	100.0 (2,961)	2.5
초대졸 이상	49.3	5.9	43.4	50.7	43.0	7.7	100.0 (3,829)	2.5
경제활동 여부($\chi^2=7.333$)								
예	48.1	5.6	42.5	51.9	44.8	7.2	100.0 (5,520)	2.5
아니오	45.9	5.9	40.1	54.1	47.7	6.4	100.0 (2,480)	2.5
종사상 지위($\chi^2=25.125^*$)								
상용직	48.1	5.8	42.3	51.9	43.5	8.4	100.0 (2,947)	2.5
임시직	48.2	6.8	41.4	51.8	46.2	5.5	100.0 (540)	2.5
일용직	50.9	4.3	46.6	49.1	41.9	7.2	100.0 (161)	2.5
자영업자	48.1	4.9	43.2	51.9	46.3	5.5	100.0 (1,758)	2.5
무급가족종사자	40.8	5.0	35.8	59.2	50.6	8.6	100.0 (115)	2.6
주관적 사회계층 ($\chi^2=25.172^{***}$)								
상(7-10)	43.2	3.8	39.4	56.8	47.3	9.5	100.0 (975)	2.6
중(5-6)	48.4	5.9	42.5	51.6	44.5	7.0	100.0 (4,186)	2.5
하(1-4)	47.4	5.9	41.4	52.6	46.7	5.9	100.0 (2,840)	2.5
경제수준($\chi^2=29.967^{***}$)								
상(상-중상)	46.6	7.9	38.7	53.4	44.6	8.8	100.0 (620)	2.5
중(중)	46.4	5.7	40.7	53.6	45.7	7.9	100.0 (4,075)	2.6
하(중하-하)	48.8	5.3	43.5	51.2	45.7	5.5	100.0 (3,304)	2.5
혼인 상태($\chi^2=5.446$)								
기혼	46.7	5.6	41.1	53.3	46.3	7.0	100.0 (6,114)	2.5
미혼	49.7	5.9	43.8	50.3	43.5	6.7	100.0 (1,886)	2.5
자녀 유무($\chi^2=1.506$)								
예	47.3	5.7	41.6	52.7	46.0	6.7	100.0 (5,561)	2.5
아니오	47.7	5.7	42.0	52.3	44.9	7.4	100.0 (2,439)	2.5
가구 형태($\chi^2=13.063$)								
1세대 가구	45.6	5.4	40.2	54.4	47.3	7.1	100.0 (3,200)	2.6
2세대 가구	48.5	5.9	42.6	51.5	44.6	7.0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53.2	5.6	47.6	46.8	43.1	3.7	100.0 (184)	2.5
기타	39.9	0.0	39.9	60.1	60.1	0.0	100.0 (12)	2.6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라. 결혼준비 비용 지원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49.9%이며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경제적 독립 지원, 주거공간 마련과 달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동의 비율이 51.5%로 남성의 48.2%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미혼의 동의 비율은 44.9%로 기혼의 51.4%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 비율은 51.5%로 자녀가 없는 경우 동의 비율 4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지역, 경제활동 여부,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19〉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4: 결혼준비 비용 지원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50.1	7.6	42.5	49.9	46.3	3.6	100.0 (8,000)	2.5
성별($\chi^2=14.032^{**}$)								
남성	51.8	8.0	43.8	48.2	44.2	4.0	100.0 (3,965)	2.4
여성	48.5	7.3	41.2	51.5	48.2	3.3	100.0 (4,035)	2.5
연령($\chi^2=31.226^*$)								
19~29세	53.1	8.1	45.0	46.9	42.8	4.1	100.0 (1,360)	2.4
30~39세	53.4	9.3	44.1	46.6	43.2	3.4	100.0 (1,279)	2.4
40~49세	49.9	6.9	43.0	50.1	46.3	3.8	100.0 (1,533)	2.5
50~59세	49.0	8.0	41.0	51.0	47.4	3.6	100.0 (1,590)	2.5
60~69세	48.6	6.4	42.2	51.4	48.3	3.1	100.0 (1,204)	2.5
70~79세	46.2	7.3	38.9	53.8	49.8	4.0	100.0 (675)	2.5
80세 이상	44.9	5.8	39.1	55.1	51.5	3.6	100.0 (360)	2.5
지역($\chi^2=11.736$)								
대도시	49.6	7.5	42.0	50.4	46.2	4.2	100.0 (3,523)	2.5
중소도시	50.3	7.1	43.2	49.7	46.3	3.4	100.0 (3,062)	2.5
농어촌	51.0	9.0	42.1	49.0	46.2	2.7	100.0 (1,415)	2.4
교육수준($\chi^2=12.951^*$)								
중졸 이하	45.7	6.5	39.2	54.3	50.4	3.9	100.0 (1,211)	2.5
고졸	50.8	7.7	43.2	49.2	45.8	3.4	100.0 (2,961)	2.4
초대졸 이상	50.9	7.9	43.0	49.1	45.3	3.8	100.0 (3,829)	2.4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경제활동 여부($\chi^2=3.885$)								
예	50.8	7.7	43.1	49.2	45.5	3.7	100.0 (5,520)	2.5
아니오	48.6	7.4	41.2	51.4	47.9	3.5	100.0 (2,480)	2.5
종사상 지위($\chi^2=21.716^*$)								
상용직	51.6	7.8	43.7	48.4	44.2	4.2	100.0 (2,947)	2.4
임시직	49.9	6.6	43.3	50.1	46.0	4.1	100.0 (540)	2.5
일용직	50.1	7.2	42.8	49.9	45.7	4.3	100.0 (161)	2.5
자영업자	49.9	8.0	41.9	50.1	47.7	2.4	100.0 (1,758)	2.4
무급가족종사자	48.4	4.8	43.6	51.6	44.3	7.4	100.0 (115)	2.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1.741^{**}$)								
상(7-10)	45.4	6.4	39.1	54.6	49.0	5.6	100.0 (975)	2.5
중(5-6)	50.0	7.6	42.4	50.0	46.4	3.6	100.0 (4,186)	2.5
하(1-4)	51.8	8.1	43.7	48.2	45.1	3.0	100.0 (2,840)	2.4
경제수준($\chi^2=13.103^*$)								
상(상-중상)	49.4	7.5	41.9	50.6	45.5	5.1	100.0 (620)	2.5
중(중)	48.7	7.5	41.1	51.3	47.6	3.7	100.0 (4,075)	2.5
하(중하-하)	52.0	7.8	44.2	48.0	44.8	3.2	100.0 (3,304)	2.4
혼인 상태($\chi^2=27.695^{***}$)								
기혼	48.6	7.2	41.3	51.4	47.9	3.6	100.0 (6,114)	2.5
미혼	55.1	8.9	46.2	44.9	41.1	3.8	100.0 (1,886)	2.4
자녀 유무($\chi^2=21.006^{***}$)								
예	48.5	7.2	41.3	51.5	47.9	3.6	100.0 (5,561)	2.5
아니오	53.7	8.6	45.1	46.3	42.5	3.7	100.0 (2,439)	2.4
가구 형태($\chi^2=4.369$)								
1세대 가구	49.5	7.5	41.9	50.5	46.9	3.6	100.0 (3,200)	2.5
2세대 가구	50.7	7.7	43.0	49.3	45.6	3.7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47.4	8.1	39.4	52.6	49.9	2.6	100.0 (184)	2.5
기타	47.9	0.0	47.9	52.1	52.1	0.0	100.0 (12)	2.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마. 손자녀 돌봄 지원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 손자녀 돌봄 등을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36.7%이며 결혼준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동의 비율이 35.0%로 여성의 38.3%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80대 이상은 44.9%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농어촌보다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

우 동의 비율이 다소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동의 비율이 각각 43.1%, 44.4%로 높았다. 기혼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20〉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5: 손자녀 돌봄 지원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63.3	13.9	49.4	36.7	34.2	2.6	100.0 (8,000)	2.3
성별($\chi^2=11.614^{**}$)								
남성	65.0	13.7	51.3	35.0	32.5	2.5	100.0 (3,965)	2.2
여성	61.7	14.0	47.6	38.3	35.7	2.6	100.0 (4,035)	2.3
연령($\chi^2=40.762^{**}$)								
19~29세	64.4	14.7	49.7	35.6	32.8	2.8	100.0 (1,360)	2.2
30~39세	65.7	14.4	51.3	34.3	31.6	2.7	100.0 (1,279)	2.2
40~49세	64.4	13.5	50.9	35.6	33.6	1.9	100.0 (1,533)	2.2
50~59세	63.3	13.7	49.5	36.7	33.6	3.1	100.0 (1,590)	2.3
60~69세	63.1	12.6	50.5	36.9	34.9	2.0	100.0 (1,204)	2.3
70~79세	58.7	16.0	42.7	41.3	38.1	3.2	100.0 (675)	2.3
80세 이상	55.1	11.0	44.1	44.9	43.2	1.7	100.0 (360)	2.4
지역($\chi^2=46.702^{***}$)								
대도시	63.4	14.4	49.0	36.6	34.4	2.2	100.0 (3,523)	2.2
중소도시	62.3	11.1	51.2	37.7	34.8	2.9	100.0 (3,062)	2.3
농어촌	65.1	18.3	46.9	34.9	32.1	2.8	100.0 (1,415)	2.2
교육수준($\chi^2=32.009^{***}$)								
중졸 이하	57.9	15.2	42.7	42.1	38.9	3.2	100.0 (1,211)	2.3
고졸	64.8	13.7	51.2	35.2	33.2	1.9	100.0 (2,961)	2.2
초대졸 이상	63.8	13.6	50.2	36.2	33.4	2.8	100.0 (3,829)	2.3
경제활동 여부($\chi^2=6.795$)								
예	64.2	14.0	50.2	35.8	33.4	2.4	100.0 (5,520)	2.2
아니오	61.3	13.6	47.7	38.7	35.9	2.9	100.0 (2,480)	2.3
종사상 지위($\chi^2=19.026$)								
상용직	63.9	13.9	50.0	36.1	33.5	2.7	100.0 (2,947)	2.2
임시직	64.7	13.1	51.6	35.3	32.6	2.6	100.0 (540)	2.2
일용직	59.3	16.1	43.2	40.7	39.2	1.5	100.0 (161)	2.3
자영업자	65.3	13.7	51.6	34.7	32.7	2.0	100.0 (1,758)	2.2
무급가족종사자	60.4	23.0	37.4	39.6	37.2	2.4	100.0 (115)	2.2
주관적 사회계층 ($\chi^2=40.892^{***}$)								
상(7-10)	56.9	9.1	47.8	43.1	39.5	3.6	100.0 (975)	2.4
중(5-6)	63.3	13.6	49.7	36.7	34.2	2.4	100.0 (4,186)	2.3
하(1-4)	65.5	15.8	49.6	34.5	32.2	2.3	100.0 (2,840)	2.2
경제수준($\chi^2=31.729^{***}$)								
상(상-중상)	55.6	13.4	42.2	44.4	40.5	3.9	100.0 (620)	2.3
중(중)	62.4	13.0	49.4	37.6	35.0	2.6	100.0 (4,075)	2.3
하(중하-하)	65.8	15.0	50.8	34.2	31.9	2.3	100.0 (3,304)	2.2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혼인 상태($\chi^2=17.171^{***}$)								
기혼	62.2	13.4	48.8	37.8	35.3	2.5	100.0 (6,114)	2.3
미혼	66.8	15.4	51.4	33.2	30.4	2.9	100.0 (1,886)	2.2
자녀 유무($\chi^2=18.573^{***}$)								
예	62.1	13.1	49.0	37.9	35.5	2.4	100.0 (5,561)	2.3
아니오	66.0	15.7	50.4	34.0	31.2	2.8	100.0 (2,439)	2.2
가구 형태($\chi^2=12.442$)								
1세대 가구	62.9	14.5	48.4	37.1	34.6	2.5	100.0 (3,200)	2.3
2세대 가구	63.7	13.3	50.4	36.3	33.6	2.7	100.0 (4,605)	2.3
3세대 이상 가구	59.3	16.5	42.8	40.7	39.7	1.0	100.0 (184)	2.3
기타	66.8	0.0	66.8	33.2	33.2	0.0	100.0 (12)	2.3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바. 결혼 후 경제적 지원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15.6%로 대부분 해당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1세대 가구의 경우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 밖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21〉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 6: 결혼 후 경제적 지원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84.4	29.5	54.9	15.6	14.1	1.4	100.0 (8,000)	1.9
성별($\chi^2=7.328$)								
남성	83.8	29.7	54.1	16.2	14.4	1.8	100.0 (3,965)	1.9
여성	85.0	29.3	55.7	15.0	13.9	1.1	100.0 (4,035)	1.9
연령($\chi^2=19.803$)								
19~29세	84.6	29.2	55.4	15.4	13.5	1.8	100.0 (1,360)	1.9
30~39세	84.7	28.9	55.8	15.3	13.6	1.7	100.0 (1,279)	1.9
40~49세	84.3	30.3	54.0	15.7	14.5	1.2	100.0 (1,533)	1.9
50~59세	83.8	30.5	53.3	16.2	15.2	1.1	100.0 (1,590)	1.9
60~69세	85.7	29.2	56.5	14.3	12.6	1.7	100.0 (1,204)	1.9
70~79세	82.5	26.5	56.0	17.5	16.5	1.0	100.0 (675)	1.9
80세 이상	85.0	31.7	53.3	15.0	13.1	1.9	100.0 (360)	1.9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지역($\chi^2=37.66^{***}$)								
대도시	85.5	30.2	55.3	14.5	13.0	1.5	100.0 (3,523)	1.9
중소도시	82.5	26.5	56.0	17.5	16.1	1.4	100.0 (3,062)	1.9
농어촌	85.9	34.3	51.7	14.1	12.7	1.4	100.0 (1,415)	1.8
교육수준($\chi^2=6.709$)								
중졸 이하	84.6	28.9	55.7	15.4	14.4	1.0	100.0 (1,211)	1.9
고졸	83.5	29.9	53.6	16.5	15.0	1.5	100.0 (2,961)	1.9
초대졸 이상	85.0	29.3	55.7	15.0	13.4	1.5	100.0 (3,829)	1.9
경제활동 여부($\chi^2=5.298$)								
예	83.8	29.2	54.6	16.2	14.7	1.5	100.0 (5,520)	1.9
아니오	85.8	30.2	55.6	14.2	12.9	1.3	100.0 (2,480)	1.9
종사상 지위 ($\chi^2=29.319^{**}$)								
상용직	82.1	27.9	54.2	17.9	16.1	1.8	100.0 (2,947)	1.9
임시직	86.9	32.4	54.5	13.1	11.9	1.2	100.0 (540)	1.8
일용직	80.5	30.4	50.1	19.5	16.7	2.8	100.0 (161)	1.9
자영업자	86.3	30.1	56.2	13.7	12.6	1.1	100.0 (1,758)	1.8
무급가족종사자	79.2	31.6	47.6	20.8	20.1	0.7	100.0 (115)	1.9
주관적 사회계층 ($\chi^2=114.553^{***}$)								
상(7-10)	75.1	20.9	54.2	24.9	22.7	2.3	100.0 (975)	2.1
중(5-6)	84.6	28.7	55.9	15.4	13.8	1.5	100.0 (4,186)	1.9
하(1-4)	87.3	33.7	53.7	12.7	11.7	1.0	100.0 (2,840)	1.8
경제수준($\chi^2=39.635^{***}$)								
상(상-중상)	80.2	29.1	51.0	19.8	17.2	2.6	100.0 (620)	1.9
중(중)	83.1	27.8	55.2	16.9	15.3	1.6	100.0 (4,075)	1.9
하(중하-하)	86.9	31.6	55.3	13.1	12.1	1.0	100.0 (3,304)	1.8
혼인 상태($\chi^2=6.289$)								
기혼	84.0	29.4	54.6	16.0	14.6	1.4	100.0 (6,114)	1.9
미혼	85.8	29.9	55.9	14.2	12.5	1.7	100.0 (1,886)	1.9
자녀 유무($\chi^2=2.57$)								
예	84.3	29.8	54.5	15.7	14.4	1.4	100.0 (5,561)	1.9
아니오	84.8	28.8	56.0	15.2	13.6	1.6	100.0 (2,439)	1.9
가구 형태($\chi^2=19.835^*$)								
1세대 가구	83.9	28.1	55.8	16.1	14.5	1.6	100.0 (3,200)	1.9
2세대 가구	84.4	30.4	54.0	15.6	14.2	1.4	100.0 (4,605)	1.9
3세대 이상 가구	92.6	32.5	60.1	7.4	6.7	0.7	100.0 (184)	1.8
기타	100.0	25.2	74.8	0.0	0.0	0.0	100.0 (12)	1.7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5.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을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노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89.8%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경제적 부양에 대한 동의 비율은 87.2%, 돌봄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 비율은 85.0%로 조사되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64.2%, 49.3%였다. 이처럼 정서적 교류, 경제적 부양, 돌봄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 비율은 80.0%가 넘게 조사된 반면, 부모를 직접 돌봐야 한다거나 직접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의 동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자식은 노부모의 정서적 안정 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10.2	0.6	9.6	89.8	60.8	29.0	100.0 (8,000)
자식은 노부모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양 해야 한다	12.7	0.6	12.1	87.3	68.6	18.7	100.0 (8,000)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15.1	0.9	14.2	85.0	66.0	19.0	100.0 (8,000)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시고 살아야 한다	35.7	2.5	33.2	64.2	57.4	6.8	100.0 (8,000)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돌봐야 한다	50.7	4.8	45.9	49.2	38.0	11.2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가. 정기적 교류

‘자식은 노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89.8%로 대부분 동의하였다. 연령에 따른 동의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어촌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92.4%로 대도시(89.5%)나 중소도시(88.9%) 거주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동의 비율에 큰 차이는 없으나, 중졸 이하는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35.0%로 고졸(28.4%), 초대졸 이상(27.6%)보다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은 높으나, 중인 경우 동의 비율이 90.4%로 상(87.5%) 또는 하(89.6%)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 밖에 성별, 경제활동 여부, 종사상 지위,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23〉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1: 정기적 교류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10.2	0.6	9.6	89.8	60.8	29.0	100.0 (8,000)	3.2
성별($\chi^2=2.732$)								
남성	9.9	0.6	9.4	90.1	60.3	29.8	100.0 (3,965)	3.2
여성	10.5	0.6	9.9	89.5	61.3	28.2	100.0 (4,035)	3.2
연령($\chi^2=36.072^{**}$)								
19~29세	10.7	0.8	9.9	89.3	61.9	27.4	100.0 (1,360)	3.2
30~39세	11.0	0.9	10.1	89.0	62.7	26.3	100.0 (1,279)	3.1
40~49세	10.1	0.3	9.8	89.9	62.2	27.7	100.0 (1,533)	3.2
50~59세	9.9	0.5	9.4	90.1	61.5	28.6	100.0 (1,590)	3.2
60~69세	9.9	0.6	9.3	90.1	57.8	32.2	100.0 (1,204)	3.2
70~79세	8.8	0.0	8.8	91.2	59.3	32.0	100.0 (675)	3.2
80세 이상	11.2	0.7	10.5	88.8	53.5	35.3	100.0 (360)	3.2
지역($\chi^2=46.232^{***}$)								
대도시	10.5	1.0	9.6	89.5	60.2	29.2	100.0 (3,523)	3.2
중소도시	11.1	0.2	10.9	88.9	61.9	27.0	100.0 (3,062)	3.2
농어촌	7.6	0.4	7.2	92.4	59.8	32.7	100.0 (1,415)	3.2
교육수준($\chi^2=30.827^{***}$)								
중졸 이하	9.5	0.3	9.2	90.5	55.5	35.0	100.0 (1,211)	3.3
고졸	11.1	0.6	10.5	88.9	60.5	28.4	100.0 (2,961)	3.2
초대졸 이상	9.8	0.6	9.2	90.2	62.7	27.6	100.0 (3,829)	3.2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경제활동 여부($\chi^2=3.439$)								
예	10.3	0.6	9.7	89.7	61.2	28.5	100.0 (5,520)	3.2
아니오	10.0	0.4	9.6	90.0	59.9	30.1	100.0 (2,480)	3.2
종사상 지위($\chi^2=19.29$)								
상용직	11.0	0.8	10.2	89.0	62.2	26.8	100.0 (2,947)	3.1
임시직	7.3	0.5	6.8	92.7	63.2	29.5	100.0 (540)	3.2
일용직	11.7	0.7	11.0	88.3	62.2	26.1	100.0 (161)	3.1
자영업자	9.9	0.4	9.5	90.1	59.0	31.2	100.0 (1,758)	3.2
무급가족종사자	10.2	0.0	10.2	89.8	59.0	30.8	100.0 (115)	3.2
주관적 사회계층 ($\chi^2=53.531^{***}$)								
상(7-10)	12.5	0.7	11.7	87.5	66.7	20.8	100.0 (975)	3.1
중(5-6)	9.6	0.6	9.0	90.4	61.9	28.6	100.0 (4,186)	3.2
하(1-4)	10.4	0.5	9.9	89.6	57.1	32.4	100.0 (2,840)	3.2
경제수준($\chi^2=37.331^{***}$)								
상(상-중상)	13.4	1.3	12.2	86.6	52.0	34.5	100.0 (620)	3.2
중(중)	10.3	0.5	9.8	89.7	62.8	26.9	100.0 (4,075)	3.2
하(중하-하)	9.5	0.5	9.0	90.5	59.9	30.5	100.0 (3,304)	3.2
혼인 상태($\chi^2=10.223^*$)								
기혼	10.1	0.5	9.6	89.9	60.2	29.7	100.0 (6,114)	3.2
미혼	10.7	0.9	9.8	89.3	62.7	26.6	100.0 (1,886)	3.1
자녀 유무($\chi^2=16.174^{**}$)								
예	9.8	0.4	9.4	90.2	60.2	30.0	100.0 (5,561)	3.2
아니오	11.1	0.9	10.1	88.9	62.2	26.8	100.0 (2,439)	3.1
가구 형태($\chi^2=13.334$)								
1세대 가구	10.3	0.5	9.8	89.7	60.2	29.5	100.0 (3,200)	3.2
2세대 가구	10.2	0.6	9.6	89.8	61.1	28.6	100.0 (4,605)	3.2
3세대 이상 가구	7.2	0.5	6.7	92.8	63.7	29.1	100.0 (184)	3.2
기타	31.7	0.0	31.7	68.3	28.8	39.5	100.0 (12)	3.1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나. 경제적 부양

‘자식은 노부모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87.2%로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동의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남성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20.1%로 여성의 17.3%보다 높았다. 정서적 교류와 달리 경제

적 부양의 경우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농어촌 지역의 동의 비율은 90.4%로 대도시(87.3%), 중소도시(85.7%)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동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상인 경우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24.9%로 높게 조사되었다.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20.6%이고 동의하는 비율은 88.3%로 1세대 가구(87.5%), 2세대 가구(87.0%)보다 높았다. 이 밖에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종사상 지위, 주관적 사회계층, 혼인 상태,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24〉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2: 경제적 부양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12.8	0.6	12.1	87.2	68.6	18.7	100.0 (8,000)	3.1
성별($\chi^2=13.735^{**}$)								
남성	12.5	0.8	11.7	87.5	67.4	20.1	100.0 (3,965)	3.1
여성	13.0	0.5	12.5	87.0	69.7	17.3	100.0 (4,035)	3.0
연령($\chi^2=18.82$)								
19~29세	13.4	0.7	12.7	86.6	67.9	18.7	100.0 (1,360)	3.0
30~39세	14.3	1.0	13.2	85.7	69.1	16.6	100.0 (1,279)	3.0
40~49세	13.1	0.6	12.5	86.9	68.8	18.1	100.0 (1,533)	3.0
50~59세	13.0	0.7	12.3	87.0	67.7	19.3	100.0 (1,590)	3.1
60~69세	10.5	0.5	10.1	89.5	69.6	19.9	100.0 (1,204)	3.1
70~79세	11.7	0.1	11.6	88.3	69.6	18.7	100.0 (675)	3.1
80세 이상	11.8	0.5	11.2	88.2	67.1	21.1	100.0 (360)	3.1
지역($\chi^2=39.063^{***}$)								
대도시	12.7	1.0	11.7	87.3	68.2	19.2	100.0 (3,523)	3.1
중소도시	14.3	0.3	14.0	85.7	67.4	18.4	100.0 (3,062)	3.0
농어촌	9.6	0.5	9.1	90.4	72.2	18.2	100.0 (1,415)	3.1
교육수준($\chi^2=3.816$)								
중졸 이하	12.0	0.3	11.7	88.0	68.2	19.8	100.0 (1,211)	3.1
고졸	12.8	0.7	12.1	87.2	68.4	18.8	100.0 (2,961)	3.1
초대졸 이상	12.9	0.7	12.2	87.1	68.9	18.2	100.0 (3,829)	3.0
경제활동 여부($\chi^2=0.117$)								
예	12.7	0.6	12.0	87.3	68.6	18.7	100.0 (5,520)	3.1
아니오	12.9	0.6	12.3	87.1	68.5	18.6	100.0 (2,480)	3.1
종사상 지위($\chi^2=15.229$)								
상용직	14.0	0.7	13.3	86.0	67.5	18.5	100.0 (2,947)	3.0
임시직	11.2	1.0	10.3	88.8	68.4	20.3	100.0 (540)	3.1
일용직	11.2	0.5	10.6	88.8	75.3	13.5	100.0 (161)	3.0
자영업자	11.2	0.5	10.7	88.8	69.7	19.1	100.0 (1,758)	3.1
무급가족종사자	12.3	0.6	11.7	87.7	70.7	17.0	100.0 (115)	3.0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주관적 사회계층 ($\chi^2=3.789$)								
상(7-10)	14.0	0.9	13.1	86.0	66.8	19.2	100.0 (975)	3.0
중(5-6)	12.7	0.5	12.1	87.3	68.6	18.8	100.0 (4,186)	3.1
하(1-4)	12.5	0.7	11.8	87.5	69.2	18.4	100.0 (2,840)	3.1
경제수준($\chi^2=19.785^{***}$)								
상(상-중상)	13.0	0.8	12.1	87.0	62.1	24.9	100.0 (620)	3.1
중(중)	13.1	0.6	12.4	86.9	68.7	18.2	100.0 (4,075)	3.0
하(중하-하)	12.3	0.6	11.7	87.7	69.6	18.1	100.0 (3,304)	3.1
혼인 상태($\chi^2=0.718$)								
기혼	12.9	0.6	12.3	87.1	68.4	18.7	100.0 (6,114)	3.1
미혼	12.3	0.7	11.6	87.7	69.0	18.7	100.0 (1,886)	3.1
자녀 유무($\chi^2=3.614$)								
예	12.4	0.7	11.7	87.6	68.6	19.0	100.0 (5,561)	3.1
아니오	13.6	0.6	13.0	86.4	68.5	17.9	100.0 (2,439)	3.0
가구 형태($\chi^2=18.615^*$)								
1세대 가구	12.5	0.4	12.1	87.5	68.6	18.9	100.0 (3,200)	3.1
2세대 가구	13.0	0.8	12.2	87.0	68.5	18.5	100.0 (4,605)	3.0
3세대 이상 가구	11.7	0.9	10.8	88.3	67.8	20.6	100.0 (184)	3.1
기타	15.7	7.2	8.5	84.3	75.9	8.4	100.0 (12)	2.9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다. 돌봄 비용 부담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85.0%로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어촌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87.4%로 대도시(85.3%)나 중소도시(83.4%)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중졸 이하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21.3%로 고졸(18.7%), 초대졸 이상(18.5%)보다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상인 경우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은 각각 21.7%, 23.4%로 높으나, 중인 경우 동의 비율이 각각 85.7%, 85.3%로 상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기타를 제외한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5-25〉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3: 돌봄 비용 부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15.0	0.9	14.2	85.0	66.0	19.0	100.0 (8,000)	3.0
성별($\chi^2=4.258$)								
남성	14.6	0.8	13.8	85.4	65.7	19.8	100.0 (3,965)	3.0
여성	15.5	1.0	14.6	84.5	66.2	18.2	100.0 (4,035)	3.0
연령($\chi^2=23.922$)								
19~29세	16.6	1.1	15.5	83.4	63.4	20.0	100.0 (1,360)	3.0
30~39세	15.8	1.2	14.7	84.2	65.5	18.6	100.0 (1,279)	3.0
40~49세	15.5	0.7	14.8	84.5	65.6	18.9	100.0 (1,533)	3.0
50~59세	15.7	0.8	14.9	84.3	67.2	17.2	100.0 (1,590)	3.0
60~69세	13.1	0.8	12.3	86.9	68.4	18.5	100.0 (1,204)	3.0
70~79세	12.7	0.6	12.1	87.3	65.0	22.3	100.0 (675)	3.1
80세 이상	12.5	0.5	12.0	87.5	66.8	20.7	100.0 (360)	3.1
지역($\chi^2=19.694^{**}$)								
대도시	14.7	1.1	13.6	85.3	66.1	19.2	100.0 (3,523)	3.0
중소도시	16.6	0.6	16.0	83.4	64.9	18.5	100.0 (3,062)	3.0
농어촌	12.6	0.9	11.7	87.4	67.8	19.6	100.0 (1,415)	3.1
교육수준($\chi^2=19.519^{**}$)								
중졸 이하	11.8	0.6	11.2	88.2	66.9	21.3	100.0 (1,211)	3.1
고졸	16.6	1.0	15.7	83.4	64.7	18.7	100.0 (2,961)	3.0
초대졸 이상	14.9	0.9	14.0	85.1	66.6	18.5	100.0 (3,829)	3.0
경제활동 여부($\chi^2=0.47$)								
예	15.1	0.9	14.2	84.9	65.8	19.1	100.0 (5,520)	3.0
아니오	15.0	0.8	14.2	85.0	66.2	18.8	100.0 (2,480)	3.0
종사상 지위 ($\chi^2=404.14^{***}$)								
상용직	16.1	1.1	15.0	83.9	64.1	19.8	100.0 (2,947)	3.0
임시직	12.0	0.2	11.8	88.0	70.5	17.6	100.0 (540)	3.1
일용직	14.2	1.2	13.0	85.8	64.6	21.3	100.0 (161)	3.1
자영업자	14.6	0.7	13.9	85.4	67.4	18.0	100.0 (1,758)	3.0
무급가족종사자	12.7	3.2	9.5	87.3	65.8	21.5	100.0 (115)	3.1
주관적 사회계층 ($\chi^2=15.434^*$)								
상(7-10)	15.9	1.3	14.6	84.1	62.3	21.7	100.0 (975)	3.0
중(5-6)	14.3	0.6	13.7	85.7	67.3	18.4	100.0 (4,186)	3.0
하(1-4)	15.8	1.1	14.7	84.2	65.3	18.9	100.0 (2,840)	3.0
경제수준($\chi^2=13.584^*$)								
상(상-중상)	16.1	1.4	14.7	83.9	60.5	23.4	100.0 (620)	3.1
중(중)	14.7	0.7	14.0	85.3	66.3	19.0	100.0 (4,075)	3.0
하(중하-하)	15.3	1.0	14.3	84.7	66.5	18.2	100.0 (3,304)	3.0
혼인 상태($\chi^2=11.758^{**}$)								
기혼	14.7	0.8	13.9	85.3	66.9	18.4	100.0 (6,114)	3.0
미혼	16.2	1.0	15.2	83.8	62.7	21.1	100.0 (1,886)	3.0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 (명)	평균
자녀 유무($\chi^2=8.826^*$)								
예	14.4	0.8	13.5	85.6	66.9	18.7	100.0 (5,561)	3.0
아니오	16.6	1.0	15.6	83.4	63.8	19.6	100.0 (2,439)	3.0
가구 형태($\chi^2=17.585^*$)								
1세대 가구	15.3	0.7	14.6	84.7	64.7	20.0	100.0 (3,200)	3.0
2세대 가구	14.9	1.0	14.0	85.1	66.8	18.3	100.0 (4,605)	3.0
3세대 이상 가구	14.1	1.0	13.1	85.9	65.8	20.1	100.0 (184)	3.0
기타	7.2	7.2	0.0	92.8	84.3	8.4	100.0 (12)	2.9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라. 모시고 살기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시고 살아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64.2%로 경제적 부양에 비해 동의 비율이 낮았다. 남성은 동의 비율이 66.8%로 여성의 61.6%보다 높아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80세 이상은 72.7%로 19~29세의 동의 비율 60.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 비율은 각각 65.2%, 65.6%로 미혼인 경우 60.9%, 자녀가 없는 경우 6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경제활동 여부,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26〉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4: 모시고 살기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35.8	2.5	33.2	64.2	57.4	6.8	100.0 (8,000)	2.7
성별($\chi^2=24.506^{***}$)								
남성	33.2	2.3	30.9	66.8	59.5	7.4	100.0 (3,965)	2.7
여성	38.4	2.8	35.6	61.6	55.3	6.3	100.0 (4,035)	2.7
연령($\chi^2=59.828^{***}$)								
19~29세	40.0	2.7	37.3	60.0	54.9	5.1	100.0 (1,360)	2.6
30~39세	39.6	2.8	36.8	60.4	55.3	5.1	100.0 (1,279)	2.6
40~49세	35.9	2.6	33.3	64.1	57.3	6.7	100.0 (1,533)	2.7
50~59세	33.9	2.6	31.3	66.1	58.5	7.6	100.0 (1,590)	2.7
60~69세	34.8	2.5	32.3	65.2	58.0	7.3	100.0 (1,204)	2.7
70~79세	30.4	1.6	28.8	69.6	60.7	8.9	100.0 (675)	2.8
80세 이상	27.3	2.0	25.3	72.7	61.5	11.2	100.0 (360)	2.8
지역($\chi^2=15.561^*$)								
대도시	36.8	3.0	33.8	63.2	55.8	7.4	100.0 (3,523)	2.7
중소도시	34.7	1.9	32.7	65.3	59.2	6.1	100.0 (3,062)	2.7
농어촌	35.6	2.6	33.0	64.4	57.3	7.1	100.0 (1,415)	2.7
교육수준($\chi^2=32.163^{***}$)								
중졸 이하	32.3	2.4	29.9	67.7	58.6	9.1	100.0 (1,211)	2.7
고졸	33.8	2.6	31.3	66.2	59.3	6.8	100.0 (2,961)	2.7
초대졸 이상	38.4	2.5	35.8	61.6	55.5	6.1	100.0 (3,829)	2.7
경제활동 여부($\chi^2=1.796$)								
예	36.1	2.5	33.7	63.9	57.0	6.9	100.0 (5,520)	2.7
아니오	35.0	2.7	32.3	65.0	58.2	6.8	100.0 (2,480)	2.7
종사상 지위 ($\chi^2=46.018^{***}$)								
상용직	35.9	2.4	33.5	64.1	56.9	7.2	100.0 (2,947)	2.7
임시직	45.1	2.3	42.8	54.9	49.1	5.7	100.0 (540)	2.6
일용직	37.5	3.3	34.2	62.5	50.2	12.3	100.0 (161)	2.7
자영업자	33.8	2.3	31.5	66.2	59.9	6.3	100.0 (1,758)	2.7
무급가족종사자	32.4	6.1	26.3	67.6	63.1	4.5	100.0 (115)	2.7
주관적 사회계층 ($\chi^2=20.72^{**}$)								
상(7-10)	31.5	2.9	28.6	68.5	60.1	8.5	100.0 (975)	2.7
중(5-6)	35.8	2.3	33.6	64.2	58.0	6.2	100.0 (4,186)	2.7
하(1-4)	37.2	2.8	34.4	62.8	55.6	7.2	100.0 (2,840)	2.7
경제수준($\chi^2=19.778^{**}$)								
상(상-중상)	33.9	2.7	31.3	66.1	56.6	9.5	100.0 (620)	2.7
중(중)	34.2	2.5	31.7	65.8	59.0	6.7	100.0 (4,075)	2.7
하(중하-하)	38.0	2.6	35.5	62.0	55.5	6.4	100.0 (3,304)	2.7
혼인 상태($\chi^2=24.838^{***}$)								
기혼	34.8	2.5	32.3	65.2	57.7	7.5	100.0 (6,114)	2.7
미혼	39.1	2.7	36.4	60.9	56.3	4.7	100.0 (1,886)	2.6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자녀 유무($\chi^2=20.006^{***}$)								
예	34.4	2.5	31.9	65.6	58.3	7.4	100.0 (5,561)	2.7
아니오	39.0	2.7	36.2	61.0	55.4	5.6	100.0 (2,439)	2.6
가구 형태($\chi^2=13.818$)								
1세대 가구	35.5	2.0	33.5	64.5	57.4	7.1	100.0 (3,200)	2.7
2세대 가구	36.1	2.9	33.2	63.9	57.3	6.6	100.0 (4,605)	2.7
3세대 이상 가구	30.3	1.9	28.4	69.7	61.1	8.6	100.0 (184)	2.8
기타	55.7	7.2	48.5	44.3	44.3	0.0	100.0 (12)	2.4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마. 직접 돌보기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돌봐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49.3%로 50.0%에 못 미쳤다. 남성의 경우 동의 비율이 50.5%로 여성의 48.1%보다 높아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80세 이상은 58.4%로 19~29세의 동의 비율 45.8%와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졸 이하의 동의 비율은 56.1%이며 초대졸 이상은 46.0%로 10.1%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으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 비율은 각각 50.1%, 50.2%로 미혼인 경우 46.7%, 자녀가 없는 경우 47.2%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의 경우에는 1세대 가구의 동의 비율이 51.7%로 2세대 가구(47.6%)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5-27〉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5: 직접 돌보기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50.7	4.8	45.9	49.3	38.0	11.2	100.0 (8,000)	2.6
성별($\chi^2=10.698^*$)								
남성	49.5	4.2	45.3	50.5	38.7	11.8	100.0 (3,965)	2.6
여성	51.9	5.4	46.5	48.1	37.4	10.7	100.0 (4,035)	2.5
연령($\chi^2=59.256^{***}$)								
19~29세	54.2	5.2	48.9	45.8	36.7	9.1	100.0 (1,360)	2.5
30~39세	55.5	5.2	50.3	44.5	34.6	9.9	100.0 (1,279)	2.5
40~49세	50.9	5.1	45.8	49.1	38.2	10.9	100.0 (1,533)	2.5
50~59세	49.6	4.8	44.7	50.4	39.0	11.4	100.0 (1,590)	2.6
60~69세	50.1	4.3	45.8	49.9	37.4	12.5	100.0 (1,204)	2.6
70~79세	42.8	4.1	38.7	57.2	41.6	15.6	100.0 (675)	2.7
80세 이상	41.6	3.3	38.3	58.4	45.9	12.5	100.0 (360)	2.7
지역($\chi^2=61.531^{***}$)								
대도시	50.9	6.7	44.2	49.1	37.8	11.3	100.0 (3,523)	2.5
중소도시	50.7	2.8	47.9	49.3	38.8	10.4	100.0 (3,062)	2.6
농어촌	50.2	4.6	45.6	49.8	37.1	12.8	100.0 (1,415)	2.6
교육수준($\chi^2=50.907^{***}$)								
중졸 이하	43.9	4.3	39.6	56.1	41.2	14.9	100.0 (1,211)	2.7
고졸	49.2	4.6	44.6	50.8	40.1	10.7	100.0 (2,961)	2.6
초대졸 이상	54.0	5.2	48.9	46.0	35.5	10.5	100.0 (3,829)	2.5
경제활동 여부 ($\chi^2=2.233$)								
예	51.0	4.7	46.4	49.0	37.9	11.1	100.0 (5,520)	2.6
아니오	50.0	5.2	44.8	50.0	38.5	11.5	100.0 (2,480)	2.6
종사상 지위($\chi^2=18.725$)								
상용직	51.2	4.8	46.3	48.8	37.6	11.3	100.0 (2,947)	2.6
임시직	56.6	4.0	52.6	43.4	34.5	8.9	100.0 (540)	2.5
일용직	45.5	5.3	40.3	54.5	43.1	11.4	100.0 (161)	2.6
자영업자	49.6	4.3	45.3	50.4	39.1	11.4	100.0 (1,758)	2.6
무급가족종사자	51.5	8.4	43.1	48.5	34.8	13.7	100.0 (115)	2.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3.887^{***}$)								
상(7-10)	43.5	5.1	38.4	56.5	42.5	14.1	100.0 (975)	2.7
중(5-6)	51.8	5.1	46.7	48.2	37.9	10.3	100.0 (4,186)	2.5
하(1-4)	51.6	4.3	47.3	48.4	36.7	11.7	100.0 (2,840)	2.6
경제수준($\chi^2=7.273$)								
상(상-중상)	51.5	6.5	45.0	48.5	36.0	12.4	100.0 (620)	2.5
중(중)	50.3	4.7	45.6	49.7	38.2	11.5	100.0 (4,075)	2.6
하(중하-하)	51.1	4.6	46.4	48.9	38.2	10.7	100.0 (3,304)	2.6
혼인 상태($\chi^2=16.43^{***}$)								
기혼	49.9	4.8	45.1	50.1	38.1	12.0	100.0 (6,114)	2.6
미혼	53.3	5.0	48.4	46.7	37.9	8.8	100.0 (1,886)	2.5
자녀 유무($\chi^2=13.798^{**}$)								
예	49.8	4.6	45.2	50.2	38.2	12.0	100.0 (5,561)	2.6
아니오	52.8	5.4	47.4	47.2	37.8	9.5	100.0 (2,439)	2.5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가구 형태($\chi^2=19.751^*$)								
1세대 가구	48.4	4.1	44.3	51.6	39.4	12.2	100.0 (3,200)	2.6
2세대 가구	52.4	5.4	47.0	47.6	37.0	10.6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49.3	3.9	45.4	50.7	40.1	10.6	100.0 (184)	2.6
기타	50.2	7.2	42.9	49.8	49.8	0.0	100.0 (12)	2.4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제2절 결혼과 가족 형성 및 구성에 대한 가치관

이번 절에서는 결혼제도에 대한 생각부터 동거, 가족 구성에 대한 생각과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그리고 가족에 대한 편견을 위주로 알아본다.

1. 결혼 및 동거 관련 견해와 결혼-자녀 연관성에 대한 생각

먼저 결혼제도와 동거에 대한 견해, 이어서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기대를 알아본다. 또 전통적으로 결혼한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는 현재 이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 결혼제도와 동거에 대한 견해

결혼제도와 동거에 대한 견해로 알아본 것은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 ‘결혼을 전제

로 성인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살아도 된다’, ‘결혼과 무관하게 성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도 된다’,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에 대해서이다.

1) 결혼제도에 대한 견해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인의 결합 방식은 결혼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결혼제도의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동거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이에 결혼제도에 대한 생각과 동거에 대한 견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본다.

먼저,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5.0%,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4.9%, 대체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6.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60.2%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3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하고 있다. 동의한다는 비율이 50대까지는 과반으로 나타나지만, 6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절반 이하의 비율로 50대를 기점으로 이 견해에 동의한다는 응답에 대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별 구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도 높

아졌다. 중졸 이하의 그룹은 동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중인 그룹보다는 하지 않는 그룹의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고, 종사상 지위를 보면, 일용직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절반 이하였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낮아졌는데, 경제수준은 중간 그룹이 가장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의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그룹의 동의 비율이 47.4%로 가장 낮았고, 미혼의 경우는 74.6%로 매우 높아 결혼제도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의 동의 비율은 71.8%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동의 비율인 55.0%보다 높았는데, 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결혼한 응답자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결혼제도를 인정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2세대 가구인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39.8	5.0	34.9	60.2	53.7	6.4	100.0 (8,000)	2.6
성별($\chi^2=3.441$)								
남성	38.9	5.0	33.9	61.1	54.6	6.5	100.0 (3,965)	2.6
여성	40.8	5.0	35.8	59.2	52.8	6.4	100.0 (4,035)	2.6
연령($\chi^2=505.035^{***}$)								
19~29세	24.9	2.5	22.4	75.1	64.5	10.6	100.0 (1,360)	2.8
30~39세	28.9	2.5	26.5	71.1	63.7	7.4	100.0 (1,279)	2.8
40~49세	35.2	2.8	32.3	64.8	57.7	7.1	100.0 (1,533)	2.7
50~59세	45.4	5.4	40.0	54.6	49.7	4.9	100.0 (1,590)	2.5
60~69세	52.0	7.7	44.3	48.0	43.8	4.2	100.0 (1,204)	2.4
70~79세	57.0	9.8	47.2	43.0	39.1	3.9	100.0 (675)	2.4
80세 이상	57.7	12.5	45.2	42.3	39.1	3.1	100.0 (360)	2.3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지역($\chi^2=45.778^{***}$)								
대도시	40.1	4.5	35.6	59.9	52.4	7.5	100.0 (3,523)	2.6
중소도시	38.1	4.5	33.6	61.9	56.9	5.1	100.0 (3,062)	2.6
농어촌	43.1	7.3	35.8	56.9	50.2	6.8	100.0 (1,415)	2.6
교육수준($\chi^2=267.855^{***}$)								
중졸 이하	56.9	10.9	46.0	43.1	39.9	3.2	100.0 (1,211)	2.4
고졸	40.8	5.2	35.5	59.2	53.0	6.2	100.0 (2,961)	2.6
초대졸 이상	33.7	2.9	30.8	66.3	58.7	7.6	100.0 (3,829)	2.7
경제활동 여부 ($\chi^2=35.766^{***}$)								
예	37.9	4.4	33.5	62.1	55.6	6.5	100.0 (5,520)	2.6
아니오	44.2	6.4	37.8	55.8	49.5	6.2	100.0 (2,480)	2.6
종사상 지위 ($\chi^2=83.961^{***}$)								
상용직	33.2	3.2	30.0	66.8	59.5	7.3	100.0 (2,947)	2.7
임시직	36.8	4.9	31.9	63.2	56.4	6.8	100.0 (540)	2.7
일용직	52.8	8.6	44.2	47.2	42.3	4.9	100.0 (161)	2.4
자영업자	44.0	5.7	38.4	56.0	50.6	5.4	100.0 (1,758)	2.6
무급가족종사자	46.8	4.9	42.0	53.2	47.2	5.9	100.0 (115)	2.5
주관적 사회계층 ($\chi^2=90.087^{***}$)								
상(7-10)	28.9	2.4	26.5	71.1	63.3	7.8	100.0 (975)	2.8
중(5-6)	39.1	4.5	34.5	60.9	54.8	6.1	100.0 (4,186)	2.6
하(1-4)	44.8	6.5	38.2	55.2	48.8	6.4	100.0 (2,840)	2.6
경제수준($\chi^2=63.426^{***}$)								
상(상-중상)	39.7	4.4	35.3	60.3	50.9	9.4	100.0 (620)	2.7
중(중)	36.4	4.1	32.4	63.6	56.7	6.8	100.0 (4,075)	2.7
하(중하-하)	44.1	6.3	37.8	55.9	50.6	5.4	100.0 (3,304)	2.6
혼인 상태($\chi^2=274.83^{***}$)								
미혼	25.4	2.6	22.8	74.6	65.2	9.4	100.0 (1,886)	2.8
무배우	52.6	9.4	43.2	47.4	42.7	4.7	100.0 (934)	2.4
유배우	42.8	5.1	37.7	57.2	51.5	5.7	100.0 (5,180)	2.6
자녀 유무 ($\chi^2=218.183^{***}$)								
예	45.0	6.0	39.0	55.0	49.8	5.2	100.0 (5,561)	2.5
아니오	28.2	2.7	25.5	71.8	62.7	9.2	100.0 (2,439)	2.8
가구 형태($\chi^2=72.402^{***}$)								
1세대 가구	44.1	6.6	37.6	55.9	50.7	5.2	100.0 (3,200)	2.5
2세대 가구	36.6	3.8	32.8	63.4	56.1	7.3	100.0 (4,605)	2.7
3세대 이상 가구	45.7	6.1	39.7	54.3	47.9	6.4	100.0 (184)	2.5
기타	54.8	12.4	42.5	45.2	28.0	17.2	100.0 (12)	2.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2) 결혼 전제 동거에 대한 견해

결혼을 할 사이의 성인 남녀가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동의한다는 견해가 53.5%,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8.4%,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12.2%,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보인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견해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지 않는 비율(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동의하는 비율(대체로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데, 70대까지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을 유지하고 80세 이상에서만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대의 혼전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가 80.0% 가까이로 매우 높아 연령에 따른 수용 정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동의 비율이 약간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보였고, 초대졸 이상 그룹에서는 약 73.0%로 중졸 이하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상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 사이에서도 혼전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은 그룹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혼인 경우의 동의 비율이 결혼 경험이 있는 유배우자나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무배우자보다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높으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17.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2세대 가구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5-29〉 ‘결혼을 전제로 성인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34.3	5.9	28.4	65.7	53.5	12.2	100.0 (8,000)	2.7
성별($\chi^2=14.909^{**}$)								
남성	32.7	5.8	26.8	67.3	54.0	13.3	100.0 (3,965)	2.7
여성	35.9	6.0	29.9	64.1	52.9	11.2	100.0 (4,035)	2.7
연령($\chi^2=499.749^{***}$)								
19~29세	20.7	3.2	17.4	79.3	60.5	18.8	100.0 (1,360)	2.9
30~39세	23.5	2.5	21.0	76.5	59.6	16.9	100.0 (1,279)	2.9
40~49세	29.7	4.1	25.6	70.3	57.9	12.4	100.0 (1,533)	2.8
50~59세	39.3	6.6	32.7	60.7	51.4	9.3	100.0 (1,590)	2.6
60~69세	45.7	8.8	36.9	54.3	46.8	7.5	100.0 (1,204)	2.5
70~79세	49.9	11.1	38.8	50.1	42.3	7.8	100.0 (675)	2.5
80세 이상	54.2	13.2	41.0	45.8	37.9	7.8	100.0 (360)	2.4
지역($\chi^2=18.908^{**}$)								
대도시	33.5	6.5	27.0	66.5	53.9	12.6	100.0 (3,523)	2.7
중소도시	34.7	4.8	29.9	65.3	53.9	11.4	100.0 (3,062)	2.7
농어촌	35.4	6.7	28.6	64.6	51.4	13.2	100.0 (1,415)	2.7
교육수준($\chi^2=250.764^{***}$)								
중졸 이하	49.8	11.6	38.2	50.2	41.9	8.3	100.0 (1,211)	2.5
고졸	36.6	6.2	30.4	63.4	52.6	10.8	100.0 (2,961)	2.7
초대졸 이상	27.6	3.9	23.7	72.4	57.8	14.6	100.0 (3,829)	2.8
경제활동 여부 ($\chi^2=32.847^{***}$)								
예	32.4	5.2	27.2	67.6	55.1	12.6	100.0 (5,520)	2.7
아니오	38.5	7.4	31.1	61.5	49.9	11.5	100.0 (2,480)	2.7
종사상 지위 ($\chi^2=96.994^{***}$)								
상용직	27.5	4.2	23.3	72.5	57.5	15.0	100.0 (2,947)	2.8
임시직	33.7	4.8	28.9	66.3	55.1	11.2	100.0 (540)	2.7
일용직	36.5	5.1	31.3	63.5	49.6	13.9	100.0 (161)	2.7
자영업자	39.3	6.9	32.4	60.7	51.8	8.9	100.0 (1,758)	2.6
무급가족종사자	40.8	7.5	33.3	59.2	47.9	11.2	100.0 (115)	2.6
주관적 사회계층 ($\chi^2=23.593^{***}$)								
상(7-10)	33.8	5.3	28.4	66.2	52.7	13.5	100.0 (975)	2.7
중(5-6)	32.6	5.3	27.3	67.4	55.6	11.8	100.0 (4,186)	2.7
하(1-4)	37.0	7.0	30.1	63.0	50.5	12.5	100.0 (2,840)	2.7
경제수준($\chi^2=10.988$)								
상(상-중상)	36.5	6.3	30.3	63.5	49.8	13.7	100.0 (620)	2.7
중(중)	33.2	5.3	27.9	66.8	54.3	12.5	100.0 (4,075)	2.7
하(중하-하)	35.2	6.6	28.6	64.8	53.1	11.7	100.0 (3,304)	2.7
혼인 상태($\chi^2=235.314^{***}$)								
미혼	22.2	3.2	19.0	77.8	59.6	18.2	100.0 (1,886)	2.9
무배우	46.6	9.1	37.5	53.4	44.0	9.4	100.0 (934)	2.5
유배우	36.5	6.3	30.2	63.5	52.9	10.6	100.0 (5,180)	2.7
자녀 유무($\chi^2=233.115^{***}$)								
예	39.0	7.1	32.0	61.0	51.2	9.8	100.0 (5,561)	2.6
아니오	23.5	3.2	20.3	76.5	58.6	17.9	100.0 (2,439)	2.9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가구 형태($\chi^2=58.87^{***}$)								
1세대 가구	38.7	7.0	31.6	61.3	49.7	11.6	100.0 (3,200)	2.7
2세대 가구	31.0	5.0	26.0	69.0	56.1	12.9	100.0 (4,605)	2.8
3세대 이상 가구	39.6	8.6	31.0	60.4	53.2	7.2	100.0 (184)	2.6
기타	33.2	0.0	33.2	66.8	58.3	8.5	100.0 (12)	2.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3)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대한 견해

이제 우리 사회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가 전체 60.0% 이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0%, 대체로 동의한다는 비율은 31.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6.1%,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로 나타나 동의한다는 응답은 36.9%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견해와 차이를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은 앞서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동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의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20대 그룹에서만 동의한다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고, 그 외 30대 이상 그룹부터는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의 비율이 높아지며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30.5%로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주관적 사회

계층과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동의 비율이 낮았다. 미혼의 경우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다른 그룹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녀가 없는 그룹과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30〉 ‘결혼과 무관하게 성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63.1	16.1	47.0	36.9	31.8	5.2	100.0 (8,000)	2.3
성별($\chi^2=20.195^{***}$)								
남성	61.3	14.4	46.8	38.7	33.2	5.5	100.0 (3,965)	2.3
여성	64.8	17.7	47.1	35.2	30.3	4.8	100.0 (4,035)	2.2
연령($\chi^2=518.33^{***}$)								
19~29세	49.3	7.5	41.8	50.7	43.4	7.4	100.0 (1,360)	2.5
30~39세	52.2	9.8	42.5	47.8	42.2	5.6	100.0 (1,279)	2.4
40~49세	60.6	12.8	47.8	39.4	33.7	5.7	100.0 (1,533)	2.3
50~59세	67.8	18.1	49.7	32.2	27.9	4.3	100.0 (1,590)	2.2
60~69세	74.4	22.3	52.1	25.6	22.1	3.5	100.0 (1,204)	2.1
70~79세	76.9	27.7	49.2	23.1	18.5	4.6	100.0 (675)	2.0
80세 이상	79.6	33.5	46.1	20.4	16.8	3.6	100.0 (360)	1.9
지역($\chi^2=40.013^{***}$)								
대도시	62.0	15.9	46.1	38.0	31.6	6.4	100.0 (3,523)	2.3
중소도시	63.7	14.7	49.0	36.3	32.4	3.9	100.0 (3,062)	2.3
농어촌	64.4	19.5	44.8	35.6	30.9	4.8	100.0 (1,415)	2.2
교육수준($\chi^2=281.633^{***}$)								
중졸 이하	77.5	29.6	47.9	22.5	18.7	3.7	100.0 (1,211)	2.0
고졸	64.2	15.9	48.2	35.8	30.9	4.9	100.0 (2,961)	2.2
초대졸 이상	57.6	11.9	45.7	42.4	36.6	5.8	100.0 (3,829)	2.4
경제활동 여부 ($\chi^2=59.93^{***}$)								
예	61.8	14.0	47.9	38.2	32.8	5.3	100.0 (5,520)	2.3
아니오	65.8	20.8	45.0	34.2	29.4	4.8	100.0 (2,480)	2.2
종사상 지위 ($\chi^2=112.705^{***}$)								
상용직	57.0	10.8	46.2	43.0	37.1	5.8	100.0 (2,947)	2.4
임시직	62.3	12.5	49.7	37.7	30.7	7.0	100.0 (540)	2.3
일용직	62.6	19.4	43.2	37.4	31.8	5.6	100.0 (161)	2.2
자영업자	69.5	18.8	50.7	30.5	26.5	4.0	100.0 (1,758)	2.2
무급가족종사자	64.3	20.1	44.2	35.7	30.0	5.7	100.0 (115)	2.2
주관적 사회계층 ($\chi^2=37.512^{***}$)								
상(7-10)	57.3	12.8	44.5	42.7	36.3	6.4	100.0 (975)	2.4
중(5-6)	62.4	15.4	46.9	37.6	32.0	5.6	100.0 (4,186)	2.3
하(1-4)	66.0	18.2	47.9	34.0	29.9	4.1	100.0 (2,840)	2.2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경제수준($\chi^2=40^{***}$)								
상(상-중상)	60.6	20.3	40.3	39.4	32.2	7.2	100.0 (620)	2.3
중(중)	61.8	14.4	47.4	38.2	32.4	5.7	100.0 (4,075)	2.3
하(중하-하)	65.0	17.4	47.6	35.0	30.8	4.1	100.0 (3,304)	2.2
혼인 상태 ($\chi^2=294.339^{***}$)								
미혼	49.3	7.8	41.4	50.7	43.6	7.1	100.0 (1,886)	2.5
무배우	71.9	26.1	45.8	28.1	24.3	3.8	100.0 (934)	2.1
유배우	66.5	17.3	49.2	33.5	28.8	4.7	100.0 (5,180)	2.2
자녀 유무 ($\chi^2=246.626^{***}$)								
예	68.2	19.1	49.1	31.8	27.4	4.4	100.0 (5,561)	2.2
아니오	51.5	9.3	42.2	48.5	41.6	6.9	100.0 (2,439)	2.5
가구 형태($\chi^2=74.176^{***}$)								
1세대 가구	66.8	19.8	47.1	33.2	28.4	4.8	100.0 (3,200)	2.2
2세대 가구	60.4	13.4	47.0	39.6	34.0	5.5	100.0 (4,605)	2.3
3세대 이상 가구	63.7	19.1	44.7	36.3	32.6	3.7	100.0 (184)	2.2
기타	47.2	0.0	47.2	52.8	52.8	0.0	100.0 (12)	2.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결혼 생활에 있어 동거의 영향에 대한 견해

결혼 전 동거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 온 성인이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결혼 생활 예행 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결혼 전 동거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대체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42.1%,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1.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2%,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약한 동의나 반대에 입장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전 동거 과정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견해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역시 연령 상승에 따라 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40대까지는 동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이상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농어촌보다는 큰 도시에 거주할수록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과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져 초대졸 이상 그룹은 과반이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의 동의 비율이 높으며 과반의 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이나 임시직인 경우 동의 비율이 과반으로 높으며,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은 그룹의 동의 비율이 높고 과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동의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혼 그룹은 동의 비율이 62.9%로 동거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혼/별거 및 사별을 한 무배우 그룹에서는 37.4%로 낮은 동의 비율을 보인다. 자녀가 없는 그룹의 동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미혼 그룹의 상당수가 자녀가 없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31〉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계(명)	평균
전체 ¹⁾	51.7	10.2	41.5	48.3	42.1	6.3	100.0 (8,000)	2.4
성별($\chi^2=10.187^*$)								
남성	50.1	9.9	40.2	49.9	43.0	6.9	100.0 (3,965)	2.5
여성	53.2	10.5	42.7	46.8	41.1	5.7	100.0 (4,035)	2.4
연령($\chi^2=591.775^{***}$)								
19~29세	36.7	4.9	31.7	63.3	50.9	12.4	100.0 (1,360)	2.7
30~39세	39.7	5.6	34.1	60.3	51.5	8.8	100.0 (1,279)	2.6
40~49세	47.8	6.9	40.9	52.2	46.5	5.7	100.0 (1,533)	2.5
50~59세	57.6	11.1	46.5	42.4	37.8	4.6	100.0 (1,590)	2.4
60~69세	64.4	14.9	49.5	35.6	32.7	2.9	100.0 (1,204)	2.2
70~79세	65.9	19.1	46.9	34.1	31.3	2.7	100.0 (675)	2.2
80세 이상	71.9	23.6	48.3	28.1	26.3	1.8	100.0 (360)	2.1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지역($\chi^2=40.645^{***}$)								
대도시	48.9	9.5	39.4	51.1	43.6	7.5	100.0 (3,523)	2.5
중소도시	53.1	9.6	43.5	46.9	41.7	5.2	100.0 (3,062)	2.4
농어촌	55.5	13.1	42.4	44.5	38.9	5.6	100.0 (1,415)	2.4
교육수준($\chi^2=295.989^{***}$)								
중졸 이하	67.0	20.3	46.7	33.0	30.3	2.7	100.0 (1,211)	2.2
고졸	54.4	9.8	44.6	45.6	40.1	5.6	100.0 (2,961)	2.4
초대졸 이상	44.7	7.3	37.5	55.3	47.3	7.9	100.0 (3,829)	2.6
경제활동 여부 ($\chi^2=46.495^{***}$)								
예	50.1	8.7	41.4	49.9	43.2	6.7	100.0 (5,520)	2.5
아니오	55.1	13.4	41.7	44.9	39.6	5.3	100.0 (2,480)	2.4
종사상 지위 ($\chi^2=105.584^{***}$)								
상용직	45.4	7.3	38.1	54.6	46.9	7.7	100.0 (2,947)	2.5
임시직	49.0	6.9	42.1	51.0	41.6	9.4	100.0 (540)	2.5
일용직	57.5	18.5	38.9	42.5	36.6	5.9	100.0 (161)	2.3
자영업자	57.6	10.8	46.8	42.4	37.8	4.6	100.0 (1,758)	2.4
무급가족종사자	53.2	10.0	43.2	46.8	45.3	1.5	100.0 (115)	2.4
주관적 사회계층 ($\chi^2=32.286^{***}$)								
상(7-10)	48.3	9.2	39.1	51.7	43.0	8.7	100.0 (975)	2.5
중(5-6)	50.6	9.2	41.3	49.4	42.9	6.5	100.0 (4,186)	2.5
하(1-4)	54.4	11.9	42.5	45.6	40.4	5.1	100.0 (2,840)	2.4
경제수준($\chi^2=50.433^{***}$)								
상(상-중상)	48.9	13.3	35.5	51.1	41.9	9.2	100.0 (620)	2.5
중(중)	50.4	8.3	42.2	49.6	43.2	6.4	100.0 (4,075)	2.5
하(중하-하)	53.7	11.9	41.8	46.3	40.7	5.6	100.0 (3,304)	2.4
혼인 상태($\chi^2=313.476^{***}$)								
미혼	37.1	5.1	32.1	62.9	51.1	11.7	100.0 (1,886)	2.7
무배우	62.6	16.0	46.6	37.4	34.5	2.9	100.0 (934)	2.2
유배우	55.0	11.0	44.0	45.0	40.1	4.9	100.0 (5,180)	2.4
자녀 유무($\chi^2=268.206^{***}$)								
예	57.1	12.1	45.0	42.9	38.5	4.5	100.0 (5,561)	2.4
아니오	39.4	5.8	33.6	60.6	50.2	10.4	100.0 (2,439)	2.7
가구 형태($\chi^2=112.211^{***}$)								
1세대 가구	57.7	13.2	44.6	42.3	37.1	5.1	100.0 (3,200)	2.3
2세대 가구	47.4	8.0	39.4	52.6	45.6	7.0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55.3	13.5	41.8	44.7	38.0	6.7	100.0 (184)	2.4
기타	26.4	10.0	16.4	73.6	65.1	8.5	100.0 (12)	2.7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대에 관한 견해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인생에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라도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대체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견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인생에 있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

인생에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59.0%,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30.2%,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0.1%,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6%로 동의하는 견해가 89.3%, 동의하지 않는 견해는 10.7%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50세 이상에서는 90.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동의 비율이 높다.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90.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용직이나 일용직보다는 높았으며, 주관적 사회계층이나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일수록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그룹보다는 있는 그룹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미혼인 경우 다른 그룹보다 이 견해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17.8%). 가구 형태에서 가장 전통적인 가구 유형인 3세대 이상의 가구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93.6%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표 5-32〉 ‘인생에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10.7	0.6	10.1	89.3	59.0	30.2	100.0 (8,000)	3.2
성별($\chi^2=4.83$)								
남성	10.5	0.5	10.0	89.5	60.0	29.4	100.0 (3,965)	3.2
여성	11.0	0.8	10.2	89.0	58.0	31.0	100.0 (4,035)	3.2
연령($\chi^2=295.044^{***}$)								
19~29세	17.8	1.1	16.7	82.2	60.6	21.6	100.0 (1,360)	3.0
30~39세	14.0	0.6	13.4	86.0	61.8	24.2	100.0 (1,279)	3.1
40~49세	11.9	0.8	11.1	88.1	61.3	26.8	100.0 (1,533)	3.1
50~59세	7.5	0.7	6.8	92.5	60.5	32.0	100.0 (1,590)	3.2
60~69세	6.4	0.2	6.2	93.6	56.8	36.8	100.0 (1,204)	3.3
70~79세	5.7	0.3	5.3	94.3	50.0	44.3	100.0 (675)	3.4
80세 이상	6.1	0.5	5.6	93.9	51.3	42.6	100.0 (360)	3.4
지역($\chi^2=27.588^{***}$)								
대도시	11.4	0.9	10.5	88.6	57.5	31.0	100.0 (3,523)	3.2
중소도시	11.2	0.4	10.8	88.8	60.5	28.3	100.0 (3,062)	3.2
농어촌	8.0	0.5	7.5	92.0	59.7	32.4	100.0 (1,415)	3.2
교육수준 ($\chi^2=146.767^{***}$)								
중졸 이하	6.4	0.4	6.0	93.6	50.8	42.8	100.0 (1,211)	3.4
고졸	9.2	0.6	8.6	90.8	61.2	29.6	100.0 (2,961)	3.2
초대졸 이상	13.3	0.8	12.5	86.7	60.0	26.7	100.0 (3,829)	3.1
경제활동 여부 ($\chi^2=24.904^{***}$)								
예	11.4	0.6	10.8	88.6	59.9	28.7	100.0 (5,520)	3.2
아니오	9.4	0.8	8.6	90.6	57.1	33.6	100.0 (2,480)	3.2
종사상 지위 ($\chi^2=88.332^{***}$)								
상용직	13.8	0.7	13.1	86.2	60.1	26.1	100.0 (2,947)	3.1
임시직	11.2	0.3	10.9	88.8	58.5	30.3	100.0 (540)	3.2
일용직	7.6	0.0	7.6	92.4	61.2	31.2	100.0 (161)	3.2
자영업자	8.0	0.5	7.5	92.0	60.0	31.9	100.0 (1,758)	3.2
무급가족종사자	6.7	0.0	6.7	93.3	57.2	36.1	100.0 (115)	3.3
주관적 사회계층 ($\chi^2=66.645^{***}$)								
상(7-10)	12.2	1.5	10.7	87.8	65.9	21.9	100.0 (975)	3.1
중(5-6)	11.5	0.6	10.9	88.5	58.6	29.8	100.0 (4,186)	3.2
하(1-4)	9.1	0.4	8.7	90.9	57.3	33.7	100.0 (2,840)	3.2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경제수준 ($\chi^2=52.626^{***}$)								
상(상-중상)	12.3	2.2	10.0	87.7	54.0	33.7	100.0 (620)	3.2
중(중)	11.5	0.6	10.9	88.5	60.6	27.9	100.0 (4,075)	3.2
하(중하-하)	9.6	0.4	9.1	90.4	58.0	32.4	100.0 (3,304)	3.2
혼인 상태 ($\chi^2=199.7^{***}$)								
미혼	17.8	1.1	16.6	82.2	61.1	21.1	100.0 (1,886)	3.0
무배우	7.1	0.2	6.9	92.9	54.7	38.1	100.0 (934)	3.3
유배우	8.8	0.5	8.3	91.2	59.1	32.1	100.0 (5,180)	3.2
자녀 유무 ($\chi^2=192.206^{***}$)								
예	8.1	0.5	7.6	91.9	58.3	33.6	100.0 (5,561)	3.3
아니오	16.8	1.0	15.8	83.2	60.6	22.5	100.0 (2,439)	3.0
가구 형태 ($\chi^2=28.334^{***}$)								
1세대 가구	9.7	0.4	9.3	90.3	57.8	32.5	100.0 (3,200)	3.2
2세대 가구	11.6	0.8	10.8	88.4	59.8	28.6	100.0 (4,605)	3.2
3세대 이상 가구	6.4	0.7	5.7	93.6	60.4	33.3	100.0 (184)	3.3
기타	21.0	0.0	21.0	79.0	79.0	0.0	100.0 (12)	2.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2) 결혼에 있어 타협에 대한 견해

결혼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8%, 대체로 동의하는 비율은 37.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6%,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더 많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 견해에 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 차이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는데 40대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이고, 50대는 동의하는 비율이

50.2%로 과반의 견해가 바뀌었다. 그리고 60대부터는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20대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1.8%이고 80대 이상은 동의하는 비율이 70.8%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 거주자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이고, 농어촌 거주자는 동의하는 비율이 51.3%로 도농 간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는 동의하는 비율이 63.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고졸이나 초대졸 이상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른 견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동의 비율이 53.2%로 높고, 미혼인 그룹은 이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 62.0%로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으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타를 제외한 1세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이 나타났다.

〈표 5-33〉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라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52.4	11.6	40.8	47.6	37.9	9.7	100.0 (8,000)	2.5
성별($\chi^2=14.727^{**}$)								
남성	51.6	10.2	41.4	48.4	38.5	9.9	100.0 (3,965)	2.5
여성	53.1	12.9	40.1	46.9	37.3	9.6	100.0 (4,035)	2.4
연령($\chi^2=322.856^{***}$)								
19~29세	61.8	19.4	42.3	38.2	29.3	8.9	100.0 (1,360)	2.3
30~39세	60.0	14.7	45.3	40.0	32.7	7.3	100.0 (1,279)	2.3
40~49세	55.6	12.3	43.3	44.4	34.5	9.9	100.0 (1,533)	2.4
50~59세	49.8	8.7	41.1	50.2	40.1	10.1	100.0 (1,590)	2.5
60~69세	47.8	7.6	40.3	52.2	42.2	10.0	100.0 (1,204)	2.5
70~79세	38.1	6.4	31.7	61.9	51.1	10.8	100.0 (675)	2.7
80세 이상	29.2	4.0	25.3	70.8	54.1	16.7	100.0 (360)	2.8
지역($\chi^2=23.843^{***}$)								
대도시	53.5	11.2	42.3	46.5	36.1	10.4	100.0 (3,523)	2.5
중소도시	52.7	11.7	41.0	47.3	38.9	8.4	100.0 (3,062)	2.4
농어촌	48.7	12.1	36.6	51.3	40.2	11.0	100.0 (1,415)	2.5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교육수준($\chi^2=205.09^{***}$)								
중졸 이하	36.8	6.0	30.8	63.2	50.3	12.9	100.0 (1,211)	2.7
고졸	50.3	10.4	40.0	49.7	40.1	9.5	100.0 (2,961)	2.5
초대졸 이상	58.9	14.3	44.6	41.1	32.3	8.9	100.0 (3,829)	2.4
경제활동 여부 ($\chi^2=12.85^{**}$)								
예	53.2	11.4	41.9	46.8	36.8	10.0	100.0 (5,520)	2.5
아니오	50.4	12.0	38.4	49.6	40.4	9.2	100.0 (2,480)	2.5
종사상 지위 ($\chi^2=46.606^{***}$)								
상용직	54.8	12.3	42.5	45.2	34.7	10.5	100.0 (2,947)	2.4
임시직	59.0	15.7	43.3	41.0	31.9	9.1	100.0 (540)	2.3
일용직	44.4	9.8	34.6	55.6	43.8	11.7	100.0 (161)	2.6
자영업자	50.0	8.9	41.1	50.0	40.8	9.2	100.0 (1,758)	2.5
무급가족종사자	47.6	7.0	40.6	52.4	39.9	12.4	100.0 (115)	2.6
주관적 사회계층 ($\chi^2=11.445$)								
상(7-10)	53.1	10.6	42.5	46.9	36.7	10.2	100.0 (975)	2.5
중(5-6)	53.6	12.0	41.6	46.4	37.3	9.1	100.0 (4,186)	2.4
하(1-4)	50.2	11.3	38.9	49.8	39.2	10.5	100.0 (2,840)	2.5
경제수준($\chi^2=8.516$)								
상(상-중상)	53.5	11.5	42.0	46.5	34.7	11.8	100.0 (620)	2.5
중(중)	52.8	11.9	40.9	47.2	37.3	9.9	100.0 (4,075)	2.5
하(중하-하)	51.6	11.2	40.5	48.4	39.2	9.2	100.0 (3,304)	2.5
혼인 상태 ($\chi^2=156.933^{***}$)								
미혼	62.0	17.6	44.3	38.0	29.0	9.1	100.0 (1,886)	2.3
무배우	43.6	6.9	36.6	56.4	45.9	10.5	100.0 (934)	2.6
유배우	50.5	10.2	40.2	49.5	39.7	9.9	100.0 (5,180)	2.5
자녀 유무 ($\chi^2=103.541^{***}$)								
예	49.6	9.5	40.1	50.4	40.6	9.8	100.0 (5,561)	2.5
아니오	58.6	16.3	42.3	41.4	31.8	9.6	100.0 (2,439)	2.3
가구 형태 ($\chi^2=46.091^{***}$)								
1세대 가구	48.2	9.7	38.5	51.8	40.9	10.9	100.0 (3,200)	2.5
2세대 가구	55.1	12.8	42.2	44.9	35.8	9.1	100.0 (4,605)	2.4
3세대 이상 가구	56.7	12.9	43.8	43.3	37.2	6.0	100.0 (184)	2.4
기타	40.6	12.3	28.3	59.4	52.1	7.2	100.0 (12)	2.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3) 결혼과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면,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49.0%,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36.7%,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10.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59.1%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4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20대만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2.1%로 과반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순으로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중졸 이하의 그룹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72.1%로 매우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보다는 하지 않는 그룹이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동의하는 비율이 상용직이나 임시직보다 높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14.3%로 적극 동의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아질수록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아졌고, 경제수준이 중간인 그룹이 높거나 낮은 그룹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미혼 그룹은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유배우 그룹이나 무배우 그룹보다 낮은 절반 이하(47.7%)로 나타났다. 결혼을 경험한 그룹은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은 이 견해에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 비율이 63.1%인 데 반해, 자녀가 없는 경우는 50.0% 비율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가구 형태에서는 1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5-34〉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40.9	4.2	36.7	59.1	49.0	10.1	100.0 (8,000)	2.7
성별($\chi^2=6.772$)								
남성	39.4	4.0	35.4	60.6	50.1	10.4	100.0 (3,965)	2.7
여성	42.3	4.4	37.9	57.7	47.9	9.8	100.0 (4,035)	2.6
연령($\chi^2=276.44^{***}$)								
19~29세	52.1	6.6	45.5	47.9	40.4	7.5	100.0 (1,360)	2.5
30~39세	47.9	4.8	43.1	52.1	45.8	6.3	100.0 (1,279)	2.5
40~49세	44.2	4.5	39.7	55.8	48.5	7.3	100.0 (1,533)	2.6
50~59세	36.6	2.8	33.8	63.4	51.2	12.3	100.0 (1,590)	2.7
60~69세	33.9	3.0	30.9	66.1	52.6	13.5	100.0 (1,204)	2.8
70~79세	27.0	3.2	23.8	73.0	56.5	16.5	100.0 (675)	2.9
80세 이상	27.3	3.6	23.7	72.7	60.1	12.6	100.0 (360)	2.8
지역($\chi^2=46.304^{***}$)								
대도시	42.6	4.7	37.9	57.4	46.9	10.5	100.0 (3,523)	2.6
중소도시	40.7	3.2	37.6	59.3	50.1	9.1	100.0 (3,062)	2.7
농어촌	36.8	5.0	31.7	63.2	52.0	11.2	100.0 (1,415)	2.7
교육수준($\chi^2=142.053^{***}$)								
중졸 이하	27.9	3.1	24.9	72.1	56.2	15.9	100.0 (1,211)	2.8
고졸	41.1	3.5	37.6	58.9	48.5	10.4	100.0 (2,961)	2.7
초대졸 이상	44.7	5.0	39.7	55.3	47.2	8.1	100.0 (3,829)	2.6
경제활동 여부 ($\chi^2=11.954^{**}$)								
예	41.8	4.2	37.6	58.2	48.7	9.5	100.0 (5,520)	2.6
아니오	38.7	4.2	34.5	61.3	49.8	11.5	100.0 (2,480)	2.7
종사상 지위 ($\chi^2=37.216^{***}$)								
상용직	43.7	4.8	39.0	56.3	47.2	9.1	100.0 (2,947)	2.6
임시직	47.4	4.7	42.6	52.6	46.4	6.2	100.0 (540)	2.5
일용직	38.9	4.8	34.1	61.1	48.7	12.3	100.0 (161)	2.7
자영업자	37.5	3.0	34.5	62.5	51.9	10.5	100.0 (1,758)	2.7
무급가족종사자	36.6	4.0	32.6	63.4	49.2	14.3	100.0 (115)	2.7
주관적 사회계층 ($\chi^2=38.609^{***}$)								
상(7-10)	44.0	5.2	38.7	56.0	46.4	9.6	100.0 (975)	2.6
중(5-6)	43.2	4.3	38.9	56.8	47.4	9.5	100.0 (4,186)	2.6
하(1-4)	36.4	3.7	32.7	63.6	52.4	11.2	100.0 (2,840)	2.7
경제수준($\chi^2=27.805^{***}$)								
상(상-중상)	40.3	4.9	35.4	59.7	47.7	12.0	100.0 (620)	2.7
중(중)	43.4	4.5	38.9	56.6	46.9	9.7	100.0 (4,075)	2.6
하(중하-하)	37.8	3.7	34.2	62.2	51.9	10.3	100.0 (3,304)	2.7
혼인 상태($\chi^2=158.075^{***}$)								
미혼	52.3	6.5	45.8	47.7	41.0	6.7	100.0 (1,886)	2.5
무배우	35.5	2.9	32.6	64.5	50.8	13.7	100.0 (934)	2.8
유배우	37.7	3.6	34.1	62.3	51.6	10.7	100.0 (5,180)	2.7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자녀 유무($\chi^2=137.222^{***}$)								
예	36.9	3.3	33.5	63.1	51.8	11.4	100.0 (5,561)	2.7
아니오	50.0	6.1	43.9	50.0	42.7	7.3	100.0 (2,439)	2.5
가구 형태($\chi^2=45.162^{***}$)								
1세대 가구	37.2	3.6	33.6	62.8	51.1	11.7	100.0 (3,200)	2.7
2세대 가구	43.6	4.7	38.9	56.4	47.3	9.1	100.0 (4,605)	2.6
3세대 이상 가구	35.3	3.3	32.0	64.7	57.4	7.4	100.0 (184)	2.7
기타	53.4	0.0	53.4	46.6	34.2	12.4	100.0 (12)	2.6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아이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

대체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알아보면, 대체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52.2%,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9.4%,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14.9%,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비율이 67.1%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32.9%)보다 높았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대는 56.1%가 동의하지만, 50대 이상은 70.0%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이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76.1%로 높았지만, 고졸은 67.6%, 초대졸 이상은 63.9%로 중졸 그룹보다 낮았다. 또 중졸 이하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22.7%로 고졸이나 초대졸 이상의 적극 동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경제활동 중을 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69.0%로 높았고, 일용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의 동의 비율이 70.0% 이상으로 다른 종사상 지위 그룹보다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에서는 높은 그룹과 중간 그룹보다

는 낮은 그룹의 동의 비율이 높고, 경제수준이 중간인 그룹이 높거나 낮은 그룹보다 동의 비율이 낮았다. 혼인 상태에서는 미혼 그룹의 동의 비율이 56.4%로 다른 그룹이 70.0% 이상인 것과 비교해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71.3%로 높았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57.5%로 낮게 나타나 자녀 유무에 따라 견해에 차이를 보였다. 이 견해에 대해서 3세대 이상 가구의 동의 비율이 76.6%로 다른 가구 형태의 동의 비율이 60.0% 이상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차이를 보인다.

〈표 5-35〉 ‘대체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32.9	3.4	29.4	67.1	52.2	14.9	100.0 (8,000)	2.8
성별($\chi^2=2.274$)								
남성	32.5	3.4	29.1	67.5	53.0	14.5	100.0 (3,965)	2.8
여성	33.3	3.5	29.8	66.7	51.4	15.3	100.0 (4,035)	2.8
연령($\chi^2=248.633^{***}$)								
19~29세	43.9	5.7	38.1	56.1	46.2	10.0	100.0 (1,360)	2.6
30~39세	37.3	4.0	33.3	62.7	50.3	12.3	100.0 (1,279)	2.7
40~49세	35.1	2.8	32.3	64.9	53.1	11.8	100.0 (1,533)	2.7
50~59세	28.9	2.6	26.3	71.1	55.3	15.8	100.0 (1,590)	2.8
60~69세	27.1	3.0	24.1	72.9	53.9	18.9	100.0 (1,204)	2.9
70~79세	22.8	3.0	19.8	77.2	57.0	20.2	100.0 (675)	2.9
80세 이상	21.8	1.2	20.6	78.2	50.5	27.7	100.0 (360)	3.0
지역($\chi^2=49.138^{***}$)								
대도시	33.6	4.2	29.4	66.4	51.4	15.0	100.0 (3,523)	2.8
중소도시	34.3	2.3	32.0	65.7	51.0	14.8	100.0 (3,062)	2.8
농어촌	28.0	4.0	24.0	72.0	57.2	14.8	100.0 (1,415)	2.8
교육수준($\chi^2=109.357^{***}$)								
중졸 이하	23.9	1.8	22.1	76.1	53.4	22.7	100.0 (1,211)	3.0
고졸	32.4	3.2	29.2	67.6	53.2	14.4	100.0 (2,961)	2.8
초대졸 이상	36.1	4.1	31.9	63.9	51.1	12.8	100.0 (3,829)	2.7
경제활동 여부($\chi^2=28.626^{***}$)								
예	33.7	3.5	30.2	66.3	52.8	13.5	100.0 (5,520)	2.8
아니오	31.0	3.2	27.9	69.0	50.9	18.0	100.0 (2,480)	2.8
종사상 지위($\chi^2=68.735^{***}$)								
상용직	35.5	4.0	31.5	64.5	51.8	12.7	100.0 (2,947)	2.7
임시직	43.2	4.7	38.5	56.8	45.6	11.2	100.0 (540)	2.6
일용직	29.7	3.6	26.1	70.3	45.9	24.4	100.0 (161)	2.9
자영업자	28.4	2.5	25.9	71.6	57.2	14.4	100.0 (1,758)	2.8
무급가족종사자	30.0	1.8	28.2	70.0	56.4	13.6	100.0 (115)	2.8
주관적 사회계층($\chi^2=34.774^{***}$)								
상(7-10)	33.5	5.6	27.9	66.5	50.1	16.3	100.0 (975)	2.8
중(5-6)	33.6	3.4	30.2	66.4	53.0	13.4	100.0 (4,186)	2.8
하(1-4)	31.5	2.7	28.8	68.5	51.9	16.6	100.0 (2,840)	2.8

특성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명)	평균
경제수준($\chi^2=41.224^{***}$)								
상(상-중상)	31.1	6.1	24.9	68.9	51.2	17.7	100.0 (620)	2.8
중(중)	34.8	3.5	31.3	65.2	51.8	13.4	100.0 (4,075)	2.8
하(중하-하)	30.9	2.9	28.0	69.1	52.9	16.2	100.0 (3,304)	2.8
혼인 상태($\chi^2=156.713^{***}$)								
미혼	43.6	5.4	38.2	56.4	46.5	9.9	100.0 (1,886)	2.6
무배우	27.2	2.4	24.8	72.8	53.6	19.2	100.0 (934)	2.9
유배우	30.0	2.9	27.1	70.0	54.1	15.9	100.0 (5,180)	2.8
자녀 유무($\chi^2=169.572^{***}$)								
예	28.7	2.7	25.9	71.3	54.5	16.9	100.0 (5,561)	2.9
아니오	42.5	5.1	37.4	57.5	47.1	10.4	100.0 (2,439)	2.6
가구 형태($\chi^2=33.109^{***}$)								
1세대 가구	31.0	2.9	28.1	69.0	52.1	16.8	100.0 (3,200)	2.8
2세대 가구	34.5	3.8	30.7	65.5	52.1	13.4	100.0 (4,605)	2.8
3세대 이상 가구	23.4	2.2	21.3	76.6	58.7	17.9	100.0 (184)	2.9
기타	32.8	8.5	24.4	67.2	49.4	17.7	100.0 (12)	2.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다. 배우자 없이 입양하는 것에 대한 생각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대부분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배우자 없이 여성이나 남성 홀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지 알아보았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여성, 남성 관계없이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았다. 이와 완전 반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배우자 없이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은 24.2%로 그다음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여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이 9.3%였으며, 남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은 3.6%로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른 견해 차이를 보면, 여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을 해도 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는 여성이 10.2%, 남성이 8.4%로 여성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응답이 30대까지는 60.0%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고 40대에서 60대까지는 70.0% 이하, 그리고 70대 이상은 70.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이 20대에서는 30.0%를 넘는 비율로 나타난 반면, 같은 견해에 대해 60대 이상부터는 20.0% 이하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에서는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하는 것은 안 된다는 비율이 72.8%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견해에 대한 응답률이 낮아져 초대졸 이상 그룹에서는 58.4%로 낮아졌다. 반대로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률도 높아졌다.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이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입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입양해도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은 임시직만 30.0% 이상으로 높았고, 다른 그룹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남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주관적 사회계층이나 경제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그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에 대해 미혼 그룹의 33.8%가 동의해 다른 그룹과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는 남녀 관계없이 혼자 입양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비율이 자녀가 없는 그룹보다 높았고, 자녀가 없는 그룹은 남녀 모두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률이 31.4%로 자녀가 있는 그룹의 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남녀 모두 안 된다는 응답에 기타를 제외하면 부모와

아이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가구 형태인 2세대 가구가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고, 이 가구 형태는 여성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는 응답에 기타를 제외한 다른 가구 형태보다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5-36〉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여성, 남성 관계없이 절대 안 된다	여성 혼자 배우자 없이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남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여성, 남성 모두 배우자 없이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계(명)
전체 ¹⁾	62.9	9.3	3.6	24.2	100.0 (8,000)
성별($\chi^2=12.376^{**}$)					
남성	62.4	8.4	3.8	25.4	100.0 (3,965)
여성	63.4	10.2	3.5	23.0	100.0 (4,035)
연령($\chi^2=183.432^{***}$)					
19~29세	52.4	10.2	3.1	34.4	100.0 (1,360)
30~39세	59.3	8.7	4.4	27.6	100.0 (1,279)
40~49세	61.6	9.1	3.6	25.7	100.0 (1,533)
50~59세	65.1	10.3	3.2	21.4	100.0 (1,590)
60~69세	69.5	8.7	3.2	18.7	100.0 (1,204)
70~79세	70.7	8.4	4.8	16.1	100.0 (675)
80세 이상	74.3	8.4	4.0	13.3	100.0 (360)
지역($\chi^2=9.658$)					
대도시	63.4	9.9	3.5	23.2	100.0 (3,523)
중소도시	62.2	8.7	4.1	25.1	100.0 (3,062)
농어촌	62.9	9.3	2.9	24.8	100.0 (1,415)
교육수준($\chi^2=101.891^{***}$)					
중졸 이하	72.8	8.2	3.6	15.5	100.0 (1,211)
고졸	64.6	9.0	3.7	22.6	100.0 (2,961)
초대졸 이상	58.4	9.9	3.6	28.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7.585$)					
예	62.0	9.7	3.6	24.7	100.0 (5,520)
아니오	64.9	8.4	3.7	23.0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63.062^{***}$)					
상용직	59.2	10.4	4.1	26.3	100.0 (2,947)
임시직	58.7	7.4	2.2	31.7	100.0 (540)
일용직	61.5	10.8	5.5	22.2	100.0 (161)
자영업자	67.4	9.4	2.8	20.5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65.9	5.3	7.7	21.1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7.578^{***}$)					
상(7-10)	59.4	9.8	5.8	25.0	100.0 (975)
중(5-6)	62.5	10.0	3.6	23.8	100.0 (4,186)
하(1-4)	64.6	8.1	2.9	24.5	100.0 (2,840)
경제수준($\chi^2=46.206^{***}$)					
상(상-중상)	55.5	13.4	6.4	24.7	100.0 (620)
중(중)	62.4	9.8	3.8	23.9	100.0 (4,075)
하(중하-하)	64.8	7.9	2.9	24.4	100.0 (3,304)

특성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여성, 남성 관계없이 절대 안 된다	여성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남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여성, 남성 모두 배우자 없이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계(명)
혼인 상태($\chi^2=156.329^{***}$)					
미혼	52.9	9.8	3.5	33.8	100.0 (1,886)
무배우	67.1	10.9	5.3	16.7	100.0 (934)
유배우	65.8	8.8	3.4	22.0	100.0 (5,180)
자녀 유무($\chi^2=113.074^{***}$)					
예	66.4	9.0	3.5	21.0	100.0 (5,561)
아니오	54.8	9.9	3.9	31.4	100.0 (2,439)
가구 형태($\chi^2=16.818$)					
1세대 가구	64.6	9.1	4.0	22.3	100.0 (3,200)
2세대 가구	61.7	9.5	3.4	25.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63.9	6.3	3.1	26.6	100.0 (184)
기타	43.4	19.6	0.0	37.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라. 부모의 혼인 상태와 아동 지원에 대한 생각

한국 사회는 결혼하지 않는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여겨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작용했고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동 또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사이, 즉 결혼 밖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알아보았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 하는 비율이 73.1%로 가장 높았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15.9%,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11.0%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

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농어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에는 대도시의 응답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용직에서 2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13.5%로 나타났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져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 보면,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자녀가 있는 그룹에서 약간 더 높고,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 약간 더 높았다.

〈표 5-37〉 부모의 혼인 상태에 따른 아동 지원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계 (명)
전체 ¹⁾	15.9	73.1	11.0	100.0 (8,000)
성별($\chi^2=0.01$)				
남성	15.9	73.1	11.0	100.0 (3,965)
여성	15.9	73.1	11.0	100.0 (4,035)
연령($\chi^2=11.147$)				
19~29세	15.4	73.6	11.0	100.0 (1,360)
30~39세	16.1	74.3	9.6	100.0 (1,279)
40~49세	17.5	71.5	10.9	100.0 (1,533)
50~59세	15.0	72.9	12.1	100.0 (1,590)
60~69세	15.2	74.1	10.7	100.0 (1,204)
70~79세	15.0	74.4	10.6	100.0 (675)
80세 이상	18.3	68.8	12.9	100.0 (360)
지역($\chi^2=21.738^{***}$)				
대도시	17.2	72.2	10.6	100.0 (3,523)
중소도시	14.4	73.2	12.4	100.0 (3,062)
농어촌	15.9	75.2	8.9	100.0 (1,415)

특성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계 (명)
교육수준($\chi^2=7.19$)				
중졸 이하	15.1	73.2	11.7	100.0 (1,211)
고졸	15.6	72.5	11.9	100.0 (2,961)
초대졸 이상	16.4	73.5	10.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2.378$)				
예	16.3	72.8	10.9	100.0 (5,520)
아니오	15.0	73.9	11.1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9.802^*$)				
상용직	17.5	71.0	11.5	100.0 (2,947)
임시직	12.3	77.7	9.9	100.0 (540)
일용직	20.8	70.0	9.3	100.0 (161)
자영업자	15.1	74.8	10.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9.2	67.4	13.5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63.717^{***}$)				
상(7-10)	23.8	63.3	12.9	100.0 (975)
중(5-6)	15.3	74.0	10.7	100.0 (4,186)
하(1-4)	14.1	75.1	10.8	100.0 (2,840)
경제수준($\chi^2=18.659^{***}$)				
상(상-중상)	18.5	69.3	12.2	100.0 (620)
중(중)	17.1	72.0	10.9	100.0 (4,075)
하(중하-하)	14.0	75.2	10.9	100.0 (3,304)
혼인 상태($\chi^2=2.788$)				
미혼	15.4	73.9	10.8	100.0 (1,886)
무배우	17.1	71.0	12.0	100.0 (934)
유배우	15.9	73.2	10.9	100.0 (5,180)
자녀 유무 ($\chi^2=521.829^{***}$)				
예	16.1	73.6	10.3	100.0 (5,561)
아니오	15.5	72.0	12.5	100.0 (2,439)
가구 형태($\chi^2=5.052$)				
1세대 가구	16.2	72.3	11.5	100.0 (3,200)
2세대 가구	15.8	73.5	10.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2.6	78.3	9.1	100.0 (184)
기타	7.2	79.2	13.6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2. 다양한 결합 및 동반자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성인 남녀의 결합만 결혼제도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다양한 결합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결합으로는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젊은 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고령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경우’이다.

가.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1)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합

첫 번째로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 간의 결합을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8.9%, ‘그렇지 않다’는 응답 39.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6.8%,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의 응답이 54.1%로 반대의 응답(4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부터 50대까지는 동의하는 응답이 50.0%대로 과반을 유지하다가 60대에서 48.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하의 동의 비율을 보였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합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비율도 낮았다. 중졸 이하의 그룹은 동의하는 비율이 43.6%로 고졸 그룹의 52.9%나 초대졸 이상 그룹의 58.4% 보다 낮았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보다 동의 비율이 높았고, 일용직의 경우가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동의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적극 동의 비율은 일용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주관적 사회계층

이 낮아질수록 동의 비율도 낮아졌으며 경제수준이 중간인 그룹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적극 동의의 비율로 보면,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적극 동의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혼인 상태에서는 미혼인 그룹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혼인 상태를 조금 더 세분화해 미혼,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이혼/별거, 사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동거/사실혼 그룹이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그룹보다 없는 그룹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 형태로 보면,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동의 비율이 41.1%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가구 형태에서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합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38〉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1: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함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전체 ¹⁾	45.9	6.8	39.1	54.1	48.9	5.2	100.0 (8,000)	2.5
성별($\chi^2=2.805$)								
남성	45.2	6.7	38.5	54.8	49.2	5.6	100.0 (3,965)	2.5
여성	46.6	6.8	39.8	53.4	48.5	4.9	100.0 (4,035)	2.5
연령($\chi^2=216.137^{***}$)								
19~29세	37.9	4.5	33.3	62.1	55.6	6.6	100.0 (1,360)	2.6
30~39세	40.5	3.8	36.7	59.5	53.2	6.3	100.0 (1,279)	2.6
40~49세	42.0	5.9	36.2	58.0	51.2	6.7	100.0 (1,533)	2.6
50~59세	47.9	6.6	41.3	52.1	48.1	4.0	100.0 (1,590)	2.5
60~69세	52.0	7.9	44.2	48.0	44.0	4.0	100.0 (1,204)	2.4
70~79세	57.9	13.2	44.7	42.1	38.8	3.3	100.0 (675)	2.3
80세 이상	59.8	14.1	45.7	40.2	36.9	3.3	100.0 (360)	2.3
지역($\chi^2=16.844^{**}$)								
대도시	45.7	6.1	39.6	54.3	48.8	5.5	100.0 (3,523)	2.5
중소도시	45.3	6.5	38.8	54.7	49.9	4.8	100.0 (3,062)	2.5
농어촌	47.6	9.0	38.7	52.4	46.9	5.5	100.0 (1,415)	2.5
교육수준($\chi^2=133.708^{***}$)								
중졸 이하	56.4	12.4	44.0	43.6	40.2	3.4	100.0 (1,211)	2.3
고졸	47.1	6.6	40.5	52.9	48.2	4.7	100.0 (2,961)	2.5
초대졸 이상	41.6	5.1	36.5	58.4	52.1	6.2	100.0 (3,829)	2.6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경제활동 여부 ($\chi^2=38.279^{***}$)									
예	43.6	6.2	37.4	56.4	50.8	5.6	100.0	(5,520)	2.6
아니오	50.9	7.9	43.0	49.1	44.6	4.5	100.0	(2,480)	2.5
종사상 지위($\chi^2=55.8^{***}$)									
상용직	40.0	5.1	34.9	60.0	53.5	6.6	100.0	(2,947)	2.6
임시직	45.5	6.6	38.9	54.5	49.3	5.2	100.0	(540)	2.5
일용직	51.0	7.8	43.2	49.0	41.6	7.4	100.0	(161)	2.5
자영업자	48.6	7.7	40.9	51.4	47.4	4.0	100.0	(1,758)	2.5
무급가족종사자	42.2	10.3	31.9	57.8	54.3	3.4	100.0	(115)	2.5
주관적 사회계층 ($\chi^2=52.918^{***}$)									
상(7-10)	38.1	4.0	34.1	61.9	55.7	6.1	100.0	(975)	2.6
중(5-6)	44.8	6.8	38.0	55.2	49.6	5.6	100.0	(4,186)	2.5
하(1-4)	50.1	7.6	42.5	49.9	45.5	4.4	100.0	(2,840)	2.5
경제수준($\chi^2=40.899^{***}$)									
상(상-중상)	46.7	5.8	40.9	53.3	46.1	7.2	100.0	(620)	2.5
중(중)	43.2	6.1	37.1	56.8	50.8	5.9	100.0	(4,075)	2.6
하(중하-하)	49.0	7.7	41.3	51.0	47.0	4.0	100.0	(3,304)	2.5
혼인 상태 ($\chi^2=103.676^{***}$)									
미혼	37.3	3.9	33.4	62.7	56.2	6.5	100.0	(1,886)	2.7
무배우	52.6	10.4	42.2	47.4	43.8	3.6	100.0	(934)	2.4
유배우	47.8	7.2	40.6	52.2	47.1	5.1	100.0	(5,180)	2.5
자녀 유무 ($\chi^2=101.765^{***}$)									
예	49.3	7.9	41.4	50.7	46.0	4.7	100.0	(5,561)	2.5
아니오	38.0	4.1	33.9	62.0	55.5	6.5	100.0	(2,439)	2.6
가구 형태($\chi^2=45.227^{***}$)									
1세대 가구	48.7	7.8	40.9	51.3	46.7	4.6	100.0	(3,200)	2.5
2세대 가구	43.5	5.9	37.5	56.5	50.8	5.7	100.0	(4,605)	2.6
3세대 이상 가구	58.9	8.0	50.9	41.1	37.0	4.1	100.0	(184)	2.4
기타	27.8	19.4	8.5	72.2	72.2	0.0	100.0	(12)	2.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2) 젊은 동성 친구의 결합

이번에는 남녀가 아닌 동성 친구 사이의 결합을 알아보았다. 젊은 층의 친구 사이와 노년의 친구 사이 결합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각각 알아보았다. 먼저 젊은 층의 동성 친구 결합에 대해서 가족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

다’는 응답 24.0%, ‘그렇다’는 응답 17.2%,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즉, 젊은 층의 동성 친구 결합에 대해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응답률이 전체 78.5%를 차지했다.

연령 상승에 따라 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20대는 27.0%가, 30대는 23.4%가 동의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20.0% 이하의 동의 비율을 보여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동의 비율이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에서는 높은 그룹과 중간 그룹보다 낮은 그룹의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혼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혼인 상태를 조금 더 세분화한 분석에서는 미혼인 경우가 다른 혼인 상태 그룹인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이혼/별거, 사별보다 동의 비율이 높고 사별 그룹이 낮은 특성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동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 기타 형태를 제외하면 3세대 이상 가구 형태인 경우 동의 비율이 15.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전통적인 가구 형태일수록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39〉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2: 젊은 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전체 ¹⁾	78.5	24.0	54.5	21.5	17.2	4.3	100.0	(8,000)	2.0
성별($\chi^2=2.413$)									
남성	78.2	23.5	54.7	21.8	17.7	4.2	100.0	(3,965)	2.0
여성	78.9	24.5	54.4	21.1	16.7	4.4	100.0	(4,035)	2.0
연령($\chi^2=133.572^{***}$)									
19~29세	73.0	18.3	54.7	27.0	22.3	4.7	100.0	(1,360)	2.1
30~39세	76.6	20.9	55.7	23.4	19.8	3.6	100.0	(1,279)	2.1
40~49세	77.1	21.0	56.1	22.9	17.8	5.1	100.0	(1,533)	2.1
50~59세	81.5	26.1	55.4	18.5	14.8	3.7	100.0	(1,590)	2.0
60~69세	82.2	28.2	54.0	17.8	14.5	3.4	100.0	(1,204)	1.9
70~79세	81.0	29.9	51.1	19.0	13.0	6.0	100.0	(675)	2.0
80세 이상	82.8	35.1	47.7	17.2	13.1	4.1	100.0	(360)	1.9

23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지역($\chi^2=9.606$)									
대도시	78.6	24.4	54.2	21.4	17.0	4.4	100.0	(3,523)	2.0
중소도시	79.1	23.2	55.9	20.9	17.2	3.7	100.0	(3,062)	2.0
농어촌	77.1	24.6	52.4	22.9	17.7	5.2	100.0	(1,415)	2.0
교육수준($\chi^2=76.221^{***}$)									
중졸 이하	82.3	32.9	49.3	17.7	13.4	4.3	100.0	(1,211)	1.9
고졸	79.0	23.6	55.4	21.0	17.5	3.6	100.0	(2,961)	2.0
초대졸 이상	77.0	21.5	55.5	23.0	18.2	4.8	100.0	(3,829)	2.1
경제활동 여부 ($\chi^2=16.968^{***}$)									
예	77.8	22.7	55.1	22.2	17.7	4.5	100.0	(5,520)	2.0
아니오	80.1	26.8	53.3	19.9	16.0	3.9	100.0	(2,480)	2.0
종사상 지위 ($\chi^2=603.968^{***}$)									
상용직	74.9	20.5	54.4	25.1	19.5	5.5	100.0	(2,947)	2.1
임시직	81.2	24.9	56.3	18.8	15.0	3.9	100.0	(540)	2.0
일용직	79.7	32.0	47.7	20.3	16.4	3.9	100.0	(161)	1.9
자영업자	81.4	24.9	56.5	18.6	15.5	3.1	100.0	(1,758)	2.0
무급가족종사자	80.1	24.1	56.0	19.9	17.8	2.1	100.0	(115)	2.0
주관적 사회계층 ($\chi^2=58.855^{***}$)									
상(7-10)	72.8	18.9	53.9	27.2	23.0	4.2	100.0	(975)	2.1
중(5-6)	77.4	23.6	53.8	22.6	18.0	4.6	100.0	(4,186)	2.0
하(1-4)	82.2	26.3	55.8	17.8	13.9	3.9	100.0	(2,840)	2.0
경제수준($\chi^2=43.216^{***}$)									
상(상-중상)	75.9	28.7	47.2	24.1	18.8	5.3	100.0	(620)	2.0
중(중)	76.7	23.0	53.7	23.3	18.3	5.0	100.0	(4,075)	2.1
하(중하-하)	81.4	24.4	57.0	18.6	15.4	3.2	100.0	(3,304)	2.0
혼인 상태($\chi^2=62.098^{***}$)									
미혼	74.4	18.5	55.9	25.6	21.0	4.5	100.0	(1,886)	2.1
무배우	81.2	29.4	51.8	18.8	14.5	4.2	100.0	(934)	1.9
유배우	79.6	25.0	54.5	20.4	16.2	4.2	100.0	(5,180)	2.0
자녀 유무($\chi^2=104.332^{***}$)									
예	80.8	26.1	54.7	19.2	15.0	4.2	100.0	(5,561)	2.0
아니오	73.4	19.3	54.1	26.6	22.1	4.5	100.0	(2,439)	2.1
가구 형태($\chi^2=21.677^{**}$)									
1세대 가구	78.5	25.6	52.9	21.5	16.7	4.8	100.0	(3,200)	2.0
2세대 가구	78.3	22.7	55.7	21.7	17.7	4.0	100.0	(4,605)	2.0
3세대 이상 가구	84.6	27.9	56.7	15.4	12.7	2.7	100.0	(184)	1.9
기타	80.4	43.8	36.6	19.6	12.4	7.2	100.0	(12)	1.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3) 고령 동성 친구의 결합

젊은 층이 아닌 노년에 동성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 가족이라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7%, ‘그렇다’는 응답은 25.2%,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6%,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응답률이 71.2%로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40대까지는 30.0% 이상이 동의하고 있지만, 50대 이상부터는 동의 비율이 30.0% 이하의 수준을 보인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동의 비율이 낮아지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도 이전에 알아본 젊은 동성 친구 결합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은 동의 비율이 30.0% 이상이었지만, 그 외의 종사상 지위 그룹은 모두 30.0% 이하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은 낮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미혼인 응답자는 31.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고, 혼인 상태의 세분화 분석에서도 미혼 상태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고 그 다음 법률혼과 이혼/별거 그룹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고령의 동성 친구가 함께 사는 것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1%로 높았다. 또한, 기타를 제외한 3세대 이상 가구에서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이 나타났다.

〈표 5-40〉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3: 고령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전체 ¹⁾	71.2	20.6	50.7	28.8	25.2	3.6	100.0	(8,000)	2.1
성별($\chi^2=0.022$)									
남성	71.1	20.6	50.6	28.9	25.2	3.6	100.0	(3,965)	2.1
여성	71.3	20.5	50.7	28.7	25.1	3.6	100.0	(4,035)	2.1
연령($\chi^2=103.326^{***}$)									
19~29세	67.2	16.8	50.4	32.8	27.9	4.9	100.0	(1,360)	2.2
30~39세	66.7	15.8	50.9	33.3	29.3	4.0	100.0	(1,279)	2.2
40~49세	69.6	18.3	51.4	30.4	26.6	3.8	100.0	(1,533)	2.2
50~59세	73.5	23.0	50.6	26.5	23.4	3.1	100.0	(1,590)	2.1
60~69세	75.5	24.1	51.4	24.5	21.8	2.6	100.0	(1,204)	2.0
70~79세	75.9	27.5	48.4	24.1	20.5	3.6	100.0	(675)	2.0
80세 이상	75.5	25.9	49.6	24.5	21.9	2.6	100.0	(360)	2.0
지역($\chi^2=80.52^{***}$)									
대도시	70.4	19.7	50.7	29.6	25.0	4.6	100.0	(3,523)	2.1
중소도시	71.5	20.4	51.1	28.5	25.9	2.6	100.0	(3,062)	2.1
농어촌	72.6	23.1	49.5	27.4	24.0	3.5	100.0	(1,415)	2.1
교육수준($\chi^2=86.469^{***}$)									
중졸 이하	77.4	28.9	48.6	22.6	20.1	2.5	100.0	(1,211)	2.0
고졸	72.4	20.2	52.2	27.6	24.4	3.2	100.0	(2,961)	2.1
초대졸 이상	68.3	18.2	50.1	31.7	27.4	4.3	100.0	(3,829)	2.2
경제활동 여부($\chi^2=6.845$)									
예	70.8	19.8	51.0	29.2	25.6	3.6	100.0	(5,520)	2.1
아니오	72.1	22.3	49.8	27.9	24.3	3.7	100.0	(2,480)	2.1
종사상 지위 ($\chi^2=46.608^{***}$)									
상용직	68.4	18.2	50.2	31.6	27.2	4.4	100.0	(2,947)	2.2
임시직	70.9	20.9	50.0	29.1	25.4	3.7	100.0	(540)	2.1
일용직	74.2	28.1	46.1	25.8	25.0	0.8	100.0	(161)	2.0
자영업자	74.1	21.4	52.7	25.9	23.6	2.3	100.0	(1,758)	2.1
무급가족종사자	77.0	18.4	58.5	23.0	16.0	7.0	100.0	(115)	2.1
주관적 사회계층 ($\chi^2=75.688^{***}$)									
상(7-10)	64.1	14.8	49.3	35.9	30.2	5.7	100.0	(975)	2.3
중(5-6)	70.2	19.5	50.6	29.8	26.0	3.8	100.0	(4,186)	2.1
하(1-4)	75.2	24.0	51.2	24.8	22.2	2.6	100.0	(2,840)	2.0
경제수준($\chi^2=45.243^{***}$)									
상(상-중상)	67.0	20.1	46.9	33.0	27.3	5.7	100.0	(620)	2.2
중(중)	69.3	18.9	50.4	30.7	26.6	4.1	100.0	(4,075)	2.2
하(중하-하)	74.3	22.7	51.6	25.7	23.0	2.7	100.0	(3,304)	2.1
혼인 상태($\chi^2=44.781^{***}$)									
미혼	68.6	17.1	51.5	31.4	27.1	4.3	100.0	(1,886)	2.2
무배우	75.1	27.4	47.7	24.9	22.2	2.7	100.0	(934)	2.0
유배우	71.5	20.6	50.9	28.5	25.0	3.6	100.0	(5,180)	2.1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자녀 유무($\chi^2=29.678^{***}$)									
예	72.6	21.9	50.8	27.4	24.0	3.3	100.0	(5,561)	2.1
아니오	67.9	17.5	50.4	32.1	27.7	4.3	100.0	(2,439)	2.2
가구 형태($\chi^2=18.413^*$)									
1세대 가구	72.2	22.3	49.9	27.8	24.2	3.7	100.0	(3,200)	2.1
2세대 가구	70.4	19.3	51.1	29.6	25.9	3.7	100.0	(4,605)	2.1
3세대 이상 가구	76.1	22.3	53.9	23.9	22.1	1.8	100.0	(184)	2.0
기타	52.2	19.4	32.8	47.8	47.8	0.0	100.0	(12)	2.3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동성(연인) 결합

다양한 결합 중 마지막으로 알아본 결합은 동성 커플(연인)에 대한 견해이다. 동성 커플(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0.1%,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35.5%, ‘그렇다’는 비율은 22.6%,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7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1.5%포인트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는데 20대는 34.3%인 반면, 80대 이상에서는 14.9%를 보여 19.4%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 지역 거주자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가 동의 비율이 낮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낮았는데 중졸 이하 그룹에서는 16.0%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보다 하지 않는 경우 동의 비율이 낮았고, 종사상 지위에서는 일용직의 동의 비율이 13.9%로 다른 그룹의 20.0% 이상인 동의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비율이다.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그룹의 동의 비율이 제일 낮았으며,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

인 그룹은 중간 그룹이다. 하지만 높은 그룹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미혼인 경우는 이 견해에 대한 동의 비율이 33.2%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를 더 세분화해 미혼,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이혼/별거, 사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사별 그룹이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 동거/사실혼 그룹의 동의 비율이 낮아 동성 커플(연인)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그룹은 동의 비율이 31.6%로 높아 자녀가 있는 그룹의 21.3%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표 5-41〉 다양한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정도 4: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전체 ¹⁾	75.6	35.5	40.1	24.4	22.6	1.9	100.0	(8,000)	1.9
성별($\chi^2=3964.349^{***}$)									
남성	74.8	33.7	41.1	25.2	23.0	2.2	100.0	(3,965)	1.9
여성	76.3	37.1	39.1	23.7	22.2	1.5	100.0	(4,035)	1.9
연령($\chi^2=243.182^{***}$)									
19~29세	65.7	28.7	36.9	34.3	30.9	3.4	100.0	(1,360)	2.1
30~39세	71.0	29.3	41.7	29.0	26.8	2.2	100.0	(1,279)	2.0
40~49세	73.0	31.8	41.2	27.0	25.2	1.8	100.0	(1,533)	2.0
50~59세	80.7	37.3	43.3	19.3	17.9	1.4	100.0	(1,590)	1.8
60~69세	81.9	42.5	39.4	18.1	16.5	1.6	100.0	(1,204)	1.8
70~79세	81.7	45.8	35.8	18.3	17.8	0.5	100.0	(675)	1.7
80세 이상	85.1	47.0	38.0	14.9	14.4	0.6	100.0	(360)	1.7
지역($\chi^2=38.211^{***}$)									
대도시	74.5	35.0	39.5	25.5	23.5	2.0	100.0	(3,523)	1.9
중소도시	74.7	32.8	41.9	25.3	23.5	1.8	100.0	(3,062)	1.9
농어촌	80.1	42.4	37.7	19.9	18.3	1.6	100.0	(1,415)	1.8
교육수준($\chi^2=143.454^{***}$)									
중졸 이하	84.0	47.9	36.2	16.0	15.1	0.9	100.0	(1,211)	1.7
고졸	76.9	36.3	40.6	23.1	21.5	1.6	100.0	(2,961)	1.9
초대졸 이상	71.9	30.9	41.0	28.1	25.8	2.4	100.0	(3,829)	2.0
경제활동 여부($\chi^2=20.129^{***}$)									
예	74.6	33.9	40.7	25.4	23.4	2.0	100.0	(5,520)	1.9
아니오	77.6	38.9	38.7	22.4	20.8	1.6	100.0	(2,480)	1.9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평균
종사상 지위($\chi^2=69.901^{***}$)									
상용직	71.4	30.7	40.8	28.6	26.2	2.4	100.0	(2,947)	2.0
임시직	73.7	34.3	39.5	26.3	24.7	1.5	100.0	(540)	1.9
일용직	86.1	41.1	45.0	13.9	13.9	0.0	100.0	(161)	1.7
자영업자	79.0	38.1	40.9	21.0	19.4	1.6	100.0	(1,758)	1.8
무급가족종사자	78.7	42.1	36.6	21.3	18.4	2.9	100.0	(115)	1.8
주관적 사회계층 ($\chi^2=33.423^{***}$)									
상(7-10)	75.6	33.1	42.5	24.4	22.1	2.3	100.0	(975)	1.9
중(5-6)	73.6	33.9	39.7	26.4	24.3	2.1	100.0	(4,186)	1.9
하(1-4)	78.4	38.6	39.8	21.6	20.2	1.3	100.0	(2,840)	1.8
경제수준($\chi^2=27.219^{***}$)									
상(상-중상)	75.0	38.9	36.1	25.0	22.6	2.4	100.0	(620)	1.9
중(중)	74.0	35.0	39.0	26.0	23.6	2.3	100.0	(4,075)	1.9
하(중하-하)	77.5	35.3	42.2	22.5	21.2	1.2	100.0	(3,304)	1.9
혼인 상태($\chi^2=141.821^{***}$)									
미혼	66.8	30.1	36.6	33.2	30.2	3.0	100.0	(1,886)	2.1
무배우	80.2	45.3	34.9	19.8	18.3	1.5	100.0	(934)	1.8
유배우	77.9	35.6	42.3	22.1	20.6	1.5	100.0	(5,180)	1.9
자녀 유무($\chi^2=2826.587^{***}$)									
예	78.7	37.6	41.1	21.3	19.9	1.4	100.0	(5,561)	1.9
아니오	68.4	30.7	37.7	31.6	28.7	2.8	100.0	(2,439)	2.0
가구 형태($\chi^2=51.76^{***}$)									
1세대 가구	77.8	39.7	38.1	22.2	20.5	1.7	100.0	(3,200)	1.8
2세대 가구	74.1	32.4	41.7	25.9	23.9	2.0	100.0	(4,605)	2.0
3세대 이상 가구	75.3	38.8	36.5	24.7	22.6	2.1	100.0	(184)	1.9
기타	51.1	35.3	15.7	48.9	48.9	0.0	100.0	(12)	2.1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나. 다양한 결합에 대한 동반자 등록 인정

현재 한국은 결혼으로만 이성 남녀가 가족이 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둘이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경우 상대방을 동반자로 등록하여 응급 시 보호자가 되어주거나 서로 돌봄, 보호 또는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등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동반자 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제

도를 마련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1)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의 결합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성인 남녀에 대해 동반자 등록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55.5%,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3.4%,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찬성에 대한 응답이 61.9%로 반대(3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찬성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20~30대는 찬성 비율이 70.0%를 넘고, 40대는 60.0%대, 50~70대는 50.0%대를 유지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찬성 비율이 약간 낮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찬성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졸 이하 그룹은 과반이 반대하지만, 초대졸 이상에서는 찬성률이 67.4%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는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찬성률이 낮다. 주관적 사회계층은 낮아질수록 찬성률도 낮아지며, 경제수준은 높은 그룹과 중간 그룹의 찬성률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그룹이 약간 낮다. 미혼의 경우 찬성률이 72.8%로 높으며, 혼인 경험이 있는 그룹은 60.0% 이하로 낮아 혼인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혼인 상태를 조금 더 세분화해 미혼,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이혼/별거, 사별로 나누어 보면, 동거/사실혼의 경우 반대하는 비율이 사별 그룹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그룹보다 없는 그룹의 찬성률이 69.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구 형태를 제외하면 2세대

가구에서 동의 비율이 64.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42〉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1: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38.1	4.7	33.4	61.9	55.5	6.4	100.0	(8,000)	2.6
성별($\chi^2=6.408$)									
남성	38.9	4.8	34.1	61.1	54.3	6.8	100.0	(3,965)	2.6
여성	37.3	4.5	32.8	62.7	56.8	5.9	100.0	(4,035)	2.6
연령($\chi^2=275.086^{***}$)									
19~29세	27.0	3.0	24.0	73.0	63.3	9.7	100.0	(1,360)	2.8
30~39세	28.8	2.7	26.1	71.2	63.8	7.4	100.0	(1,279)	2.8
40~49세	37.0	4.1	32.9	63.0	56.1	6.9	100.0	(1,533)	2.7
50~59세	41.1	4.6	36.5	58.9	53.7	5.2	100.0	(1,590)	2.6
60~69세	48.2	6.1	42.1	51.8	47.2	4.6	100.0	(1,204)	2.5
70~79세	48.3	8.4	39.9	51.7	47.6	4.1	100.0	(675)	2.5
80세 이상	51.5	9.1	42.4	48.5	45.0	3.5	100.0	(360)	2.4
지역($\chi^2=33.163^{***}$)									
대도시	38.4	3.7	34.7	61.6	54.4	7.2	100.0	(3,523)	2.7
중소도시	37.3	4.8	32.4	62.7	57.4	5.3	100.0	(3,062)	2.6
농어촌	39.1	6.6	32.5	60.9	54.2	6.6	100.0	(1,415)	2.6
교육수준($\chi^2=158.994^{***}$)									
중졸 이하	50.2	8.7	41.4	49.8	45.9	3.9	100.0	(1,211)	2.4
고졸	40.3	4.7	35.6	59.7	53.6	6.1	100.0	(2,961)	2.6
초대졸 이상	32.6	3.4	29.2	67.4	60.1	7.3	100.0	(3,829)	2.7
경제활동 여부 ($\chi^2=12.856^{**}$)									
예	36.9	4.4	32.5	63.1	56.5	6.6	100.0	(5,520)	2.7
아니오	40.8	5.4	35.4	59.2	53.4	5.8	100.0	(2,480)	2.6
종사상 지위 ($\chi^2=44.857^{***}$)									
상용직	33.7	4.2	29.5	66.3	58.6	7.7	100.0	(2,947)	2.7
임시직	36.7	3.5	33.2	63.3	57.0	6.3	100.0	(540)	2.7
일용직	42.9	4.9	37.9	57.1	47.6	9.5	100.0	(161)	2.6
자영업자	41.6	4.8	36.9	58.4	53.6	4.8	100.0	(1,758)	2.6
무급가족종사자	38.3	4.2	34.1	61.7	56.3	5.5	100.0	(115)	2.6
주관적 사회계층 ($\chi^2=74.989^{***}$)									
상(7-10)	34.5	3.4	31.0	65.5	59.5	6.0	100.0	(975)	2.7
중(5-6)	37.9	4.6	33.3	62.1	55.5	6.6	100.0	(4,186)	2.6
하(1-4)	39.7	5.2	34.5	60.3	54.2	6.1	100.0	(2,840)	2.6
경제수준($\chi^2=14.378^*$)									
상(상-중상)	38.0	4.4	33.6	62.0	53.2	8.8	100.0	(620)	2.7
중(중)	37.5	4.2	33.4	62.5	56.0	6.5	100.0	(4,075)	2.6
하(중하-하)	38.8	5.4	33.4	61.2	55.4	5.8	100.0	(3,304)	2.6

특성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계	(명)	평균
혼인 상태($\chi^2=146.161^{***}$)									
미혼	27.2	2.8	24.4	72.8	64.1	8.7	100.0	(1,886)	2.8
무배우	45.7	6.7	39.1	54.3	50.0	4.2	100.0	(934)	2.5
유배우	40.7	5.0	35.7	59.3	53.4	5.9	100.0	(5,180)	2.6
자녀 유무($\chi^2=97.988^{***}$)									
예	41.4	5.5	35.9	58.6	53.0	5.6	100.0	(5,561)	2.6
아니오	30.6	2.8	27.8	69.4	61.2	8.2	100.0	(2,439)	2.7
가구 형태($\chi^2=103.508^{***}$)									
1세대 가구	42.0	5.6	36.4	58.0	52.6	5.4	100.0	(3,200)	2.6
2세대 가구	35.3	4.1	31.3	64.7	57.5	7.1	100.0	(4,605)	2.7
3세대 이상 가구	41.5	3.9	37.7	58.5	54.2	4.2	100.0	(184)	2.6
기타	15.3	0.0	15.3	84.7	84.7	0.0	100.0	(12)	2.8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2) 젊은 동성 친구의 결합

젊은 동성 친구의 결합을 동반자 등록제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고, ‘찬성하는 편’이라는 그룹은 28.3%,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5.3%,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찬성률이 40.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30대에서 50대까지는 30.0%대를 유지하고 있다. 60세 이상이 되면서 찬성률은 30.0% 이하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의 찬성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찬성률도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미혼 그룹에서 찬성률이 가장 높고 사별 및 이혼 등 무배우 그룹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혼인 상태를 세분화한 분석 결과에서는 미혼을 제외하고 동거/사실혼 그룹에서 매우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 적극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에서는 기타 가구를 제외하고 1세대 가구에서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표 5-43〉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2: 젊은 층 동성 친구들이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67.2	15.3	51.9	32.8	28.3	4.5	100.0	(8,000)	2.2
성별($\chi^2=2.475$)									
남성	67.2	15.6	51.6	32.8	28.7	4.1	100.0	(3,965)	2.2
여성	67.2	15.1	52.1	32.8	28.0	4.8	100.0	(4,035)	2.2
연령($\chi^2=173.848^{***}$)									
19~29세	59.7	9.8	49.9	40.3	34.9	5.4	100.0	(1,360)	2.4
30~39세	61.8	10.6	51.2	38.2	32.9	5.3	100.0	(1,279)	2.3
40~49세	65.5	15.3	50.2	34.5	30.4	4.1	100.0	(1,533)	2.2
50~59세	69.5	16.2	53.2	30.5	25.7	4.8	100.0	(1,590)	2.2
60~69세	74.2	19.9	54.2	25.8	22.5	3.3	100.0	(1,204)	2.1
70~79세	74.8	20.8	54.0	25.2	21.7	3.5	100.0	(675)	2.1
80세 이상	74.4	23.5	50.9	25.6	22.4	3.2	100.0	(360)	2.1
지역($\chi^2=23.935^{***}$)									
대도시	65.5	15.4	50.0	34.5	29.7	4.8	100.0	(3,523)	2.2
중소도시	69.5	14.9	54.5	30.5	27.1	3.5	100.0	(3,062)	2.2
농어촌	66.6	15.9	50.7	33.4	27.7	5.6	100.0	(1,415)	2.2
교육수준($\chi^2=94.54^{***}$)									
중졸 이하	75.2	22.9	52.3	24.8	21.6	3.1	100.0	(1,211)	2.0
고졸	67.2	15.3	51.9	32.8	28.7	4.1	100.0	(2,961)	2.2
초대졸 이상	64.7	12.9	51.7	35.3	30.2	5.1	100.0	(3,829)	2.3
경제활동 여부($\chi^2=7.943^*$)									
예	66.4	14.8	51.6	33.6	28.9	4.7	100.0	(5,520)	2.2
아니오	69.0	16.4	52.6	31.0	27.2	3.8	100.0	(2,480)	2.2
종사상 지위($\chi^2=60.194^{***}$)									
상용직	63.3	13.8	49.5	36.7	30.9	5.8	100.0	(2,947)	2.3
임시직	68.1	15.7	52.4	31.9	28.0	3.9	100.0	(540)	2.2
일용직	70.6	22.1	48.5	29.4	28.9	0.5	100.0	(161)	2.1
자영업자	70.5	15.4	55.1	29.5	25.8	3.7	100.0	(1,758)	2.2
무급가족종사자	69.2	19.0	50.2	30.8	28.5	2.3	100.0	(115)	2.1
주관적 사회계층($\chi^2=12.125$)									
상(7-10)	65.6	12.8	52.8	34.4	29.5	4.9	100.0	(975)	2.3
중(5-6)	66.9	15.2	51.7	33.1	28.2	4.9	100.0	(4,186)	2.2
하(1-4)	68.2	16.3	51.9	31.8	28.1	3.7	100.0	(2,840)	2.2

특성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계	(명)	평균
경제수준($\chi^2=25.327^{***}$)									
상(상-중상)	64.1	16.8	47.3	35.9	29.3	6.6	100.0	(620)	2.3
중(중)	66.8	14.7	52.1	33.2	28.2	5.1	100.0	(4,075)	2.2
하(중하-하)	68.3	15.8	52.5	31.7	28.4	3.3	100.0	(3,304)	2.2
혼인 상태($\chi^2=80.674^{***}$)									
미혼	60.8	10.4	50.4	39.2	33.9	5.4	100.0	(1,886)	2.3
무배우	73.2	18.9	54.3	26.8	23.0	3.7	100.0	(934)	2.1
유배우	68.5	16.5	52.0	31.5	27.3	4.2	100.0	(5,180)	2.2
자녀 유무($\chi^2=195.467^{***}$)									
예	69.6	17.1	52.5	30.4	26.3	4.1	100.0	(5,561)	2.2
아니오	61.8	11.2	50.5	38.2	32.9	5.3	100.0	(2,439)	2.3
가구 형태($\chi^2=75.009^{***}$)									
1세대 가구	70.2	16.8	53.4	29.8	25.2	4.5	100.0	(3,200)	2.2
2세대 가구	65.1	14.3	50.7	34.9	30.5	4.5	100.0	(4,605)	2.3
3세대 이상 가구	67.4	14.8	52.6	32.6	29.7	2.8	100.0	(184)	2.2
기타	76.3	10.0	66.3	23.7	16.4	7.2	100.0	(12)	2.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3) 고령 동성 친구의 결합

고령층에서 동성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를 동반자 등록제와 같은 제도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는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0.1%,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8.3%, ‘매우 반대한다’는 입장은 12.8%, 그리고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8.8%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도 38.3%로 높고, 매우 반대하는 입장도 약간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49.4%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률이 낮아졌는데, 40대까지는 과반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 연령대부터는 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스스로의 입장을 확인해 보면, 60~70대가 약 43.0% 수준의

찬성 비율을 보이며, 80세 이상은 37.7%로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찬성률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찬성률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상용직이나 임시직의 찬성 비율이 그 외 종사상 지위보다 높게 나타나며, 주관적 사회계층에서는 가장 낮은 그룹의 찬성률이 절반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제수준은 낮아질수록 찬성률도 낮아진다. 혼인 상태에서는 미혼인 그룹의 찬성률이 53.3%로 유배우나 무배우 그룹보다 높고, 혼인 상태의 세부 분석을 통해서는 미혼 다음으로 법률혼(유배우)과 이혼/별거 그룹의 찬성률이 높지만,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은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과 이혼/별거 그룹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그룹보다는 없는 그룹의 찬성률이 높다. 또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표 5-44〉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3: 고령층 동성 친구들이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51.1	12.8	38.3	48.9	40.1	8.8	100.0	(8,000)	2.4
성별($\chi^2=7.445$)									
남성	51.6	12.7	38.9	48.4	38.9	9.5	100.0	(3,965)	2.5
여성	50.6	12.9	37.7	49.4	41.2	8.2	100.0	(4,035)	2.4
연령($\chi^2=117.748^{***}$)									
19~29세	45.9	9.6	36.4	54.1	42.8	11.3	100.0	(1,360)	2.6
30~39세	45.1	9.4	35.7	54.9	44.4	10.5	100.0	(1,279)	2.6
40~49세	49.1	11.6	37.5	50.9	42.0	8.9	100.0	(1,533)	2.5
50~59세	53.0	13.6	39.3	47.0	38.3	8.7	100.0	(1,590)	2.4
60~69세	57.5	16.7	40.8	42.5	35.5	7.0	100.0	(1,204)	2.3
70~79세	55.4	15.8	39.6	44.6	38.2	6.4	100.0	(675)	2.4
80세 이상	62.3	19.8	42.5	37.7	32.7	5.0	100.0	(360)	2.2
지역($\chi^2=4.921$)									
대도시	50.6	12.9	37.8	49.4	39.8	9.6	100.0	(3,523)	2.5
중소도시	51.0	12.6	38.4	49.0	40.5	8.4	100.0	(3,062)	2.4
농어촌	52.3	13.1	39.3	47.7	39.7	8.0	100.0	(1,415)	2.4

특성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진 않다	찬성 한다	찬성 하진 않다	매우 찬성 한다	계	(명)	평균
교육수준($\chi^2=141.058^{***}$)									
중졸 이하	61.2	19.5	41.7	38.8	33.6	5.3	100.0	(1,211)	2.2
고졸	53.8	13.8	40.0	46.2	38.3	7.9	100.0	(2,961)	2.4
초대졸 이상	45.9	9.9	35.9	54.1	43.5	10.7	100.0	(3,829)	2.5
경제활동 여부($\chi^2=2.845$)									
예	50.6	12.4	38.2	49.4	40.4	9.0	100.0	(5,520)	2.5
아니오	52.1	13.7	38.5	47.9	39.3	8.6	100.0	(2,480)	2.4
종사상 지위($\chi^2=22.769^*$)									
상용직	49.8	11.8	37.9	50.2	40.3	10.0	100.0	(2,947)	2.5
임시직	48.8	11.5	37.3	51.2	40.1	11.1	100.0	(540)	2.5
일용직	51.0	16.7	34.3	49.0	42.9	6.2	100.0	(161)	2.4
자영업자	52.7	13.4	39.3	47.3	40.4	6.9	100.0	(1,758)	2.4
무급가족종사자	49.6	10.5	39.0	50.4	42.5	8.0	100.0	(115)	2.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4.633^{***}$)									
상(7-10)	49.5	9.4	40.1	50.5	40.8	9.7	100.0	(975)	2.5
중(5-6)	49.9	13.1	36.8	50.1	40.6	9.5	100.0	(4,186)	2.5
하(1-4)	53.4	13.6	39.8	46.6	39.0	7.6	100.0	(2,840)	2.4
경제수준($\chi^2=39.967^{***}$)									
상(상-중상)	43.8	9.6	34.2	56.2	41.5	14.7	100.0	(620)	2.6
중(중)	50.8	13.1	37.7	49.2	40.3	8.9	100.0	(4,075)	2.4
하(중하-하)	52.8	13.0	39.8	47.2	39.5	7.7	100.0	(3,304)	2.4
혼인 상태($\chi^2=52.258^{***}$)									
미혼	46.7	9.3	37.4	53.3	43.1	10.2	100.0	(1,886)	2.5
무배우	58.1	16.5	41.7	41.9	35.4	6.4	100.0	(934)	2.3
유배우	51.4	13.4	38.0	48.6	39.8	8.8	100.0	(5,180)	2.4
자녀 유무($\chi^2=23.319^{***}$)									
예	52.5	13.8	38.7	47.5	39.1	8.4	100.0	(5,561)	2.4
아니오	47.9	10.5	37.3	52.1	42.2	9.9	100.0	(2,439)	2.5
가구 형태($\chi^2=34.913^{***}$)									
1세대 가구	54.7	14.0	40.8	45.3	37.4	7.9	100.0	(3,200)	2.4
2세대 가구	48.7	12.0	36.6	51.3	41.7	9.6	100.0	(4,605)	2.5
3세대 이상 가구	49.1	13.1	35.9	50.9	44.7	6.3	100.0	(184)	2.4
기타	48.2	0.0	48.2	51.8	32.2	19.6	100.0	(12)	2.7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4) 동성(연인) 결합

다양한 결합에 대해 동반자 등록제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결합인 동성 결합에 대한 견해를 보면, ‘반대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40.5%,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8.8%, ‘매우 반대한다’는 입장은 27.6%,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은 3.1%로 나타나 반대의 입장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대는 찬성률이 42.6%이지만, 80세 이상에서는 19.9%로 낮아진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찬성률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찬성률이 낮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직의 찬성률은 35.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30.0% 이하였다. 주관적 사회계층이 가장 낮은 그룹의 찬성률이 가장 낮으며, 미혼인 경우 41.6%로 높다. 혼인 상태를 미혼, 동거/사실혼, 법률혼(유배우), 이혼/별거, 사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에서는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미혼을 제외하고는 이혼/별거, 법률혼(유배우), 동거/사실혼, 사별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동거/사실혼 그룹이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해서 다른 그룹보다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자녀는 없는 경우가 찬성률이 높고, 기타를 제외한 2세대 가구에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5〉 동반자 등록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결합 인정 정도 4: 동성 커플(연인) 둘이 함께 사는 경우

(단위: %, 명, 점)

특성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계	(명)	평균
전체 ¹⁾	68.1	27.6	40.5	31.9	28.8	3.1	100.0	(8,000)	2.1
성별($\chi^2=0.671$)									
남성	68.0	27.2	40.8	32.0	28.9	3.1	100.0	(3,965)	2.1
여성	68.2	28.0	40.2	31.8	28.7	3.1	100.0	(4,035)	2.1
연령($\chi^2=274.563^{***}$)									
19~29세	57.4	22.2	35.2	42.6	37.0	5.7	100.0	(1,360)	2.3
30~39세	60.1	22.4	37.7	39.9	36.0	3.9	100.0	(1,279)	2.2
40~49세	66.0	24.2	41.8	34.0	31.4	2.6	100.0	(1,533)	2.1
50~59세	72.5	29.2	43.4	27.5	24.9	2.6	100.0	(1,590)	2.0
60~69세	77.1	34.7	42.4	22.9	20.6	2.3	100.0	(1,204)	1.9
70~79세	77.0	33.6	43.4	23.0	22.2	0.8	100.0	(675)	1.9
80세 이상	80.1	39.7	40.4	19.9	17.8	2.1	100.0	(360)	1.8
지역($\chi^2=40.295^{***}$)									
대도시	67.2	26.8	40.3	32.8	29.4	3.5	100.0	(3,523)	2.1
중소도시	66.9	25.9	41.0	33.1	30.4	2.7	100.0	(3,062)	2.1
농어촌	73.1	33.4	39.7	26.9	23.7	3.2	100.0	(1,415)	2.0
교육수준($\chi^2=141.087^{***}$)									
중졸 이하	79.3	37.1	42.2	20.7	19.3	1.4	100.0	(1,211)	1.9
고졸	69.9	28.3	41.6	30.1	27.0	3.1	100.0	(2,961)	2.0
초대졸 이상	63.2	24.1	39.1	36.8	33.1	3.7	100.0	(3,829)	2.2
경제활동 여부($\chi^2=7.296$)									
예	67.2	27.2	40.0	32.8	29.5	3.3	100.0	(5,520)	2.1
아니오	70.1	28.5	41.6	29.9	27.2	2.7	100.0	(2,480)	2.0
종사상 지위($\chi^2=85.762^{***}$)									
상용직	63.5	24.6	38.9	36.5	32.6	3.9	100.0	(2,947)	2.2
임시직	64.3	28.1	36.2	35.7	29.8	5.9	100.0	(540)	2.1
일용직	77.3	39.0	38.2	22.7	21.7	1.0	100.0	(161)	1.8
자영업자	72.8	30.2	42.6	27.2	25.5	1.6	100.0	(1,758)	2.0
무급가족종사자	75.0	27.5	47.5	25.0	20.8	4.2	100.0	(115)	2.0
주관적 사회계층 ($\chi^2=25.386^{***}$)									
상(7-10)	68.4	25.2	43.2	31.6	28.3	3.3	100.0	(975)	2.1
중(5-6)	66.5	26.6	39.8	33.5	30.7	2.9	100.0	(4,186)	2.1
하(1-4)	70.5	29.9	40.6	29.5	26.1	3.4	100.0	(2,840)	2.0
경제수준($\chi^2=9.493$)									
상(상-중상)	67.1	30.1	37.0	32.9	28.6	4.3	100.0	(620)	2.1
중(중)	67.6	26.9	40.8	32.4	29.5	2.9	100.0	(4,075)	2.1
하(중하-하)	68.9	28.0	40.8	31.1	28.0	3.2	100.0	(3,304)	2.1
혼인 상태($\chi^2=155.886^{***}$)									
미혼	58.4	23.7	34.7	41.6	36.3	5.3	100.0	(1,886)	2.2
무배우	76.3	36.6	39.7	23.7	21.7	2.0	100.0	(934)	1.9
유배우	70.2	27.4	42.8	29.8	27.3	2.5	100.0	(5,180)	2.0

특성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반대 하는 편이다	찬성 한다	찬성 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 한다	계	(명)	평균
자녀 유무($\chi^2=117.381^{***}$)									
예	71.6	29.1	42.5	28.4	26.2	2.3	100.0	(5,561)	2.0
아니오	60.2	24.3	36.0	39.8	34.7	5.1	100.0	(2,439)	2.2
가구 형태($\chi^2=69.012^{***}$)									
1세대 가구	72.3	31.7	40.6	27.7	25.1	2.6	100.0	(3,200)	2.0
2세대 가구	65.2	25.0	40.3	34.8	31.3	3.5	100.0	(4,605)	2.1
3세대 이상 가구	69.7	24.5	45.2	30.3	27.4	2.9	100.0	(184)	2.1
기타	39.8	0.0	39.8	60.2	53.0	7.2	100.0	(12)	2.7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3.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 및 가족 관련 편견에 대한 생각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인한 부와 모가 모두 있고,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의 가족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활동 및 활발한 사회 진출을 하고, 결혼 관계는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기도 하는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해 가족의 모습도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가족의 여러 모습에 대해 어떠한 가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거나 외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기도 하고, 동성이 가족을 형성하는 등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등 가족에 대한 편견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가.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생각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은 어떠한 모습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9가지 가족을 제시하였다. 1)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2)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3)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4)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5)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6)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7)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8)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9)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가족은 4)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즉 맞벌이가족으로 약간 이상적이라는 비율이 54.2%, 별로 이상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매우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각각 21.8%와 21.4%로 나타났고,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5%로 낮았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5.6%로 매우 높았다. 그다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은 2)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핵가족 모습으로 외벌이가족이다. 이 가족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1.9%로 맞벌이가족보다 약간 낮지만 다른 가족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그 외에 과반이거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은 1)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과 9)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으로 각각 63.0%와 47.5%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의 가족들에 대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38.5%, 3)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35.0%, 8)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26.2%, 5)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19.0%, 6)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15.4%로 각각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지 않다는 비율이 80.0% 이상으로 높았다.

〈표 5-46〉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가족	이상적 이지 않다	전혀 이상적 이지 않다		이상적 이다	약간 이상적 이다		매우 이상적 이다	평균
			이성적 이지 않다	여성적 이지 않다		이성적 이다	여성적 이다		
1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사는 가족	37.0	3.3	33.7	63.0	48.7	14.3	2.74	
2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28.1	3.0	25.1	71.9	53.8	18.1	2.87	
3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65.0	6.7	58.3	35.0	31.4	3.5	2.32	
4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24.4	2.5	21.8	75.6	54.2	21.4	2.95	
5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81.0	9.3	71.7	19.0	17.7	1.3	2.11	
6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84.6	14.8	69.9	15.4	14.0	1.3	2.02	
7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61.5	6.7	54.8	38.5	35.8	2.7	2.35	
8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73.8	9.5	64.3	26.2	24.5	1.7	2.18	
9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52.5	4.5	48.0	47.5	44.1	3.4	2.46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나. 한국 사회의 가족에 대한 편견 정도

한국 사회의 여러 가족 모습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우리 사회가 가장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동성 커플 가족이었다. 81.2%가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매우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7.2%로 우리 사회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은 미혼부/모 가족이었다. 미혼부 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7.5%,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6.7%로 이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그 다음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기르는 여성 한부모가족과 남성 한부모가족이었다.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4.4%, 남성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61.1%로 한부모에 대한 편견이 높았다. 그다음은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가족(58.9%)이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 가족보다 한부모나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손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5.3%였다. 그다음은 국제결혼 가족과 입양가족, 무자녀 가족이었는데 이러한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에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모두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성 커플(연인),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그 중에서 특히 미혼부/모 가족, 그리고 동거 가족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7〉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정도

(단위: %, 점)

가족		편견이 없다	전혀 편견이 없다	별로 편견이 없다	편견이 있다	약간 편견이 있다	매우 편견이 있다	평균
1	이혼이나 사별로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35.6	5.2	30.4	64.4	57.2	7.1	2.66
2	이혼이나 사별로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38.9	5.8	33.1	61.1	49.6	11.5	2.67
3	미혼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 는 가족	23.3	2.7	20.6	76.7	46.9	29.8	3.04

	가족	편견이 없다	전혀 편견이 없다		편견이 있다	약간 편견이 있다		매우 편견이 있다	평균
			전혀 편견이 없다	별로 편견이 없다		약간 편견이 있다	매우 편견이 있다		
4	미혼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22.5	2.6	19.9	77.5	48.9	28.6	3.04	
5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44.7	5.8	38.9	55.3	48.4	6.9	2.56	
6	아이가 없는 가족	60.0	11.4	48.6	40.0	35.2	4.8	2.33	
7	아이를 입양한 가족	57.2	11.5	45.7	42.8	38.1	4.7	2.36	
8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56.2	11.0	45.2	43.8	38.8	5.0	2.38	
9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55.3	10.9	44.4	44.7	39.9	4.8	2.39	
10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가족	41.1	4.8	36.3	58.9	50.9	8.0	2.62	
11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가족	18.8	2.2	16.6	81.2	44.0	37.2	3.16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제3절 소결

1. 가족 기능 및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해당 영역에서는 다섯 가지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 응답자의 49.1%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며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출산을 통한 재생산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경우 정서적 기능의 비율이 높고 재생산 기능의 비율이 낮은 반면 노인층은 젊은 층에 비해 정서적

기능에 대한 비율이 다소 낮고 재생산 기능의 비율은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다만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농어촌 지역은 정서적 기능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조사되어 농촌 사회의 환경적 요인이 정서적 기능에 대한 욕구를 더 드러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가족 간의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으로 보는 데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자녀 출산이나 자녀 교육을 통한 사회화에 대한 욕구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주제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하여 5가지 항목(육아, 의사결정권,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 책임,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을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5가지 항목 중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대한 동의 비율(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이 80.9%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74.5%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육아에 대한 평등 의식은 상당히 높은 반면 여전히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5가지 항목의 동의 비율은 육아에 뒤이어 의사결정권(77.7%), 가사노동(76.4%), 경제적 부양 책임(75.4%),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74.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육아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의 경우 여성의 동의 비율은 77.8%이며 남성의 동의 비율은 75.0%로 약 2.8%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동의 비율이 약 0.9%포인트 차이임을 고려하면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로 여성의 동의 비율은 75.4%이며 남성의 동의 비율은 72.4%로 차이는 3.0%포인트이다. 이는 남성은 여전히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성보다 다소 강하다고 볼 수 있다. 5가지 항목에 대해 ‘경제적 부양 책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부양 책임과 관련하여 남성의 동의 비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젊은 세대는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제적 부양의 경우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영역은 가족 내 성평등 정도(실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5가지 문항, 즉 동등한 의사결정권(동의 비율 77.3%),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동의 비율 70.7%), 공평한 경제적 부양책임(동의 비율 59.4%), 공평한 육아분담(동의 비율 55.7%), 공평한 가사노동(동의 비율 47.7%) 순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가지 영역 중 가사노동에 대한 성평등 동의 비율은 47.7%로 5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아 분담의 경우에도 동의 비율이 55.7%에 불과하였다.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들이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앞서 분석한 전통적 성역할 및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여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입장에서 인식과 실태에 대한 차이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이 인식하는 만큼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자녀 부양과 노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은 6가지 항목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6가지 항목 중 ‘대학교육까지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83.5%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 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 비율은 15.6%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미혼 자녀의 주거공간 마련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지원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52.6%와 53.9%로 나타났다. 결혼 준비에 대한 지원과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49.9%, 36.7%였다. 전반적으로 자녀 부양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비용 지원과 손자녀 돌봄 지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손자녀 돌봄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부양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대학교육 지원, 결혼 지원, 손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동의는 세대 간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결혼 후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결혼 준비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해 미혼의 동의 비율은 44.9%로 기혼의 경우 51.4%보다 낮게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 지원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5가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노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

이 89.8%로 5가지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경제적 부양에 대한 동의 비율은 87.2%, 돌봄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 비율은 85.0%로 나타났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64.2%, 49.3%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정서적 교류, 경제적 부양, 돌봄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 비율은 80.0%가 넘게 조사된 반면, 부모를 직접 돌봐야 한다거나 직접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 교류, 경제적 부양, 돌봄 비용 부담에 대한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모시고 살거나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직접 돌보거나 모시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전히 노부모를 모시거나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기능, 성역할, 성평등, 돌봄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별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본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오히려 대도시 거주자와 유사하게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어촌 거주자는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중소도시보다 높은 반면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책임의식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소 상반된 결과는 해당 지역 내에서도 가치관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결혼과 가족 형성 및 구성에 대한 가치관

결혼과 가족 형성 및 구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결혼, 동거, 가족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먼저 결혼제도와 동거에 대한 견해를 보면, 현재 남녀 성인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유일하게 결혼제도만 다루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뿐 아니라 동거나 동반자와 같은 결혼의 형태도 다양화해지는 세계의 경향 속에서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결과이다. 혼인제도 안과 밖으로 구분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동거는 혼인제도 바깥에 있지만, 결혼 전에 살아보는 단계로 또는 언젠가는 결혼할 것으로 규정된 관계가 함께 사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동거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상관성이 낮다고 할 때 그 동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결혼을 전제한 동거는 65.0% 이상이 동의하지만, 결혼과 무관한 동거는 40.0% 미만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결혼 전 동거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약 48.0%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즉, 결혼을 전제한 동거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높아졌지만, 그 동거 과정이 결혼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그리고 여전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까지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만큼 결혼은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업이며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인생에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동의하는 비율이 9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트렌드와는 별개로 결혼과 가족 구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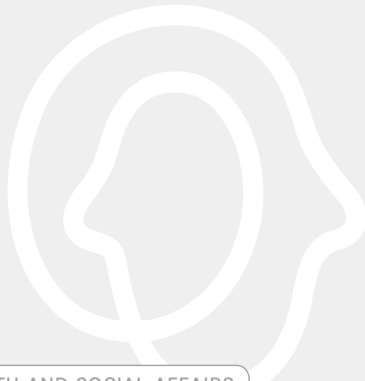
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60.0% 정도가 동의해 결혼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20대는 절반 이하가 이 견해에 동의해 70.0% 이상이 동의하는 70세 이상 그룹과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젊은 층 위주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결혼은 하는 것이 더 낫고 아이도 있는 편이 더 낫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에 대한 생각에서,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배우자 없이 입양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 60.0% 이상으로 높아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서의 아동 양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꼭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는 태어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아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70.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아동의 성장에서 평등한 기회나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 이외의 결합이 실생활에서 존재하며 여러 통로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다양한 결합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과반이 가족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젊은 동성 친구의 결합이나 고령 동성 친구의 결합은 30.0%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성 커플(연인) 결합은 25.0% 미만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알아본 동반자 등록을 통해 다

양한 결합에 대해 보호해 주는 방안에서는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는 60.0% 이상이 찬성했다. 젊은 동성 친구에 대한 결합은 33.0%, 고령 동성 친구 결합은 약 50.0%가 동반자 등록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해 현실적으로 가족은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동성 친구 사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생활에서의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는 비율이 다른 결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성 커플(연인)에 대해서도 30.0% 이상이 동의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도보다 제도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수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이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즉, 외벌이가족에 대한 응답도 높았으나, 맞벌이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편견이 많은 경우는 동성 커플(연인) 가족이었고, 그 다음이 미혼모/부 가족, 한부모가족 순이었다. 동성 커플(연인) 가족은 그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미혼모/부 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분명히 기르고 있는 가족 형태라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까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제6장

연령과 세대에 대한 가치관 분석

제1절 연령기준과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가치관

제2절 세대갈등에 대한 가치관

제3절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제4절 소결

제6장 연령과 세대에 대한 가치관 분석

평균 수명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급속한 사회문화적 가치 및 환경 변화로 인해 연령 범위와 세대 간 차이가 커지면서, 특정 세대가 배제되지 않고 모든 연령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연령별 기대 역할, 세대 구분의 연령기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연령별 차별 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또 가족, 직장, 사회 내에서의 세대별 갈등 실태 및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살펴본다.

제1절 연령기준과 연령규범 및 차별에 대한 가치관

1. 연령기준에 대한 가치관: 아동·청년·노인

연령은 아동, 청년, 노인 등 각 인구 집단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 및 보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척도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며, 아동수당 대상자는 6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 청년의 연령기준은 법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사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한다. 노인의 연령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이용 등은 60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 연령은 절대적 구분은 아니며, 사회적 필요와 욕구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되어 왔다.

먼저 국민들이 인식하는 아동 연령기준의 상한선은 평균 11.1세로, 12세 또는 13세까지를 아동으로 여긴다는 응답자가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4~2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에 그쳤다(〈표 6-1〉 참조). 나이가 많을수록 아동 기준 연령의 상한선을 높게 인식하여 70~79세,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 아동 연령의 상한선을 14~20세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10.8%, 11.6%로 나타났다. 지역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농어촌 거주 응답자가 도시 거주 응답자에 비해 아동 연령 상한선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평균 11.4세 대비 11.1세), 일용직 근로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아동 연령 상한선을 높게 인식하였다(평균 11.7세).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중간 계층에서 상·하위 계층에 비해 아동 연령의 상한선을 더 높게 인식했다. 혼인 및 자녀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미혼 또는 동거/사실혼보다는 법률혼(유배우)·이혼/별거·사별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 연령 기준의 상한선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6-1〉 아동기의 상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단위: 세, 명)

특성	0~9	10~11	12~13	14~20	〈평균 - 세〉	〈표준 편차〉	1순위 최빈값	2순위 최빈값	(명)
전체 ¹⁾	20.8	20.1	50.3	8.7	11.1	2.52	12	13	(8,000)
성별($\chi^2=2.356$)									
남성	21.1	20.6	49.5	8.8	11.1	2.55	12	13	(3,965)
여성	20.6	19.7	51.2	8.6	11.2	2.49	12	13	(4,035)
연령($\chi^2=37.1^{**}$)									
19~29세	22.7	20.3	49.0	8.0	11.0	2.56	12	13	(1,360)
30~39세	22.9	19.8	51.0	6.3	11.0	2.57	12	13	(1,279)
40~49세	20.9	18.5	52.1	8.5	11.2	2.49	12	13	(1,533)
50~59세	20.3	20.5	49.6	9.6	11.2	2.52	12	13	(1,590)
60~69세	18.4	20.3	52.1	9.2	11.2	2.38	12	13	(1,204)
70~79세	20.2	21.9	47.0	10.8	11.2	2.58	12	10	(675)
80세 이상	17.0	22.0	49.4	11.6	11.4	2.58	12	10	(360)
지역($\chi^2=60.357^{***}$)									
대도시	21.9	19.1	49.0	10.0	11.1	2.65	12	13	(3,523)
중소도시	20.9	21.2	52.1	5.9	11.1	2.37	12	13	(3,062)
농어촌	18.1	20.4	50.1	11.4	11.4	2.51	12	13	(1,415)

특성	0~9	10~11	12~13	14~20	〈평균 - 세〉	〈표준 편차〉	1순위 최빈값	2순위 최빈값	(명)
교육수준($\chi^2=16.496^*$)									
중졸 이하	19.7	21.9	47.6	10.8	11.2	2.58	12	10	(1,211)
고졸	21.5	20.3	49.5	8.6	11.1	2.52	12	13	(2,961)
초대졸 이상	20.6	19.4	51.9	8.1	11.1	2.50	12	13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0.932$)									
예	20.8	20.0	50.4	8.9	11.1	2.53	12	13	(5,520)
아니오	20.9	20.5	50.3	8.3	11.1	2.49	12	13	(2,480)
종사상 지위($\chi^2=16.933$)									
상용직	21.1	19.9	50.2	8.7	11.1	2.54	12	13	(2,947)
임시직	20.5	23.8	47.6	8.1	11.0	2.50	12	10	(540)
일용직	14.0	16.4	58.1	11.4	11.7	2.02	12	13	(161)
자영업자	21.0	19.3	50.9	8.8	11.1	2.55	12	13	(1,758)
무급가족종사자	18.7	18.3	49.1	13.9	11.3	2.92	12	13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97.598^{***}$)									
상(7-10)	20.4	24.8	48.0	6.8	11.1	2.36	12	10	(975)
중(5-6)	18.6	18.6	54.9	7.9	11.3	2.46	12	13	(4,186)
하(1-4)	24.2	20.8	44.5	10.5	11.0	2.65	12	10	(2,840)
경제수준($\chi^2=34.562^{***}$)									
상(상-중상)	20.4	20.4	50.2	9.1	11.1	2.62	12	13	(620)
중(중)	19.1	19.6	53.3	8.0	11.2	2.45	12	13	(4,075)
하(중하-하)	23.0	20.7	46.8	9.5	11.0	2.58	12	10	(3,304)
혼인 상태($\chi^2=68.609^{***}$)									
미혼	23.2	20.0	49.1	7.7	11.0	2.54	12	13	(1,886)
동거/사실혼	21.5	25.6	44.2	8.8	10.9	2.57	12	10	(1,248)
법률혼(유배우)	20.0	18.3	53.2	8.6	11.2	2.50	12	13	(3,932)
이혼/별거	17.4	17.3	56.0	9.2	11.4	2.24	12	13	(280)
사별	19.3	22.1	46.4	12.3	11.3	2.55	12	10	(654)
자녀 유무($\chi^2=9.727^*$)									
예	20.1	20.2	50.6	9.2	11.2	2.53	12	13	(5,561)
아니오	22.5	20.0	49.8	7.6	11.0	2.50	12	13	(2,439)
가구 형태($\chi^2=19.139^*$)									
1세대 가구	20.2	20.4	49.4	10.0	11.2	2.49	12	13	(3,200)
2세대 가구	21.4	19.9	50.8	7.9	11.1	2.54	12	13	(4,605)
3세대 이상 가구	16.0	21.3	55.7	6.9	11.3	2.36	12	13	(184)
기타	33.3	8.3	58.4	0.0	10.3	2.88	12	13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청년 연령 상한선은 평균 30.8세로, 30세까지를 청년으로 여긴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5세까지를 청년으로 여긴다는 응답자가 그 뒤를 이어 30~39세 사이 연령을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6.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청년의 연령 범위를 작게는 15세, 많게는 75세까지 여기는 응답자도 있어, 청년의 연령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2〉 참조). 인구 특성별 청년 연령기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대도시(평균 30.6세) 또는 중소도시(평균 30.7세)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평균 31.6세) 응답자가 청년 연령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인 응답자가 인식하는 청년 연령 상한선은 평균 32.7세로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해 높았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신의 경제수준이 상·중상(31.2세) 또는 중(31.1세)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경우 중하·하라고 인식한 응답자(30.5세)보다 청년 평균 연령을 높게 인식하였다. 혼인 상태에서는 동거/사실혼 중인 응답자가 인식하는 청년 연령 상한선은 평균 29.8세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특히 낮게 나타났다.

〈표 6-2〉 청년기의 상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단위: 세, 명)

특성	15~19	20~29	30~39	40 이상	〈평균 - 세〉	〈표준편 차〉	1순위 최빈값	2순위 최빈값	(명)
전체 ¹⁾	3.5	35.7	56.4	4.4	30.8	5.79	30	35	(8,000)
성별($\chi^2=3.148$)									
남성	3.9	35.3	56.4	4.4	30.8	5.83	30	35	(3,965)
여성	3.2	36.0	56.4	4.4	30.8	5.75	30	35	(4,035)
연령($\chi^2=44.573^{***}$)									
19~29세	3.4	34.6	58.8	3.3	30.8	5.36	30	35	(1,360)
30~39세	3.8	32.8	58.7	4.7	31.1	5.65	30	35	(1,279)
40~49세	4.9	35.2	55.9	4.0	30.7	6.03	30	35	(1,533)
50~59세	3.7	36.0	55.1	5.2	30.8	5.83	30	35	(1,590)
60~69세	2.4	39.4	54.1	4.1	30.6	5.98	30	35	(1,204)
70~79세	2.9	34.8	56.7	5.5	31.0	6.01	30	35	(675)
80세 이상	1.2	39.0	54.0	5.8	30.9	5.63	30	29	(360)

특성	15~19	20~29	30~39	40 이상	〈평균 - 세〉	〈표준편 차〉	1순위 최빈값	2순위 최빈값	(명)
지역($\chi^2=66.108^{***}$)									
대도시	3.1	37.0	56.5	3.4	30.6	5.58	30	35	(3,523)
중소도시	4.0	37.0	54.9	4.2	30.7	5.68	30	35	(3,062)
농어촌	3.7	29.4	59.4	7.6	31.6	6.45	35	30	(1,415)
교육수준($\chi^2=44.643^{***}$)									
중졸 이하	2.5	40.3	50.8	6.4	30.7	6.02	30	35	(1,211)
고졸	3.7	37.0	55.2	4.0	30.6	5.84	30	35	(2,961)
초대졸 이상	3.7	33.1	59.1	4.2	31.0	5.67	30	35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8.622^*$)									
예	3.6	34.7	57.3	4.4	30.9	5.79	30	35	(5,520)
아니오	3.2	37.8	54.3	4.6	30.7	5.78	30	35	(2,480)
종사상 지위 ($\chi^2=41.579^{***}$)									
상용직	3.8	33.8	58.4	4.0	31.0	5.76	30	35	(2,947)
임시직	4.2	37.0	56.0	2.8	30.5	5.50	30	29	(540)
일용직	3.9	42.2	48.4	5.6	30.3	5.76	30	35	(161)
자영업자	3.2	35.5	56.6	4.7	30.8	5.78	30	35	(1,758)
무급가족종사자	2.5	24.2	59.7	13.7	32.7	7.58	30	35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3.94^{***}$)									
상(7-10)	6.0	33.6	56.4	4.0	30.9	6.72	30	35	(975)
중(5-6)	3.3	35.2	57.1	4.4	30.9	5.56	30	35	(4,186)
하(1-4)	3.0	37.0	55.4	4.7	30.7	5.78	30	35	(2,840)
경제수준($\chi^2=22.791^{***}$)									
상(상-중상)	5.1	30.4	59.4	5.1	31.2	6.34	30	35	(620)
중(중)	3.2	34.6	57.6	4.6	31.1	5.70	30	35	(4,075)
하(중하-하)	3.6	38.0	54.3	4.2	30.5	5.78	30	35	(3,304)
혼인 상태($\chi^2=45.431^{***}$)									
미혼	3.9	33.3	59.2	3.5	30.8	5.41	30	35	(1,886)
동거/사실혼	4.9	39.2	51.3	4.6	29.8	6.59	30	35	(1,248)
법률혼(유배우)	3.3	35.1	57.1	4.5	31.1	5.74	30	29	(3,932)
이혼/별거	0.8	40.7	52.2	6.3	31.0	5.27	30	29	(280)
사별	2.2	36.7	55.4	5.6	30.9	5.57	30	35	(654)
자녀 유무($\chi^2=8.68^*$)									
예	3.4	35.8	56.0	4.9	30.9	5.91	30	35	(5,561)
아니오	3.8	35.4	57.4	3.5	30.7	5.51	30	35	(2,439)
가구 형태1($\chi^2=13.032$)									
1세대 가구	3.1	34.8	57.6	4.5	30.9	5.70	30	35	(3,200)
2세대 가구	3.8	36.3	55.6	4.3	30.8	5.81	30	35	(4,605)
3세대 이상 가구	3.4	33.9	54.3	8.3	31.2	7.00	30	35	(184)
기타	0.0	44.1	55.9	0.0	30.6	3.21	35	3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 연령에 대하여 전체의 약 50.0%의 응답자가 70~74세부터를 노인이라고 여겼으며, 65~69세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40.0%를 차지하여, 응답자가 인식하는 노년기가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69.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을 노인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표 6-3〉 참조).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인구 집단별로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상이하다. 먼저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노인 연령기준 하한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거주 응답자보다는 대도시 거주 응답자가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기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노인 연령기준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 차이를 보면,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근로자보다 노인 연령기준의 하한선을 높게 인식하였다. 주관적 사회계층에서는 상위 계층이 중·하위 계층보다 노인 연령기준의 하한선을 높게 인식한 반면, 경제수준에서는 하(중하-하) 수준의 응답자가 상(상-중상) 또는 중(중) 수준의 응답자보다 노인 연령기준의 하한선을 높게 인식하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 응답자가 인식하는 노인 연령 하한선이 평균 68.7세로 특히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낮았으며,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인식하는 노인 연령 하한선이 평균 68.8세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평균 69.4세)보다 낮았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1세대 가구 응답자(평균 69.4세)가 기타 비친족 가구 응답자(평균 67.8세)에 비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기준의 하한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 노년기(노인)의 하한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단위: 세, 명)

특성	65~69	70~74	75 이상	〈평균 -세〉	〈표준 편차〉	1순위 최빈값	2순위 최빈값	(명)
전체 ¹⁾	40.0	49.2	10.8	69.2	3.36	70	65	(8,000)
성별($\chi^2=0.307$)								
남성	39.7	49.5	10.8	69.2	3.33	70	65	(3,965)
여성	40.3	48.9	10.8	69.2	3.39	70	65	(4,035)
연령($\chi^2=100.462^{***}$)								
19~29세	49.3	43.0	7.7	68.5	3.20	70	65	(1,360)
30~39세	42.1	47.3	10.6	69.1	3.40	70	65	(1,279)
40~49세	41.3	47.6	11.1	69.2	3.30	70	65	(1,533)
50~59세	36.2	53.0	10.8	69.4	3.24	70	65	(1,590)
60~69세	36.7	52.2	11.2	69.4	3.37	70	65	(1,204)
70~79세	33.6	52.0	14.4	69.6	3.50	70	65	(675)
80세 이상	31.4	54.0	14.6	69.9	3.82	70	65	(360)
지역($\chi^2=12.701^*$)								
대도시	39.6	48.6	11.8	69.3	3.51	70	65	(3,523)
중소도시	41.5	48.9	9.6	69.1	3.23	70	65	(3,062)
농어촌	37.7	51.3	11.0	69.2	3.23	70	65	(1,415)
교육수준($\chi^2=45.148^{***}$)								
중졸 이하	34.5	53.0	12.5	69.5	3.62	70	65	(1,211)
고졸	38.6	48.9	12.5	69.4	3.40	70	65	(2,961)
초대졸 이상	42.8	48.2	9.0	69.0	3.22	70	65	(3,829)
경제활동 여부($\chi^2=6.5^*$)								
예	39.1	49.8	11.1	69.3	3.33	70	65	(5,520)
아니오	42.0	47.9	10.1	69.1	3.41	70	65	(2,480)
종사상 지위($\chi^2=38.287^{***}$)								
상용직	40.9	49.4	9.7	69.1	3.20	70	65	(2,947)
임시직	44.2	47.2	8.6	68.9	3.12	70	65	(540)
일용직	36.9	51.1	11.9	69.4	3.39	70	65	(161)
자영업자	35.1	51.2	13.7	69.7	3.53	70	65	(1,758)
무급가족종사자	32.8	49.5	17.7	69.8	3.83	70	65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41.051^{***}$)								
상(7-10)	37.4	47.2	15.4	69.7	3.89	70	65	(975)
중(5-6)	40.5	50.6	9.0	69.1	3.17	70	65	(4,186)
하(1-4)	40.2	47.8	12.0	69.2	3.41	70	65	(2,840)
경제수준($\chi^2=34.756^{***}$)								
상(상-중상)	44.6	42.6	12.8	69.1	3.81	70	65	(620)
중(중)	40.5	50.4	9.1	69.1	3.19	70	65	(4,075)
하(중하-하)	38.5	49.0	12.6	69.4	3.47	70	65	(3,304)
혼인상태($\chi^2=80.616^{***}$)								
미혼	46.6	44.6	8.8	68.7	3.27	70	65	(1,886)
동거/사실혼	38.3	47.1	14.6	69.5	3.73	70	65	(1,248)
법률혼(유배우)	37.7	52.4	9.9	69.3	3.14	70	65	(3,932)
이혼/별거	38.7	46.5	14.9	69.7	3.96	70	65	(280)
사별	38.6	48.1	13.3	69.4	3.67	70	65	(654)
자녀 유무($\chi^2=46.311^{***}$)								
예	37.6	50.8	11.6	69.4	3.37	70	65	(5,561)
아니오	45.5	45.5	9.0	68.8	3.30	70	65	(2,439)
가구형태($\chi^2=23.977^{***}$)								
1세대 가구	37.0	51.2	11.8	69.4	3.42	70	65	(3,200)
2세대 가구	42.0	47.8	10.3	69.1	3.32	70	65	(4,605)
3세대 이상 가구	42.4	50.6	7.0	68.8	3.02	70	65	(184)
기타	53.4	36.6	10.0	67.8	3.49	65	7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2. 연령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이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다음 7개 문항에서는 이러한 연령규범이 가족생활주기, 경력개발 등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노인 및 청년에게 통용되는 몇 가지 연령규범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조사하였다.

첫째,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문항에 64.8%가 ‘그런 편이다’, 26.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약 10명 중 9명은 가족생활에 대한 연령별 기대 역할이 있음에 동의하였다. 둘째,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진로·생애경력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86.3%가 동의(‘그런 편이다’ 54.1%, ‘매우 그렇다’ 32.2%)하여, 가족생활주기별 기대 역할에 관한 첫 번째 문항에 비해 전체 동의 비율은 약간 낮으나, ‘매우 그렇다’라고 강한 동의를 나타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장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문항에는 62.8%가 ‘그런 편이다’, 22.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85.4%가 직장에서의 연령별 기대 역할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두 문항은 노인에 관한 연령규범으로, 먼저 “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기술이나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조언하는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74.1%가 동의하였다(‘그런 편이다’ 61.0%, ‘매우 그렇다’ 13.1%).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다”라는 질문에는 각각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동의(50.1%) 또는

반대(49.9%)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42.9%로 가장 높았고, 근소한 차이로 ‘그런 편이다’(41.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매우 그렇다’(8.8%)와 ‘전혀 그렇지 않다’(7.0%)는 응답률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년에 대한 연령규범의 첫 번째 문항인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에 대해 56.6%가 ‘그런 편이다’, 31.9%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8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젊을 때는 다소 고생스러운 생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0.7%가 ‘그런 편이다’, 21.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81.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4〉 참조).

〈표 6-4〉 연령규범(연령대별 기대되는 역할, 행동)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9.2	0.5	8.7	90.8	64.8	26.0	100.0 (8,000)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진로·생애경력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3.7	0.6	13.1	86.3	54.1	32.2	100.0 (8,000)
직장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6	0.7	13.9	85.4	62.8	22.6	100.0 (8,000)
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기술이나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26.0	1.4	24.6	74.1	61.0	13.1	100.0 (8,000)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이다	49.9	7.0	42.9	50.1	41.3	8.8	100.0 (8,000)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11.5	0.7	10.8	88.5	56.6	31.9	100.0 (8,000)
젊을 때는 다소 고생스러운 생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18.1	1.4	16.7	81.9	60.7	21.2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연령구범의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수행이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 80세 이상의 경우 95.5%가 동의한 반면 19~29세는 84.3%가 동의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89.5%)에 비해 대도시(91.2%), 농어촌(92.5%) 지역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졸 이하 응답자의 94.7%가 동의한 반면 초대졸 이상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88.4%였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상용직, 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약 4.0%포인트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사회계층을 하위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92.5%로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상위(90.5%), 중위(89.7%) 계층 순으로 동의 비율이 나타났다. 경제수준의 경우에도 하위 수준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92.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상위(90.4%), 중위(89.7%) 수준 순으로 동의 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상위 경제수준 응답자의 경우 ‘그런 편이다’(58.5%)라는 응답보다는 ‘매우 그렇다’(31.9%)라고 강한 동의를 나타낸 응답률이 높았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미혼인 경우(85.4%)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특히 동의 비율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없는 응답자(86.4%)보다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92.7%), 기타 비친족 가구(78.8%)보다는 1세대 가구(92.2%)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5〉 참조).

〈표 6-5〉 연령규범 동의 정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수행은 중요하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¹⁾	9.2	0.5	8.7	90.8	64.8	26.0	100.0	(8,000)
성별($\chi^2=2.615$)								
남성	9.4	0.5	8.9	90.6	65.3	25.3	100.0	(3,965)
여성	9.0	0.4	8.6	91.0	64.4	26.6	100.0	(4,035)
연령($\chi^2=174.868^{***}$)								
19~29세	15.7	1.0	14.7	84.3	61.6	22.7	100.0	(1,360)
30~39세	13.5	0.7	12.8	86.5	62.8	23.7	100.0	(1,279)
40~49세	8.7	0.4	8.3	91.3	67.4	23.9	100.0	(1,533)
50~59세	6.0	0.4	5.7	94.0	66.6	27.3	100.0	(1,590)
60~69세	5.8	0.4	5.4	94.2	65.8	28.4	100.0	(1,204)
70~79세	5.3	0.0	5.3	94.7	62.8	31.9	100.0	(675)
80세 이상	4.5	0.0	4.5	95.5	65.9	29.6	100.0	(360)
지역($\chi^2=18.078^{**}$)								
대도시	8.8	0.6	8.2	91.2	65.8	25.5	100.0	(3,523)
중소도시	10.5	0.4	10.1	89.5	64.1	25.4	100.0	(3,062)
농어촌	7.5	0.4	7.1	92.5	64.1	28.4	100.0	(1,415)
교육수준($\chi^2=71.425^{***}$)								
중졸 이하	5.3	0.3	5.1	94.7	63.1	31.6	100.0	(1,211)
고졸	7.7	0.3	7.4	92.3	67.2	25.1	100.0	(2,961)
초대졸 이상	11.6	0.7	10.9	88.4	63.6	24.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4.011$)								
예	9.6	0.5	9.0	90.4	64.9	25.6	100.0	(5,520)
아니오	8.4	0.4	8.0	91.6	64.8	26.8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39.514^{***}$)								
상용직	10.9	0.6	10.3	89.1	65.1	24.0	100.0	(2,947)
임시직	11.3	1.1	10.2	88.7	60.2	28.5	100.0	(540)
일용직	6.3	0.0	6.3	93.7	60.0	33.7	100.0	(161)
자영업자	7.3	0.3	7.0	92.7	66.6	26.1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6.6	1.0	5.5	93.4	59.7	33.7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40.952^{***}$)								
상(7-10)	9.5	0.9	8.6	90.5	69.7	20.7	100.0	(975)
중(5-6)	10.3	0.5	9.8	89.7	64.1	25.6	100.0	(4,186)
하(1-4)	7.5	0.3	7.2	92.5	64.2	28.3	100.0	(2,840)
경제수준($\chi^2=32.052^{***}$)								
상(상-중상)	9.6	0.9	8.7	90.4	58.5	31.9	100.0	(620)
중(중)	10.3	0.5	9.8	89.7	65.5	24.3	100.0	(4,075)
하(중하-하)	7.8	0.4	7.4	92.2	65.3	26.9	100.0	(3,30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 상태 ($\chi^2=1753.079^{***}$)								
미혼	14.6	0.9	13.7	85.4	62.3	23.1	100.0	(1,886)
동거/사실혼	6.3	0.6	5.7	93.7	65.4	28.3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8.4	0.3	8.1	91.6	66.1	25.5	100.0	(3,932)
이혼/별거	5.3	0.4	5.0	94.7	64.9	29.8	100.0	(280)
사별	5.4	0.2	5.2	94.6	63.5	31.1	100.0	(654)
자녀 유무($\chi^2=86.661^{***}$)								
예	7.3	0.4	6.9	92.7	65.5	27.2	100.0	(5,561)
아니오	13.6	0.8	12.8	86.4	63.4	23.0	100.0	(2,439)
가구 형태($\chi^2=21.548^*$)								
1세대 가구	7.8	0.4	7.4	92.2	64.6	27.6	100.0	(3,200)
2세대 가구	10.1	0.5	9.6	89.9	64.9	25.0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0.8	1.2	9.7	89.2	68.3	20.9	100.0	(184)
기타	21.2	0.0	21.2	78.8	58.0	20.8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생애·진로경력 개발에 관한 연령규범에 대해서도 가족발달과업에 관한 연령규범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져, 80세 이상은 87.5%, 19~29세 응답자는 84.8%가 동의하였다(‘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3.3%)보다는 대도시(88.2%) 또는 농어촌(88.3%)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 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주관적 사회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 수준(87.0%), 하위 수준(86.9%), 중위 수준(85.8%) 순으로 동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상위 경제수준 응답자 중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는 37.3%로 높았다. 가족발달과업 관련 문항과 마찬가지로 미혼인 경우(84.6%), 자녀가 없는 경우(85.0%)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6-6〉 참조).

〈표 6-6〉 연령규범 동의 정도: 연령에 맞는 생애·진로경력 개발이 중요하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함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13.7	0.6	13.1	86.3	54.1	32.2	100.0 (8,000)
성별($\chi^2=0.825$)							
남성	13.8	0.6	13.2	86.2	53.9	32.3	100.0 (3,965)
여성	13.5	0.5	13.0	86.5	54.3	32.2	100.0 (4,035)
연령($\chi^2=22.593$)							
19~29세	15.2	0.6	14.6	84.8	56.2	28.6	100.0 (1,360)
30~39세	14.5	0.7	13.7	85.5	53.3	32.2	100.0 (1,279)
40~49세	14.2	0.4	13.8	85.8	53.8	32.0	100.0 (1,533)
50~59세	13.7	0.7	13.0	86.3	53.4	32.9	100.0 (1,590)
60~69세	11.5	0.5	11.0	88.5	54.8	33.7	100.0 (1,204)
70~79세	12.2	0.6	11.6	87.8	52.7	35.1	100.0 (675)
80세 이상	12.5	0.3	12.2	87.5	53.6	33.9	100.0 (360)
지역($\chi^2=60.59^{***}$)							
대도시	11.8	0.6	11.2	88.2	54.2	34.0	100.0 (3,523)
중소도시	16.7	0.5	16.2	83.3	54.8	28.5	100.0 (3,062)
농어촌	11.7	0.5	11.2	88.3	52.4	35.9	100.0 (1,415)
교육수준($\chi^2=5.215$)							
중졸 이하	13.7	0.6	13.1	86.3	52.2	34.1	100.0 (1,211)
고졸	13.2	0.4	12.8	86.8	54.7	32.1	100.0 (2,961)
초대졸 이상	14.0	0.7	13.3	86.0	54.2	31.8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5.772$)							
예	14.3	0.6	13.7	85.7	53.8	31.9	100.0 (5,520)
아니오	12.3	0.5	11.8	87.7	54.8	33.0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0.773$)							
상용직	15.2	0.7	14.4	84.8	53.2	31.6	100.0 (2,947)
임시직	14.3	0.4	13.9	85.7	55.1	30.5	100.0 (540)
일용직	11.9	0.5	11.4	88.1	58.2	29.9	100.0 (161)
자영업자	13.0	0.4	12.6	87.0	54.1	32.9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4.5	1.3	13.2	85.5	52.4	33.1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11.519$)							
상(7-10)	15.7	0.9	14.8	84.3	50.8	33.5	100.0 (975)
중(5-6)	13.5	0.6	12.9	86.5	55.2	31.3	100.0 (4,186)
하(1-4)	13.2	0.4	12.8	86.8	53.6	33.2	100.0 (2,840)
경제수준($\chi^2=14.362^*$)							
상(상-중상)	13.0	0.7	12.4	87.0	49.7	37.3	100.0 (620)
중(중)	14.2	0.6	13.6	85.8	53.2	32.6	100.0 (4,075)
하(중하-하)	13.1	0.5	12.6	86.9	56.1	30.8	100.0 (3,304)

특성	동의함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 상태 ($\chi^2=983.236^{***}$)									
미혼	15.4	0.7	14.7	84.6	55.7	28.9	100.0	(1,886)	
동거/사실혼	13.9	1.4	12.5	86.1	55.1	31.0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12.8	0.4	12.5	87.2	53.2	34.0	100.0	(3,932)	
이혼/별거	13.9	0.0	13.9	86.1	57.2	28.9	100.0	(280)	
사별	13.3	0.1	13.1	86.7	51.4	35.3	100.0	(654)	
자녀 유무($\chi^2=14.388^{**}$)									
예	13.1	0.5	12.6	86.9	53.5	33.4	100.0	(5,561)	
아니오	15.0	0.7	14.3	85.0	55.5	29.5	100.0	(2,439)	
가구 형태($\chi^2=8.669$)									
1세대 가구	12.9	0.5	12.5	87.1	53.6	33.5	100.0	(3,200)	
2세대 가구	14.2	0.6	13.6	85.8	54.4	31.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3.8	1.0	12.8	86.2	54.5	31.7	100.0	(184)	
기타	0.0	0.0	0.0	100.0	71.5	28.5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직장에서의 연령규범에 대해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앞의 두 문항과는 달리 70~79세 응답자의 동의 비율(89.2%)이 타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앞의 두 문항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에서의 동의 비율(83.1%)이 대도시(87.3%) 또는 농어촌(85.6%) 지역 거주자보다 낮았으며, 경제수준에서는 상위 수준 응답자(87.3%)의 동의 비율이 중위(84.8%) 또는 하위(85.7%) 수준 응답자보다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이혼/별거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80.4%로 특히 낮았다. 자녀 유무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한 부정을 보인 응답자가 유자녀에 비해 무자녀 응답자가 두 배 이상 많았으나 (1.3% 대 0.8%),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의견의 통합 비율은 두 집단이 비슷하였다(〈표 6-7〉 참조).

〈표 6-7〉 연령규범 동의 정도: 직장에서 연령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14.6	0.7	13.9	85.4	62.8	22.6	100.0 (8,000)
성별($\chi^2=7.178$)							
남성	14.3	0.7	13.6	85.7	64.1	21.5	100.0 (3,965)
여성	14.8	0.8	14.1	85.2	61.5	23.6	100.0 (4,035)
연령($\chi^2=35.569^{**}$)							
19~29세	14.1	1.0	13.1	85.9	63.0	22.9	100.0 (1,360)
30~39세	15.3	1.1	14.2	84.7	62.4	22.3	100.0 (1,279)
40~49세	15.2	0.5	14.7	84.8	65.3	19.6	100.0 (1,533)
50~59세	15.0	0.2	14.8	85.0	61.4	23.6	100.0 (1,590)
60~69세	14.9	0.9	14.0	85.1	62.0	23.1	100.0 (1,204)
70~79세	10.8	0.6	10.2	89.2	64.4	24.8	100.0 (675)
80세 이상	15.6	1.3	14.3	84.4	59.2	25.1	100.0 (360)
지역($\chi^2=57.36^{***}$)							
대도시	12.7	1.1	11.6	87.3	62.5	24.8	100.0 (3,523)
중소도시	16.9	0.5	16.4	83.1	63.1	20.0	100.0 (3,062)
농어촌	14.4	0.4	14.0	85.6	62.9	22.7	100.0 (1,415)
교육수준($\chi^2=12.773^*$)							
중졸 이하	14.1	0.7	13.5	85.9	61.8	24.0	100.0 (1,211)
고졸	14.8	0.8	14.0	85.2	61.0	24.1	100.0 (2,961)
초대졸 이상	14.6	0.7	13.9	85.4	64.5	20.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6.125$)							
예	14.8	0.7	14.1	85.2	63.4	21.8	100.0 (5,520)
아니오	14.2	0.8	13.4	85.8	61.6	24.2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9.639$)							
상용직	15.3	0.8	14.5	84.7	63.5	21.2	100.0 (2,947)
임시직	15.8	0.6	15.2	84.2	60.7	23.5	100.0 (540)
일용직	13.3	0.8	12.5	86.7	61.0	25.7	100.0 (161)
자영업자	13.9	0.6	13.3	86.1	64.3	21.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0.6	0.0	10.6	89.4	62.6	26.7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8.018$)							
상(7-10)	16.7	1.0	15.7	83.3	61.6	21.7	100.0 (975)
중(5-6)	14.7	0.8	14.0	85.3	62.9	22.3	100.0 (4,186)
하(1-4)	13.6	0.5	13.1	86.4	63.1	23.3	100.0 (2,840)
경제수준($\chi^2=16.978^{**}$)							
상(상-중상)	12.7	1.4	11.4	87.3	59.8	27.5	100.0 (620)
중(중)	15.2	0.8	14.3	84.8	62.9	22.0	100.0 (4,075)
하(중하-하)	14.3	0.5	13.8	85.7	63.3	22.4	100.0 (3,304)

특성	동의함 않음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 상태($\chi^2=52.091^{***}$)									
미혼	14.9	1.2	13.7	85.1	62.6	22.5	100.0	(1,886)	
동거/사실혼	12.6	1.6	11.1	87.4	64.3	23.0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14.9	0.2	14.7	85.1	63.2	21.9	100.0	(3,932)	
이혼/별거	19.6	0.8	18.8	80.4	58.0	22.4	100.0	(280)	
사별	13.4	0.8	12.7	86.6	60.5	26.1	100.0	(654)	
자녀 유무($\chi^2=16.253^{**}$)									
예	14.6	0.5	14.1	85.4	63.2	22.2	100.0	(5,561)	
아니오	14.7	1.3	13.4	85.3	62.0	23.3	100.0	(2,439)	
가구 형태($\chi^2=11.41$)									
1세대 가구	14.9	0.8	14.1	85.1	61.7	23.3	100.0	(3,200)	
2세대 가구	14.4	0.6	13.7	85.6	63.3	22.3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4.6	1.7	12.9	85.4	70.2	15.2	100.0	(184)	
기타	13.8	0.0	13.8	86.2	59.1	27.1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의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졌다(80세 이상 78.8%, 19~29세 73.7%). 지역별로는 중소도시(72.0%) 또는 농어촌(73.6%)보다는 대도시(76.1%) 거주 응답자 중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주관적 사회계층을 상위 계층(68.4%)보다는 중위(75.7%) 또는 하위(73.5%) 계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혼/별거(78.6%) 또는 사별(79.1%)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74.6%)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72.9%)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기타 비친족 가구(78.2%)와 3세대 이상 가구(76.0%)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표 6-8〉 참조).

〈표 6-8〉 연령구분 동의 정도: 노인의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기술,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25.9	1.4	24.6	74.1	61.0	13.1	100.0	(8,000)
성별($\chi^2=1.269$)								
남성	26.1	1.5	24.6	73.9	60.6	13.3	100.0	(3,965)
여성	25.7	1.3	24.5	74.3	61.3	12.9	100.0	(4,035)
연령($\chi^2=717.795^{***}$)								
19~29세	26.3	1.9	24.4	73.7	61.7	12.0	100.0	(1,360)
30~39세	26.7	1.7	24.9	73.3	62.0	11.3	100.0	(1,279)
40~49세	29.7	1.5	28.2	70.3	57.2	13.1	100.0	(1,533)
50~59세	25.0	1.3	23.8	75.0	59.9	15.1	100.0	(1,590)
60~69세	24.5	0.9	23.6	75.5	62.6	12.9	100.0	(1,204)
70~79세	22.4	0.9	21.5	77.6	63.7	13.9	100.0	(675)
80세 이상	21.2	0.7	20.6	78.8	64.6	14.1	100.0	(360)
지역($\chi^2=16.42^*$)								
대도시	23.9	1.1	22.8	76.1	62.8	13.3	100.0	(3,523)
중소도시	28.0	1.5	26.5	72.0	58.9	13.0	100.0	(3,062)
농어촌	26.4	1.6	24.8	73.6	60.8	12.7	100.0	(1,415)
교육수준($\chi^2=17.972^{**}$)								
중졸 이하	22.8	0.6	22.2	77.2	63.2	14.1	100.0	(1,211)
고졸	25.3	1.2	24.0	74.7	61.5	13.3	100.0	(2,961)
초대졸 이상	27.5	1.7	25.7	72.5	59.8	12.7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0.467$)								
예	25.9	1.4	24.5	74.1	61.0	13.1	100.0	(5,520)
아니오	26.0	1.2	24.7	74.0	60.9	13.1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0.562$)								
상용직	27.2	1.8	25.4	72.8	60.2	12.6	100.0	(2,947)
임시직	26.6	1.2	25.4	73.4	63.1	10.3	100.0	(540)
일용직	28.5	1.4	27.2	71.5	59.4	12.1	100.0	(161)
자영업자	23.6	1.0	22.6	76.4	61.5	14.9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21.2	0.0	21.2	78.8	65.6	13.1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49.423^{***}$)								
상(7-10)	31.6	3.2	28.4	68.4	57.1	11.3	100.0	(975)
중(5-6)	24.3	1.3	23.0	75.7	62.8	12.9	100.0	(4,186)
하(1-4)	26.5	0.9	25.6	73.5	59.5	14.0	100.0	(2,840)
경제수준($\chi^2=7.026$)								
상(상-중상)	27.2	2.2	25.0	72.8	59.9	12.9	100.0	(620)
중(중)	25.2	1.4	23.8	74.8	61.7	13.1	100.0	(4,075)
하(중하-하)	26.7	1.2	25.4	73.3	60.2	13.1	100.0	(3,30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 상태($\chi^2=29.461^{**}$)									
미혼	26.4	2.0	24.4	73.6	61.5	12.0	100.0	(1,886)	
동거/사실혼	27.5	1.8	25.6	72.5	59.2	13.3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26.4	1.1	25.2	73.6	60.3	13.3	100.0	(3,932)	
이혼/별거	21.4	0.7	20.8	78.6	65.0	13.5	100.0	(280)	
사별	20.9	0.3	20.6	79.1	64.7	14.3	100.0	(654)	
자녀 유무($\chi^2=15.691^{**}$)									
예	25.4	1.1	24.3	74.6	60.8	13.7	100.0	(5,561)	
아니오	27.1	2.0	25.0	72.9	61.2	11.7	100.0	(2,439)	
가구 형태($\chi^2=40.232^{***}$)									
1세대 가구	25.2	1.5	23.7	74.8	61.5	13.3	100.0	(3,200)	
2세대 가구	26.5	1.3	25.2	73.5	60.4	13.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24.0	1.0	23.0	76.0	65.5	10.6	100.0	(184)	
기타	21.8	5.3	16.4	78.2	69.8	8.4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노인이 신기술(지식)을 습득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두 번째 노인 관련 연령구분 역시 70~80대 노인 연령층에서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및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낮았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 비율이 11.9%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상위 사회계층(52.5%), 사별(57.1%)한 응답자, 그리고 유자녀 응답자(51.1%)의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는 동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형태에서 1세대 가구의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10.0%, 기타 비친족 가구의 경우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률이 58.8%에 이르는 등 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 38.7%만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표 6-9〉 참조).

〈표 6-9〉 연령규범 동의 정도: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지식)을 배우기에는 늦은 나이이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¹⁾	49.9	7.0	42.9	50.1	41.3	8.8	100.0 (8,000)
성별($\chi^2=1.029$)							
남성	49.5	6.8	42.7	50.5	41.7	8.8	100.0 (3,965)
여성	50.3	7.2	43.0	49.7	40.9	8.8	100.0 (4,035)
연령($\chi^2=57.755^{***}$)							
19~29세	52.1	9.6	42.5	47.9	39.2	8.7	100.0 (1,360)
30~39세	52.9	7.1	45.8	47.1	39.3	7.8	100.0 (1,279)
40~49세	51.9	7.5	44.4	48.1	39.9	8.2	100.0 (1,533)
50~59세	47.6	6.9	40.7	52.4	43.1	9.3	100.0 (1,590)
60~69세	49.5	6.4	43.1	50.5	42.1	8.4	100.0 (1,204)
70~79세	46.6	4.2	42.4	53.4	43.8	9.6	100.0 (675)
80세 이상	40.4	2.7	37.7	59.6	46.6	13.0	100.0 (360)
지역($\chi^2=65.842^{***}$)							
대도시	47.2	6.2	41.0	52.8	42.9	9.8	100.0 (3,523)
중소도시	55.0	8.5	46.5	45.0	38.1	6.8	100.0 (3,062)
농어촌	45.5	5.8	39.7	54.5	44.0	10.5	100.0 (1,415)
교육수준($\chi^2=55.241^{***}$)							
중졸 이하	42.8	4.5	38.4	57.2	47.1	10.1	100.0 (1,211)
고졸	48.6	6.2	42.3	51.4	42.6	8.8	100.0 (2,961)
초대졸 이상	53.2	8.4	44.7	46.8	38.5	8.4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3.868$)							
예	49.2	7.0	42.2	50.8	41.9	8.9	100.0 (5,520)
아니오	51.5	7.1	44.4	48.5	39.9	8.6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31.539^{**}$)							
상용직	49.9	7.0	42.9	50.1	40.9	9.2	100.0 (2,947)
임시직	51.8	11.6	40.3	48.2	40.9	7.3	100.0 (540)
일용직	44.5	8.4	36.0	55.5	43.6	11.9	100.0 (1,611)
자영업자	47.7	5.4	42.3	52.3	43.6	8.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8.0	6.4	41.6	52.0	45.4	6.6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13.508^*$)							
상(7-10)	47.5	8.6	38.9	52.5	42.4	10.1	100.0 (975)
중(5-6)	50.2	6.8	43.4	49.8	41.6	8.2	100.0 (4,186)
하(1-4)	50.3	6.9	43.4	49.7	40.4	9.3	100.0 (2,840)
경제수준($\chi^2=2.176$)							
상(상-중상)	51.3	7.9	43.4	48.7	39.3	9.4	100.0 (620)
중(중)	49.6	6.8	42.8	50.4	41.5	8.9	100.0 (4,075)
하(중하-하)	50.0	7.2	42.8	50.0	41.4	8.6	100.0 (3,304)
혼인 상태($\chi^2=37.687^{***}$)							
미혼	52.6	9.2	43.4	47.4	39.2	8.2	100.0 (1,886)
동거/사실혼	49.9	7.6	42.3	50.1	41.9	8.2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49.8	6.2	43.7	50.2	41.3	8.9	100.0 (3,932)
이혼/별거	48.8	7.0	41.8	51.2	41.0	10.2	100.0 (280)
사별	42.9	4.6	38.4	57.1	46.3	10.7	100.0 (654)
자녀 유무($\chi^2=13.773^{**}$)							
예	48.9	6.4	42.5	51.1	42.0	9.2	100.0 (5,561)
아니오	52.2	8.3	43.9	47.8	39.8	8.0	100.0 (2,439)
가구 형태($\chi^2=26.358^{***}$)							
1세대 가구	48.3	6.5	41.8	51.7	41.7	10.0	100.0 (3,200)
2세대 가구	50.6	7.4	43.2	49.4	41.2	8.2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61.3	6.8	54.5	38.7	35.2	3.5	100.0 (184)
기타	41.2	5.3	35.9	58.8	58.8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청년이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문항도 역시 중소도시(28.3%)보다는 농어촌(33.3%), 대도시(34.5%) 거주자의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이 36.0%로 고졸 또는 초대졸 이상 응답자에 비해 약 5.0%포인트 높았으나,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률이 낮아 전체적인 동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또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동의 비율이 92.9%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사회계층이 중이거나 경제수준이 하인 경우 동의 비율이 약 89.0%로 높았다. 혼인 상태는 법률혼(유배우) 혹은 이혼/별거 응답자에게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유자녀배우,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10〉 참조).

〈표 6-10〉 연령규범 동의 정도: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11.5	0.7	10.8	88.5	56.6	31.9	100.0 (8,000)
성별($\chi^2=7.446$)							
남성	11.2	0.9	10.2	88.8	57.1	31.7	100.0 (3,965)
여성	11.8	0.5	11.3	88.2	56.1	32.1	100.0 (4,035)
연령($\chi^2=32.987^*$)							
19~29세	12.9	0.9	12.0	87.1	57.3	29.8	100.0 (1,360)
30~39세	12.4	0.8	11.6	87.6	58.0	29.7	100.0 (1,279)
40~49세	10.4	0.3	10.1	89.6	58.2	31.4	100.0 (1,533)
50~59세	10.8	0.6	10.2	89.2	57.2	32.0	100.0 (1,590)
60~69세	10.3	0.8	9.5	89.7	54.0	35.7	100.0 (1,204)
70~79세	11.3	1.0	10.4	88.7	53.6	35.0	100.0 (675)
80세 이상	14.7	0.3	14.4	85.3	54.3	30.9	100.0 (360)
지역($\chi^2=49.152^{***}$)							
대도시	10.9	0.8	10.1	89.1	54.7	34.5	100.0 (3,523)
중소도시	13.3	0.5	12.8	86.7	58.4	28.3	100.0 (3,062)
농어촌	9.1	0.8	8.3	90.9	57.6	33.3	100.0 (1,415)
교육수준($\chi^2=19.196^{**}$)							
중졸 이하	12.9	0.7	12.2	87.1	51.1	36.0	100.0 (1,211)
고졸	10.9	0.8	10.1	89.1	57.7	31.5	100.0 (2,961)
초대졸 이상	11.5	0.7	10.9	88.5	57.5	31.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882$)							
예	11.5	0.7	10.8	88.5	57.0	31.5	100.0 (5,520)
아니오	11.4	0.6	10.8	88.6	55.7	32.8	100.0 (2,48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종사상 지위($\chi^2=29.079^{**}$)							
상용직	12.0	0.7	11.3	88.0	59.0	29.0	100.0 (2,947)
임시직	13.5	0.9	12.6	86.5	52.1	34.4	100.0 (540)
일용직	11.8	2.0	9.7	88.2	55.9	32.3	100.0 (161)
자영업자	10.4	0.7	9.7	89.6	55.0	34.6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7.1	0.0	7.1	92.9	59.7	33.2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16.205^*$)							
상(7-10)	13.3	1.3	12.0	86.7	58.0	28.7	100.0 (975)
중(5-6)	10.7	0.6	10.1	89.3	56.3	33.0	100.0 (4,186)
하(1-4)	12.0	0.6	11.4	88.0	56.6	31.3	100.0 (2,840)
경제수준($\chi^2=23.671^{***}$)							
상(상-중상)	12.5	2.1	10.4	87.5	52.4	35.1	100.0 (620)
중(중)	11.6	0.6	11.0	88.4	57.1	31.4	100.0 (4,075)
하(중하-하)	11.2	0.5	10.6	88.8	56.9	32.0	100.0 (3,304)
혼인 상태($\chi^2=50.39^{***}$)							
미혼	13.4	1.2	12.2	86.6	57.9	28.7	100.0 (1,886)
동거/사실혼	13.4	1.3	12.1	86.6	51.9	34.7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9.9	0.4	9.5	90.1	58.0	32.1	100.0 (3,932)
이혼/별거	10.1	0.3	9.8	89.9	57.7	32.2	100.0 (280)
사별	12.7	0.6	12.1	87.3	52.7	34.6	100.0 (654)
자녀 유무($\chi^2=31.93^{***}$)							
예	10.7	0.5	10.1	89.3	55.7	33.6	100.0 (5,561)
아니오	13.3	1.1	12.2	86.7	58.6	28.1	100.0 (2,439)
가구 형태($\chi^2=11.19$)							
1세대 가구	12.2	0.9	11.3	87.8	57.1	30.7	100.0 (3,200)
2세대 가구	11.1	0.6	10.5	88.9	56.5	32.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8.8	0.0	8.8	91.2	52.1	39.0	100.0 (184)
기타	16.0	0.0	16.0	84.0	49.1	35.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의 고생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앞선 여러 연령구분 문항과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혹은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0.0% 미만이었으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약 23.0%로 높았다. 또한 타 연령구분 문항과 비슷하게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특히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는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6-11〉 참조).

〈표 6-11〉 연령규범 동의 정도: 젊을 때 고생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18.1	1.4	16.7	81.9	60.7	21.2	100.0 (8,000)
성별($\chi^2=2.877$)							
남성	18.1	1.5	16.6	81.9	61.5	20.5	100.0 (3,965)
여성	18.2	1.4	16.8	81.8	60.0	21.9	100.0 (4,035)
연령($\chi^2=153.22^{***}$)							
19~29세	25.0	2.8	22.3	75.0	57.8	17.2	100.0 (1,360)
30~39세	23.8	1.9	21.9	76.2	58.7	17.5	100.0 (1,279)
40~49세	17.4	1.5	15.9	82.6	63.1	19.6	100.0 (1,533)
50~59세	15.2	0.8	14.4	84.8	61.1	23.7	100.0 (1,590)
60~69세	14.1	0.8	13.3	85.9	62.1	23.8	100.0 (1,204)
70~79세	12.3	0.7	11.6	87.7	62.4	25.2	100.0 (675)
80세 이상	12.3	1.0	11.3	87.7	59.3	28.5	100.0 (360)
지역($\chi^2=50.065^{***}$)							
대도시	16.4	1.4	14.9	83.6	60.7	23.0	100.0 (3,523)
중소도시	21.6	1.5	20.1	78.4	59.0	19.4	100.0 (3,062)
농어촌	15.1	1.3	13.8	84.9	64.5	20.4	100.0 (1,415)
교육수준($\chi^2=82.04^{***}$)							
중졸 이하	12.2	0.8	11.4	87.8	60.6	27.2	100.0 (1,211)
고졸	16.5	1.1	15.4	83.5	61.8	21.7	100.0 (2,961)
초대졸 이상	21.2	1.9	19.4	78.8	59.9	18.8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12.376^{**}$)							
예	18.6	1.4	17.2	81.4	61.3	20.1	100.0 (5,520)
아니오	17.0	1.4	15.7	83.0	59.5	23.5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46.679^{***}$)							
상용직	20.3	1.7	18.6	79.7	61.6	18.1	100.0 (2,947)
임시직	21.0	2.8	18.2	79.0	59.3	19.6	100.0 (540)
일용직	14.4	0.0	14.4	85.6	63.3	22.4	100.0 (161)
자영업자	15.4	0.7	14.6	84.6	61.4	23.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8.9	0.4	18.5	81.1	57.3	23.7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268$)							
상(7-10)	18.4	1.2	17.2	81.6	61.3	20.3	100.0 (975)
중(5-6)	18.3	1.4	16.9	81.7	60.9	20.8	100.0 (4,186)
하(1-4)	17.8	1.5	16.3	82.2	60.3	21.9	100.0 (2,840)
경제수준($\chi^2=12.392$)							
상(상-중상)	15.2	0.9	14.4	84.8	61.2	23.6	100.0 (620)
중(중)	19.0	1.4	17.6	81.0	60.9	20.1	100.0 (4,075)
하(중하-하)	17.6	1.5	16.0	82.4	60.4	22.1	100.0 (3,304)
혼인 상태 ($\chi^2=174.089^{***}$)							
미혼	26.2	2.9	23.3	73.8	57.2	16.6	100.0 (1,886)
동거/사실혼	13.9	1.9	12.0	86.1	62.9	23.2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16.5	0.7	15.8	83.5	61.9	21.6	100.0 (3,932)
이혼/별거	19.8	2.1	17.8	80.2	60.8	19.3	100.0 (280)
사별	11.9	0.5	11.5	88.1	59.5	28.6	100.0 (65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자녀 유무 ($\chi^2=163.106^{***}$)							
예	14.9	0.9	14.0	85.1	61.6	23.5	100.0 (5,561)
아니오	25.4	2.6	22.8	74.6	58.8	15.8	100.0 (2,439)
가구 형태($\chi^2=9.038$)							
1세대 가구	17.4	1.3	16.1	82.6	61.3	21.3	100.0 (3,200)
2세대 가구	18.7	1.5	17.2	81.3	60.3	20.9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4.2	1.3	12.8	85.8	60.8	25.0	100.0 (184)
기타	41.9	4.0	37.8	58.1	48.1	1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연령차별에 대한 가치관

연령차별이란 특정 연령층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거나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직장, 사회, 가정에서 연령으로 인해 능력, 기여, 성과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노인과 젊은 사람이 각각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의 동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가. 노인차별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문항에 68.2%가 ‘그런 편이다’, 19.4%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87.6%가 이러한 취업 부문에서 노인차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노인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항에 58.7%는 ‘그런 편이다’, 27.8%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12.4%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71.1%가 직장에서의 노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노인은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문항에는 54.4%가 ‘그런 편이다’, 32.1%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라고 한 12.0%의 응답자를 합산하여, 사회 전반에서의 노인차별 실태에 대해 66.4%가 매우 또는 약간의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노인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된다는 문항으로 60.0%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27.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10.4%의 응답자를 합산하여 가정 내 노인차별에 대해 70.3%가 매우 또는 약간의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노인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라는 문항과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마지막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문항에는 43.3%가 ‘그렇지 않다’, 6.8%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여, 총 50.1%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비슷하게 재혼에 관한 문항에 대하여는 47.6%가 ‘그렇지 않다’, 8.0%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총 55.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2〉 참조).

〈표 6-12〉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질문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12.4	0.5	11.9	87.6	68.2	19.4	100.0 (8,000)
노인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29.0	1.2	27.8	71.1	58.7	12.4	100.0 (8,000)
노인은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33.7	1.6	32.1	66.4	54.4	12.0	100.0 (8,00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노인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손자녀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받는다	29.6	2.2	27.4	70.4	60.0	10.4	100.0 (8,000)
노인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50.1	6.8	43.3	49.9	43.1	6.8	100.0 (8,000)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55.6	8.0	47.6	44.3	39.2	5.1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인구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차별 실태에 대해 30대 이상,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중소도시, 미취업자, 기혼자, 그리고 여자녀 응답자 중에서 특히 동의(‘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13〉 참조).

〈표 6-13〉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12.3	0.5	11.9	87.7	68.2	19.4	100.0 (8,000)
성별($\chi^2=5.905$)							
남성	13.1	0.6	12.6	86.9	68.0	18.9	100.0 (3,965)
여성	11.6	0.4	11.2	88.4	68.5	20.0	100.0 (4,035)
연령($\chi^2=63.496^{***}$)							
19~29세	15.5	0.7	14.8	84.5	67.3	17.1	100.0 (1,360)
30~39세	11.7	0.6	11.1	88.3	70.5	17.8	100.0 (1,279)
40~49세	13.3	0.4	12.9	86.7	70.9	15.8	100.0 (1,533)
50~59세	11.8	0.6	11.2	88.2	67.1	21.1	100.0 (1,590)
60~69세	9.7	0.3	9.5	90.3	67.8	22.5	100.0 (1,204)
70~79세	11.6	0.3	11.3	88.4	64.8	23.5	100.0 (675)
80세 이상	11.0	0.0	11.0	89.0	64.6	24.3	100.0 (360)
지역($\chi^2=15.098^*$)							
대도시	12.0	0.4	11.5	88.0	67.7	20.4	100.0 (3,523)
중소도시	11.7	0.3	11.3	88.3	69.6	18.7	100.0 (3,062)
농어촌	14.8	0.8	14.0	85.2	66.6	18.6	100.0 (1,415)
교육수준($\chi^2=27.601^{***}$)							
중졸 이하	12.9	0.5	12.4	87.1	62.7	24.4	100.0 (1,211)
고졸	11.9	0.3	11.6	88.1	69.3	18.8	100.0 (2,961)
초대졸 이상	12.5	0.6	11.9	87.5	69.1	18.4	100.0 (3,829)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경제활동 여부 ($\chi^2=18.433^{***}$)							
예	12.9	0.5	12.4	87.1	68.7	18.3	100.0 (5,520)
아니오	11.0	0.3	10.7	89.0	67.0	22.0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8.395$)							
상용직	12.8	0.5	12.2	87.2	69.8	17.5	100.0 (2,947)
임시직	14.1	0.7	13.4	85.9	63.1	22.8	100.0 (540)
일용직	14.0	0.0	14.0	86.0	61.5	24.6	100.0 (161)
자영업자	12.7	0.6	12.1	87.3	69.4	18.0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5.7	0.7	15.0	84.3	69.1	15.2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3.939^{***}$)							
상(7-10)	11.2	0.8	10.3	88.8	69.9	18.9	100.0 (975)
중(5-6)	11.8	0.4	11.4	88.2	70.4	17.9	100.0 (4,186)
하(1-4)	13.6	0.4	13.2	86.4	64.4	22.0	100.0 (2,840)
경제수준($\chi^2=12.743^*$)							
상(상-중상)	13.1	0.3	12.8	86.9	64.8	22.1	100.0 (620)
중(중)	11.6	0.4	11.2	88.4	69.8	18.6	100.0 (4,075)
하(중하-하)	13.1	0.6	12.5	86.9	67.0	19.9	100.0 (3,304)
혼인 상태($\chi^2=60.288^{***}$)							
미혼	14.8	0.7	14.1	85.2	67.6	17.6	100.0 (1,886)
동거/사실혼	11.2	0.7	10.4	88.8	66.4	22.5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11.4	0.3	11.2	88.6	70.5	18.1	100.0 (3,932)
이혼/별거	12.5	0.7	11.8	87.5	66.5	21.0	100.0 (280)
사별	12.9	0.4	12.5	87.1	60.5	26.6	100.0 (654)
자녀 유무($\chi^2=17.051^{***}$)							
예	11.4	0.4	11.1	88.6	68.6	20.0	100.0 (5,561)
아니오	14.4	0.7	13.7	85.6	67.4	18.2	100.0 (2,439)
가구 형태($\chi^2=10.527$)							
1세대 가구	12.9	0.6	12.3	87.1	66.5	20.6	100.0 (3,200)
2세대 가구	12.1	0.4	11.7	87.9	69.3	18.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9.2	0.0	9.2	90.8	69.9	20.9	100.0 (184)
기타	7.2	0.0	7.2	92.8	75.9	16.9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노인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실태에 대한 동의 비율도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10.5%)에 비해 대도시(13.8%) 또는 농어촌(12.8%)에서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차별 실태에 동의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별한 응답자, 그리고 유자녀 응답자의 경우 차별 실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6-14〉 참조).

〈표 6-14〉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직장에서 성과 대비 낮은 대우를 받는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28.9	1.2	27.8	71.1	58.7	12.4	100.0 (8,000)
성별($\chi^2=1.772$)							
남성	29.1	1.2	28.0	70.9	58.1	12.8	100.0 (3,965)
여성	28.7	1.1	27.5	71.3	59.4	12.0	100.0 (4,035)
연령($\chi^2=52.006^{***}$)							
19~29세	32.2	1.1	31.2	67.8	56.7	11.1	100.0 (1,360)
30~39세	33.0	1.8	31.2	67.0	55.8	11.2	100.0 (1,279)
40~49세	29.5	1.3	28.2	70.5	58.3	12.2	100.0 (1,533)
50~59세	28.3	1.2	27.1	71.7	58.5	13.2	100.0 (1,590)
60~69세	24.0	0.9	23.1	76.0	63.1	12.8	100.0 (1,204)
70~79세	27.1	0.3	26.8	72.9	59.2	13.7	100.0 (675)
80세 이상	21.6	1.0	20.5	78.4	64.4	14.0	100.0 (360)
지역($\chi^2=24.249^{***}$)							
대도시	27.7	1.1	26.6	72.3	58.5	13.8	100.0 (3,523)
중소도시	30.2	1.0	29.2	69.8	59.3	10.5	100.0 (3,062)
농어촌	29.1	1.7	27.4	70.9	58.1	12.8	100.0 (1,415)
교육수준($\chi^2=17.097^{**}$)							
중졸 이하	25.4	0.7	24.7	74.6	61.9	12.7	100.0 (1,211)
고졸	27.8	1.1	26.7	72.2	59.4	12.8	100.0 (2,961)
초대졸 이상	30.8	1.3	29.5	69.2	57.2	11.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5.214$)							
예	29.7	1.2	28.5	70.3	58.1	12.2	100.0 (5,520)
아니오	27.2	1.1	26.1	72.8	60.2	12.7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9.867$)							
상용직	29.9	1.3	28.6	70.1	57.4	12.7	100.0 (2,947)
임시직	30.3	1.2	29.1	69.7	56.9	12.8	100.0 (540)
일용직	27.8	0.8	27.0	72.2	56.7	15.5	100.0 (161)
자영업자	29.0	1.1	27.9	71.0	59.8	11.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4.1	0.0	34.1	65.9	57.2	8.7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8.513^{***}$)							
상(7-10)	24.2	0.7	23.5	75.8	59.9	15.9	100.0 (975)
중(5-6)	28.6	1.0	27.6	71.4	59.7	11.6	100.0 (4,186)
하(1-4)	30.9	1.5	29.4	69.1	56.8	12.2	100.0 (2,840)
경제수준($\chi^2=11.123$)							
상(상-중상)	25.9	1.2	24.7	74.1	59.8	14.4	100.0 (620)
중(중)	28.6	1.1	27.5	71.4	58.3	13.1	100.0 (4,075)
하(중하-하)	29.8	1.2	28.7	70.2	59.0	11.1	100.0 (3,30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혼인 상태($\chi^2=1715.117^{***}$)							
미혼	32.7	1.6	31.1	67.3	56.1	11.2	100.0 (1,886)
동거/사실혼	27.4	1.3	26.1	72.6	60.2	12.4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28.4	1.0	27.4	71.6	58.8	12.8	100.0 (3,932)
이혼/별거	32.3	0.6	31.6	67.7	54.9	12.8	100.0 (280)
사별	22.3	0.7	21.6	77.7	64.7	12.9	100.0 (654)
자녀 유무($\chi^2=13.662^{**}$)							
예	27.8	1.0	26.8	72.2	59.5	12.7	100.0 (5,561)
아니오	31.5	1.5	30.0	68.5	57.0	11.5	100.0 (2,439)
가구 형태($\chi^2=15.553$)							
1세대 가구	27.0	1.2	25.8	73.0	59.6	13.4	100.0 (3,200)
2세대 가구	30.1	1.1	29.1	69.9	58.1	11.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1.0	1.9	29.0	69.0	58.7	10.4	100.0 (184)
기타	28.7	0.0	28.7	71.3	64.0	7.2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차별 실태에 대해서도 50대 이상,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또는 농어촌 거주자, 낮은 교육수준, 상위 사회계층, 기혼(동거, 법정 혼인, 이혼, 사별 포함), 유자녀 응답자에게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15〉 참조).

〈표 6-15〉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33.7	1.6	32.1	66.3	54.4	12.0	100.0 (8,000)
성별($\chi^2=2.26$)							
남성	33.0	1.6	31.4	67.0	54.7	12.3	100.0 (3,965)
여성	34.4	1.6	32.7	65.6	54.1	11.6	100.0 (4,035)
연령($\chi^2=57.16^{***}$)							
19~29세	38.2	2.3	35.9	61.8	51.6	10.2	100.0 (1,360)
30~39세	37.0	2.2	34.8	63.0	51.9	11.1	100.0 (1,279)
40~49세	35.5	1.4	34.1	64.5	53.5	10.9	100.0 (1,533)
50~59세	31.5	1.2	30.2	68.5	54.5	14.0	100.0 (1,590)
60~69세	29.8	1.3	28.5	70.2	57.3	12.9	100.0 (1,204)
70~79세	28.2	1.4	26.7	71.8	59.8	12.0	100.0 (675)
80세 이상	30.1	1.1	29.0	69.9	56.4	13.5	100.0 (36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지역($\chi^2=30.185^{***}$)							
대도시	33.6	1.9	31.8	66.4	53.1	13.3	100.0 (3,523)
중소도시	34.6	1.2	33.4	65.4	55.5	9.8	100.0 (3,062)
농어촌	31.8	2.0	29.8	68.2	54.9	13.3	100.0 (1,415)
교육수준($\chi^2=22.67^{***}$)							
중졸 이하	30.8	1.5	29.4	69.2	58.2	11.0	100.0 (1,211)
고졸	32.6	1.1	31.5	67.4	54.7	12.7	100.0 (2,961)
초대졸 이상	35.4	2.1	33.3	64.6	52.9	11.7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0.221$)							
예	33.7	1.7	32.1	66.3	54.3	11.9	100.0 (5,520)
아니오	33.5	1.5	32.0	66.5	54.4	12.1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4.433$)							
상용직	34.2	1.8	32.5	65.8	54.0	11.8	100.0 (2,947)
임시직	36.8	2.4	34.4	63.2	53.4	9.8	100.0 (540)
일용직	28.5	1.7	26.8	71.5	58.5	13.1	100.0 (161)
자영업자	32.1	1.3	30.8	67.9	55.4	12.5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0.2	1.6	38.6	59.8	44.8	14.9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17.822^{**}$)							
상(7-10)	30.2	1.6	28.6	69.8	55.0	14.8	100.0 (975)
중(5-6)	34.1	1.4	32.7	65.9	53.8	12.1	100.0 (4,186)
하(1-4)	34.3	2.0	32.3	65.7	54.9	10.8	100.0 (2,840)
경제수준($\chi^2=17.585^{**}$)							
상(상-중상)	32.5	2.1	30.4	67.5	52.3	15.2	100.0 (620)
중(중)	33.6	1.5	32.1	66.4	53.7	12.7	100.0 (4,075)
하(중하-하)	34.0	1.7	32.3	66.0	55.5	10.4	100.0 (3,304)
혼인 상태($\chi^2=51.744^{***}$)							
미혼	37.5	2.5	35.0	62.5	52.9	9.6	100.0 (1,886)
동거/사실혼	32.9	2.5	30.4	67.1	53.0	14.0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2.3	1.2	31.2	67.7	54.9	12.8	100.0 (3,932)
이혼/별거	33.8	0.6	33.2	66.2	56.3	9.9	100.0 (280)
사별	32.2	0.7	31.5	67.8	57.1	10.7	100.0 (654)
자녀 유무($\chi^2=26.505^{***}$)							
예	32.3	1.3	31.0	67.7	55.1	12.6	100.0 (5,561)
아니오	36.9	2.4	34.5	63.1	52.6	10.6	100.0 (2,439)
가구 형태($\chi^2=10.007$)							
1세대 가구	32.3	1.7	30.6	67.7	55.9	11.8	100.0 (3,200)
2세대 가구	34.7	1.6	33.2	65.3	53.1	12.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0.7	1.5	29.2	69.3	59.3	10.1	100.0 (184)
기타	41.9	0.0	41.9	58.1	41.6	16.5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의 가정 내 돌봄 활동에 대한 차별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 비율은 남성-여성 간 비슷했으나, ‘매우 그렇다’고 강한 동의를 나타낸 응답자 비율이 여성 11.3%, 남성 9.5%로 여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돌봄 활동에 대한 차별 실태 역시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타 노인차별 실태 문항과 달리 돌봄 활동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상류층 및 상위 경제수준 응답자보다는 중위 또는 하위 사회계층·경제수준 응답자에게서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표 6-16〉 참조).

〈표 6-16〉 노인차별 실태: 노인의 가족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받는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29.7	2.2	27.4	70.3	60.0	10.4	100.0	(8,000)
성별($\chi^2=8.514^*$)								
남성	29.3	2.3	27.1	70.7	61.2	9.5	100.0	(3,965)
여성	30.0	2.2	27.8	70.0	58.8	11.3	100.0	(4,035)
연령($\chi^2=37.221^{**}$)								
19~29세	31.6	2.0	29.6	68.4	60.4	7.9	100.0	(1,360)
30~39세	30.1	3.1	27.0	69.9	59.1	10.8	100.0	(1,279)
40~49세	31.1	1.9	29.2	68.9	59.5	9.4	100.0	(1,533)
50~59세	28.9	2.8	26.2	71.1	60.2	10.9	100.0	(1,590)
60~69세	27.8	2.2	25.6	72.2	60.0	12.2	100.0	(1,204)
70~79세	28.5	0.8	27.7	71.5	59.8	11.7	100.0	(675)
80세 이상	26.1	1.9	24.2	73.9	62.9	11.1	100.0	(360)
지역($\chi^2=18.938^{**}$)								
대도시	29.3	2.4	26.9	70.7	60.8	9.9	100.0	(3,523)
중소도시	31.6	2.0	29.6	68.4	58.2	10.2	100.0	(3,062)
농어촌	26.5	2.4	24.1	73.5	61.7	11.8	100.0	(1,415)
교육수준($\chi^2=12.872^*$)								
중졸 이하	27.9	2.0	25.9	72.1	59.9	12.2	100.0	(1,211)
고졸	30.0	2.0	28.0	70.0	59.2	10.9	100.0	(2,961)
초대졸 이상	30.0	2.5	27.5	70.0	60.6	9.4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3.814$)								
예	29.5	2.4	27.1	70.5	60.0	10.5	100.0	(5,520)
아니오	30.0	1.8	28.2	70.0	60.0	10.0	100.0	(2,48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종사상 지위($\chi^2=18.519$)								
상용직	29.6	2.6	27.0	70.4	60.6	9.9	100.0	(2,947)
임시직	31.2	3.0	28.2	68.8	56.9	11.9	100.0	(540)
일용직	30.8	2.8	28.1	69.2	50.8	18.4	100.0	(161)
자영업자	28.8	2.0	26.8	71.2	60.7	10.5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28.8	1.9	26.9	71.2	60.1	11.1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0.226^{***}$)								
상(7-10)	31.8	2.7	29.2	68.2	56.8	11.3	100.0	(975)
중(5-6)	29.4	1.7	27.7	70.6	61.5	9.1	100.0	(4,186)
하(1-4)	29.2	2.8	26.4	70.8	58.8	12.0	100.0	(2,840)
경제수준($\chi^2=29.602^{***}$)								
상(상-중상)	32.7	4.0	28.6	67.3	57.0	10.3	100.0	(620)
중(중)	29.1	1.7	27.4	70.9	61.6	9.3	100.0	(4,075)
하(중하-하)	29.7	2.5	27.2	70.3	58.6	11.7	100.0	(3,304)
혼인 상태 ($\chi^2=1000.122^{***}$)								
미혼	30.1	2.5	27.6	69.9	61.4	8.5	100.0	(1,886)
동거/사실혼	29.3	3.2	26.1	70.7	57.8	12.9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29.1	1.7	27.5	70.9	60.7	10.2	100.0	(3,932)
이혼/별거	30.6	4.1	26.5	69.4	58.8	10.5	100.0	(280)
사별	31.8	2.2	29.5	68.2	56.3	12.0	100.0	(654)
자녀 유무($\chi^2=1.126$)								
예	29.8	2.2	27.6	70.2	59.7	10.5	100.0	(5,561)
아니오	29.3	2.3	27.0	70.7	60.7	10.0	100.0	(2,439)
가구 형태($\chi^2=14.951$)								
1세대 가구	28.2	1.7	26.4	71.8	60.5	11.3	100.0	(3,200)
2세대 가구	30.8	2.6	28.2	69.2	59.5	9.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27.1	2.8	24.3	72.9	63.0	9.9	100.0	(184)
기타	25.1	0.0	25.1	74.9	58.9	16.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의 이혼에 대한 차별 실태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특히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졸 이하의 경우 61.1%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초대졸 이상 응답자는 44.9%만이 동의하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의 이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일용직 종사자,

상위 사회계층, 사별한 응답자, 유자녀 응답자, 1세대 가구 응답자에게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17〉 참조).

〈표 6-17〉 노인차별 실태: 노인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50.1	6.8	43.3	49.9	43.1	6.8	100.0 (8,000)
성별($\chi^2=2.263$)							
남성	50.6	6.6	43.9	49.4	42.4	7.0	100.0 (3,965)
여성	49.7	7.0	42.6	50.3	43.7	6.7	100.0 (4,035)
연령($\chi^2=194.792^{***}$)							
19~29세	58.2	10.2	48.0	41.8	35.0	6.8	100.0 (1,360)
30~39세	55.9	8.4	47.5	44.1	37.8	6.3	100.0 (1,279)
40~49세	54.4	7.3	47.1	45.6	39.7	5.9	100.0 (1,533)
50~59세	45.5	5.3	40.2	54.5	49.2	5.3	100.0 (1,590)
60~69세	46.5	5.2	41.3	53.5	46.3	7.2	100.0 (1,204)
70~79세	38.2	4.6	33.6	61.8	51.5	10.3	100.0 (675)
80세 이상	35.8	3.2	32.5	64.2	52.9	11.3	100.0 (360)
지역($\chi^2=16.613^*$)							
대도시	51.3	7.9	43.4	48.7	42.4	6.3	100.0 (3,523)
중소도시	50.0	6.0	44.0	50.0	42.9	7.2	100.0 (3,062)
농어촌	47.4	6.0	41.4	52.6	45.2	7.4	100.0 (1,415)
교육수준($\chi^2=114.49^{***}$)							
중졸 이하	38.9	4.5	34.4	61.1	51.5	9.6	100.0 (1,211)
고졸	48.2	6.0	42.3	51.8	45.2	6.6	100.0 (2,961)
초대졸 이상	55.1	8.3	46.8	44.9	38.7	6.2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7.658$)							
예	50.8	7.2	43.6	49.2	42.8	6.4	100.0 (5,520)
아니오	48.6	6.1	42.6	51.4	43.7	7.7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8.383^{**}$)							
상용직	52.5	7.4	45.1	47.5	41.1	6.4	100.0 (2,947)
임시직	54.7	9.8	44.8	45.3	40.9	4.4	100.0 (540)
일용직	43.3	7.1	36.1	56.7	47.6	9.1	100.0 (161)
자영업자	47.6	6.3	41.3	52.4	45.4	7.0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8.2	3.6	44.6	51.8	46.5	5.3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6.304^{***}$)							
상(7-10)	43.6	7.0	36.6	56.4	49.0	7.4	100.0 (975)
중(5-6)	49.9	6.8	43.2	50.1	43.1	6.9	100.0 (4,186)
하(1-4)	52.6	6.9	45.8	47.4	40.9	6.5	100.0 (2,840)
경제수준($\chi^2=8.135$)							
상(상-중상)	49.1	9.1	40.0	50.9	44.3	6.7	100.0 (620)
중(중)	50.2	6.7	43.5	49.8	43.3	6.6	100.0 (4,075)
하(중하-하)	50.3	6.6	43.6	49.7	42.6	7.2	100.0 (3,30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혼인 상태($\chi^2=117.75^{***}$)							
미혼	58.1	9.5	48.6	41.9	35.5	6.4	100.0 (1,886)
동거/사실혼	48.3	6.2	42.1	51.7	46.3	5.4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48.8	6.3	42.6	51.2	44.0	7.2	100.0 (3,932)
이혼/별거	51.7	6.2	45.5	48.3	44.0	4.3	100.0 (280)
사별	37.5	4.1	33.4	62.5	52.6	9.9	100.0 (654)
자녀 유무($\chi^2=53.95^{***}$)							
예	47.7	5.9	41.8	52.3	45.4	6.8	100.0 (5,561)
아니오	55.5	8.9	46.7	44.5	37.7	6.8	100.0 (2,439)
가구 형태($\chi^2=25.448^{**}$)							
1세대 가구	47.0	6.1	40.9	53.0	45.5	7.5	100.0 (3,200)
2세대 가구	52.1	7.4	44.7	47.9	41.6	6.3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3.8	6.8	47.1	46.2	37.7	8.4	100.0 (184)
기타	63.2	5.3	57.9	36.8	36.8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마지막으로 노인의 재혼에 대한 차별 실태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노인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혼에 대해서도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중졸 이하 응답자의 57.2%가 동의한 반면(9.7%의 강한 동의 포함), 초대졸 이상 응답자는 40.5%만이 동의하였다. 또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상위 사회계층은 51.7%가 동의한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43.5%가 동의하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의 경우 동의 비율이 가장 낮고, 사별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무자녀보다는 유자녀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기타 비친족 가구의 동의 비율이 62.7%로 가장 높았지만, 1세대 가구의 경우 48.4%로 낮게 나타났다(<표 6-18> 참조).

〈표 6-18〉 노인차별 실태: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55.7	8.0	47.6	44.3	39.2	5.1	100.0 (8,000)
성별($\chi^2=7.357$)							
남성	56.4	7.8	48.6	43.6	39.1	4.5	100.0 (3,965)
여성	54.9	8.2	46.7	45.1	39.4	5.7	100.0 (4,035)
연령($\chi^2=196.411^{***}$)							
19~29세	63.7	11.8	51.9	36.3	32.5	3.8	100.0 (1,360)
30~39세	61.2	10.2	50.9	38.8	35.1	3.7	100.0 (1,279)
40~49세	58.6	7.5	51.1	41.4	36.9	4.5	100.0 (1,533)
50~59세	53.8	7.0	46.7	46.2	41.9	4.3	100.0 (1,590)
60~69세	48.5	5.8	42.8	51.5	44.5	6.9	100.0 (1,204)
70~79세	48.8	6.5	42.3	51.2	43.7	7.5	100.0 (675)
80세 이상	37.7	2.9	34.8	62.3	51.1	11.2	100.0 (360)
지역($\chi^2=8.774$)							
대도시	55.9	8.9	47.0	44.1	38.8	5.3	100.0 (3,523)
중소도시	55.1	7.2	47.9	44.9	40.0	4.9	100.0 (3,062)
농어촌	56.2	7.5	48.7	43.8	38.7	5.1	100.0 (1,415)
교육수준($\chi^2=138.55^{***}$)							
중졸 이하	42.8	5.3	37.5	57.2	47.5	9.7	100.0 (1,211)
고졸	55.9	7.8	48.1	44.1	39.9	4.2	100.0 (2,961)
초대졸 이상	59.5	9.1	50.4	40.5	36.1	4.3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9.676^{***}$)							
예	56.7	8.1	48.7	43.3	38.8	4.5	100.0 (5,520)
아니오	53.3	8.0	45.3	46.7	40.2	6.6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2.152^*$)							
상용직	58.3	8.3	49.9	41.7	37.8	3.9	100.0 (2,947)
임시직	60.0	10.1	49.9	40.0	34.5	5.5	100.0 (540)
일용직	48.5	6.5	42.0	51.5	43.7	7.8	100.0 (161)
자영업자	54.1	7.2	46.9	45.9	41.2	4.6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3.2	6.6	46.6	46.8	40.8	6.1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33.255^{***}$)							
상(7-10)	48.3	8.6	39.6	51.7	45.7	6.0	100.0 (975)
중(5-6)	56.8	8.2	48.6	43.2	38.6	4.6	100.0 (4,186)
하(1-4)	56.5	7.6	49.0	43.5	37.9	5.6	100.0 (2,840)
경제수준($\chi^2=27.685^{***}$)							
상(상-중상)	54.1	11.7	42.3	45.9	38.5	7.4	100.0 (620)
중(중)	56.3	8.3	48.0	43.7	39.1	4.6	100.0 (4,075)
하(중하-하)	55.2	7.0	48.2	44.8	39.5	5.3	100.0 (3,304)
혼인 상태($\chi^2=117.93^{***}$)							
미혼	61.3	11.4	49.9	38.7	35.0	3.7	100.0 (1,886)
동거/사실혼	57.5	7.2	50.4	42.5	37.3	5.2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54.3	6.9	47.4	45.7	40.6	5.1	100.0 (3,932)
이혼/별거	58.5	11.4	47.2	41.5	35.2	6.3	100.0 (280)
사별	42.5	5.0	37.5	57.5	48.6	8.8	100.0 (654)
자녀 유무($\chi^2=45.115^{***}$)							
예	53.9	6.9	47.0	46.1	40.5	5.6	100.0 (5,561)
아니오	59.5	10.6	48.9	40.5	36.4	4.1	100.0 (2,439)
가구 형태($\chi^2=41.616^{***}$)							
1세대 가구	51.6	7.2	44.4	48.4	42.3	6.1	100.0 (3,200)
2세대 가구	58.4	8.6	49.8	41.6	37.2	4.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8.4	8.2	50.2	41.6	36.2	5.4	100.0 (184)
기타	37.3	5.3	31.9	62.7	62.7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나. 청년차별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률('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은 노인차별 실태에 대한 동의 비율에 비해 약 11.3%포인트(가정 내 돌봄)에서 18.3%포인트(이혼) 가량 낮게 나타났다. 첫째,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1.2%가 '그런 편이다', 17.3%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총 78.5%가 취업 과정에서 젊은 사람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두 번째로 젊은 사람들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3.9%가 '그런 편이다', 41.6%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약간 동의 또는 비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0.7%로 총 54.6%가 약간 또는 매우 젊은 사람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문항에 44.2%가 '그런 편이다', 41.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약간 동의 또는 비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9.1%로 총 53.3%가 약간 또는 매우 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네 번째는 젊은 사람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된다는 문항으로 53.0%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3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8.0%의 응답자를 합산하여 가정 내 차별 문항에 대해서는 61.0%가 매우 또는 약간의 정도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라는 문항과 마지막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

지 않는 응답률이 동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문항에는 51.0%가 ‘그렇지 않다’, 17.3%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여, 총 68.3%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비슷하게, 재혼에 관한 문항에 대하여는 53.7%가 ‘그렇지 않다’, 19.4%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총 73.1%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19〉 참조).

〈표 6-19〉 젊은 사람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실태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21.5	1.9	19.6	78.5	61.2	17.3	100.0 (8,000)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의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45.4	3.8	41.6	54.6	43.9	10.7	100.0 (8,000)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46.7	5.2	41.5	53.3	44.2	9.1	100.0 (8,000)
젊은 사람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부모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받는다	39.0	3.8	35.2	61.0	53.0	8.0	100.0 (8,000)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68.3	17.3	51.0	31.6	28.3	3.3	100.0 (8,000)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73.1	19.4	53.7	26.9	24.8	2.1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청년차별과 노인차별 각각의 문항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인정($\alpha=0.12$) 및 직장에서의 성과($\alpha=0.15$) 부분이 상관계수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사회적·직업적 인정 부문에서 노인 집단과 청년 집단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혼($\alpha=0.40$) 및 재혼($\alpha=0.38$) 관련 응답은 노인-청년차별 정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가운데 재혼이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연령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차별 실태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20대에서 '매우 그렇다'고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응답률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분포하는 미혼(20.9%) 및 동거/사실혼(20.1%)에서 강한 동의를 보이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비슷하게 무자녀 응답자가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비중이 높았다(20.2%). 또 노인 일자리 차별 실태와 마찬가지로 임시직·무급가족종사자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표 6-20〉 참조).

〈표 6-20〉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함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21.5	1.9	19.6	78.5	61.2	17.3	100.0	(8,000)
성별($\chi^2=1.535$)								
남성	21.4	2.1	19.3	78.6	61.4	17.2	100.0	(3,965)
여성	21.6	1.8	19.8	78.4	61.0	17.4	100.0	(4,035)
연령($\chi^2=77.284^{***}$)								
19~29세	15.0	1.0	14.0	85.0	62.5	22.5	100.0	(1,360)
30~39세	20.2	1.6	18.6	79.8	63.1	16.7	100.0	(1,279)
40~49세	23.5	2.1	21.4	76.5	60.6	15.9	100.0	(1,533)
50~59세	22.1	2.3	19.8	77.9	61.7	16.2	100.0	(1,590)
60~69세	25.6	2.1	23.5	74.4	57.5	16.9	100.0	(1,204)
70~79세	22.1	2.7	19.4	77.9	61.8	16.1	100.0	(675)
80세 이상	24.7	2.1	22.7	75.3	61.1	14.2	100.0	(360)
지역($\chi^2=26.014^{***}$)								
대도시	22.3	1.7	20.5	77.7	60.1	17.6	100.0	(3,523)
중소도시	22.3	2.4	19.9	77.7	62.0	15.8	100.0	(3,062)
농어촌	17.9	1.4	16.6	82.1	62.3	19.8	100.0	(1,415)
교육수준($\chi^2=6.017$)								
중졸 이하	22.6	1.8	20.8	77.4	60.3	17.1	100.0	(1,211)
고졸	21.9	2.0	19.9	78.1	61.8	16.3	100.0	(2,961)
초대졸 이상	20.8	1.9	18.9	79.2	61.0	18.2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4.301$)								
예	21.2	1.7	19.4	78.8	61.5	17.3	100.0	(5,520)
아니오	22.3	2.4	19.9	77.7	60.5	17.2	100.0	(2,48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저렴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종사상 지위($\chi^2=21.931^*$)									
상용직	20.2	1.6	18.7	79.8	62.5	17.2	100.0	(2,947)	
임시직	17.7	1.1	16.6	82.3	61.6	20.7	100.0	(540)	
일용직	25.4	2.5	22.9	74.6	60.4	14.2	100.0	(161)	
자영업자	23.7	2.2	21.6	76.3	59.6	16.7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5.6	0.0	15.6	84.4	66.4	18.0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4.873^{***}$)									
상(7-10)	17.1	2.3	14.8	82.9	64.2	18.7	100.0	(975)	
중(5-6)	22.9	1.9	20.9	77.1	61.6	15.5	100.0	(4,186)	
하(1-4)	21.0	1.8	19.2	79.0	59.6	19.4	100.0	(2,840)	
경제수준($\chi^2=36.046^{***}$)									
상(상-중상)	24.0	4.6	19.5	76.0	57.5	18.4	100.0	(620)	
중(중)	22.2	1.6	20.6	77.8	61.7	16.2	100.0	(4,075)	
하(중하-하)	20.2	1.8	18.4	79.8	61.3	18.5	100.0	(3,304)	
혼인 상태($\chi^2=73.032^{***}$)									
미혼	16.5	1.4	15.1	83.5	62.6	20.9	100.0	(1,886)	
동거/사실혼	22.0	2.8	19.2	78.0	57.9	20.1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23.1	1.9	21.2	76.9	61.5	15.4	100.0	(3,932)	
이혼/별거	22.9	0.7	22.1	77.1	62.1	15.0	100.0	(280)	
사별	24.7	2.2	22.5	75.3	61.2	14.2	100.0	(654)	
자녀 유무($\chi^2=57.543^{***}$)									
예	23.6	2.2	21.4	76.4	60.4	16.0	100.0	(5,561)	
아니오	16.7	1.2	15.5	83.3	63.1	20.2	100.0	(2,439)	
가구 형태($\chi^2=7.073$)									
1세대 가구	21.8	1.9	19.9	78.2	61.2	17.0	100.0	(3,200)	
2세대 가구	21.3	2.0	19.4	78.7	61.1	17.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20.7	2.0	18.6	79.3	64.6	14.8	100.0	(184)	
기타	19.6	0.0	19.6	80.4	40.2	40.2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직장에서의 차별 실태에 대해서도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53.5%) 또는 중소도시(52.3%)보다는 농어촌 지역(62.5%) 거주자의 경우 보통 또는 강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차별 실태와는 달리 무급가족종사자의 직장 내 차별 실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또 상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인 경우, 그리고 무자녀의 경우 직장에서의 청년차별 실태에 동의하

는 비율이 높았다(〈표 6-21〉 참조).

〈표 6-21〉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는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45.4	3.8	41.6	54.6	43.9	10.7	100.0	(8,000)
성별($\chi^2=5.173$)								
남성	44.6	3.4	41.1	55.4	44.3	11.2	100.0	(3,965)
여성	46.2	4.2	42.0	53.8	43.6	10.2	100.0	(4,035)
연령($\chi^2=71.938^{***}$)								
19~29세	37.1	2.8	34.3	62.9	49.7	13.3	100.0	(1,360)
30~39세	43.4	3.8	39.6	56.6	46.8	9.9	100.0	(1,279)
40~49세	46.0	4.0	42.0	54.0	43.5	10.5	100.0	(1,533)
50~59세	48.4	4.0	44.5	51.6	40.2	11.3	100.0	(1,590)
60~69세	49.4	4.8	44.6	50.6	41.6	9.0	100.0	(1,204)
70~79세	48.9	3.4	45.5	51.1	42.7	8.4	100.0	(675)
80세 이상	47.9	3.4	44.5	52.1	40.8	11.2	100.0	(360)
지역($\chi^2=59.808^{***}$)								
대도시	46.5	3.7	42.9	53.5	41.9	11.5	100.0	(3,523)
중소도시	47.7	4.5	43.2	52.3	43.5	8.8	100.0	(3,062)
농어촌	37.5	2.6	34.9	62.5	50.0	12.5	100.0	(1,415)
교육수준($\chi^2=12.549$)								
중졸 이하	49.3	3.9	45.4	50.7	41.4	9.3	100.0	(1,211)
고졸	45.0	3.4	41.7	55.0	44.2	10.8	100.0	(2,961)
초대졸 이상	44.4	4.1	40.3	55.6	44.5	11.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4.743$)								
예	44.6	3.7	41.0	55.4	44.4	10.9	100.0	(5,520)
아니오	47.1	4.1	42.9	52.9	42.8	10.1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43.221^{***}$)								
상용직	42.3	4.2	38.1	57.7	45.2	12.5	100.0	(2,947)
임시직	42.3	2.7	39.5	57.7	48.2	9.6	100.0	(540)
일용직	45.8	2.6	43.2	54.2	45.1	9.1	100.0	(161)
자영업자	48.9	3.2	45.7	51.1	42.0	9.1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0.6	3.4	47.2	49.4	44.1	5.4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47.81^{***}$)								
상(7-10)	41.4	3.0	38.4	58.6	41.8	16.8	100.0	(975)
중(5-6)	45.5	3.9	41.7	54.5	44.2	10.3	100.0	(4,186)
하(1-4)	46.5	4.0	42.6	53.5	44.3	9.1	100.0	(2,840)

특성	동의함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경제수준($\chi^2=48.144^{***}$)								
상(상-중상)	41.1	6.2	34.9	58.9	44.1	14.8	100.0	(620)
중(중)	44.5	3.7	40.8	55.5	43.8	11.7	100.0	(4,075)
하(중하-하)	47.3	3.5	43.8	52.7	44.1	8.7	100.0	(3,304)
혼인 상태($\chi^2=76.729^{***}$)								
미혼	37.8	3.2	34.6	62.2	50.0	12.2	100.0	(1,886)
동거/사실혼	46.1	2.7	43.4	53.9	44.1	9.7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47.8	4.4	43.4	52.2	41.5	10.7	100.0	(3,932)
이혼/별거	48.5	5.2	43.3	51.5	45.6	6.0	100.0	(280)
사별	49.8	3.3	46.5	50.2	40.0	10.2	100.0	(654)
자녀 유무($\chi^2=57.306^{***}$)								
예	48.2	4.1	44.1	51.8	41.6	10.2	100.0	(5,561)
아니오	39.1	3.1	36.0	60.9	49.2	11.8	100.0	(2,439)
가구 형태($\chi^2=7.613$)								
1세대 가구	45.1	3.9	41.2	54.9	43.9	10.9	100.0	(3,200)
2세대 가구	45.5	3.8	41.8	54.5	43.9	10.5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8.1	2.5	45.6	51.9	43.4	8.5	100.0	(184)
기타	19.4	0.0	19.4	80.6	57.4	23.2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청년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차별 실태에 대해서도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임시직 근로자인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인 일자리 차별 실태와는 달리 중위 경제수준일 때 청년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차별을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타 문항과 동일하게, 그리고 연령별 차이와 경향을 같이하며, 미혼 및 무자녀 응답자 중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22〉 참조).

〈표 6-22〉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함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46.7	5.2	41.5	53.3	44.2	9.1	100.0 (8,000)
성별($\chi^2=5.55$)							
남성	45.7	5.5	40.3	54.3	44.8	9.4	100.0 (3,965)
여성	47.7	4.9	42.7	52.3	43.5	8.8	100.0 (4,035)
연령($\chi^2=61.484^{***}$)							
19~29세	39.1	4.0	35.1	60.9	49.6	11.3	100.0 (1,360)
30~39세	45.4	4.9	40.5	54.6	45.0	9.6	100.0 (1,279)
40~49세	47.1	4.8	42.3	52.9	42.9	10.0	100.0 (1,533)
50~59세	49.1	6.6	42.5	50.9	42.5	8.4	100.0 (1,590)
60~69세	51.1	5.6	45.5	48.9	42.2	6.7	100.0 (1,204)
70~79세	49.1	5.8	43.3	50.9	43.0	8.0	100.0 (675)
80세 이상	48.7	4.1	44.7	51.3	42.5	8.8	100.0 (360)
지역($\chi^2=53.535^{***}$)							
대도시	48.5	5.4	43.1	51.5	41.9	9.5	100.0 (3,523)
중소도시	48.3	5.5	42.7	51.7	44.1	7.7	100.0 (3,062)
농어촌	38.8	3.8	35.0	61.2	50.0	11.2	100.0 (1,415)
교육수준($\chi^2=13.21^*$)							
중졸 이하	50.3	5.0	45.3	49.7	42.3	7.4	100.0 (1,211)
고졸	45.8	4.7	41.0	54.2	44.6	9.6	100.0 (2,961)
초대졸 이상	46.3	5.6	40.7	53.7	44.4	9.3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6.352$)							
예	45.8	5.0	40.8	54.2	44.9	9.3	100.0 (5,520)
아니오	48.7	5.6	43.1	51.3	42.7	8.6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33.016^{***}$)							
상용직	43.0	5.2	37.7	57.0	46.6	10.4	100.0 (2,947)
임시직	45.8	4.9	40.9	54.2	45.2	9.1	100.0 (540)
일용직	50.2	6.5	43.6	49.8	39.8	10.0	100.0 (161)
자영업자	49.8	4.6	45.1	50.2	42.5	7.7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1.7	3.6	48.1	48.3	40.9	7.4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4.489$)							
상(7-10)	44.9	5.1	39.8	55.1	44.6	10.5	100.0 (975)
중(5-6)	46.6	5.3	41.3	53.4	44.6	8.8	100.0 (4,186)
하(1-4)	47.5	5.1	42.5	52.5	43.4	9.1	100.0 (2,840)
경제수준($\chi^2=23.347^{***}$)							
상(상-중상)	45.8	8.0	37.8	54.2	44.5	9.6	100.0 (620)
중(중)	45.5	5.1	40.4	54.5	44.8	9.7	100.0 (4,075)
하(중하-하)	48.4	4.7	43.6	51.6	43.3	8.3	100.0 (3,30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저희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 상태($\chi^2=61.751^{***}$)								
미혼	40.4	4.6	35.9	59.6	48.4	11.2	100.0	(1,886)
동거/사실혼	49.7	5.3	44.4	50.3	39.5	10.8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47.9	5.5	42.4	52.1	43.9	8.1	100.0	(3,932)
이혼/별거	47.9	5.4	42.5	52.1	46.4	5.7	100.0	(280)
사별	51.4	5.1	46.3	48.6	41.4	7.2	100.0	(654)
자녀 유무($\chi^2=43.135^{***}$)								
예	49.0	5.5	43.6	51.0	42.6	8.3	100.0	(5,561)
아니오	41.4	4.6	36.8	58.6	47.7	10.9	100.0	(2,439)
가구 형태($\chi^2=11.578$)								
1세대 가구	47.0	5.2	41.8	53.0	44.2	8.8	100.0	(3,200)
2세대 가구	46.4	5.2	41.1	53.6	44.1	9.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1.4	4.5	46.9	48.6	45.2	3.5	100.0	(184)
기타	31.8	0.0	31.8	68.2	59.7	8.5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청년의 가족 돌봄 활동에 대한 차별 실태에 대해서도 농어촌 지역에서
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경우, 상용직·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그리고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차별 실태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
히,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타 문항과는 달리 가족 돌봄 활동
문항에서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타 문항과 동일하게, 연령별 차이와 경
향을 같이하며, 미혼 및 무자녀 응답자 중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표 6-23〉 참조).

〈표 6-23〉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의 가족 돌봄 활동은 낮게 평가된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39.0	3.8	35.2	61.0	53.0	8.0	100.0 (8,000)
성별($\chi^2=4.467$)							
남성	38.1	3.4	34.7	61.9	53.6	8.3	100.0 (3,965)
여성	39.9	4.1	35.8	60.1	52.5	7.6	100.0 (4,035)
연령($\chi^2=25.348$)							
19~29세	35.8	3.3	32.5	64.2	55.1	9.1	100.0 (1,360)
30~39세	37.3	4.0	33.3	62.7	54.2	8.5	100.0 (1,279)
40~49세	38.5	3.7	34.7	61.5	54.2	7.4	100.0 (1,533)
50~59세	40.8	4.1	36.7	59.2	52.1	7.1	100.0 (1,590)
60~69세	40.6	3.3	37.3	59.4	52.5	6.9	100.0 (1,204)
70~79세	40.8	4.1	36.6	59.2	49.9	9.3	100.0 (675)
80세 이상	43.2	4.3	38.8	56.8	47.8	9.0	100.0 (360)
지역($\chi^2=61.667^{***}$)							
대도시	42.4	4.7	37.7	57.6	49.8	7.8	100.0 (3,523)
중소도시	38.3	2.9	35.4	61.7	54.5	7.2	100.0 (3,062)
농어촌	32.2	3.4	28.8	67.8	57.9	9.9	100.0 (1,415)
교육수준($\chi^2=15.9^*$)							
중졸 이하	41.6	4.5	37.1	58.4	48.9	9.5	100.0 (1,211)
고졸	39.6	3.4	36.1	60.4	53.0	7.4	100.0 (2,961)
초대졸 이상	37.8	3.8	34.0	62.2	54.3	7.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0.754^*$)							
예	38.0	3.6	34.4	62.0	54.2	7.8	100.0 (5,520)
아니오	41.3	4.2	37.1	58.7	50.3	8.4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72.131^{***}$)							
상용직	36.8	3.7	33.1	63.2	55.1	8.1	100.0 (2,947)
임시직	36.8	3.1	33.7	63.2	57.1	6.2	100.0 (540)
일용직	41.8	5.5	36.3	58.2	46.7	11.5	100.0 (161)
자영업자	39.9	3.4	36.5	60.1	52.8	7.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0.2	3.0	37.2	59.8	51.4	8.4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13.619^*$)							
상(7-10)	42.3	4.6	37.7	57.7	49.2	8.5	100.0 (975)
중(5-6)	39.0	3.5	35.5	61.0	53.7	7.3	100.0 (4,186)
하(1-4)	37.9	3.8	34.0	62.1	53.4	8.7	100.0 (2,840)
경제수준($\chi^2=14.841^*$)							
상(상-중상)	41.7	5.9	35.8	58.3	49.0	9.3	100.0 (620)
중(중)	39.6	3.6	36.0	60.4	52.7	7.8	100.0 (4,075)
하(중하-하)	37.8	3.6	34.2	62.2	54.3	7.9	100.0 (3,304)
혼인 상태($\chi^2=24.213^*$)							
미혼	35.3	3.8	31.5	64.7	56.0	8.7	100.0 (1,886)
동거/사실혼	41.1	4.3	36.8	58.9	52.0	6.9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9.2	3.6	35.6	60.8	52.7	8.1	100.0 (3,932)
이혼/별거	42.1	3.5	38.6	57.9	51.8	6.1	100.0 (280)
사별	43.3	3.8	39.5	56.7	48.8	7.9	100.0 (654)
자녀 유무($\chi^2=19.827^{***}$)							
예	40.5	3.9	36.6	59.5	52.1	7.4	100.0 (5,561)
아니오	35.7	3.6	32.1	64.3	55.1	9.2	100.0 (2,439)
가구 형태($\chi^2=11.178$)							
1세대 가구	39.5	3.7	35.8	60.5	52.1	8.4	100.0 (3,200)
2세대 가구	38.7	3.8	34.9	61.3	53.5	7.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0.3	4.4	35.9	59.7	55.5	4.2	100.0 (184)
기타	7.2	0.0	7.2	92.8	79.0	13.8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반면, 젊은 사람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차별 실태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혼에 대한 문항만), 그리고 상위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에 속한다고 인식할수록 차별 실태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젊은 층의 이혼 차별 실태가 존재한다는 문항에 대해 사별인 경우, 44.2%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특히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미혼과 이혼/별거의 경우 30.0% 미만이 동의하였다. 비슷하게, 젊은 층의 재혼 차별 실태에 관해 사별인 경우 35.9%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인 경우 34.9%, 이혼/별거인 경우 21.8%만 동의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24> 및 <표 6-25> 참조).

<표 6-24>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¹⁾	68.4	17.3	51.0	31.6	28.3	3.3	100.0 (8,000)
성별($\chi^2=5.766$)							
남성	68.4	16.4	52.0	31.6	28.3	3.3	100.0 (3,965)
여성	68.3	18.3	50.0	31.7	28.3	3.4	100.0 (4,035)
연령($\chi^2=218.338^{***}$)							
19~29세	75.7	24.9	50.9	24.3	21.1	3.2	100.0 (1,360)
30~39세	73.4	19.3	54.1	26.6	23.6	3.0	100.0 (1,279)
40~49세	71.4	17.2	54.2	28.6	25.0	3.5	100.0 (1,533)
50~59세	66.3	15.1	51.2	33.7	31.2	2.4	100.0 (1,590)
60~69세	65.2	16.1	49.1	34.8	31.1	3.7	100.0 (1,204)
70~79세	56.9	11.0	45.9	43.1	38.8	4.2	100.0 (675)
80세 이상	50.6	8.3	42.3	49.4	44.1	5.3	100.0 (360)
지역($\chi^2=25.351^{***}$)							
대도시	70.0	18.8	51.2	30.0	26.8	3.2	100.0 (3,523)
중소도시	66.8	15.3	51.5	33.2	30.2	3.0	100.0 (3,062)
농어촌	67.8	18.2	49.6	32.2	27.9	4.3	100.0 (1,415)
교육수준($\chi^2=122.857^{***}$)							
중졸 이하	57.3	12.1	45.2	42.7	38.0	4.7	100.0 (1,211)
고졸	66.8	16.8	50.0	33.2	30.2	3.0	100.0 (2,961)
초대졸 이상	73.1	19.4	53.7	26.9	23.8	3.2	100.0 (3,829)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경제활동 여부 ($\chi^2=17.161^{***}$)							
예	69.7	17.8	52.0	30.3	26.9	3.4	100.0 (5,520)
아니오	65.3	16.4	48.9	34.7	31.4	3.3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1.3$)							
상용직	69.8	17.6	52.2	30.2	26.6	3.6	100.0 (2,947)
임시직	72.9	21.1	51.8	27.1	23.9	3.2	100.0 (540)
일용직	72.7	17.2	55.5	27.3	24.3	3.0	100.0 (161)
자영업자	68.2	16.8	51.4	31.8	28.6	3.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70.8	20.7	50.1	29.2	27.8	1.4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3.297^{***}$)							
상(7-10)	62.8	13.3	49.5	37.2	32.1	5.0	100.0 (975)
중(5-6)	69.9	17.3	52.5	30.1	27.0	3.2	100.0 (4,186)
하(1-4)	68.0	18.7	49.4	32.0	28.9	3.0	100.0 (2,840)
경제수준($\chi^2=29.991^{***}$)							
상(상-중상)	64.6	17.7	46.9	35.4	30.5	5.0	100.0 (620)
중(중)	69.8	17.3	52.5	30.2	26.9	3.3	100.0 (4,075)
하(중하-하)	67.3	17.3	49.9	32.7	29.6	3.1	100.0 (3,304)
혼인 상태($\chi^2=136.507^{***}$)							
미혼	76.0	22.9	53.0	24.0	21.0	3.1	100.0 (1,886)
동거/사실혼	67.4	17.1	50.3	32.6	29.3	3.3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67.0	15.8	51.1	33.0	29.6	3.4	100.0 (3,932)
이혼/별거	70.4	17.3	53.1	29.6	27.5	2.1	100.0 (280)
사별	55.8	10.7	45.1	44.2	40.0	4.2	100.0 (654)
자녀 유무($\chi^2=43^{***}$)							
예	66.5	15.9	50.6	33.5	30.0	3.5	100.0 (5,561)
아니오	72.6	20.6	51.9	27.4	24.5	2.9	100.0 (2,439)
가구 형태($\chi^2=28.683^{***}$)							
1세대 가구	65.4	16.1	49.3	34.6	30.8	3.8	100.0 (3,200)
2세대 가구	70.4	18.4	52.0	29.6	26.5	3.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68.4	13.2	55.2	31.6	30.2	1.5	100.0 (184)
기타	71.9	17.8	54.1	28.1	28.1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표 6-25〉 청년차별 실태: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¹⁾	73.1	19.4	53.7	26.9	24.8	2.1	100.0 (8,000)
성별($\chi^2=4.052$)							
남성	72.9	19.2	53.8	27.1	25.3	1.8	100.0 (3,965)
여성	73.3	19.7	53.7	26.7	24.3	2.4	100.0 (4,035)
연령($\chi^2=102.504^{***}$)							
19~29세	77.5	25.6	51.8	22.5	20.8	1.8	100.0 (1,360)
30~39세	74.7	20.5	54.2	25.3	23.0	2.3	100.0 (1,279)
40~49세	75.2	19.5	55.7	24.8	22.9	1.9	100.0 (1,533)
50~59세	72.1	17.2	55.0	27.9	25.4	2.4	100.0 (1,590)
60~69세	72.0	18.2	53.8	28.0	26.3	1.7	100.0 (1,204)
70~79세	67.5	15.8	51.7	32.5	31.0	1.5	100.0 (675)
80세 이상	61.0	12.5	48.4	39.0	34.8	4.2	100.0 (360)
지역($\chi^2=22.483^{***}$)							
대도시	73.5	20.7	52.8	26.5	24.3	2.2	100.0 (3,523)
중소도시	73.0	17.1	55.9	27.0	25.3	1.7	100.0 (3,062)
농어촌	72.5	21.2	51.3	27.5	24.9	2.6	100.0 (1,415)
교육수준($\chi^2=39.38^{***}$)							
중졸 이하	67.1	15.0	52.1	32.9	30.6	2.3	100.0 (1,211)
고졸	72.9	19.6	53.3	27.1	24.8	2.2	100.0 (2,961)
초대졸 이상	75.2	20.7	54.5	24.8	22.9	1.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2.934$)							
예	73.5	19.8	53.7	26.5	24.4	2.1	100.0 (5,520)
아니오	72.3	18.5	53.8	27.7	25.7	2.0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8.372^{**}$)							
상용직	72.2	19.4	52.8	27.8	25.7	2.1	100.0 (2,947)
임시직	77.9	22.5	55.4	22.1	19.6	2.5	100.0 (540)
일용직	70.7	25.7	45.0	29.3	27.5	1.7	100.0 (161)
자영업자	74.1	19.2	54.9	25.9	24.1	1.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79.9	20.2	59.8	20.1	14.7	5.4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chi^2=53.085^{***}$)							
상(7-10)	64.3	16.5	47.8	35.7	32.0	3.6	100.0 (975)
중(5-6)	75.0	19.6	55.5	25.0	23.3	1.6	100.0 (4,186)
하(1-4)	73.3	20.2	53.1	26.7	24.5	2.2	100.0 (2,840)
경제수준($\chi^2=15.792^*$)							
상(상-중상)	69.0	22.1	46.9	31.0	28.2	2.8	100.0 (620)
중(중)	73.3	19.6	53.7	26.7	24.7	1.9	100.0 (4,075)
하(중하-하)	73.7	18.6	55.0	26.3	24.2	2.1	100.0 (3,304)
혼인 상태($\chi^2=61.114^{***}$)							
미혼	76.1	24.3	51.8	23.9	21.7	2.2	100.0 (1,886)
동거/사실혼	73.9	18.8	55.0	26.1	23.5	2.6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72.6	17.9	54.7	27.4	25.5	1.9	100.0 (3,932)
이혼/별거	78.2	22.6	55.6	21.8	19.8	1.9	100.0 (280)
사별	64.1	13.9	50.1	35.9	33.8	2.1	100.0 (654)
자녀 유무($\chi^2=24.6^{***}$)							
예	72.4	18.1	54.3	27.6	25.6	1.9	100.0 (5,561)
아니오	74.7	22.4	52.3	25.3	22.9	2.5	100.0 (2,439)
가구 형태($\chi^2=9.824$)							
1세대 가구	71.9	18.7	53.3	28.1	25.6	2.5	100.0 (3,200)
2세대 가구	74.0	20.0	54.0	26.0	24.1	1.8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71.7	17.4	54.3	28.3	26.3	2.0	100.0 (184)
기타	61.9	29.0	32.9	38.1	38.1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제2절 세대갈등에 대한 가치관

우리 사회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 심각성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64.6%는 ‘대체로 그렇다’, 7.6%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총 72.2%가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20대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73.8%로 타 연령에 비해 약간 높았다. 중소도시(5.8%)에 비해 대도시(8.7%) 및 농어촌(8.6%)에서 ‘매우 그렇다’는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응답자가 많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심각하다는 동의 비율이 81.0%로 특히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법률혼(유배우)에서 세대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73.5%로 높았고, 이혼/별거의 경우에는 67.0%로 낮았다(〈표 6-26〉 참조).

〈표 6-26〉 우리 사회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명)
전체 ¹⁾	27.8	1.0	26.8	72.2	64.6	7.6	100.0 (8,000)
성별($\chi^2=1.945$)							
남성	27.1	1.0	26.2	72.9	65.1	7.8	100.0 (3,965)
여성	28.4	1.0	27.5	71.6	64.2	7.4	100.0 (4,035)
연령($\chi^2=32.979^*$)							
19~29세	26.2	1.8	24.3	73.8	64.4	9.4	100.0 (1,360)
30~39세	28.2	0.6	27.6	71.8	63.9	7.9	100.0 (1,279)
40~49세	27.1	1.0	26.1	72.9	65.9	7.0	100.0 (1,533)
50~59세	28.1	0.6	27.5	71.9	64.8	7.1	100.0 (1,590)
60~69세	28.0	1.0	27.0	72.0	65.7	6.4	100.0 (1,204)
70~79세	29.8	0.6	29.2	70.2	63.1	7.1	100.0 (675)
80세 이상	29.4	1.2	28.2	70.6	61.6	9.0	100.0 (360)
지역($\chi^2=25.743^{***}$)							
대도시	27.5	0.9	26.6	72.5	63.8	8.7	100.0 (3,523)
중소도시	28.3	0.8	27.5	71.7	65.8	5.8	100.0 (3,062)
농어촌	27.3	1.4	25.9	72.7	64.1	8.6	100.0 (1,415)

특성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교육수준($\chi^2=6.624$)								
중졸 이하	29.2	1.1	28.1	70.8	62.8	8.0	100.0	(1,211)
고졸	27.2	1.0	26.2	72.8	66.0	6.8	100.0	(2,961)
초대졸 이상	27.8	0.9	26.9	72.2	64.2	8.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3.712$)								
예	27.3	0.9	26.4	72.7	65.3	7.4	100.0	(5,520)
아니오	28.9	1.1	27.8	71.1	63.2	7.9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3.22^*$)								
상용직	26.9	0.8	26.1	73.1	66.1	7.0	100.0	(2,947)
임시직	31.4	2.1	29.2	68.6	60.5	8.1	100.0	(540)
일용직	29.6	0.0	29.6	70.4	61.4	8.9	100.0	(161)
자영업자	27.0	0.7	26.2	73.0	65.3	7.7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9.0	0.6	18.4	81.0	72.2	8.8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11.109$)								
상(7-10)	27.6	0.7	26.8	72.4	63.3	9.2	100.0	(975)
중(5-6)	28.0	0.9	27.1	72.0	65.2	6.8	100.0	(4,186)
하(1-4)	27.6	1.2	26.4	72.4	64.3	8.1	100.0	(2,840)
경제수준($\chi^2=59.575^{***}$)								
상(상-중상)	23.6	0.7	23.0	76.4	62.0	14.4	100.0	(620)
중(중)	27.3	0.8	26.5	72.7	66.3	6.4	100.0	(4,075)
하(중하-하)	29.2	1.3	27.9	70.8	63.1	7.7	100.0	(3,304)
혼인 상태($\chi^2=27.845^{**}$)								
미혼	27.5	1.3	26.2	72.5	64.3	8.2	100.0	(1,886)
동거/사실혼	29.6	1.6	28.0	70.4	63.2	7.2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26.5	0.6	25.9	73.5	66.1	7.5	100.0	(3,932)
이혼/별거	33.0	1.0	32.1	67.0	61.2	5.8	100.0	(280)
사별	31.0	1.1	29.9	69.0	61.4	7.6	100.0	(654)
자녀 유무($\chi^2=5.568$)								
예	27.8	0.8	27.0	72.2	64.8	7.4	100.0	(5,561)
아니오	27.7	1.3	26.4	72.3	64.3	8.0	100.0	(2,439)
가구 형태($\chi^2=15.482$)								
1세대 가구	27.8	1.0	26.8	72.2	65.3	6.9	100.0	(3,200)
2세대 가구	27.4	0.9	26.5	72.6	64.6	8.0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6.6	1.9	34.6	63.4	54.4	9.1	100.0	(184)
기타	45.1	0.0	45.1	54.9	49.6	5.3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이러한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이유로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고,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29.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18.6%,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12.4%를 차지하였다. 인구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과 청년의 삶의 경험이 다르다는 응답과 젊은 세대의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증가한 반면, 고령 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특히 적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 및 하위 경제수준에서는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온 경험이 매우 다르다는 응답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 및 자녀 여부별로는 미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고령 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혼/별거 및 사별의 경우 젊은 세대의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해 연령대별 혼인·자녀 상태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이상 가구는 전체 응답자에 비해 세대 간 소통 기회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줄고(29.4%), 노인층과 청년층의 삶의 경험이 다르다는 응답률(40.7%)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27〉 참조).

〈표 6-27〉 우리 사회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갈등이 심각한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세대 간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노년층이 경험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기타 ³⁾	계(명)
전체 ¹⁾	39.1	29.8	18.6	12.4	0.1	100.0 (5,777)
성별($\chi^2=6.222$)						
남성	40.4	29.7	18.2	11.6	0.1	100.0 (2,889)
여성	37.8	29.9	19.0	13.1	0.2	100.0 (2,888)
연령($\chi^2=104.643^{***}$)						
19~29세	37.4	28.2	16.0	18.3	0.1	100.0 (1,004)
30~39세	41.6	28.2	18.2	11.9	0.2	100.0 (918)
40~49세	39.2	27.0	17.9	15.9	0.1	100.0 (1,117)
50~59세	41.3	29.5	20.2	8.9	0.1	100.0 (1,143)
60~69세	37.5	34.1	18.1	10.1	0.1	100.0 (867)
70~79세	34.2	34.5	22.6	8.3	0.4	100.0 (473)
80세 이상	40.8	32.9	20.2	6.1	0.0	100.0 (254)
지역($\chi^2=35.034^{***}$)						
대도시	39.5	28.4	17.9	13.9	0.2	100.0 (2,554)
중소도시	37.6	29.7	20.0	12.6	0.0	100.0 (2,194)
농어촌	41.1	33.5	17.3	8.1	0.1	100.0 (1,028)
교육수준($\chi^2=41.565^{***}$)						
중졸 이하	36.1	33.5	21.6	8.6	0.2	100.0 (857)
고졸	39.1	30.1	19.6	11.1	0.1	100.0 (2,155)
초대졸 이상	40.0	28.5	16.9	14.5	0.1	100.0 (2,765)
경제활동 여부($\chi^2=4.42$)						
예	39.4	29.7	18.2	12.6	0.1	100.0 (4,014)
아니오	38.5	30.2	19.4	11.8	0.2	100.0 (1,763)
종사상 지위($\chi^2=23.797$)						
상용직	40.5	28.4	17.5	13.6	0.1	100.0 (2,154)
임시직	37.9	30.3	16.1	15.5	0.3	100.0 (370)
일용직	39.8	31.3	16.1	12.8	0.0	100.0 (113)
자영업자	38.3	30.8	20.3	10.5	0.1	100.0 (1,284)
무급가족종사자	33.7	40.1	18.7	7.5	0.0	100.0 (93)
주관적 사회계층($\chi^2=15.986^*$)						
상(7-10)	41.2	31.1	17.7	9.9	0.1	100.0 (706)
중(5-6)	40.4	28.4	18.1	12.9	0.1	100.0 (3,015)
하(1-4)	36.5	31.4	19.6	12.4	0.1	100.0 (2,056)
경제수준($\chi^2=22.84^{**}$)						
상(상-중상)	38.3	29.0	21.8	10.6	0.2	100.0 (474)
중(중)	40.7	27.9	17.8	13.5	0.1	100.0 (2,963)
하(중하-하)	37.2	32.4	18.9	11.4	0.1	100.0 (2,340)
혼인 상태($\chi^2=64.555^{***}$)						
미혼	38.2	28.4	16.1	17.2	0.1	100.0 (1,367)
동거/사실혼	37.0	32.1	18.7	11.8	0.3	100.0 (879)
법률혼(유배우)	40.4	29.5	18.8	11.2	0.1	100.0 (2,892)
이혼/별거	40.8	25.5	25.1	8.6	0.0	100.0 (188)
사별	36.6	33.5	22.0	8.0	0.0	100.0 (451)

특성	세대 간 소통하는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	노년층과 젊은층이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	젊은 세대가 노년층 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 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기타 ³⁾	계 (명)
자녀 유무($\chi^2=33.273^{***}$)						
예	39.0	30.6	19.4	10.8	0.1	100.0 (4,014)
아니오	39.2	28.1	16.7	15.9	0.1	100.0 (1,763)
가구 형태($\chi^2=29.59^{**}$)						
1세대 가구	39.1	31.3	18.6	10.8	0.2	100.0 (2,311)
2세대 가구	39.4	28.4	18.6	13.5	0.1	100.0 (3,343)
3세대 이상 가구	29.4	40.7	17.9	11.2	0.8	100.0 (117)
기타	20.5	34.1	20.3	25.1	0.0	100.0 (6)

주: 1) 우리 사회의 직장과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5,777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기타 0.1% (문정부와 민주당이 세대 지역 갈등 정책을 하고 있음 1건, 서로가 이해 부족 1건, 이념·지역·계층 간에 심하기 때문에 1건, 이유가 불분하고 노인에 대한 혐오감이 있음 1건, 정부가 세대 간, 지역 간 편가르기 하고 있음. 정부의 정책이 문제임 1건, 정부가 세월호와 5.18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해서 사회갈등이 있음 1건, 정부의 정책이 문제 1건, 정치적으로 이기적인 세대 간 부추김 1건)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세대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대하여, 55.1%는 ‘대체로 그렇다’, 4.0%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총 59.2%가 가족 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직장과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률보다는 낮으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가족 내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전 연령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특히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대도시 또는 농어촌 거주자(5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의 경우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특히 적었다.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 계층 또는 상위 경제수준에서 매우 또는 보통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각각 65.3%, 65.0%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별거 응답자(54.5%), 가구 형태별로는 기타 비친족 가구 응답자(34.9%)에게서 가족 내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표 6-28〉 참조).

3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28〉 우리 사회 가족 내에서의 세대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40.8	3.1	37.7	59.2	55.1	4.0	100.0 (8,000)
성별($\chi^2=0.578$)							
남성	40.5	2.9	37.6	59.5	55.4	4.1	100.0 (3,965)
여성	41.1	3.2	37.9	58.9	54.9	4.0	100.0 (4,035)
연령($\chi^2=15.545$)							
19~29세	41.5	3.7	37.7	58.5	54.1	4.5	100.0 (1,360)
30~39세	40.8	2.8	38.0	59.2	54.7	4.5	100.0 (1,279)
40~49세	40.4	3.2	37.3	59.6	56.1	3.4	100.0 (1,533)
50~59세	40.3	2.9	37.4	59.7	55.2	4.5	100.0 (1,590)
60~69세	41.8	3.5	38.4	58.2	54.9	3.3	100.0 (1,204)
70~79세	40.4	2.0	38.4	59.6	56.0	3.6	100.0 (675)
80세 이상	39.3	2.0	37.3	60.7	55.7	5.0	100.0 (360)
지역($\chi^2=29.487^{***}$)							
대도시	42.1	4.0	38.1	57.9	53.6	4.3	100.0 (3,523)
중소도시	38.7	2.1	36.6	61.3	57.6	3.6	100.0 (3,062)
농어촌	42.0	2.6	39.4	58.0	53.6	4.3	100.0 (1,415)
교육수준($\chi^2=3.938$)							
중졸 이하	40.1	2.8	37.4	59.9	56.6	3.3	100.0 (1,211)
고졸	41.3	3.3	38.0	58.7	54.5	4.2	100.0 (2,961)
초대졸 이상	40.6	3.0	37.7	59.4	55.2	4.2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4.509$)							
예	40.6	3.2	37.5	59.4	55.6	3.8	100.0 (5,520)
아니오	41.2	2.8	38.4	58.8	54.2	4.6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41.397^{***}$)							
상용직	38.9	3.1	35.8	61.1	57.5	3.7	100.0 (2,947)
임시직	47.9	6.7	41.3	52.1	47.4	4.6	100.0 (540)
일용직	39.9	1.8	38.1	60.1	55.5	4.6	100.0 (161)
자영업자	41.4	2.5	39.0	58.6	54.7	3.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1.1	3.0	38.1	58.9	57.4	1.6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5.198^{***}$)							
상(7-10)	34.7	2.6	32.1	65.3	60.2	5.1	100.0 (975)
중(5-6)	41.4	2.7	38.7	58.6	54.7	4.0	100.0 (4,186)
하(1-4)	42.1	3.8	38.4	57.9	54.1	3.8	100.0 (2,840)
경제수준($\chi^2=20.651^{**}$)							
상(상-중상)	35.0	2.8	32.2	65.0	58.5	6.5	100.0 (620)
중(중)	41.0	2.7	38.3	59.0	55.0	4.0	100.0 (4,075)
하(중하-하)	41.7	3.5	38.2	58.3	54.7	3.7	100.0 (3,304)

특성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혼인 상태($\chi^2=94.925^{***}$)							
미혼	41.7	3.4	38.3	58.3	54.4	3.9	100.0 (1,886)
동거/사실혼	42.0	6.9	35.2	58.0	55.2	2.7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9.7	2.0	37.7	60.3	55.7	4.7	100.0 (3,932)
이혼/별거	45.5	3.1	42.3	54.5	51.6	2.9	100.0 (280)
사별	40.9	1.5	39.4	59.1	55.6	3.5	100.0 (654)
자녀 유무($\chi^2=2.33$)							
예	40.6	3.0	37.7	59.4	55.1	4.2	100.0 (5,561)
아니오	41.2	3.3	37.9	58.8	55.2	3.6	100.0 (2,439)
가구 형태($\chi^2=17.541^*$)							
1세대 가구	40.1	2.9	37.2	59.9	56.6	3.3	100.0 (3,200)
2세대 가구	40.9	3.2	37.8	59.1	54.5	4.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8.3	3.4	44.9	51.7	47.3	4.4	100.0 (184)
기타	65.1	4.0	61.0	34.9	34.9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가정 내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이유로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자식 세대에 강요한다는 응답이 20.0%,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저마다의 고충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8.0%,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7.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구 특성별 주요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세대의 강요라는 응답률은 낮아졌고, 부모-자식 세대 모두의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80세 이상에서는 부모-자식 세대 모두 생활의 여유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특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 중에서 세대 간 이해 부족이 50.0%로 큰 비율을 차지한 반면, 부모 세대의 강요는 14.2%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부모 세대의 강요가 주요 이유라는 응답률은 초대줄 이상인 경우, 미혼 또는 동거/사실혼 응답자인 경우, 상

용직·임시직 근로자인 경우 2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자녀 대비 유자녀 응답자의 경우, 1세대 가구보다는 2·3세대 가구에서 부모-자녀 세대 모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고, 부모 세대의 강요라는 응답률은 낮았다(〈표 6-29〉 참조).

〈표 6-29〉 우리 사회 가족 내에서의 세대갈등이 심각한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부모와 자식 세대 서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자식 세대에게 강요하기 때문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의 저마다의 고충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	자식 세대 대해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세대가 서로에 대해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기타 ³⁾	계(명)
전체 ¹⁾	44.2	20.0	18.0	17.8	0.0	100.0	(4,736)
성별($\chi^2=5.605$)							
남성	44.2	18.9	18.7	18.1	0.0	100.0	(2,359)
여성	44.1	21.1	17.2	17.5	0.0	100.0	(2,377)
연령($\chi^2=2622.953^{***}$)							
19~29세	37.5	28.0	18.4	16.2	0.0	100.0	(796)
30~39세	42.9	23.5	18.1	15.6	0.0	100.0	(756)
40~49세	41.9	21.2	16.1	20.8	0.0	100.0	(913)
50~59세	48.7	16.8	18.0	16.4	0.1	100.0	(950)
60~69세	47.2	15.7	18.2	19.0	0.0	100.0	(700)
70~79세	48.1	14.4	18.1	19.3	0.0	100.0	(402)
80세 이상	46.1	12.7	22.3	18.9	0.0	100.0	(218)
지역($\chi^2=34.578^{***}$)							
대도시	43.1	21.7	17.1	18.2	0.0	100.0	(2,040)
중소도시	42.8	20.8	17.8	18.6	0.1	100.0	(1,875)
농어촌	50.0	14.2	20.6	15.3	0.0	100.0	(820)
교육수준($\chi^2=32.814^{***}$)							
중졸 이하	46.4	14.1	20.9	18.6	0.0	100.0	(725)
고졸	44.8	18.9	17.4	18.9	0.1	100.0	(1,737)
초대졸 이상	43.0	22.8	17.5	16.7	0.0	100.0	(2,274)
경제활동 여부 ($\chi^2=10.257^*$)							
예	45.1	20.4	17.7	16.8	0.0	100.0	(3,276)
아니오	42.0	19.3	18.6	20.1	0.0	100.0	(1,459)
종사상 지위 ($\chi^2=76.04^{***}$)							
상용직	43.0	22.7	17.4	16.9	0.0	100.0	(1,802)
임시직	45.3	20.2	17.1	17.4	0.0	100.0	(281)
일용직	50.0	13.2	20.0	15.7	1.1	100.0	(97)
자영업자	48.2	17.3	17.6	16.9	0.0	100.0	(1,029)
무급가족종사자	49.0	16.9	23.7	10.4	0.0	100.0	(68)

특성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해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부모 세대가 자식들의 사고방식을 자식 세대에게 강요하기 때문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자만의 고충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	자식 세대 부모 대하 중중히 부족하기 때문	세대 세대 세대와 기타 ³⁾	계(명)
주관적 사회계층 ($\chi^2=17.221^*$)						
상(7-10)	47.6	16.1	20.5	15.9	0.0	100.0 (637)
중(5-6)	44.0	21.3	17.4	17.3	0.0	100.0 (2,455)
하(1-4)	43.2	19.7	17.8	19.3	0.1	100.0 (1,644)
경제수준($\chi^2=8.321$)						
상(상-중상)	44.5	22.2	18.0	15.4	0.0	100.0 (403)
중(중)	44.6	20.6	17.1	17.7	0.0	100.0 (2,405)
하(중하-하)	43.6	18.9	19.0	18.5	0.1	100.0 (1,928)
혼인 상태($\chi^2=68.1^{***}$)						
미혼	39.2	25.2	18.9	16.6	0.0	100.0 (1,101)
동거/사실혼	37.9	22.0	20.7	19.2	0.2	100.0 (723)
법률혼(유배우)	47.8	17.9	16.5	17.7	0.0	100.0 (2,373)
이혼/별거	48.0	19.8	11.7	20.6	0.0	100.0 (153)
사별	46.2	14.3	21.2	18.3	0.0	100.0 (386)
자녀 유무($\chi^2=21.415^{***}$)						
예	45.7	18.4	17.9	18.0	0.0	100.0 (3,301)
아니오	40.7	23.9	18.2	17.3	0.0	100.0 (1,434)
가구 형태($\chi^2=2820^{***}$)						
1세대 가구	46.8	16.5	18.4	18.2	0.1	100.0 (1,917)
2세대 가구	42.7	22.4	17.5	17.4	0.0	100.0 (2,720)
3세대 이상 가구	33.4	20.7	22.0	23.9	0.0	100.0 (95)
기타	15.3	56.1	28.7	0.0	0.0	100.0 (4)

주: 1) 우리 사회의 가족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4,736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기타 0.0%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건)

다음은 노인과 젊은 사람이 갈등할 수 있는 6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노인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첫 번째 문항에는 55.0%가 ‘그런 편이다’, 4.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총 5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5.2%가 ‘그런 편이다’, 21.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총 76.5%가 동의하였다.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문항에는 44.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42.5%,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8%를 차지하였다(총 50.3% 매우 또는 약간 동의). 네 번째는 직장에서 고령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젊은 사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직장의 전체적인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항으로 49.4%가 ‘그런 편이다’, 6.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총 55.7%가 동의하였다. 다섯 번째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항에는 45.2%가 ‘그런 편이다’, 7.0%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52.2%가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1.5%가 ‘그런 편이다’, 20.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총 82.1%가 동의하였다(〈표 6-30〉 참조).

〈표 6-30〉 노인과 젊은 사람의 세대갈등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노인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40.3	3.3	37.0	59.8	55.0	4.8	100.0 (8,000)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	23.5	1.6	21.9	76.5	55.2	21.3	100.0 (8,000)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49.7	5.0	44.7	50.3	42.5	7.8	100.0 (8,000)
직장에서 고령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젊은 사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직장의 전체적인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4.4	3.1	41.3	55.7	49.4	6.3	100.0 (8,000)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47.8	6.0	41.8	52.2	45.2	7.0	100.0 (8,000)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	17.9	1.6	16.3	82.1	61.5	20.6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의 의사결정에서 노인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70세 이상 노인 중 68.0% 이상이 동의한 반면, 20~30대는 53.0% 이상(각각 54.0%, 53.1%)이 동의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서 동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 응답자,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동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별인 경우, 유자녀인 경우, 그리고 1세대 가구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31〉 참조).

〈표 6-31〉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은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40.3	3.3	37.0	59.7	55.0	4.8	100.0 (8,000)
성별($\chi^2=1.332$)							
남성	40.7	3.5	37.3	59.3	54.5	4.7	100.0 (3,965)
여성	39.8	3.1	36.7	60.2	55.4	4.8	100.0 (4,035)
연령($\chi^2=108.841^{***}$)							
19~29세	46.0	4.6	41.4	54.0	49.0	5.0	100.0 (1,360)
30~39세	46.9	3.6	43.3	53.1	49.3	3.8	100.0 (1,279)
40~49세	41.9	3.8	38.0	58.1	53.7	4.4	100.0 (1,533)
50~59세	37.8	2.7	35.1	62.2	57.9	4.2	100.0 (1,590)
60~69세	35.3	2.2	33.1	64.7	58.8	5.9	100.0 (1,204)
70~79세	31.5	2.3	29.2	68.5	63.8	4.7	100.0 (675)
80세 이상	31.8	2.8	29.0	68.2	60.9	7.2	100.0 (360)
지역($\chi^2=23.36^{***}$)							
대도시	39.3	2.7	36.7	60.7	55.3	5.3	100.0 (3,523)
중소도시	42.2	3.6	38.6	57.8	54.1	3.8	100.0 (3,062)
농어촌	38.4	4.1	34.3	61.6	56.0	5.6	100.0 (1,415)
교육수준($\chi^2=56.634^{***}$)							
중졸 이하	32.7	2.9	29.9	67.3	61.3	6.0	100.0 (1,211)
고졸	38.6	3.0	35.6	61.4	56.1	5.2	100.0 (2,961)
초대졸 이상	43.9	3.6	40.3	56.1	52.1	4.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4.797^{**}$)							
예	40.9	3.8	37.2	59.1	54.5	4.6	100.0 (5,520)
아니오	38.7	2.2	36.5	61.3	56.0	5.2	100.0 (2,48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종사상 지위($\chi^2=56.808^{***}$)							
상용직	42.2	3.2	39.0	57.8	52.8	5.1	100.0 (2,947)
임시직	42.7	7.5	35.3	57.3	53.9	3.4	100.0 (540)
일용직	33.9	6.0	27.9	66.1	56.4	9.8	100.0 (161)
자영업자	39.2	3.3	36.0	60.8	57.0	3.7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6.7	4.6	32.1	63.3	61.4	2.0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65.461^{***}$)							
상(7-10)	30.6	1.8	28.8	69.4	61.6	7.8	100.0 (975)
중(5-6)	40.4	3.2	37.2	59.6	55.0	4.6	100.0 (4,186)
하(1-4)	43.3	3.9	39.4	56.7	52.7	4.0	100.0 (2,840)
경제수준($\chi^2=30.477^{***}$)							
상(상-중상)	37.7	3.7	34.1	62.3	54.8	7.4	100.0 (620)
중(중)	38.6	3.0	35.6	61.4	56.2	5.2	100.0 (4,075)
하(중하-하)	42.8	3.6	39.2	57.2	53.5	3.8	100.0 (3,304)
혼인 상태($\chi^2=73.606^{***}$)							
미혼	45.8	4.6	41.2	54.2	49.9	4.3	100.0 (1,886)
동거/사실혼	41.3	3.8	37.5	58.7	53.9	4.8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8.4	2.6	35.8	61.6	57.1	4.5	100.0 (3,932)
이혼/별거	42.1	4.6	37.5	57.9	54.3	3.6	100.0 (280)
사별	32.7	1.8	31.0	67.3	59.1	8.2	100.0 (654)
자녀 유무($\chi^2=20.383^{***}$)							
예	39.0	2.9	36.1	61.0	56.4	4.6	100.0 (5,561)
아니오	43.1	4.2	38.9	56.9	51.8	5.1	100.0 (2,439)
가구 형태($\chi^2=40.682^{***}$)							
1세대 가구	37.2	3.8	33.5	62.8	57.6	5.2	100.0 (3,200)
2세대 가구	42.1	3.0	39.0	57.9	53.4	4.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5.5	0.9	44.6	54.5	50.8	3.8	100.0 (184)
기타	76.3	0.0	76.3	23.7	23.7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젊은 세대의 교류 기회 부족에 대한 의견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 하위 경제수준, 사별 또는 법률혼(유배우) 응답자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32〉 참조).

〈표 6-32〉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젊은 세대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23.5	1.6	21.9	76.5	55.2	21.3	100.0	(8,000)
성별($\chi^2=4.413$)								
남성	24.2	1.8	22.4	75.8	54.2	21.6	100.0	(3,965)
여성	22.9	1.4	21.5	77.1	56.1	21.0	100.0	(4,035)
연령($\chi^2=45.311^{***}$)								
19~29세	25.6	1.7	23.9	74.4	56.6	17.8	100.0	(1,360)
30~39세	23.3	1.8	21.5	76.7	56.9	19.8	100.0	(1,279)
40~49세	24.8	1.5	23.3	75.2	54.6	20.6	100.0	(1,533)
50~59세	24.1	2.0	22.1	75.9	52.1	23.8	100.0	(1,590)
60~69세	22.2	0.9	21.3	77.8	56.6	21.1	100.0	(1,204)
70~79세	20.5	1.1	19.4	79.5	53.4	26.1	100.0	(675)
80세 이상	18.4	1.9	16.6	81.6	58.6	22.9	100.0	(360)
지역($\chi^2=33.445^{***}$)								
대도시	22.9	1.6	21.3	77.1	54.1	22.9	100.0	(3,523)
중소도시	25.6	1.8	23.9	74.4	55.9	18.4	100.0	(3,062)
농어촌	20.4	1.1	19.4	79.6	56.2	23.3	100.0	(1,415)
교육수준($\chi^2=5.079$)								
중졸 이하	21.9	1.6	20.3	78.1	55.4	22.7	100.0	(1,211)
고졸	24.1	1.5	22.6	75.9	54.3	21.6	100.0	(2,961)
초대졸 이상	23.6	1.6	22.0	76.4	55.8	20.6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9.744^*$)								
예	24.5	1.7	22.8	75.5	54.3	21.2	100.0	(5,520)
아니오	21.4	1.3	20.1	78.6	57.1	21.5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9.215$)								
상용직	24.4	1.9	22.5	75.6	54.5	21.1	100.0	(2,947)
임시직	22.6	1.3	21.3	77.4	60.4	17.0	100.0	(540)
일용직	23.0	2.1	20.9	77.0	55.8	21.1	100.0	(161)
자영업자	24.9	1.4	23.5	75.1	52.3	22.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2.5	2.3	30.3	67.5	49.6	17.9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12.262$)								
상(7-10)	22.6	1.0	21.7	77.4	53.6	23.7	100.0	(975)
중(5-6)	23.5	1.9	21.6	76.5	55.0	21.4	100.0	(4,186)
하(1-4)	23.9	1.3	22.5	76.1	55.9	20.2	100.0	(2,840)
경제수준($\chi^2=17.061^{**}$)								
상(상-중상)	24.0	1.2	22.8	76.0	50.6	25.4	100.0	(620)
중(중)	23.7	1.9	21.8	76.3	54.8	21.5	100.0	(4,075)
하(중하-하)	23.2	1.2	22.0	76.8	56.5	20.3	100.0	(3,30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 상태($\chi^2=72.407^{***}$)									
미혼	25.3	1.8	23.5	74.7	55.5	19.2	100.0	(1,886)	
동거/사실혼	29.6	3.2	26.3	70.4	52.0	18.4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21.1	1.1	20.0	78.9	55.7	23.2	100.0	(3,932)	
이혼/별거	24.1	1.0	23.1	75.9	59.3	16.6	100.0	(280)	
사별	21.2	0.8	20.4	78.8	55.6	23.2	100.0	(654)	
가구 형태($\chi^2=13.628$)									
1세대 가구	22.4	1.6	20.8	77.6	55.3	22.3	100.0	(3,200)	
2세대 가구	24.5	1.6	22.9	75.5	54.8	20.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9.5	1.4	18.1	80.5	61.3	19.2	100.0	(184)	
기타	19.4	0.0	19.4	80.6	80.6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의견에는 연령별로 동의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및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동의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의 경우, 1세대 또는 2세대 가구 응답자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33> 참조).

<표 6-33>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으로 인해 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¹⁾	49.7	5.0	44.7	50.3	42.5	7.8	100.0	(8,000)	
성별($\chi^2=1.298$)									
남성	49.3	5.0	44.4	50.7	43.0	7.6	100.0	(3,965)	
여성	50.1	5.0	45.1	49.9	41.9	8.0	100.0	(4,035)	
연령($\chi^2=19.206$)									
19~29세	47.6	4.4	43.1	52.4	44.4	8.1	100.0	(1,360)	
30~39세	48.1	5.8	42.3	51.9	43.3	8.6	100.0	(1,279)	
40~49세	48.9	5.0	43.9	51.1	43.4	7.7	100.0	(1,533)	
50~59세	50.8	4.5	46.3	49.2	41.9	7.3	100.0	(1,590)	
60~69세	50.5	4.8	45.8	49.5	42.2	7.3	100.0	(1,204)	
70~79세	52.7	5.3	47.5	47.3	39.8	7.4	100.0	(675)	
80세 이상	53.7	6.2	47.5	46.3	37.0	9.3	100.0	(36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지역($\chi^2=29.063^{***}$)							
대도시	48.5	4.9	43.6	51.5	42.5	9.0	100.0 (3,523)
중소도시	52.4	4.8	47.7	47.6	41.0	6.5	100.0 (3,062)
농어촌	46.8	5.6	41.2	53.2	45.4	7.8	100.0 (1,415)
교육수준($\chi^2=19.691^{**}$)							
중졸 이하	54.3	5.4	48.9	45.7	38.2	7.4	100.0 (1,211)
고졸	49.1	4.7	44.4	50.9	42.1	8.8	100.0 (2,961)
초대졸 이상	48.7	5.0	43.6	51.3	44.1	7.2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3.198$)							
예	49.3	4.7	44.6	50.7	42.9	7.8	100.0 (5,520)
아니오	50.6	5.5	45.1	49.4	41.5	7.9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5.577$)							
상용직	48.3	4.5	43.8	51.7	44.0	7.7	100.0 (2,947)
임시직	49.4	3.6	45.8	50.6	41.7	8.9	100.0 (540)
일용직	53.8	6.9	46.9	46.2	35.4	10.8	100.0 (161)
자영업자	50.5	5.0	45.5	49.5	42.2	7.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9.4	8.5	40.9	50.6	43.3	7.3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4.492^{***}$)							
상(7-10)	45.2	3.2	42.0	54.8	44.3	10.5	100.0 (975)
중(5-6)	50.1	4.8	45.4	49.9	42.6	7.3	100.0 (4,186)
하(1-4)	50.6	5.9	44.7	49.4	41.7	7.7	100.0 (2,840)
경제수준($\chi^2=22.677^{***}$)							
상(상-중상)	45.6	5.2	40.4	54.4	44.2	10.1	100.0 (620)
중(중)	48.1	5.0	43.1	51.9	44.1	7.8	100.0 (4,075)
하(중하-하)	52.5	5.0	47.5	47.5	40.2	7.4	100.0 (3,304)
혼인 상태($\chi^2=20.6$)							
미혼	47.4	4.5	42.8	52.6	44.7	8.0	100.0 (1,886)
동거/사실혼	49.2	5.2	44.1	50.8	42.5	8.3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49.8	5.1	44.7	50.2	42.6	7.6	100.0 (3,932)
이혼/별거	55.3	3.7	51.6	44.7	39.0	5.7	100.0 (280)
사별	54.2	5.6	48.6	45.8	36.9	8.9	100.0 (654)
자녀 유무($\chi^2=9.106^*$)							
예	50.6	5.2	45.4	49.4	42.1	7.3	100.0 (5,561)
아니오	47.7	4.6	43.1	52.3	43.4	8.9	100.0 (2,439)
가구 형태($\chi^2=20.39^*$)							
1세대 가구	49.8	4.7	45.1	50.2	42.1	8.0	100.0 (3,200)
2세대 가구	49.1	5.0	44.1	50.9	43.1	7.8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63.5	9.4	54.1	36.5	32.5	4.0	100.0 (184)
기타	50.7	0.0	50.7	49.3	42.1	7.2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고령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젊은 층과 직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동의 여부도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59.0%)

의 동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직 근로자(57.5%)가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미혼·동거/사실혼 응답자와 무자녀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34〉 참조).

〈표 6-34〉 세대갈등 동의 정도: 고령 근로자는 젊은 사람,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44.4	3.1	41.3	55.6	49.4	6.3	100.0 (8,000)
성별($\chi^2=1.42$)							
남성	44.4	2.8	41.6	55.6	49.4	6.2	100.0 (3,965)
여성	44.4	3.3	41.1	55.6	49.3	6.3	100.0 (4,035)
연령($\chi^2=27.449$)							
19~29세	41.3	1.9	39.4	58.7	51.7	7.1	100.0 (1,360)
30~39세	43.2	3.1	40.1	56.8	50.5	6.2	100.0 (1,279)
40~49세	45.6	3.2	42.4	54.4	48.3	6.1	100.0 (1,533)
50~59세	43.7	3.1	40.6	56.3	49.7	6.6	100.0 (1,590)
60~69세	47.1	3.9	43.2	52.9	46.5	6.4	100.0 (1,204)
70~79세	43.7	3.1	40.6	56.3	51.6	4.7	100.0 (675)
80세 이상	50.1	3.9	46.2	49.9	44.9	5.0	100.0 (360)
지역($\chi^2=63.737^{***}$)							
대도시	41.0	3.0	38.0	59.0	52.0	7.1	100.0 (3,523)
중소도시	48.0	2.3	45.7	52.0	46.8	5.2	100.0 (3,062)
농어촌	45.1	4.9	40.2	54.9	48.3	6.6	100.0 (1,415)
교육수준($\chi^2=7.592$)							
중졸 이하	47.1	3.9	43.2	52.9	46.8	6.1	100.0 (1,211)
고졸	44.7	3.0	41.7	55.3	49.1	6.2	100.0 (2,961)
초대졸 이상	43.3	2.8	40.4	56.7	50.3	6.4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5.752$)							
예	43.6	2.9	40.7	56.4	50.2	6.2	100.0 (5,520)
아니오	46.2	3.4	42.8	53.8	47.5	6.3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70.681^{***}$)							
상용직	42.5	2.6	39.9	57.5	50.7	6.7	100.0 (2,947)
임시직	48.2	3.1	45.1	51.8	47.4	4.3	100.0 (540)
일용직	49.4	2.6	46.9	50.6	46.7	3.8	100.0 (161)
자영업자	43.2	3.3	40.0	56.8	50.6	6.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6.1	4.6	41.5	53.9	47.8	6.1	100.0 (115)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저렴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주관적 사회계층 ($\chi^2=36.042^{***}$)								
상(7-10)	39.6	3.6	36.0	60.4	51.6	8.9	100.0	(975)
중(5-6)	43.3	2.7	40.6	56.7	50.9	5.8	100.0	(4,186)
하(1-4)	47.6	3.3	44.2	52.4	46.4	6.1	100.0	(2,840)
경제수준($\chi^2=42.874^{***}$)								
상(상-중상)	41.3	5.5	35.8	58.7	51.0	7.8	100.0	(620)
중(중)	42.3	3.0	39.4	57.7	51.2	6.5	100.0	(4,075)
하(중하-하)	47.5	2.8	44.8	52.5	46.8	5.6	100.0	(3,304)
혼인 상태($\chi^2=38.23^{***}$)								
미혼	41.7	2.1	39.6	58.3	51.1	7.1	100.0	(1,886)
동거/사실혼	41.2	4.2	36.9	58.8	51.0	7.8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46.2	3.1	43.1	53.8	48.3	5.5	100.0	(3,932)
이혼/별거	46.1	2.9	43.1	53.9	47.5	6.4	100.0	(280)
사별	46.6	3.3	43.2	53.4	48.4	5.0	100.0	(654)
자녀 유무($\chi^2=11.859^{**}$)								
예	45.0	3.5	41.6	55.0	48.9	6.1	100.0	(5,561)
아니오	42.9	2.1	40.8	57.1	50.4	6.7	100.0	(2,439)
가구 형태($\chi^2=13.867$)								
1세대 가구	46.0	3.1	42.9	54.0	48.4	5.6	100.0	(3,200)
2세대 가구	43.1	3.0	40.1	56.9	50.1	6.8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7.2	3.5	43.7	52.8	48.6	4.3	100.0	(184)
기타	67.8	0.0	67.8	32.2	32.2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젊은 층의 선거의견 소외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져, 20~30대의 55.0% 이상이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응답자의 경우, 그리고 무자녀의 경우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35〉 참조).

〈표 6-35〉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인구 증가로 선거에 젊은 사람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47.8	6.0	41.8	52.2	45.2	7.0	100.0	(8,000)
성별($\chi^2=3.025$)								
남성	47.5	5.5	42.0	52.5	45.5	7.0	100.0	(3,965)
여성	48.1	6.4	41.6	51.9	44.9	7.0	100.0	(4,035)
연령($\chi^2=58.983^{***}$)								
19~29세	44.0	4.7	39.3	56.0	47.3	8.8	100.0	(1,360)
30~39세	44.6	4.4	40.1	55.4	47.5	8.0	100.0	(1,279)
40~49세	47.1	5.5	41.6	52.9	45.0	7.9	100.0	(1,533)
50~59세	48.7	6.1	42.6	51.3	45.4	5.9	100.0	(1,590)
60~69세	51.2	7.8	43.5	48.8	43.4	5.4	100.0	(1,204)
70~79세	53.4	8.9	44.5	46.6	41.9	4.7	100.0	(675)
80세 이상	50.4	6.7	43.7	49.6	41.9	7.7	100.0	(360)
지역($\chi^2=47.644^{***}$)								
대도시	46.8	5.2	41.7	53.2	45.3	7.8	100.0	(3,523)
중소도시	51.3	6.5	44.7	48.7	43.1	5.6	100.0	(3,062)
농어촌	42.6	6.8	35.8	57.4	49.4	8.0	100.0	(1,415)
교육수준($\chi^2=29.677^{***}$)								
중졸 이하	50.8	8.4	42.3	49.2	43.8	5.5	100.0	(1,211)
고졸	47.8	6.2	41.6	52.2	45.8	6.4	100.0	(2,961)
초대졸 이상	46.8	5.0	41.8	53.2	45.2	7.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9.951^*$)								
예	46.9	5.5	41.3	53.1	45.9	7.3	100.0	(5,520)
아니오	49.8	7.0	42.9	50.2	43.7	6.4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85.801^{***}$)								
상용직	45.9	5.0	40.9	54.1	46.7	7.4	100.0	(2,947)
임시직	46.4	5.1	41.3	53.6	46.8	6.8	100.0	(540)
일용직	50.2	7.3	42.9	49.8	44.1	5.7	100.0	(161)
자영업자	48.2	6.2	42.0	51.8	44.6	7.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8.9	9.1	39.8	51.1	43.4	7.7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5.791^{***}$)								
상(7-10)	42.2	3.5	38.7	57.8	47.4	10.4	100.0	(975)
중(5-6)	49.0	6.1	42.9	51.0	44.4	6.5	100.0	(4,186)
하(1-4)	47.9	6.7	41.2	52.1	45.6	6.6	100.0	(2,840)
경제수준($\chi^2=7.616$)								
상(상-중상)	47.0	6.5	40.5	53.0	44.6	8.4	100.0	(620)
중(중)	47.5	6.1	41.4	52.5	45.1	7.4	100.0	(4,075)
하(중하-하)	48.3	5.7	42.6	51.7	45.5	6.2	100.0	(3,304)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혼인 상태($\chi^2=66.863^{***}$)							
미혼	44.4	4.3	40.1	55.6	47.3	8.3	100.0 (1,886)
동거/사실혼	50.8	9.0	41.8	49.2	43.1	6.1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49.2	5.7	43.5	50.8	43.7	7.1	100.0 (3,932)
이혼/별거	41.6	5.4	36.1	58.4	55.8	2.6	100.0 (280)
사별	46.2	7.2	39.0	53.8	47.6	6.2	100.0 (654)
자녀 유무($\chi^2=22.943^{***}$)							
예	49.1	6.7	42.4	50.9	44.3	6.6	100.0 (5,561)
아니오	44.9	4.4	40.4	55.1	47.3	7.9	100.0 (2,439)
가구 형태($\chi^2=11.531$)							
1세대 가구	48.8	6.2	42.6	51.2	44.8	6.4	100.0 (3,200)
2세대 가구	47.1	5.8	41.3	52.9	45.5	7.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0.2	7.3	42.9	49.8	43.5	6.3	100.0 (184)
기타	26.5	15.3	11.2	73.5	65.1	8.4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인구 증가가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젊은 층의 동의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연령층에서 80.0%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역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농어촌 지역에서 높았다. 경제수준별 차이도 있었는데, 중산층보다는 상위 또는 하위 수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별거 또는 사별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84.5%로 동일하게 높았고, 가구 형태별로는 기타 비친족 가구를 제외한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84.0%로 높게 나타났다(〈표 6-36〉 참조).

〈표 6-36〉 세대갈등 동의 정도: 노인인구 증가가 젊은 사람의 부양 부담을 증가시킨다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17.9	1.6	16.3	82.1	61.5	20.6	100.0 (8,000)
성별($\chi^2=6.802$)							
남성	18.1	1.4	16.7	81.9	62.2	19.7	100.0 (3,965)
여성	17.7	1.8	15.9	82.3	60.8	21.5	100.0 (4,035)
연령($\chi^2=31.173^*$)							
19~29세	16.6	1.5	15.1	83.4	60.8	22.6	100.0 (1,360)
30~39세	16.2	1.2	15.1	83.8	62.6	21.2	100.0 (1,279)
40~49세	18.6	1.6	17.0	81.4	60.1	21.3	100.0 (1,533)
50~59세	19.6	1.9	17.7	80.4	58.6	21.8	100.0 (1,590)
60~69세	18.3	1.4	16.9	81.7	63.2	18.5	100.0 (1,204)
70~79세	17.5	1.9	15.6	82.5	66.3	16.2	100.0 (675)
80세 이상	17.9	2.3	15.7	82.1	64.1	18.0	100.0 (360)
지역($\chi^2=144.066^{***}$)							
대도시	16.3	1.9	14.3	83.7	57.9	25.8	100.0 (3,523)
중소도시	20.8	1.2	19.6	79.2	64.1	15.1	100.0 (3,062)
농어촌	15.6	1.6	14.1	84.4	64.9	19.5	100.0 (1,415)
교육수준($\chi^2=7.022$)							
중졸 이하	18.3	1.9	16.3	81.7	63.2	18.6	100.0 (1,211)
고졸	18.3	1.5	16.8	81.7	61.5	20.2	100.0 (2,961)
초대졸 이상	17.5	1.6	15.9	82.5	61.0	21.6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5.501$)							
예	18.5	1.5	16.9	81.5	60.9	20.7	100.0 (5,520)
아니오	16.6	1.7	14.9	83.4	62.9	20.5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5.55$)							
상용직	19.2	1.4	17.8	80.8	60.8	20.0	100.0 (2,947)
임시직	18.5	1.3	17.3	81.5	57.9	23.6	100.0 (540)
일용직	14.4	2.1	12.3	85.6	62.9	22.7	100.0 (161)
자영업자	17.6	1.8	15.7	82.4	62.2	20.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8.8	1.5	17.3	81.2	52.9	28.3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10.204$)							
상(7-10)	16.9	1.9	15.0	83.1	62.9	20.2	100.0 (975)
중(5-6)	18.8	1.8	17.0	81.2	61.0	20.2	100.0 (4,186)
하(1-4)	16.9	1.1	15.8	83.1	61.7	21.4	100.0 (2,840)
경제수준($\chi^2=21.711^{**}$)							
상(상-중상)	16.7	2.5	14.2	83.3	61.9	21.4	100.0 (620)
중(중)	19.4	1.9	17.5	80.6	60.7	19.9	100.0 (4,075)
하(중하-하)	16.3	1.1	15.2	83.7	62.4	21.3	100.0 (3,304)

특성	동의할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혼인 상태($\chi^2=24.218^*$)								
미혼	17.5	1.4	16.1	82.5	60.1	22.4	100.0	(1,886)
동거/사실혼	19.1	2.7	16.4	80.9	60.5	20.5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18.3	1.4	16.9	81.7	62.1	19.6	100.0	(3,932)
이혼/별거	15.5	1.4	14.1	84.5	60.4	24.1	100.0	(280)
사별	15.5	1.4	14.1	84.5	64.3	20.2	100.0	(654)
자녀 유무($\chi^2=0.341$)								
예	17.8	1.6	16.2	82.2	61.6	20.6	100.0	(5,561)
아니오	18.2	1.7	16.5	81.8	61.2	20.6	100.0	(2,439)
가구 형태($\chi^2=17.83^*$)								
1세대 가구	18.7	1.8	16.9	81.3	62.3	19.0	100.0	(3,200)
2세대 가구	17.5	1.4	16.0	82.5	60.8	21.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16.0	2.3	13.8	84.0	63.2	20.7	100.0	(184)
기타	0.0	0.0	0.0	100.0	96.0	4.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제3절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1. 청년과 노인 정책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가. 청년 정책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연령, 소득기준, 재학 또는 취업 상태, 가구 형태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된다. 가장 많은 응답자(37.4%)가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을 청년 정책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았으며, 생애과정(졸업, 진학, 취직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6%의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연령(18.7%), 가족 구성 형태(8.2%)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표 6-37> 참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별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소득기준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대도시는 연령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응답이 22.6%로 약간 높았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소득기준’의 응답률은 높아지고 ‘연령’의 응답률은 낮아졌으며, 법률혼(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응답률이, 동거/사실혼인 경우에는 ‘연령’의 응답률이 특히 높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6-37〉 청년 정책의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

(단위: %, 명)

특성	소득 기준	연령	생애 과정	가족 구성 형태	기타 ³⁾	계 (명)
전체 ¹⁾	37.4	18.7	35.6	8.2	0.1	100.0 (8,000)
성별($\chi^2=2.561$)						
남성	36.9	18.6	35.8	8.5	0.1	100.0 (3,965)
여성	37.9	18.7	35.3	8.0	0.1	100.0 (4,035)
연령($\chi^2=27.518$)						
19~29세	35.6	18.4	37.1	8.9	0.0	100.0 (1,360)
30~39세	38.2	17.3	36.4	8.1	0.0	100.0 (1,279)
40~49세	37.3	19.0	35.2	8.4	0.1	100.0 (1,533)
50~59세	36.8	18.4	36.9	7.8	0.2	100.0 (1,590)
60~69세	39.1	19.1	33.1	8.7	0.0	100.0 (1,204)
70~79세	38.4	19.9	34.5	7.1	0.1	100.0 (675)
80세 이상	38.3	20.2	32.9	8.0	0.5	100.0 (360)
지역($\chi^2=77.719^{***}$)						
대도시	35.3	22.6	34.2	7.7	0.1	100.0 (3,523)
중소도시	38.7	15.0	36.8	9.4	0.1	100.0 (3,062)
농어촌	40.0	16.6	36.2	7.0	0.2	100.0 (1,415)
교육수준($\chi^2=13.422$)						
중졸 이하	37.9	20.6	33.8	7.4	0.3	100.0 (1,211)
고졸	37.4	18.8	35.0	8.7	0.1	100.0 (2,961)
초대졸 이상	37.4	17.9	36.6	8.1	0.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0.646$)						
예	37.6	18.6	35.4	8.4	0.1	100.0 (5,520)
아니오	37.1	18.8	36.0	8.0	0.1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31.725^*$)						
상용직	36.8	18.2	36.7	8.2	0.1	100.0 (2,947)
임시직	40.2	16.1	35.7	7.9	0.0	100.0 (540)
일용직	45.1	13.5	29.3	11.6	0.6	100.0 (161)
자영업자	37.7	20.8	33.0	8.4	0.1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3.4	13.8	44.2	8.6	0.0	100.0 (115)

특성	소득 기준	연령	생애 과정	가족 구성 형태	기타 ³⁾	계 (명)
주관적 사회계층 ($\chi^2=29.616^{***}$)						
상(7-10)	34.2	21.7	34.1	9.9	0.1	100.0 (975)
중(5-6)	37.7	18.9	35.7	7.6	0.0	100.0 (4,186)
하(1-4)	38.1	17.3	35.9	8.6	0.2	100.0 (2,840)
경제수준($\chi^2=9.887$)						
상(상-중상)	37.3	20.5	33.3	8.8	0.0	100.0 (620)
중(중)	37.6	18.9	35.5	7.9	0.0	100.0 (4,075)
하(중하-하)	37.2	18.0	36.0	8.5	0.2	100.0 (3,304)
혼인 상태($\chi^2=50.254^{***}$)						
미혼	36.4	17.2	37.5	8.8	0.0	100.0 (1,886)
동거/사실혼	31.7	23.3	35.2	9.7	0.1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9.0	18.2	35.0	7.7	0.1	100.0 (3,932)
이혼/별거	40.1	18.1	35.8	5.7	0.4	100.0 (280)
사별	41.0	16.5	34.1	8.2	0.2	100.0 (654)
자녀 유무($\chi^2=13.208^*$)						
예	37.9	19.2	34.5	8.2	0.1	100.0 (5,561)
아니오	36.3	17.3	38.0	8.4	0.0	100.0 (2,439)
가구 형태($\chi^2=14.604$)						
1세대 가구	38.6	18.7	34.9	7.8	0.1	100.0 (3,200)
2세대 가구	36.3	18.8	36.3	8.5	0.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5.2	15.9	28.6	10.4	0.0	100.0 (184)
기타	47.9	13.8	38.3	0.0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기타 0.1% (종합적인 원인 분석 필요 2건, 건강상태 1건, 결혼 여부 1건, 부모와는 관계없는 본인의 자립 여건 1건, 일자리 제공 1건, 주택 여부 1건)

나. 노인 정책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청년 정책과 비슷하게 노인 정책 역시 대상자 선정 시 연령, 소득기준, 취업 상태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한다. 약 3분의 1의 응답자(32.0%)가 소득기준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으로 여겼으며, 연령(22.0%)과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20.6%)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고용 상태, 가족 구성 형태를 정책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여겨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16.9%, 8.5%를 차지하였다(〈표 6-38〉 참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소

득기준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응답자 비율은 높고, 고용 상태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응답자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능 상태의 응답률은 감소하는 반면 소득기준의 응답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고용 상태보다 연령을 우선순위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기준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가족 구성 형태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혼인 상태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소득기준을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비율은 동거/사실혼 응답자의 경우 26.6%, 이혼/별거의 경우는 40.6%로 나타났고, 동거/사실혼 및 사별의 경우 가족 구성 형태를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각각 10.6%, 10.2%로 타 혼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38〉 노인 정책의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준

(단위: %, 명)

특성	소득 기준	연령	기능 상태	고용 상태	가족 구성 형태	기타 ³⁾	계(명)
전체 ¹⁾	32.0	22.0	20.6	16.9	8.5	0.1	100.0 (8,000)
성별($\chi^2=4.615$)							
남성	31.7	21.8	21.5	16.7	8.2	0.0	100.0 (3,965)
여성	32.3	22.1	19.6	17.1	8.7	0.1	100.0 (4,035)
연령($\chi^2=33.863$)							
19~29세	30.5	20.6	21.5	18.8	8.5	0.1	100.0 (1,360)
30~39세	33.5	21.6	19.6	17.4	7.9	0.0	100.0 (1,279)
40~49세	32.5	21.2	19.7	18.1	8.5	0.0	100.0 (1,533)
50~59세	32.3	21.6	21.2	16.4	8.4	0.1	100.0 (1,590)
60~69세	32.0	22.9	21.3	15.6	8.1	0.2	100.0 (1,204)
70~79세	31.0	26.3	18.1	14.9	9.7	0.0	100.0 (675)
80세 이상	31.4	22.1	23.6	13.4	9.5	0.0	100.0 (360)
지역($\chi^2=26.579^{**}$)							
대도시	31.2	23.3	20.5	17.1	7.9	0.1	100.0 (3,523)
중소도시	31.5	20.6	20.5	17.7	9.7	0.0	100.0 (3,062)
농어촌	35.5	21.6	20.8	14.9	7.1	0.1	100.0 (1,415)
교육수준($\chi^2=27.327^{**}$)							
중졸 이하	31.1	24.2	21.2	13.9	9.5	0.1	100.0 (1,211)
고졸	30.7	20.8	22.2	17.8	8.4	0.1	100.0 (2,961)
초대졸 이상	33.3	22.2	19.1	17.1	8.2	0.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21.04^{***}$)							
예	32.0	20.9	21.1	17.7	8.2	0.1	100.0 (5,520)
아니오	32.1	24.4	19.4	15.0	9.1	0.0	100.0 (2,480)

특성	소득 기준	연령	기능 상태	고용 상태	가족 구성 형태	기타 ³⁾	계 (명)
종사상 지위($\chi^2=35.789^*$)							
상용직	32.8	20.8	20.6	17.7	8.1	0.0	100.0 (2,947)
임시직	36.8	17.8	18.6	18.8	8.0	0.0	100.0 (540)
일용직	41.3	18.7	18.2	15.9	5.9	0.0	100.0 (161)
자영업자	28.5	22.3	23.0	17.4	8.6	0.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0.0	19.0	20.4	22.1	8.5	0.0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72.587^{***}$)							
상(7-10)	24.5	26.6	20.2	16.6	12.0	0.1	100.0 (975)
중(5-6)	31.6	21.7	22.3	16.2	8.2	0.0	100.0 (4,186)
하(1-4)	35.2	20.8	18.2	18.0	7.7	0.1	100.0 (2,840)
경제수준($\chi^2=28.949^{**}$)							
상(상-중상)	28.0	25.4	18.8	16.4	11.3	0.0	100.0 (620)
중(중)	31.5	20.9	22.2	17.2	8.2	0.0	100.0 (4,075)
하(중하-하)	33.4	22.6	18.9	16.6	8.3	0.1	100.0 (3,304)
혼인 상태($\chi^2=79.039^{***}$)							
미혼	31.8	20.0	21.0	19.3	7.9	0.0	100.0 (1,886)
동거/사실혼	26.6	21.0	21.3	20.5	10.6	0.0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3.1	23.4	20.3	15.0	8.1	0.1	100.0 (3,932)
이혼/별거	40.6	17.2	23.2	15.0	4.0	0.0	100.0 (280)
사별	33.0	22.9	18.2	15.5	10.2	0.2	100.0 (654)
자녀 유무($\chi^2=12.312^*$)							
예	31.6	22.6	20.6	16.3	8.9	0.1	100.0 (5,561)
아니오	33.0	20.6	20.6	18.3	7.5	0.0	100.0 (2,439)
가구 형태($\chi^2=13.254$)							
1세대 가구	33.1	22.3	20.2	16.5	7.9	0.0	100.0 (3,200)
2세대 가구	31.2	21.7	20.9	17.2	9.0	0.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5.0	21.7	21.1	17.1	5.0	0.0	100.0 (184)
기타	32.2	36.2	8.5	7.2	16.0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3) 기타 0.1% (건강상태 1건, 명의 변경한 노인들 찾아서 정확한 소득기준 1건, 의료관계 1건, 종합적인 기준으로 판단 1건)

2. 연령대별 정책의 필요 정도

본 영역에서는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기의 생애주기별 정책의 중요도와 실제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각 생애주기별 인구 집단에 대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노인 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4.8%,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5.4%로, 약 10명 중 9명은 노인 정책

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중장년 정책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47.8%,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6.9%로 나타났고, 그 뒤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2.4%를 차지하여 총 60.2%가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년 정책도 중장년 정책과 비슷하게 4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7.3%로 그 뒤를 이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9.6%를 차지하여, 총 69.4%가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62.3%가 ‘필요하다’, 25.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총 87.3%가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아동 정책은 전체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생애주기별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6-39〉 참조).

〈표 6-39〉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명)
노인	9.8	0.6	9.2	90.2	74.8	15.4	100.0 (8,000)
중장년	39.8	2.9	36.9	60.2	47.8	12.4	100.0 (8,000)
청년	30.6	3.3	27.3	69.4	49.8	19.6	100.0 (8,000)
아동	12.7	0.9	11.8	87.3	62.3	25.0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이어서, 연령대별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연령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다른 연령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정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령별 구분보다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응답 경향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청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 간의 중장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으며, 반대로 중장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 간의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나, 두 연령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40〉 참조).

〈표 6-40〉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교차분석)

(단위: 점)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노인	-	-	3.1	2.9***	3.1	3.0***	3.1	2.8***
중장년	2.7	2.4***	-	-	2.9	2.3***	2.7	2.5***
청년	2.9	2.6***	3.1	2.5***	-	-	2.9	2.5***
아동	3.2	2.7***	3.2	3.0***	3.2	2.9***	-	-

주: 1) 각 연령대별 지원이 필요(매우 필요) 또는 불필요(매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각각에 대해 평균점수를 계산한 뒤 비교함.

2) ***p < .001, **p < .01, *p < .05

연령별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 정책은 연령이 높을수록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여, 80세 이상은 23.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0~30대에서는 약 13.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94.9%), 인천/경기지역(92.3%), 서울(91.4%)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중소도시, 대도시에 비해 약간 높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사별 및 유자녀 응답자일 경우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41〉 참조).

〈표 6-41〉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명)
전체 ¹⁾	9.8	0.6	9.2	90.2	74.8	15.4	100.0 (8,000)
성별($\chi^2=1.46$)							
남성	10.2	0.7	9.5	89.8	74.3	15.5	100.0 (3,965)
여성	9.5	0.5	8.9	90.5	75.3	15.3	100.0 (4,035)
연령($\chi^2=70.184^{***}$)							
19~29세	10.8	0.6	10.2	89.2	76.1	13.1	100.0 (1,360)
30~39세	9.3	0.5	8.8	90.7	77.9	12.8	100.0 (1,279)
40~49세	10.1	0.5	9.6	89.9	76.6	13.3	100.0 (1,533)
50~59세	10.3	0.7	9.5	89.7	74.8	14.9	100.0 (1,590)
60~69세	9.4	0.8	8.6	90.6	72.5	18.1	100.0 (1,204)
70~79세	9.0	0.2	8.8	91.0	69.3	21.8	100.0 (675)
80세 이상	7.8	0.9	6.9	92.2	69.0	23.3	100.0 (360)
지역							
지역 1($\chi^2=194.104^{***}$)							
서울	8.6	1.2	7.5	91.4	73.2	18.2	100.0 (1,540)
인천/경기	7.7	0.2	7.5	92.3	75.8	16.5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15.3	0.6	14.7	84.7	76.8	7.9	100.0 (1,222)
대구/경북	14.8	0.2	14.6	85.2	70.8	14.4	100.0 (789)
광주/전라	5.1	0.3	4.7	94.9	76.1	18.8	100.0 (787)
대전/세종/충청	10.1	0.7	9.3	89.9	76.4	13.5	100.0 (843)
제주/강원	9.7	1.9	7.9	90.3	69.2	21.1	100.0 (342)
지역 2($\chi^2=150.714^{***}$)							
대도시	9.4	0.8	8.6	90.6	75.0	15.5	100.0 (3,523)
중소도시	10.5	0.3	10.2	89.5	75.0	14.5	100.0 (3,062)
농어촌	9.3	0.8	8.5	90.7	73.7	17.0	100.0 (1,415)
교육수준($\chi^2=18.359^{**}$)							
중졸 이하	9.5	0.6	8.9	90.5	71.7	18.8	100.0 (1,211)
고졸	9.4	0.6	8.8	90.6	74.7	15.8	100.0 (2,961)
초대졸 이상	10.2	0.6	9.6	89.8	75.8	14.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14.608^{**}$)							
예	10.4	0.7	9.8	89.6	75.0	14.6	100.0 (5,520)
아니오	8.5	0.5	8.0	91.5	74.3	17.3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1.342$)							
상용직	10.4	0.6	9.8	89.6	76.3	13.3	100.0 (2,947)
임시직	10.7	0.8	9.9	89.3	73.0	16.3	100.0 (540)
일용직	9.1	1.2	7.9	90.9	75.8	15.0	100.0 (161)
자영업자	10.4	0.6	9.8	89.6	73.4	16.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0.2	0.0	10.2	89.8	74.9	14.9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18.793^{**}$)							
상(7-10)	11.2	1.3	9.9	88.8	74.9	13.9	100.0 (975)
중(5-6)	10.3	0.6	9.7	89.7	73.8	15.9	100.0 (4,186)
하(1-4)	8.6	0.4	8.3	91.4	76.2	15.2	100.0 (2,840)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명)
경제수준($\chi^2=29.893^{***}$)							
상(상-중상)	8.9	1.3	7.6	91.1	69.5	21.6	100.0 (620)
중(중)	10.2	0.5	9.6	89.8	74.4	15.4	100.0 (4,075)
하(중하-하)	9.5	0.5	9.0	90.5	76.2	14.2	100.0 (3,304)
혼인 상태($\chi^2=45.784^{***}$)							
미혼	11.4	0.6	10.8	88.6	76.4	12.2	100.0 (1,886)
동거/사실혼	9.1	0.6	8.5	90.9	74.2	16.8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9.4	0.5	8.9	90.6	74.8	15.7	100.0 (3,932)
이혼/별거	9.8	1.0	8.8	90.2	78.0	12.2	100.0 (280)
사별	9.0	0.9	8.0	91.0	69.6	21.4	100.0 (654)
자녀 유무($\chi^2=20.502^{***}$)							
예	9.3	0.5	8.8	90.7	74.3	16.5	100.0 (5,561)
아니오	11.0	0.8	10.2	89.0	76.0	13.0	100.0 (2,439)
가구 형태($\chi^2=14.589$)							
1세대 가구	10.7	0.8	10.0	89.3	73.6	15.6	100.0 (3,200)
2세대 가구	9.3	0.5	8.8	90.7	75.6	15.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8	0.0	5.8	94.2	73.8	20.4	100.0 (184)
기타	12.5	0.0	12.5	87.5	87.5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중장년 정책의 경우에는 중장년층에서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지는 않았다. 지자체별 차이를 보면, 노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광주/전라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6.6%로 특히 높았으며, 부산/경남/울산지역(68.2%)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며,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67.6%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5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위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에서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혼/별거 응답자, 무자녀 응답자, 기타 비친족 가구 응답자에게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6-42> 참조).

33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표 6-42〉 중장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명)
전체 ¹⁾	39.9	2.9	36.9	60.1	47.8	12.4	100.0 (8,000)
성별($\chi^2=7.545$)							
남성	39.6	3.3	36.4	60.4	47.2	13.2	100.0 (3,965)
여성	40.1	2.6	37.5	59.9	48.3	11.6	100.0 (4,035)
연령($\chi^2=26.762$)							
19~29세	42.6	3.3	39.3	57.4	45.8	11.6	100.0 (1,360)
30~39세	39.9	2.9	36.9	60.1	47.2	13.0	100.0 (1,279)
40~49세	39.5	3.3	36.2	60.5	47.6	12.9	100.0 (1,533)
50~59세	38.5	2.6	35.9	61.5	48.2	13.3	100.0 (1,590)
60~69세	40.0	2.9	37.1	60.0	49.0	11.0	100.0 (1,204)
70~79세	38.4	1.9	36.4	61.6	50.6	11.1	100.0 (675)
80세 이상	39.3	3.6	35.7	60.7	46.8	13.9	100.0 (360)
지역							
지역 1($\chi^2=331.177^{***}$)							
서울	46.8	1.8	44.9	53.2	42.7	10.5	100.0 (1,540)
인천/경기	46.5	4.7	41.8	53.5	45.5	8.0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31.8	1.2	30.7	68.2	51.1	17.1	100.0 (1,222)
대구/경북	39.5	1.8	37.7	60.5	48.6	11.8	100.0 (789)
광주/전라	23.4	4.2	19.3	76.6	56.2	20.4	100.0 (787)
대전/세종/충청	36.2	2.9	33.4	63.8	47.3	16.5	100.0 (843)
제주/강원	37.0	1.6	35.4	63.0	54.9	8.1	100.0 (342)
지역 2($\chi^2=961.145^{***}$)							
대도시	39.8	2.2	37.6	60.2	46.7	13.5	100.0 (3,523)
중소도시	43.4	3.6	39.8	56.6	46.4	10.2	100.0 (3,062)
농어촌	32.4	3.2	29.2	67.6	53.3	14.3	100.0 (1,415)
교육수준($\chi^2=9.554$)							
중졸 이하	38.5	2.0	36.5	61.5	50.4	11.1	100.0 (1,211)
고졸	40.5	3.0	37.5	59.5	46.6	12.8	100.0 (2,961)
초대졸 이상	39.8	3.2	36.6	60.2	47.8	12.4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5.241$)							
예	39.2	3.0	36.2	60.8	48.1	12.7	100.0 (5,520)
아니오	41.3	2.7	38.6	58.7	47.1	11.6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8.233$)							
상용직	40.4	3.3	37.1	59.6	46.5	13.2	100.0 (2,947)
임시직	36.7	2.5	34.1	63.3	53.1	10.2	100.0 (540)
일용직	37.1	2.8	34.3	62.9	50.4	12.6	100.0 (161)
자영업자	39.1	3.0	36.1	60.9	48.4	12.6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27.1	0.8	26.4	72.9	57.3	15.6	100.0 (115)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명)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주관적 사회계층 ($\chi^2=45.404^{***}$)								
상(7-10)	35.0	2.7	32.2	65.0	48.9	16.1	100.0	(975)
중(5-6)	42.9	3.4	39.4	57.1	45.7	11.4	100.0	(4,186)
하(1-4)	37.1	2.3	34.8	62.9	50.4	12.5	100.0	(2,840)
경제수준($\chi^2=17.718^{**}$)								
상(상-중상)	39.6	4.3	35.3	60.4	47.5	12.9	100.0	(620)
중(중)	41.5	3.1	38.3	58.5	46.1	12.4	100.0	(4,075)
하(중하-하)	37.9	2.5	35.5	62.1	49.9	12.2	100.0	(3,304)
혼인 상태($\chi^2=28.959^{**}$)								
미혼	41.5	3.2	38.3	58.5	46.8	11.8	100.0	(1,886)
동거/사실혼	41.0	2.5	38.5	59.0	43.7	15.3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9.4	3.1	36.3	60.6	48.9	11.7	100.0	(3,932)
이혼/별거	32.6	0.9	31.7	67.4	53.8	13.6	100.0	(280)
사별	38.8	2.7	36.1	61.2	49.2	12.0	100.0	(654)
자녀 유무 ($\chi^2=1846.735^{***}$)								
예	40.2	3.0	37.1	59.8	47.2	12.6	100.0	(5,561)
아니오	39.2	2.7	36.5	60.8	48.9	11.9	100.0	(2,439)
가구 형태($\chi^2=20.392^*$)								
1세대 가구	37.6	2.5	35.1	62.4	49.2	13.2	100.0	(3,200)
2세대 가구	41.2	3.3	37.9	58.8	46.8	11.9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5.1	1.2	43.9	54.9	45.4	9.5	100.0	(184)
기타	24.8	0.0	24.8	75.2	68.0	7.2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청년 정책은 나이가 적을수록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20대의 경우 50.9%가 ‘필요하다’, 25.9%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50.0%, 17.3%가 각각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중에는 광주/전라지역(84.7%) 및 대전/세종/충청지역(83.1%)에서 매우 또는 보통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 거주자(77.3%) 중에서 매우 또는 보통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초대졸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그리고

무자녀 응답자에게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표 6-43〉 참조).

〈표 6-43〉 청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계 (명)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¹⁾	30.6	3.3	27.3	69.4	49.8	19.6	100.0 (8,000)
성별($\chi^2=2.661$)							
남성	30.1	3.1	27.0	69.9	50.6	19.4	100.0 (3,965)
여성	31.2	3.5	27.7	68.8	49.0	19.8	100.0 (4,035)
연령($\chi^2=88.715^{***}$)							
19~29세	23.2	2.3	20.8	76.8	50.9	25.9	100.0 (1,360)
30~39세	28.4	2.7	25.8	71.6	52.7	18.9	100.0 (1,279)
40~49세	33.0	3.2	29.8	67.0	49.5	17.5	100.0 (1,533)
50~59세	32.7	3.1	29.7	67.3	49.4	17.9	100.0 (1,590)
60~69세	34.7	4.6	30.1	65.3	46.4	19.0	100.0 (1,204)
70~79세	31.2	4.2	27.1	68.8	49.7	19.1	100.0 (675)
80세 이상	32.6	4.6	28.0	67.4	50.0	17.3	100.0 (360)
지역							
지역 1($\chi^2=450.183^{***}$)							
서울	34.2	3.8	30.5	65.8	49.7	16.1	100.0 (1,540)
인천/경기	39.0	5.0	34.0	61.0	47.6	13.4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33.6	2.5	31.2	66.4	41.7	24.7	100.0 (1,222)
대구/경북	26.5	1.6	24.9	73.5	54.1	19.5	100.0 (789)
광주/전라	15.3	3.6	11.7	84.7	49.2	35.5	100.0 (787)
대전/세종/충청	16.9	0.6	16.4	83.1	61.3	21.7	100.0 (843)
제주/강원	21.7	1.5	20.2	78.3	58.4	19.9	100.0 (342)
지역 2($\chi^2=86.773^{***}$)							
대도시	31.3	3.5	27.8	68.7	48.7	20.0	100.0 (3,523)
중소도시	33.5	3.3	30.2	66.5	50.2	16.3	100.0 (3,062)
농어촌	22.7	2.9	19.8	77.3	51.7	25.6	100.0 (1,415)
교육수준($\chi^2=13.279^*$)							
중졸 이하	31.6	4.2	27.5	68.4	48.7	19.6	100.0 (1,211)
고졸	32.2	3.7	28.5	67.8	48.7	19.1	100.0 (2,961)
초대졸 이상	29.1	2.7	26.4	70.9	51.0	19.9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9.648^*$)							
예	30.4	2.9	27.5	69.6	50.3	19.3	100.0 (5,520)
아니오	31.2	4.2	27.0	68.8	48.7	20.1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34.035^{***}$)							
상용직	29.3	2.9	26.4	70.7	51.9	18.8	100.0 (2,947)
임시직	27.6	1.6	26.0	72.4	47.2	25.2	100.0 (540)
일용직	35.2	3.2	32.0	64.8	45.4	19.4	100.0 (161)
자영업자	33.0	3.2	29.7	67.0	49.3	17.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24.0	3.2	20.8	76.0	46.1	29.9	100.0 (115)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명)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주관적 사회계층 ($\chi^2=23.611^{***}$)							
상(7-10)	27.2	3.5	23.7	72.8	48.6	24.2	100.0 (975)
중(5-6)	31.5	3.2	28.2	68.5	50.5	18.0	100.0 (4,186)
하(1-4)	30.6	3.3	27.3	69.4	49.2	20.3	100.0 (2,840)
경제수준($\chi^2=21.997^{**}$)							
상(상-중상)	28.4	5.0	23.3	71.6	48.2	23.4	100.0 (620)
중(중)	30.7	2.9	27.8	69.3	50.9	18.4	100.0 (4,075)
하(중하-하)	30.9	3.4	27.5	69.1	48.7	20.4	100.0 (3,304)
혼인 상태($\chi^2=92.999^{***}$)							
미혼	25.0	2.1	22.9	75.0	52.1	22.9	100.0 (1,886)
동거/사실혼	38.5	4.8	33.7	61.5	43.0	18.5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1.1	3.4	27.8	68.9	50.8	18.0	100.0 (3,932)
이혼/별거	21.9	1.4	20.5	78.1	55.1	22.9	100.0 (280)
사별	32.5	4.1	28.4	67.5	47.6	19.9	100.0 (654)
자녀 유무($\chi^2=76.367^{***}$)							
예	33.3	3.9	29.4	66.7	48.9	17.9	100.0 (5,561)
아니오	24.6	2.0	22.6	75.4	51.9	23.5	100.0 (2,439)
가구 형태($\chi^2=12.224$)							
1세대 가구	30.1	3.3	26.8	69.9	49.2	20.8	100.0 (3,200)
2세대 가구	31.0	3.4	27.7	69.0	50.1	18.9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31.0	2.0	29.0	69.0	54.2	14.8	100.0 (184)
가타	27.1	0.0	27.1	72.9	33.4	39.5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아동 정책의 경우 30대의 29.9%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강원지역 거주자의 92.5%, 대구/경북지역 거주자의 92.0%가 아동 정책이 매우 또는 보통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광주/전라지역 거주자 중 전반적 필요 응답률(‘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은 85.8%이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40.0%에 가깝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4.5%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 이상에서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주

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별거, 법률혼(유배우)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약 27.0%로 높게 나타났고, 유자녀인 경우, 3세대 이상 가구에서 특히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6-44> 참조).

<표 6-44>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명)
전체 ¹⁾	12.7	0.9	11.8	87.3	62.3	25.0	100.0 (8,000)
성별($\chi^2=0.597$)							
남성	12.8	0.9	11.8	87.2	62.0	25.3	100.0 (3,965)
여성	12.6	0.9	11.7	87.4	62.7	24.8	100.0 (4,035)
연령($\chi^2=32.291^*$)							
19~29세	13.1	1.0	12.2	86.9	63.5	23.3	100.0 (1,360)
30~39세	11.0	0.8	10.2	89.0	59.1	29.9	100.0 (1,279)
40~49세	12.2	0.9	11.3	87.8	61.4	26.4	100.0 (1,533)
50~59세	12.7	1.0	11.7	87.3	63.2	24.1	100.0 (1,590)
60~69세	14.0	0.7	13.3	86.0	62.7	23.3	100.0 (1,204)
70~79세	13.5	1.2	12.3	86.5	62.9	23.6	100.0 (675)
80세 이상	13.1	0.6	12.5	86.9	66.4	20.6	100.0 (360)
지역							
지역 1($\chi^2=1484.193^{***}$)							
서울	11.5	1.8	9.6	88.5	67.1	21.4	100.0 (1,540)
인천/경기	13.0	0.9	12.1	87.0	60.5	26.5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19.0	0.3	18.7	81.0	57.8	23.2	100.0 (1,222)
대구/경북	8.0	0.5	7.5	92.0	69.2	22.7	100.0 (789)
광주/전라	14.2	0.6	13.6	85.8	46.2	39.6	100.0 (787)
대전/세종/충청	9.7	0.4	9.2	90.3	72.7	17.6	100.0 (843)
제주/강원	7.5	1.2	6.3	92.5	65.7	26.8	100.0 (342)
지역 2($\chi^2=44.371^{***}$)							
대도시	12.0	1.1	10.9	88.0	64.5	23.4	100.0 (3,523)
중소도시	13.6	0.4	13.2	86.4	61.8	24.6	100.0 (3,062)
농어촌	12.2	1.3	10.9	87.8	58.0	29.8	100.0 (1,415)
교육수준($\chi^2=19.198^{**}$)							
중졸 이하	14.2	0.7	13.4	85.8	62.8	23.0	100.0 (1,211)
고졸	13.3	0.9	12.4	86.7	63.3	23.4	100.0 (2,961)
초대졸 이상	11.7	1.0	10.7	88.3	61.4	26.9	100.0 (3,829)

특성	불필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명)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경제활동 여부($\chi^2=3.921$)							
예	12.9	0.8	12.1	87.1	62.5	24.6	100.0 (5,520)
아니오	12.1	1.0	11.0	87.9	62.0	26.0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4.95$)							
상용직	13.5	1.1	12.4	86.5	62.2	24.3	100.0 (2,947)
임시직	11.2	0.3	10.9	88.8	64.7	24.1	100.0 (540)
일용직	13.6	1.1	12.5	86.4	59.7	26.7	100.0 (161)
자영업자	12.4	0.6	11.8	87.6	63.1	24.5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14.1	0.0	14.1	85.9	52.3	33.7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8.17^{***}$)							
상(7-10)	18.1	1.3	16.9	81.9	59.5	22.4	100.0 (975)
중(5-6)	12.5	0.9	11.6	87.5	63.3	24.3	100.0 (4,186)
하(1-4)	11.1	0.8	10.3	88.9	61.9	27.0	100.0 (2,840)
경제수준($\chi^2=14.382^*$)							
상(상-중상)	15.8	1.5	14.2	84.2	56.9	27.4	100.0 (620)
중(중)	12.8	0.8	12.1	87.2	63.0	24.2	100.0 (4,075)
하(중하-하)	11.9	0.9	11.0	88.1	62.5	25.6	100.0 (3,304)
혼인 상태($\chi^2=35.469^{***}$)							
미혼	13.4	1.2	12.3	86.6	64.7	21.9	100.0 (1,886)
동거/사실혼	14.6	1.1	13.6	85.4	63.7	21.7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11.9	0.7	11.1	88.1	60.8	27.3	100.0 (3,932)
이혼/별거	11.0	1.0	10.0	89.0	61.2	27.8	100.0 (280)
사별	12.5	0.6	11.9	87.5	62.0	25.5	100.0 (654)
자녀 유무($\chi^2=12.161^{**}$)							
예	11.9	0.8	11.1	88.1	62.3	25.8	100.0 (5,561)
아니오	14.4	1.0	13.3	85.6	62.4	23.2	100.0 (2,439)
가구 형태($\chi^2=17.434^*$)							
1세대 가구	13.5	0.7	12.7	86.5	62.4	24.1	100.0 (3,200)
2세대 가구	12.3	1.0	11.2	87.7	61.9	25.8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7.6	0.0	7.6	92.4	71.0	21.4	100.0 (184)
기타	24.4	0.0	24.4	75.6	61.8	13.8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3. 연령대별 정책의 충분성 정도

각 인구 집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한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노인

정책을 제외한 중장년, 청년, 아동을 위한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우선 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36.4%가 ‘충분하지 않다’, 2.8%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불충분 의사를 표현한 응답률이 39.2%를 차지하였다. 중장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52.1%가 ‘충분하지 않다’, 7.3%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9.4%가 불충분 의사를 나타내었다. 중장년과 비슷하게 청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46.1%가 ‘충분하지 않다’, 9.7%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5.8%가 불충분 의사를 나타내었다. 아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는 45.7%가 ‘충분하지 않다’, 11.0%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56.7%가 불충분 의사를 나타내었다(〈표 6-45〉 참조).

〈표 6-45〉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충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 (명)
노인	39.2	2.8	36.4	60.8	54.4	6.4	100.0 (8,000)
중장년	59.4	7.3	52.1	40.6	34.4	6.2	100.0 (8,000)
청년	55.8	9.7	46.1	44.2	38.0	6.2	100.0 (8,000)
아동	56.7	11.0	45.7	43.2	37.7	5.5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이어서 연령대별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정 연령대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다른 연령대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구분보다는 정책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응답 경향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청년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불

충분하다고 응답한 집단 간의 중장년 지원 충분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으며(평균 2.7 대 2.2점), 반대로 중장년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집단과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집단 간의 청년 지원 충분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나(평균 2.7 대 2.2점), 두 연령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46〉 참조).

〈표 6-46〉 연령대별로 국가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교차분석)

(단위: 점)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충분	불충분	충분	불충분	충분	불충분	충분	불충분
노인	-	-	2.7	2.6***	2.7	2.6***	2.9	2.5***
중장년	2.5	2.2***	-	-	2.7	2.2***	2.5	2.3***
청년	2.5	2.2***	2.7	2.2***	-	-	2.6	2.3***
아동	2.6	2.1***	2.5	2.3***	2.6	2.2***	-	-

주: 1) 각 연령대별 지원이 충분(매우 충분) 또는 불충분(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각각에 대해 평균점수를 계산한 뒤 비교함.

2) *** $p < .001$, ** $p < .01$, * $p < .05$

노인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어촌 지역 보다는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지역 거주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지자체 중에는 인천/경기지역 거주자의 48.5%, 제주/강원지역 거주자의 47.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광주/전라지역 거주자의 경우 노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16.4%만이 노인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불충분 의사는 주관적 사회계층 또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이혼/별거 응답자와 3세대 이상 가구 응답자에게서 많이 나타났다(〈표 6-47〉 참조).

〈표 6-47〉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충분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명)
전체 ¹⁾	39.2	2.8	36.4	60.8	54.4	6.4	100.0 (8,000)
성별($\chi^2=1.94$)							
남성	39.5	2.6	36.9	60.5	54.1	6.4	100.0 (3,965)
여성	38.8	3.0	35.8	61.2	54.7	6.5	100.0 (4,035)
연령($\chi^2=61.188^{***}$)							
19~29세	35.3	1.9	33.4	64.7	57.6	7.1	100.0 (1,360)
30~39세	41.4	1.9	39.4	58.6	52.8	5.8	100.0 (1,279)
40~49세	39.1	2.2	37.0	60.9	54.5	6.4	100.0 (1,533)
50~59세	37.9	2.3	35.6	62.1	55.2	6.9	100.0 (1,590)
60~69세	41.8	4.3	37.5	58.2	51.6	6.6	100.0 (1,204)
70~79세	39.2	4.3	34.9	60.8	55.3	5.5	100.0 (675)
80세 이상	43.0	6.7	36.3	57.0	51.4	5.5	100.0 (360)
지역							
지역 1($\chi^2=474.866^{***}$)							
서울	42.6	3.8	38.9	57.4	47.5	9.8	100.0 (1,540)
인천/경기	48.5	2.7	45.8	51.5	48.6	3.0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37.2	3.3	33.9	62.8	60.6	2.3	100.0 (1,222)
대구/경북	31.4	2.1	29.3	68.6	57.1	11.5	100.0 (789)
광주/전라	16.4	0.5	15.9	83.6	74.0	9.6	100.0 (787)
대전/세종/충청	33.7	3.3	30.4	66.3	59.5	6.8	100.0 (843)
제주/강원	47.4	3.5	43.9	52.6	41.3	11.4	100.0 (342)
지역 2($\chi^2=82.586^{***}$)							
대도시	39.7	3.8	35.9	60.3	53.3	7.1	100.0 (3,523)
중소도시	41.2	1.8	39.4	58.8	54.4	4.4	100.0 (3,062)
농어촌	33.6	2.6	31.0	66.4	57.2	9.2	100.0 (1,415)
교육수준($\chi^2=22.984^{***}$)							
중졸 이하	37.0	4.4	32.6	63.0	55.7	7.3	100.0 (1,211)
고졸	38.8	2.7	36.1	61.2	54.7	6.5	100.0 (2,961)
초대졸 이상	40.1	2.4	37.7	59.9	53.7	6.2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19.071^{***}$)							
예	39.4	2.3	37.1	60.6	54.1	6.5	100.0 (5,520)
아니오	38.6	3.9	34.7	61.4	55.0	6.4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35.364^{***}$)							
상용직	38.3	1.9	36.4	61.7	55.1	6.5	100.0 (2,947)
임시직	43.7	2.2	41.5	56.3	50.4	5.8	100.0 (540)
일용직	37.3	5.5	31.8	62.7	50.1	12.5	100.0 (161)
자영업자	40.7	2.8	37.9	59.3	53.5	5.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31.1	2.0	29.1	68.9	58.2	10.7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9.263^{***}$)							
상(7-10)	32.3	2.3	30.0	67.7	59.7	7.9	100.0 (975)
중(5-6)	40.0	2.6	37.3	60.0	53.3	6.7	100.0 (4,186)
하(1-4)	40.3	3.3	37.1	59.7	54.1	5.6	100.0 (2,840)

특성	불충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명)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경제수준($\chi^2=23.388^{***}$)							
상(상-중상)	35.0	2.2	32.8	65.0	55.3	9.7	100.0 (620)
중(중)	39.0	2.4	36.6	61.0	54.4	6.6	100.0 (4,075)
하(중하-하)	40.2	3.4	36.8	59.8	54.2	5.6	100.0 (3,304)
혼인 상태($\chi^2=72.251^{***}$)							
미혼	38.3	1.9	36.4	61.7	55.5	6.2	100.0 (1,886)
동거/사실혼	37.7	1.2	36.5	62.3	53.9	8.4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39.9	3.0	36.9	60.1	54.3	5.8	100.0 (3,932)
이혼/별거	43.7	5.7	38.0	56.3	48.8	7.4	100.0 (280)
사별	38.3	6.4	31.9	61.7	54.9	6.8	100.0 (654)
자녀 유무($\chi^2=2.36$)							
예	39.6	3.0	36.6	60.4	54.0	6.4	100.0 (5,561)
아니오	38.3	2.5	35.8	61.7	55.2	6.6	100.0 (2,439)
가구 형태($\chi^2=23.562^{**}$)							
1세대 가구	39.0	3.8	35.2	61.0	54.5	6.5	100.0 (3,200)
2세대 가구	39.1	2.2	36.9	60.9	54.5	6.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5.2	2.6	42.6	54.8	48.7	6.1	100.0 (184)
기타	27.1	0.0	27.1	72.9	64.4	8.5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중장년 정책의 경우 50대 중장년층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 7.4%, ‘충분하지 않다’ 54.9%로 불충분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기준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혹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충분 의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cap$ 패턴을 보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라 지역에서 약 65.0%로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불충분 응답률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불충분 의사가 63.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불충분 의사가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 보면 이혼/별거의 경우 불충분 의견이 69.5%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표 6-48〉 참조).

〈표 6-48〉 중장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충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명)	
전체 ¹⁾	59.4	7.3	52.1	40.6	34.4	6.2	100.0	(8,000)
성별($\chi^2=6.498$)								
남성	60.0	7.6	52.4	40.0	33.4	6.7	100.0	(3,965)
여성	58.8	6.9	51.9	41.2	35.4	5.7	100.0	(4,035)
연령($\chi^2=35.405^{**}$)								
19~29세	56.4	7.6	48.8	43.6	37.9	5.7	100.0	(1,360)
30~39세	60.5	7.7	52.7	39.5	33.2	6.3	100.0	(1,279)
40~49세	60.3	7.9	52.3	39.7	33.9	5.8	100.0	(1,533)
50~59세	62.2	7.4	54.9	37.8	30.7	7.1	100.0	(1,590)
60~69세	59.7	7.2	52.5	40.3	34.8	5.5	100.0	(1,204)
70~79세	56.7	5.6	51.1	43.3	36.2	7.1	100.0	(675)
80세 이상	54.5	3.8	50.7	45.5	39.1	6.4	100.0	(360)
지역								
지역 1($\chi^2=318.06^{***}$)								
서울	65.2	10.2	55.0	34.8	31.0	3.8	100.0	(1,540)
인천/경기	50.0	4.4	45.6	50.0	42.5	7.5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66.9	8.5	58.4	33.1	29.2	3.9	100.0	(1,222)
대구/경북	64.7	5.7	59.0	35.3	29.6	5.7	100.0	(789)
광주/전라	66.6	13.9	52.6	33.4	27.1	6.4	100.0	(787)
대전/세종/충청	52.7	4.6	48.1	47.3	35.4	11.8	100.0	(843)
제주/강원	62.5	5.0	57.4	37.5	35.2	2.3	100.0	(342)
지역 2($\chi^2=100.212^{***}$)								
대도시	63.2	9.4	53.8	36.8	31.3	5.4	100.0	(3,523)
중소도시	53.9	4.5	49.4	46.1	38.9	7.2	100.0	(3,062)
농어촌	61.7	7.9	53.8	38.3	32.4	5.9	100.0	(1,415)
교육수준($\chi^2=12.398$)								
중졸 이하	59.4	5.6	53.8	40.6	35.2	5.3	100.0	(1,211)
고졸	59.1	8.0	51.1	40.9	34.9	6.0	100.0	(2,961)
초대졸 이상	59.6	7.2	52.4	40.4	33.7	6.6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13.179^{**}$)								
예	60.5	7.3	53.2	39.5	33.1	6.3	100.0	(5,520)
아니오	56.9	7.2	49.7	43.1	37.2	5.9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6.153^*$)								
상용직	59.6	7.5	52.1	40.4	33.9	6.5	100.0	(2,947)
임시직	62.9	4.1	58.8	37.1	31.6	5.5	100.0	(540)
일용직	58.3	3.0	55.3	41.7	34.0	7.7	100.0	(161)
자영업자	61.3	8.3	53.0	38.7	32.2	6.5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64.4	8.1	56.3	35.6	34.7	0.9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41.92^{***}$)								
상(7-10)	59.0	7.6	51.4	41.0	31.5	9.5	100.0	(975)
중(5-6)	58.3	6.4	51.9	41.7	35.2	6.4	100.0	(4,186)
하(1-4)	61.1	8.4	52.7	38.9	34.2	4.7	100.0	(2,840)

특성	불충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명)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경제수준($\chi^2=44.514^{***}$)								
상(상-중상)	55.1	5.1	50.0	44.9	35.2	9.7	100.0	(620)
중(중)	57.7	6.9	50.8	42.3	35.4	6.9	100.0	(4,075)
하(중하-하)	62.3	8.1	54.2	37.7	33.1	4.6	100.0	(3,304)
혼인 상태($\chi^2=57.6^{***}$)								
미혼	58.9	7.8	51.1	41.1	35.7	5.4	100.0	(1,886)
동거/사실혼	59.0	10.5	48.5	41.0	35.1	5.9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59.8	6.1	53.7	40.2	33.4	6.8	100.0	(3,932)
이혼/별거	69.5	7.2	62.3	30.5	26.9	3.6	100.0	(280)
사별	54.8	6.2	48.6	45.2	38.8	6.4	100.0	(654)
자녀 유무($\chi^2=1.695$)								
예	59.7	7.1	52.6	40.3	34.1	6.3	100.0	(5,561)
아니오	58.8	7.5	51.2	41.2	35.2	6.1	100.0	(2,439)
가구 형태($\chi^2=9.937$)								
1세대 가구	60.0	6.7	53.3	40.0	33.8	6.3	100.0	(3,200)
2세대 가구	59.2	7.7	51.4	40.8	34.6	6.2	100.0	(4,605)
3세대 이상	55.7	5.8	49.9	44.3	40.2	4.1	100.0	(184)
기타	51.9	12.4	39.5	48.1	48.1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청년 정책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 혹은 ‘충분하지 않다’는 불충분 의사가 각각 65.5%, 57.9%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지역 거주자의 20.4%가 청년 정책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등 불충분 의사가 높았으며, 제주/강원지역의 경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1.2%로 높았다. 또한 중소도시보다 농어촌, 대도시에서의 불충분 의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대졸 이상 또는 중졸 이하에서 불충분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불충분 의사 비율은 70.0%로 특히 높았다.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혼/별거 응답자, 그리고 무자녀 응답자의 경우 불충분 의사를 나타내는 비율이 높았다(〈표 6-49〉 참조).

〈표 6-49〉 청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충분하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 (명)
	불충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 ¹⁾	55.8	9.7	46.1	44.2	38.0	6.2	100.0 (8,000)
성별($\chi^2=3.744$)							
남성	55.7	10.3	45.4	44.3	38.2	6.1	100.0 (3,965)
여성	55.8	9.1	46.7	44.2	37.9	6.3	100.0 (4,035)
연령($\chi^2=120.82^{***}$)							
19~29세	65.5	15.7	49.8	34.5	29.4	5.1	100.0 (1,360)
30~39세	57.9	10.2	47.7	42.1	37.2	4.9	100.0 (1,279)
40~49세	52.5	7.7	44.8	47.5	40.9	6.7	100.0 (1,533)
50~59세	52.6	8.6	44.0	47.4	40.5	7.0	100.0 (1,590)
60~69세	53.0	8.2	44.8	47.0	41.1	5.9	100.0 (1,204)
70~79세	53.0	7.9	45.1	47.0	39.1	7.9	100.0 (675)
80세 이상	54.0	7.1	46.9	46.0	38.7	7.3	100.0 (360)
지역							
지역 1($\chi^2=6461^{***}$)							
서울	58.5	9.1	49.4	41.5	35.0	6.4	100.0 (1,540)
인천/경기	45.4	5.3	40.1	54.6	46.6	8.0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61.8	13.8	48.1	38.2	33.5	4.7	100.0 (1,222)
대구/경북	54.5	11.8	42.8	45.5	40.6	4.8	100.0 (789)
광주/전라	73.5	20.4	53.1	26.5	23.2	3.3	100.0 (787)
대전/세종/충청	52.1	7.0	45.1	47.9	40.5	7.4	100.0 (843)
제주/강원	67.7	6.5	61.2	32.3	27.7	4.6	100.0 (342)
지역 2($\chi^2=52.173^{***}$)							
대도시	58.4	11.0	47.4	41.6	35.6	6.0	100.0 (3,523)
중소도시	51.1	7.9	43.2	48.9	42.2	6.7	100.0 (3,062)
농어촌	59.4	10.4	49.1	40.6	34.9	5.6	100.0 (1,415)
교육수준($\chi^2=12.683^*$)							
중졸 이하	56.3	8.0	48.3	43.7	37.3	6.4	100.0 (1,211)
고졸	54.1	10.1	44.0	45.9	39.3	6.6	100.0 (2,961)
초대졸 이상	56.9	9.9	47.0	43.1	37.3	5.8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87$)							
예	56.2	9.6	46.5	43.8	37.8	6.0	100.0 (5,520)
아니오	54.9	9.8	45.1	45.1	38.5	6.6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31.71^{**}$)							
상용직	57.0	9.7	47.3	43.0	36.9	6.1	100.0 (2,947)
임시직	54.0	11.4	42.6	46.0	40.7	5.2	100.0 (540)
일용직	45.6	12.9	32.7	54.4	48.6	5.8	100.0 (161)
자영업자	55.4	8.6	46.9	44.6	38.3	6.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70.0	11.0	59.0	30.0	25.6	4.4	100.0 (115)

특성	불충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 (명)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주관적 사회계층 ($\chi^2=51.127^{***}$)							
상(7-10)	56.2	12.2	44.0	43.8	33.8	10.0	100.0 (975)
중(5-6)	55.7	8.8	46.9	44.3	38.0	6.3	100.0 (4,186)
하(1-4)	55.7	10.2	45.5	44.3	39.6	4.7	100.0 (2,840)
경제수준($\chi^2=51.021^{***}$)							
상(상-중상)	58.8	9.7	49.1	41.2	31.7	9.5	100.0 (620)
중(중)	55.3	8.7	46.5	44.7	37.7	7.0	100.0 (4,075)
하(중하-하)	55.8	10.9	44.9	44.2	39.7	4.5	100.0 (3,304)
혼인 상태 ($\chi^2=113.163^{***}$)							
미혼	63.1	13.9	49.2	36.9	32.0	4.8	100.0 (1,886)
동거/사실혼	48.7	8.7	40.0	51.3	44.1	7.2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54.2	8.2	46.1	45.8	39.1	6.7	100.0 (3,932)
이혼/별거	64.9	11.2	53.6	35.1	30.9	4.3	100.0 (280)
사별	53.5	8.0	45.5	46.5	40.5	6.1	100.0 (654)
자녀 유무($\chi^2=93.781^{***}$)							
예	53.0	7.9	45.1	47.0	40.5	6.5	100.0 (5,561)
아니오	62.1	13.7	48.4	37.9	32.4	5.5	100.0 (2,439)
가구 형태($\chi^2=5.442$)							
1세대 가구	56.6	9.5	47.2	43.4	37.5	5.9	100.0 (3,200)
2세대 가구	55.2	9.9	45.3	44.8	38.3	6.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4.1	7.8	46.3	45.9	40.2	5.7	100.0 (184)
기타	65.6	8.5	57.2	34.4	34.4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아동 정책의 경우 30대에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14.3%를 차지하였다. 지자체별로는 대구/경북, 광주/전라지역에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14.6%로 동일하게 높았고, 제주/강원지역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56.9%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불충분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보다는 초대졸 이상 또는 중졸 이하에서 불충분 의견이 많은 반면, 상위 경제수준에서 불충분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

태별로는 이혼/별거인 경우, 기타 비친족 가구에서 불충분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표 6-50〉 참조).

〈표 6-50〉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특성	불충분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명)
전체 ¹⁾	56.7	11.0	45.7	43.3	37.7	5.5	100.0 (8,000)
성별($\chi^2=2.357$)							
남성	57.1	10.7	46.4	42.9	37.2	5.7	100.0 (3,965)
여성	56.4	11.3	45.1	43.6	38.3	5.3	100.0 (4,035)
연령($\chi^2=42.781^{***}$)							
19~29세	53.6	10.6	43.0	46.4	40.1	6.3	100.0 (1,360)
30~39세	61.3	14.3	47.0	38.7	34.6	4.1	100.0 (1,279)
40~49세	58.2	11.1	47.1	41.8	36.1	5.6	100.0 (1,533)
50~59세	55.2	10.6	44.6	44.8	38.5	6.3	100.0 (1,590)
60~69세	56.4	10.5	45.9	43.6	38.1	5.6	100.0 (1,204)
70~79세	56.9	9.0	47.9	43.1	37.7	5.4	100.0 (675)
80세 이상	53.3	7.7	45.6	46.7	42.7	4.0	100.0 (360)
지역							
지역 1($\chi^2=185.35^{***}$)							
서울	52.7	11.7	41.0	47.3	37.0	10.3	100.0 (1,540)
인천/경기	58.5	9.5	49.0	41.5	37.0	4.5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58.5	11.4	47.1	41.5	38.5	3.0	100.0 (1,222)
대구/경북	59.8	14.6	45.1	40.2	35.5	4.7	100.0 (789)
광주/전라	59.2	14.6	44.6	40.8	34.2	6.6	100.0 (787)
대전/세종/충청	48.6	8.8	39.8	51.4	47.8	3.6	100.0 (843)
제주/강원	63.0	6.2	56.9	37.0	32.3	4.7	100.0 (342)
지역 2($\chi^2=81.232^{***}$)							
대도시	55.7	13.0	42.7	44.3	37.4	7.0	100.0 (3,523)
중소도시	57.5	8.9	48.5	42.5	39.1	3.4	100.0 (3,062)
농어촌	57.8	10.5	47.3	42.2	35.8	6.4	100.0 (1,415)
교육수준($\chi^2=35.536^{***}$)							
중졸 이하	56.9	9.1	47.8	43.1	38.0	5.0	100.0 (1,211)
고졸	53.3	10.0	43.2	46.7	41.0	5.7	100.0 (2,961)
초대졸 이상	59.3	12.4	47.0	40.7	35.1	5.5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3.386$)							
예	56.2	10.9	45.2	43.8	38.0	5.8	100.0 (5,520)
아니오	57.9	11.1	46.8	42.1	37.1	5.0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5.655$)							
상용직	56.9	11.1	45.8	43.1	37.8	5.3	100.0 (2,947)
임시직	53.7	10.9	42.8	46.3	40.5	5.8	100.0 (540)
일용직	50.8	15.1	35.7	49.2	40.7	8.4	100.0 (161)
자영업자	56.4	10.1	46.2	43.6	37.4	6.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3.4	13.8	39.6	46.6	40.5	6.0	100.0 (115)

특성	불충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 (명)
		충분하지 않다	충분 충분하다				
주관적 사회계층 ($\chi^2=33.375^{***}$)							
상(7-10)	50.5	12.0	38.4	49.5	42.4	7.1	100.0 (975)
중(5-6)	58.1	10.6	47.5	41.9	36.2	5.7	100.0 (4,186)
하(1-4)	56.8	11.3	45.5	43.2	38.5	4.7	100.0 (2,840)
경제수준($\chi^2=21.895^{**}$)							
상(상-중상)	60.6	15.1	45.5	39.4	33.5	5.9	100.0 (620)
중(중)	57.3	10.9	46.4	42.7	36.8	5.9	100.0 (4,075)
하(중하-하)	55.3	10.3	44.9	44.7	39.7	5.0	100.0 (3,304)
혼인 상태($\chi^2=68.174^{***}$)							
미혼	54.1	10.4	43.7	45.9	39.9	6.1	100.0 (1,886)
동거/사실혼	53.1	6.9	46.2	46.9	40.3	6.6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58.6	12.8	45.8	41.4	36.0	5.4	100.0 (3,932)
이혼/별거	61.5	15.9	45.7	38.5	34.4	4.0	100.0 (280)
사별	58.2	7.6	50.5	41.8	38.4	3.4	100.0 (654)
자녀 유무($\chi^2=2.871$)							
예	57.3	10.9	46.4	42.7	37.3	5.4	100.0 (5,561)
아니오	55.5	11.2	44.3	44.5	38.7	5.8	100.0 (2,439)
가구 형태($\chi^2=23.743^{**}$)							
1세대 가구	55.5	10.7	44.8	44.5	39.3	5.2	100.0 (3,200)
2세대 가구	57.2	11.4	45.8	42.8	37.0	5.8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65.2	5.3	59.9	34.8	31.0	3.7	100.0 (184)
기타	70.5	15.3	55.1	29.5	29.5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4. 연령대별 정책과 세대 간 갈등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제도나 사업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킨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제도나 사업 형태에 따라 현금수당(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아동·청소년·노인 대상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주택지원(청년 임대주택, 신혼 희망타운,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 그리고 고용지원(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중장년 고용장려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다.

먼저 현금수당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46.2%는 ‘그렇지 않다’, 42.9%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9%,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0%를 차지하였다. 현금수당의 세대 간 갈등 유발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6.9%를 차지하여, 네 가지 제시된 정책 제도나 사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5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23.9%는 ‘그런 편이다’, 17.2%는 ‘전혀 그렇지 않다’, 5.4%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주택지원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49.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29.2%는 ‘그런 편이다’, 16.1%는 ‘전혀 그렇지 않다’, 4.9%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고용지원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4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32.4%는 ‘그런 편이다’, 15.0%는 ‘전혀 그렇지 않다’, 3.2%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6-51〉 참조).

〈표 6-51〉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특성	동의 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명)
현금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53.1	6.9	46.2	46.9	42.9	4.0	100.0 (8,000)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아동, 청소년, 노인)	70.7	17.2	53.5	29.3	23.9	5.4	100.0 (8,000)
주택지원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 타운,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	66.0	16.1	49.9	34.1	29.2	4.9	100.0 (8,000)
고용지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제, 중장년 고용장려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64.4	15.0	49.4	35.6	32.4	3.2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현금수당이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51.0%)과 대구/경북(58.8%)

지역에서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상위 사회 계층 및 경제수준 응답자, 동거/사실혼 응답자에게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52〉 참조).

〈표 6-52〉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1: 현금수당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53.1	6.9	46.2	46.9	42.9	4.0	100.0	(8,000)
성별($\chi^2=6.52$)								
남성	53.5	6.8	46.7	46.5	42.0	4.5	100.0	(3,965)
여성	52.7	6.9	45.8	47.3	43.7	3.6	100.0	(4,035)
연령($\chi^2=6.73$)								
19~29세	52.6	6.6	46.0	47.4	43.5	3.9	100.0	(1,360)
30~39세	54.6	7.0	47.6	45.4	41.4	3.9	100.0	(1,279)
40~49세	52.6	6.5	46.1	47.4	43.3	4.1	100.0	(1,533)
50~59세	52.4	7.0	45.3	47.6	43.3	4.3	100.0	(1,590)
60~69세	54.7	6.7	48.0	45.3	41.3	4.0	100.0	(1,204)
70~79세	52.3	7.8	44.5	47.7	44.2	3.5	100.0	(675)
80세 이상	51.2	7.0	44.3	48.8	44.2	4.6	100.0	(360)
지역								
지역 1($\chi^2=587.434^{***}$)								
서울	49.0	4.1	45.0	51.0	44.8	6.1	100.0	(1,540)
인천/경기	54.4	5.4	49.0	45.6	43.1	2.5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52.7	4.1	48.6	47.3	44.4	2.9	100.0	(1,222)
대구/경북	41.2	3.5	37.7	58.8	54.6	4.2	100.0	(789)
광주/전라	65.9	24.2	41.7	34.1	31.6	2.5	100.0	(787)
대전/세종/충청	51.6	6.6	44.9	48.4	43.5	4.9	100.0	(843)
제주/강원	65.4	8.4	57.0	34.6	23.9	10.7	100.0	(342)
지역 2($\chi^2=57.974^{***}$)								
대도시	51.3	6.4	45.0	48.7	44.1	4.6	100.0	(3,523)
중소도시	53.0	5.6	47.3	47.0	43.7	3.3	100.0	(3,062)
농어촌	57.8	10.8	47.0	42.2	38.0	4.2	100.0	(1,415)
교육수준($\chi^2=6.091$)								
중졸 이하	53.0	8.0	45.0	47.0	42.8	4.2	100.0	(1,211)
고졸	52.0	6.4	45.7	48.0	44.0	4.0	100.0	(2,961)
초대졸 이상	54.0	6.9	47.1	46.0	42.0	4.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3.222$)								
예	52.9	6.6	46.4	47.1	42.9	4.2	100.0	(5,520)
아니오	53.5	7.6	45.9	46.5	42.8	3.8	100.0	(2,48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종사상 지위($\chi^2=8.735$)								
상용직	52.0	6.4	45.7	48.0	43.6	4.4	100.0	(2,947)
임시직	55.7	6.4	49.3	44.3	40.7	3.6	100.0	(540)
일용직	52.9	6.6	46.3	47.1	44.5	2.6	100.0	(161)
자영업자	54.1	6.8	47.2	45.9	41.9	4.1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45.9	7.8	38.1	54.1	50.3	3.8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5.905^{***}$)								
상(7-10)	47.3	5.4	41.9	52.7	45.7	7.0	100.0	(975)
중(5-6)	54.1	7.0	47.1	45.9	42.5	3.4	100.0	(4,186)
하(1-4)	53.6	7.2	46.5	46.4	42.4	4.0	100.0	(2,840)
경제수준 ($\chi^2=254.814^{***}$)								
상(상-중상)	46.5	9.1	37.5	53.5	46.8	6.6	100.0	(620)
중(중)	53.2	6.6	46.6	46.8	42.9	3.9	100.0	(4,075)
하(중하-하)	54.2	6.8	47.5	45.8	42.1	3.7	100.0	(3,304)
혼인 상태($\chi^2=28.27^{**}$)								
미혼	54.0	6.9	47.1	46.0	42.2	3.8	100.0	(1,886)
동거/사실혼	51.6	4.5	47.0	48.4	42.6	5.9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53.3	7.6	45.7	46.7	43.0	3.8	100.0	(3,932)
이혼/별거	53.7	5.8	47.9	46.3	43.7	2.5	100.0	(280)
사별	52.3	7.3	44.9	47.7	44.3	3.5	100.0	(654)
자녀 유무($\chi^2=0.511$)								
예	52.9	6.8	46.2	47.1	43.0	4.1	100.0	(5,561)
아니오	53.6	7.1	46.5	46.4	42.5	3.9	100.0	(2,439)
가구 형태($\chi^2=7.739$)								
1세대 가구	54.1	7.6	46.4	45.9	41.9	4.0	100.0	(3,200)
2세대 가구	52.5	6.4	46.0	47.5	43.5	4.1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3.4	5.4	48.0	46.6	43.3	3.3	100.0	(184)
기타	47.3	0.0	47.3	52.7	52.7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는 의견 역시, 연령에 따른 동의 여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부산/경남/울산,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약 35.0% 이상의 동의 비율이 나타난 반면, 제주/강원 지역에서는 19.1%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보다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에서 32.1%로 더 높은 세대갈등 동의 비율을 보

였다.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요금 감면(면제) 정책이 세대 갈등을 유발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졌고, 혼인 상태별로는 동거/사실혼인 경우 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6-53> 참조).

<표 6-53>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2: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70.7	17.2	53.5	29.3	23.9	5.4	100.0	(8,000)
성별($\chi^2=0.278$)								
남성	70.7	17.1	53.5	29.3	23.8	5.5	100.0	(3,965)
여성	70.7	17.2	53.5	29.3	24.0	5.3	100.0	(4,035)
연령($\chi^2=25.006$)								
19~29세	68.3	14.9	53.4	31.7	24.6	7.1	100.0	(1,360)
30~39세	70.1	16.6	53.4	29.9	24.7	5.3	100.0	(1,279)
40~49세	70.5	17.8	52.7	29.5	24.6	4.9	100.0	(1,533)
50~59세	72.7	17.2	55.4	27.3	22.0	5.4	100.0	(1,590)
60~69세	70.1	18.7	51.4	29.9	24.2	5.7	100.0	(1,204)
70~79세	72.9	18.2	54.7	27.1	23.4	3.7	100.0	(675)
80세 이상	71.4	17.1	54.3	28.6	24.5	4.1	100.0	(360)
지역								
지역 1($\chi^2=432.199^{***}$)								
서울	64.9	13.1	51.9	35.1	28.3	6.7	100.0	(1,540)
인천/경기	76.8	17.3	59.5	23.2	19.3	3.9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63.6	15.2	48.4	36.4	31.1	5.4	100.0	(1,222)
대구/경북	72.2	9.8	62.4	27.8	23.8	4.0	100.0	(789)
광주/전라	73.7	36.9	36.8	26.3	21.4	4.9	100.0	(787)
대전/세종/충청	65.0	14.3	50.7	35.0	26.9	8.1	100.0	(843)
제주/강원	80.9	20.1	60.8	19.1	11.1	8.0	100.0	(342)
지역 2($\chi^2=53.191^{***}$)								
대도시	67.9	16.5	51.4	32.1	25.8	6.3	100.0	(3,523)
중소도시	73.0	16.0	57.0	27.0	22.8	4.1	100.0	(3,062)
농어촌	72.5	21.2	51.4	27.5	21.6	5.9	100.0	(1,415)
교육수준($\chi^2=15.237^*$)								
중졸 이하	71.7	19.6	52.1	28.3	24.5	3.8	100.0	(1,211)
고졸	69.5	16.7	52.8	30.5	24.6	5.9	100.0	(2,961)
초대졸 이상	71.3	16.7	54.5	28.7	23.2	5.5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7.004$)								
예	70.3	16.6	53.7	29.7	24.0	5.7	100.0	(5,520)
아니오	71.5	18.5	53.1	28.5	23.8	4.7	100.0	(2,480)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종사상 지위($\chi^2=19.917$)								
상용직	68.6	16.0	52.5	31.4	24.7	6.7	100.0	(2,947)
임시직	74.1	15.7	58.4	25.9	22.4	3.5	100.0	(540)
일용직	74.4	17.9	56.5	25.6	21.4	4.1	100.0	(161)
자영업자	71.5	17.7	53.8	28.5	23.6	4.9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72.8	15.9	56.9	27.2	21.8	5.5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29.364^{***}$)								
상(7-10)	65.5	14.8	50.6	34.5	27.1	7.5	100.0	(975)
중(5-6)	70.1	16.7	53.4	29.9	24.3	5.6	100.0	(4,186)
하(1-4)	73.3	18.6	54.7	26.7	22.2	4.5	100.0	(2,840)
경제수준($\chi^2=21.094^{**}$)								
상(상-중상)	66.8	19.9	46.9	33.2	26.7	6.5	100.0	(620)
중(중)	69.8	16.3	53.5	30.2	24.3	5.9	100.0	(4,075)
하(중하-하)	72.4	17.6	54.8	27.6	22.9	4.6	100.0	(3,304)
혼인 상태($\chi^2=22.557^*$)								
미혼	69.2	15.9	53.3	30.8	24.2	6.6	100.0	(1,886)
동거/사실혼	68.2	17.4	50.8	31.8	27.3	4.5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71.8	17.4	54.5	28.2	22.8	5.3	100.0	(3,932)
이혼/별거	72.7	17.8	54.9	27.3	22.3	5.0	100.0	(280)
사별	71.8	18.7	53.1	28.2	23.9	4.3	100.0	(654)
자녀 유무($\chi^2=7.701$)								
예	71.3	17.5	53.8	28.7	23.7	5.0	100.0	(5,561)
아니오	69.2	16.4	52.8	30.8	24.4	6.4	100.0	(2,439)
가구 형태($\chi^2=14.414$)								
1세대 가구	72.0	18.1	54.0	28.0	22.4	5.6	100.0	(3,200)
2세대 가구	69.5	16.6	52.9	30.5	25.1	5.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76.9	15.7	61.2	23.1	20.1	3.0	100.0	(184)
기타	68.3	10.0	58.3	31.7	23.2	8.5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주택지원의 세대갈등 유발 여부 역시 연령에 따른 동의 정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는 대전/세종/충청지역이 43.4%, 서울지역이 39.7%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지역 거주자의 9.1%가 ‘매우 그렇다’라고 강한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지

원 정책 역시 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사회계층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54〉 참조).

〈표 6-54〉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3: 주택지원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66.0	16.1	49.9	34.0	29.2	4.9	100.0 (8,000)
성별($\chi^2=3.946$)							
남성	65.0	16.1	48.9	35.0	29.9	5.1	100.0 (3,965)
여성	66.9	16.1	50.9	33.1	28.4	4.6	100.0 (4,035)
연령($\chi^2=28.774$)							
19~29세	66.0	15.3	50.6	34.0	28.9	5.2	100.0 (1,360)
30~39세	64.0	17.2	46.9	36.0	31.8	4.2	100.0 (1,279)
40~49세	64.6	16.4	48.2	35.4	30.8	4.6	100.0 (1,533)
50~59세	67.2	16.3	51.0	32.8	28.2	4.6	100.0 (1,590)
60~69세	67.1	16.1	51.0	32.9	27.5	5.4	100.0 (1,204)
70~79세	67.7	16.6	51.1	32.3	27.3	4.9	100.0 (675)
80세 이상	66.3	12.2	54.1	33.7	27.2	6.6	100.0 (360)
지역							
지역 1($\chi^2=330.643^{***}$)							
서울	60.3	12.7	47.6	39.7	35.7	4.0	100.0 (1,540)
인천/경기	68.1	19.9	48.2	31.9	28.4	3.5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68.5	11.7	56.8	31.5	26.7	4.8	100.0 (1,222)
대구/경북	70.1	9.0	61.1	29.9	25.8	4.1	100.0 (789)
광주/전라	67.9	28.8	39.1	32.1	25.0	7.1	100.0 (787)
대전/세종/충청	56.6	12.1	44.5	43.4	34.2	9.1	100.0 (843)
제주/강원	75.9	16.4	59.4	24.1	18.9	5.2	100.0 (342)
지역 2($\chi^2=46.535^{***}$)							
대도시	63.7	13.7	50.0	36.3	31.5	4.9	100.0 (3,523)
중소도시	67.9	17.7	50.2	32.1	27.9	4.2	100.0 (3,062)
농어촌	67.6	18.6	48.9	32.4	26.0	6.4	100.0 (1,415)
교육수준($\chi^2=10.938$)							
중졸 이하	68.0	15.3	52.7	32.0	26.1	5.8	100.0 (1,211)
고졸	65.7	15.8	49.9	34.3	29.6	4.7	100.0 (2,961)
초대졸 이상	65.6	16.6	49.0	34.4	29.7	4.7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12.763^{**}$)							
예	64.9	16.1	48.8	35.1	30.3	4.8	100.0 (5,520)
아니오	68.5	16.1	52.4	31.5	26.6	4.9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6.187^*$)							
상용직	63.4	16.0	47.4	36.6	31.8	4.8	100.0 (2,947)
임시직	69.4	13.9	55.5	30.6	25.3	5.3	100.0 (540)
일용직	64.1	15.8	48.3	35.9	27.2	8.7	100.0 (161)
자영업자	65.8	16.7	49.1	34.2	30.0	4.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69.3	22.2	47.0	30.7	25.0	5.7	100.0 (115)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주관적 사회계층 ($\chi^2=14.495^*$)							
상(7-10)	61.8	14.8	47.0	38.2	32.6	5.6	100.0 (975)
중(5-6)	65.9	15.5	50.4	34.1	29.1	5.0	100.0 (4,186)
하(1-4)	67.5	17.4	50.1	32.5	28.1	4.4	100.0 (2,840)
경제수준($\chi^2=1218.85^{***}$)							
상(상-중상)	63.7	18.8	44.9	36.3	30.2	6.1	100.0 (620)
중(중)	65.4	15.7	49.7	34.6	29.7	4.8	100.0 (4,075)
하(중하-하)	67.1	16.0	51.1	32.9	28.2	4.7	100.0 (3,304)
혼인 상태($\chi^2=9.538$)							
미혼	65.8	15.7	50.1	34.2	29.2	4.9	100.0 (1,886)
동거/사실혼	66.2	15.5	50.6	33.8	28.0	5.8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65.5	16.4	49.2	34.5	29.8	4.6	100.0 (3,932)
이혼/별거	69.9	18.4	51.5	30.1	27.4	2.7	100.0 (280)
사별	67.0	15.8	51.2	33.0	27.8	5.2	100.0 (654)
자녀 유무($\chi^2=1.022$)							
예	66.2	16.2	50.1	33.8	29.1	4.7	100.0 (5,561)
아니오	65.4	16.0	49.5	34.6	29.4	5.2	100.0 (2,439)
가구 형태($\chi^2=18.17^*$)							
1세대 가구	67.1	15.7	51.4	32.9	27.4	5.4	100.0 (3,200)
2세대 가구	65.0	16.3	48.8	35.0	30.4	4.6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70.5	19.1	51.4	29.5	26.5	3.0	100.0 (184)
기타	49.3	8.4	40.9	50.7	50.7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마지막으로 고용지원 정책의 동의 정도 역시 연령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자체별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그런 편이다’ 44.4%, ‘매우 그렇다’ 4.6%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고, 그 뒤로 대전/세종/충청, 서울 지역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표 6-55〉 참조).

〈표 6-55〉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4: 고용지원

(단위: %, 명)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¹⁾	64.5	15.0	49.4	35.5	32.4	3.2	100.0 (8,000)
성별($\chi^2=5.057$)							
남성	63.3	14.9	48.4	36.7	33.5	3.2	100.0 (3,965)
여성	65.6	15.2	50.4	34.4	31.3	3.1	100.0 (4,035)
연령($\chi^2=26.455$)							
19~29세	63.5	15.6	47.9	36.5	33.4	3.0	100.0 (1,360)
30~39세	65.5	14.0	51.5	34.5	32.1	2.4	100.0 (1,279)
40~49세	65.3	14.7	50.6	34.7	31.3	3.4	100.0 (1,533)
50~59세	63.0	15.2	47.8	37.0	32.8	4.2	100.0 (1,590)
60~69세	64.5	16.5	48.0	35.5	32.3	3.2	100.0 (1,204)
70~79세	68.0	15.8	52.2	32.0	29.7	2.3	100.0 (675)
80세 이상	60.5	11.4	49.2	39.5	36.9	2.5	100.0 (360)
지역							
지역 1($\chi^2=259.092^{***}$)							
서울	62.5	11.2	51.3	37.5	34.4	3.1	100.0 (1,540)
인천/경기	67.7	17.8	49.9	32.3	30.0	2.3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63.3	12.7	50.6	36.7	32.5	4.3	100.0 (1,222)
대구/경북	51.0	9.6	41.4	49.0	44.4	4.6	100.0 (789)
광주/전라	75.3	25.5	49.8	24.7	22.7	2.0	100.0 (787)
대전/세종/충청	59.0	12.3	46.7	41.0	38.7	2.3	100.0 (843)
제주/강원	73.5	15.8	57.7	26.5	19.2	7.2	100.0 (342)
지역 2($\chi^2=44.422^{***}$)							
대도시	62.3	13.2	49.1	37.7	34.2	3.5	100.0 (3,523)
중소도시	66.4	15.4	51.0	33.6	31.3	2.3	100.0 (3,062)
농어촌	65.6	18.8	46.8	34.4	30.2	4.2	100.0 (1,415)
교육수준($\chi^2=11.149$)							
중졸 이하	65.2	17.4	47.8	34.8	31.9	2.9	100.0 (1,211)
고졸	63.0	13.9	49.1	37.0	33.5	3.4	100.0 (2,961)
초대졸 이상	65.3	15.2	50.2	34.7	31.6	3.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8.432^*$)							
예	63.6	14.6	48.9	36.4	33.0	3.4	100.0 (5,520)
아니오	66.4	15.9	50.5	33.6	31.0	2.6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8.511$)							
상용직	63.5	14.2	49.2	36.5	33.7	2.8	100.0 (2,947)
임시직	65.5	16.4	49.2	34.5	30.5	4.0	100.0 (540)
일용직	60.7	17.8	42.9	39.3	33.8	5.5	100.0 (161)
자영업자	64.0	14.7	49.2	36.0	32.0	4.0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55.2	11.2	43.9	44.8	38.9	5.9	100.0 (115)

특성	동의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의함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주관적 사회계층 ($\chi^2=36.478^{***}$)								
상(7-10)	59.0	12.3	46.7	41.0	36.0	5.0	100.0	(975)
중(5-6)	64.7	14.2	50.5	35.3	32.2	3.0	100.0	(4,186)
하(1-4)	65.9	17.3	48.7	34.1	31.3	2.7	100.0	(2,840)
경제수준($\chi^2=21.655^{**}$)								
상(상-중상)	63.9	17.0	47.0	36.1	30.6	5.4	100.0	(620)
중(중)	63.7	13.9	49.7	36.3	33.3	3.0	100.0	(4,075)
하(중하-하)	65.5	16.0	49.5	34.5	31.5	3.0	100.0	(3,304)
혼인 상태($\chi^2=15.875$)								
미혼	64.3	16.5	47.8	35.7	32.9	2.9	100.0	(1,886)
동거/사실혼	63.9	12.4	51.5	36.1	32.6	3.6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65.0	15.0	50.0	35.0	31.9	3.1	100.0	(3,932)
이혼/별거	66.2	15.4	50.8	33.8	30.8	3.0	100.0	(280)
사별	62.1	15.9	46.2	37.9	34.3	3.6	100.0	(654)
자녀 유무($\chi^2=7.814$)								
예	64.1	14.6	49.5	35.9	32.4	3.5	100.0	(5,561)
아니오	65.3	16.0	49.3	34.7	32.2	2.5	100.0	(2,439)
가구 형태($\chi^2=14.266$)								
1세대 가구	64.9	16.6	48.3	35.1	32.2	2.9	100.0	(3,200)
2세대 가구	64.2	14.1	50.2	35.8	32.4	3.4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62.4	13.6	48.8	37.6	34.5	3.0	100.0	(184)
기타	52.0	0.0	52.0	48.0	48.0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5. 연령대별 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노인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53.7%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많다’는 응답이 33.5%, ‘전혀 없다’는 응답 11.2%, ‘매우 많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중장년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58.9%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2.2%로 추가 납세 의향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1.1%로 나타났다. 반면 추가 납세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8.9%로 나타났다. 청년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49.7%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추가 납세 의향이 ‘많다’는 응답이 25.6%, ‘전혀 없다’는 응답이 21.6%, ‘매우 많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났다. 아동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많다’는 의견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소한 차이로 ‘거의 없다’는 의견(40.1%)이 뒤를 이었고, ‘전혀 없다’는 의견이 12.3%, ‘매우 많다’는 의견이 4.4%로 나타났다(〈표 6-56〉 참조).

〈표 6-56〉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단위: %, 명)

특성	노인 정책			청년 정책			계 (명)	
	소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소계	많다	매우 많다		
노인 정책	64.9	11.2	53.7	35.0	33.5	1.5	100.0	(8,000)
중장년 정책	81.1	22.2	58.9	18.9	16.7	2.2	100.0	(8,000)
청년 정책	71.3	21.6	49.7	28.7	25.6	3.1	100.0	(8,000)
아동 정책	52.4	12.3	40.1	47.6	43.2	4.4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 정책의 경우, 40대 이상 70대 미만의 중년, 전기 노인층에서 가장 높은 추가 납세 의향을 보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강원지역 거주자의 46.0%, 대전/세종/충청지역 거주자의 41.3%가 추가 납세 의향이 ‘많다’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타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추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는 고졸, 초대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임시직 근로자인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하위인 경우, 사별 응답자의 경우, 유자녀 응답자의 경우, 그리고 1세대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 납세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6-57〉 참조).

〈표 6-57〉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1: 노인 정책

(단위: %, 명)

특성	소계	저혀 없다	거의 없다	소계	많다	매우 많다	계 (명)
전체 ¹⁾	64.9	11.2	53.7	35.1	33.5	1.5	100.0 (8,000)
성별($\chi^2=6.999$)							
남성	64.0	10.9	53.0	36.0	34.2	1.8	100.0 (3,965)
여성	65.9	11.5	54.5	34.1	32.8	1.2	100.0 (4,035)
연령($\chi^2=48.739^{***}$)							
19~29세	67.6	13.2	54.4	32.4	31.3	1.1	100.0 (1,360)
30~39세	66.0	10.4	55.7	34.0	32.4	1.6	100.0 (1,279)
40~49세	63.2	9.1	54.0	36.8	35.0	1.9	100.0 (1,533)
50~59세	61.6	10.4	51.3	38.4	36.5	1.9	100.0 (1,590)
60~69세	64.6	10.5	54.1	35.4	33.9	1.5	100.0 (1,204)
70~79세	68.6	14.1	54.6	31.4	30.6	0.8	100.0 (675)
80세 이상	67.9	16.3	51.5	32.1	30.5	1.7	100.0 (360)
지역							
지역 1($\chi^2=280.776^{***}$)							
서울	61.8	9.7	52.0	38.2	35.4	2.8	100.0 (1,540)
인천/경기	60.1	8.9	51.2	39.9	39.1	0.8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73.7	16.3	57.5	26.3	25.2	1.0	100.0 (1,222)
대구/경북	75.0	12.0	63.0	25.0	23.5	1.4	100.0 (789)
광주/전라	74.2	14.0	60.2	25.8	25.5	0.3	100.0 (787)
대전/세종/충청	58.7	8.5	50.2	41.3	39.7	1.6	100.0 (843)
제주/강원	54.0	15.3	38.8	46.0	40.1	5.9	100.0 (342)
지역 2($\chi^2=58.889^{***}$)							
대도시	65.9	9.7	56.2	34.1	32.4	1.8	100.0 (3,523)
중소도시	62.0	11.3	50.7	38.0	36.9	1.1	100.0 (3,062)
농어촌	69.1	14.8	54.3	30.9	29.0	1.9	100.0 (1,415)
교육수준($\chi^2=46.33^{***}$)							
중졸 이하	72.5	14.8	57.6	27.5	26.3	1.2	100.0 (1,211)
고졸	62.8	10.2	52.6	37.2	35.7	1.6	100.0 (2,961)
초대졸 이상	64.2	10.8	53.4	35.8	34.1	1.6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5.761$)							
예	64.2	10.9	53.3	35.8	34.1	1.7	100.0 (5,520)
아니오	66.5	11.9	54.7	33.5	32.2	1.3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4.913^*$)							
상용직	63.6	10.7	52.9	36.4	34.6	1.8	100.0 (2,947)
임시직	70.7	10.1	60.5	29.3	28.1	1.3	100.0 (540)
일용직	64.0	13.2	50.7	36.0	32.4	3.6	100.0 (161)
자영업자	63.3	10.9	52.4	36.7	35.4	1.3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64.5	16.4	48.0	35.5	32.7	2.8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48.047^{***}$)							
상(7-10)	64.3	10.1	54.2	35.7	33.3	2.4	100.0 (975)
중(5-6)	62.1	11.4	50.8	37.9	36.4	1.4	100.0 (4,186)
하(1-4)	69.3	11.3	58.0	30.7	29.3	1.4	100.0 (2,840)

특성	소계	전혀 없다		소계	많다	매우 많다	계 (명)	
		거의 없다	소계					
경제수준($\chi^2=55.432^{***}$)								
상(상-중상)	59.9	11.5	48.4	40.1	37.3	2.8	100.0	(620)
중(중)	62.1	10.9	51.3	37.9	36.3	1.6	100.0	(4,075)
하(중하-하)	69.4	11.6	57.8	30.6	29.3	1.3	100.0	(3,304)
혼인 상태($\chi^2=42.691^{***}$)								
미혼	66.8	12.5	54.3	33.2	31.7	1.4	100.0	(1,886)
동거/사실혼	61.3	9.0	52.3	38.7	36.6	2.1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64.3	10.5	53.8	35.7	34.3	1.4	100.0	(3,932)
이혼/별거	66.8	9.8	57.0	33.2	31.9	1.3	100.0	(280)
사별	69.5	16.7	52.8	30.5	28.9	1.6	100.0	(654)
자녀 유무($\chi^2=14.512^{**}$)								
예	63.6	10.8	52.9	36.4	34.8	1.6	100.0	(5,561)
아니오	67.9	12.2	55.8	32.1	30.6	1.4	100.0	(2,439)
가구 형태($\chi^2=25.782^{**}$)								
1세대 가구	67.4	12.5	54.9	32.6	31.4	1.2	100.0	(3,200)
2세대 가구	63.5	10.4	53.1	36.5	34.8	1.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59.4	8.0	51.4	40.6	38.1	2.5	100.0	(184)
기타	57.4	22.5	34.9	42.6	42.6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중장년 정책의 경우 30대 이상 60대 미만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은 추가 납세 의향을 보였다(20.0% 내외).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라, 제주/강원 지역 거주자의 약 25.0%가 '많다' 또는 '매우 많다'라고 응답하여 높은 추가 납세 의향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농어촌, 중소도시에 비해 약간 높은 납세 동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고졸 또는 초대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동거/사실혼 응답자의 경우 중장년 정책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표 6-58〉 참조).

〈표 6-58〉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2: 중장년 정책

(단위: %, 명)

특성	소계	저렴하다		소계	많다		계 (명)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전체 ¹⁾	81.1	22.2	58.9	18.9	16.7	2.2	100.0	(8,000)
성별($\chi^2=10.2^*$)								
남성	79.9	22.1	57.8	20.1	17.6	2.5	100.0	(3,965)
여성	82.3	22.3	60.0	17.7	15.9	1.8	100.0	(4,035)
연령1($\chi^2=52.129^{***}$)								
19~29세	82.3	22.3	60.1	17.7	16.0	1.7	100.0	(1,360)
30~39세	81.0	20.8	60.3	19.0	16.5	2.5	100.0	(1,279)
40~49세	79.3	19.4	59.9	20.7	18.4	2.4	100.0	(1,533)
50~59세	79.5	20.3	59.1	20.5	18.4	2.2	100.0	(1,590)
60~69세	82.1	23.7	58.4	17.9	16.0	1.9	100.0	(1,204)
70~79세	84.9	29.7	55.3	15.1	12.7	2.4	100.0	(675)
80세 이상	81.6	27.9	53.7	18.4	16.1	2.3	100.0	(360)
지역								
지역 1($\chi^2=502.496^{***}$)								
서울	84.0	20.0	64.0	16.0	14.3	1.7	100.0	(1,540)
인천/경기	87.1	23.8	63.3	12.9	12.4	0.5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74.7	25.1	49.6	25.3	21.6	3.7	100.0	(1,222)
대구/경북	77.9	20.5	57.5	22.1	19.2	2.9	100.0	(789)
광주/전라	74.8	25.2	49.6	25.2	24.1	1.1	100.0	(787)
대전/세종/충청	78.8	18.4	60.4	21.2	15.6	5.6	100.0	(843)
제주/강원	75.5	16.5	59.0	24.5	21.9	2.6	100.0	(342)
지역 2($\chi^2=26.233^{***}$)								
대도시	79.6	21.7	57.9	20.4	17.8	2.6	100.0	(3,523)
중소도시	82.8	21.6	61.2	17.2	15.8	1.4	100.0	(3,062)
농어촌	81.2	24.8	56.4	18.8	16.2	2.6	100.0	(1,415)
교육수준($\chi^2=55.789^{***}$)								
중졸 이하	83.8	30.3	53.6	16.2	14.2	2.0	100.0	(1,211)
고졸	80.1	21.2	59.0	19.9	17.5	2.3	100.0	(2,961)
초대졸 이상	81.0	20.4	60.6	19.0	16.9	2.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21.57^{***}$)								
예	80.0	21.3	58.6	20.0	17.5	2.5	100.0	(5,520)
아니오	83.6	24.1	59.5	16.4	14.9	1.4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10.576$)								
상용직	79.1	21.2	57.8	20.9	18.2	2.8	100.0	(2,947)
임시직	81.5	20.5	60.9	18.5	15.6	2.9	100.0	(540)
일용직	80.5	25.9	54.7	19.5	16.9	2.5	100.0	(161)
자영업자	81.0	21.3	59.7	19.0	17.1	1.8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80.0	21.5	58.5	20.0	16.6	3.4	100.0	(115)
주관적 사회계층 ($\chi^2=34.041^{***}$)								
상(7-10)	76.3	19.2	57.1	23.7	19.9	3.8	100.0	(975)
중(5-6)	81.1	21.6	59.5	18.9	16.7	2.2	100.0	(4,186)
하(1-4)	82.7	24.1	58.7	17.3	15.7	1.6	100.0	(2,840)

특성	소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소계	많다	매우 많다	계 (명)
경제수준($\chi^2=31.457^{***}$)							
상(상-중상)	77.8	21.8	56.0	22.2	19.8	2.4	100.0 (620)
중(중)	80.2	20.3	59.8	19.8	17.3	2.5	100.0 (4,075)
하(중하-하)	82.9	24.6	58.3	17.1	15.5	1.6	100.0 (3,304)
혼인 상태($\chi^2=59.818^{***}$)							
미혼	82.0	21.6	60.4	18.0	16.2	1.7	100.0 (1,886)
동거/사실혼	76.9	21.6	55.3	23.1	20.6	2.5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82.0	21.2	60.8	18.0	15.6	2.4	100.0 (3,932)
이혼/별거	79.6	21.7	57.9	20.4	18.6	1.8	100.0 (280)
사별	81.7	31.3	50.4	18.3	16.6	1.7	100.0 (654)
자녀 유무($\chi^2=2.128$)							
예	80.9	22.4	58.5	19.1	16.8	2.3	100.0 (5,561)
아니오	81.6	21.8	59.8	18.4	16.5	1.9	100.0 (2,439)
가구 형태($\chi^2=12.521$)							
1세대 가구	81.6	23.8	57.9	18.4	16.2	2.1	100.0 (3,200)
2세대 가구	80.6	21.2	59.4	19.4	17.1	2.2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84.4	19.5	64.9	15.6	14.9	0.7	100.0 (184)
기타	76.8	22.5	54.3	23.2	23.2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청년 정책의 경우 20~30대에서 높은 추가 납세 의향이 나타나, 20대의 40.3%가 추가 납세 의향이 '많다'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40.0%에 가까운 응답자가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 농어촌 거주자의 추가 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추가 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 타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납세 의향이 높았으며, 미혼인 경우, 무자녀인 경우, 그리고 2세대 가구 응답자 중에서 추가 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표 6-59〉 참조).

〈표 6-59〉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3: 청년 정책

(단위: %, 명)

특성	소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소계	많다	매우 많다	계 (명)	
전체 ¹⁾	71.3	21.6	49.7	28.7	25.6	3.1	100.0	(8,000)
성별($\chi^2=6.514$)								
남성	70.1	21.2	48.9	29.9	26.5	3.4	100.0	(3,965)
여성	72.5	22.1	50.4	27.5	24.7	2.8	100.0	(4,035)
연령($\chi^2=173.399^{***}$)								
19~29세	59.7	14.6	45.1	40.3	36.1	4.2	100.0	(1,360)
30~39세	70.0	18.7	51.3	30.0	27.3	2.7	100.0	(1,279)
40~49세	72.1	21.6	50.5	27.9	25.0	2.8	100.0	(1,533)
50~59세	73.5	22.1	51.4	26.5	23.0	3.5	100.0	(1,590)
60~69세	75.8	26.9	48.9	24.2	21.7	2.5	100.0	(1,204)
70~79세	77.8	27.1	50.7	22.2	19.4	2.8	100.0	(675)
80세 이상	78.8	28.4	50.4	21.2	18.5	2.7	100.0	(360)
지역								
지역 1($\chi^2=266.661^{***}$)								
서울	71.7	20.2	51.5	28.3	25.9	2.4	100.0	(1,540)
인천/경기	80.7	25.1	55.7	19.3	17.4	1.8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69.9	26.0	43.9	30.1	26.1	4.1	100.0	(1,222)
대구/경북	66.5	19.0	47.5	33.5	27.8	5.6	100.0	(789)
광주/전라	61.7	19.7	41.9	38.3	33.7	4.6	100.0	(787)
대전/세종/충청	60.2	14.6	45.7	39.8	36.7	3.0	100.0	(843)
제주/강원	66.4	15.4	51.0	33.6	30.1	3.5	100.0	(342)
지역 2($\chi^2=45.892^{***}$)								
대도시	69.6	22.5	47.1	30.4	27.3	3.1	100.0	(3,523)
중소도시	74.1	20.4	53.7	25.9	23.5	2.4	100.0	(3,062)
농어촌	69.3	21.9	47.3	30.7	26.0	4.7	100.0	(1,415)
교육수준($\chi^2=66.217^{***}$)								
중졸 이하	78.1	28.6	49.5	21.9	19.2	2.7	100.0	(1,211)
고졸	71.7	21.3	50.4	28.3	25.0	3.3	100.0	(2,961)
초대졸 이상	68.8	19.6	49.2	31.2	28.1	3.1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 ($\chi^2=17.224^{***}$)								
예	70.9	20.7	50.3	29.1	25.6	3.5	100.0	(5,520)
아니오	72.1	23.7	48.4	27.9	25.7	2.3	100.0	(2,480)
종사상 지위($\chi^2=29.61^{**}$)								
상용직	69.4	19.2	50.2	30.6	27.5	3.1	100.0	(2,947)
임시직	72.1	21.7	50.3	27.9	24.0	3.9	100.0	(540)
일용직	71.6	20.9	50.7	28.4	24.2	4.1	100.0	(161)
자영업자	73.1	23.1	50.0	26.9	23.2	3.7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70.8	17.3	53.4	29.2	20.9	8.3	100.0	(115)

특성	소계	거의 없다		소계	매우 많다		계 (명)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많다	매우 많다		
주관적 사회계층 ($\chi^2=43.611^{***}$)								
상(7-10)	64.1	18.4	45.7	35.9	31.2	4.7	100.0	(975)
중(5-6)	70.9	21.6	49.3	29.1	26.3	2.8	100.0	(4,186)
하(1-4)	74.3	22.8	51.6	25.7	22.6	3.1	100.0	(2,840)
경제수준($\chi^2=32.936^{***}$)								
상(상-중상)	64.4	20.3	44.1	35.6	31.0	4.6	100.0	(620)
중(중)	70.1	20.6	49.5	29.9	26.7	3.2	100.0	(4,075)
하(중하-하)	74.1	23.2	50.9	25.9	23.2	2.8	100.0	(3,304)
혼인 상태 ($\chi^2=119.694^{***}$)								
미혼	63.3	16.4	46.9	36.7	33.0	3.7	100.0	(1,886)
동거/사실혼	74.1	24.4	49.7	25.9	23.2	2.6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72.7	21.9	50.8	27.3	24.1	3.2	100.0	(3,932)
이혼/별거	73.5	20.1	53.4	26.5	24.2	2.3	100.0	(280)
사별	79.2	30.2	49.0	20.8	18.3	2.6	100.0	(654)
자녀 유무($\chi^2=78.428^{***}$)								
예	73.9	23.6	50.3	26.1	23.2	3.0	100.0	(5,561)
아니오	65.4	17.1	48.3	34.6	31.2	3.5	100.0	(2,439)
가구 형태($\chi^2=23.774^{**}$)								
1세대 가구	73.5	23.5	50.0	26.5	23.6	2.9	100.0	(3,200)
2세대 가구	69.5	20.2	49.3	30.5	27.1	3.3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76.7	23.9	52.8	23.3	21.9	1.4	100.0	(184)
기타	71.7	14.1	57.6	28.3	28.3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 $p < .001$, ** $p < .01$, * $p < .05$

아동 정책의 경우 30~40대에서 52.0~56.0%의 높은 추가 납세 의향을 보였다. 지자체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며, 제주/강원 58.3%, 대전/세종/충청 51.2%, 서울 50.6%의 응답자가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부산/경남/울산에서는 40.0% 미만의 응답자가 추가 납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 중위 이상의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인 경우, 법률혼(유배우)인 경우, 그리고 3세대 이상 가구에서 추가 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표 6-60〉 참조).

〈표 6-60〉 연령대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 4: 아동 정책

(단위: %, 명)

특성	소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소계	많다	매우 많다	계 (명)	
전체 ¹⁾	52.4	12.3	40.1	47.6	43.2	4.4	100.0	(8,000)
성별($\chi^2=2.948$)								
남성	51.6	12.1	39.5	48.4	43.8	4.6	100.0	(3,965)
여성	53.2	12.4	40.8	46.8	42.7	4.1	100.0	(4,035)
연령($\chi^2=122.497^{***}$)								
19~29세	52.0	12.4	39.5	48.0	43.2	4.8	100.0	(1,360)
30~39세	43.9	9.1	34.8	56.1	50.9	5.2	100.0	(1,279)
40~49세	47.9	10.0	37.9	52.1	47.0	5.1	100.0	(1,533)
50~59세	53.3	12.6	40.6	46.7	42.6	4.1	100.0	(1,590)
60~69세	58.3	13.4	44.9	41.7	38.0	3.6	100.0	(1,204)
70~79세	61.0	16.3	44.7	39.0	36.4	2.6	100.0	(675)
80세 이상	63.3	19.4	44.0	36.7	33.2	3.4	100.0	(360)
지역								
지역 1($\chi^2=364.546^{***}$)								
서울	49.4	10.2	39.1	50.6	47.5	3.1	100.0	(1,540)
인천/경기	51.8	12.0	39.8	48.2	44.6	3.7	100.0	(2,477)
부산/경남/울산	60.5	15.3	45.2	39.5	33.9	5.6	100.0	(1,222)
대구/경북	50.8	17.2	33.6	49.2	42.8	6.4	100.0	(789)
광주/전라	57.8	8.5	49.2	42.2	38.3	4.0	100.0	(787)
대전/세종/충청	48.8	11.3	37.5	51.2	47.9	3.3	100.0	(843)
제주/강원	41.7	11.9	29.8	58.3	48.8	9.5	100.0	(342)
지역 2($\chi^2=15.911^*$)								
대도시	53.6	11.9	41.7	46.4	42.3	4.1	100.0	(3,523)
중소도시	51.1	11.7	39.4	48.9	44.6	4.3	100.0	(3,062)
농어촌	52.3	14.5	37.8	47.7	42.7	5.0	100.0	(1,415)
교육수준($\chi^2=110.811^{***}$)								
중졸 이하	64.0	17.5	46.5	36.0	33.2	2.7	100.0	(1,211)
고졸	53.5	11.7	41.8	46.5	42.3	4.2	100.0	(2,961)
초대졸 이상	47.8	11.0	36.8	52.2	47.2	5.0	100.0	(3,829)
경제활동 여부($\chi^2=4.229$)								
예	51.7	12.1	39.6	48.3	43.7	4.6	100.0	(5,520)
아니오	53.9	12.6	41.3	46.1	42.3	3.9	100.0	(2,480)
종사상 지위 ($\chi^2=27.054^{**}$)								
상용직	49.0	11.1	37.9	51.0	46.3	4.7	100.0	(2,947)
임시직	55.3	13.1	42.2	44.7	39.0	5.7	100.0	(540)
일용직	59.4	13.6	45.7	40.6	37.0	3.6	100.0	(161)
자영업자	54.0	13.2	40.8	46.0	41.8	4.2	100.0	(1,758)
무급가족종사자	60.5	15.6	44.8	39.5	36.5	3.0	100.0	(115)

특성	소계	거의 없다		소계	매우 많다		계 (명)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많다	매우 많다		
주관적 사회계층 ($\chi^2=20.907^{**}$)								
상(7-10)	54.7	13.5	41.3	45.3	41.3	4.0	100.0	(975)
중(5-6)	50.1	11.8	38.3	49.9	45.6	4.4	100.0	(4,186)
하(1-4)	55.0	12.6	42.4	45.0	40.5	4.5	100.0	(2,840)
경제수준($\chi^2=31.18^{***}$)								
상(상-중상)	48.6	11.7	36.9	51.4	45.1	6.3	100.0	(620)
중(중)	50.3	11.4	38.8	49.7	45.5	4.3	100.0	(4,075)
하(중하-하)	55.7	13.4	42.3	44.3	40.2	4.1	100.0	(3,304)
혼인 상태($\chi^2=50.94^{***}$)								
미혼	52.5	12.5	40.1	47.5	43.3	4.1	100.0	(1,886)
동거/사실혼	51.8	12.2	39.6	48.2	42.4	5.8	100.0	(1,248)
법률혼(유배우)	50.5	11.2	39.4	49.5	45.3	4.2	100.0	(3,932)
이혼/별거	56.7	14.0	42.7	43.3	40.5	2.8	100.0	(280)
사별	62.4	17.5	44.9	37.6	33.5	4.1	100.0	(654)
자녀 유무($\chi^2=3.963$)								
예	51.8	12.1	39.7	48.2	43.6	4.6	100.0	(5,561)
아니오	53.7	12.6	41.0	46.3	42.5	3.8	100.0	(2,439)
가구 형태($\chi^2=49.592^{***}$)								
1세대 가구	56.4	14.2	42.2	43.6	39.5	4.1	100.0	(3,200)
2세대 가구	49.7	11.0	38.7	50.3	45.6	4.7	100.0	(4,605)
3세대 이상 가구	49.1	9.6	39.5	50.9	49.7	1.3	100.0	(184)
기타	66.5	22.5	44.0	33.5	33.5	0.0	100.0	(12)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p < .001, **p < .01, *p < .05

제4절 소결

1. 연령기준과 연령규범 및 차별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아동, 청년, 노인의 연령기준은 무엇인지, 청년 또는 노인 정책 대상자 선정 시 연령기준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아동은 12~13세까지라고 생각하는 등 아동의 연령기준은 많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의 경

우 30세까지라는 응답과 35세까지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작게는 15세, 많게는 75세까지 청년으로 여긴다는 응답이 있어 청년의 연령기준을 매우 다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통용되는 노인의 법적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이나(일부 60세 기준 적용), 본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기준 하한선은 평균 69.2세로 나타났으며, 70세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한 노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기준도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지은정, 2017; 송현주 외, 2018), 국민들이 인식하는 평균 연령기준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의 경우 자신 또는 자신과 동 세대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점점 중·고령 인구의 주관적 인식 연령(subjective age)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송현주 외, 2018). 따라서 60~70대를 위해 건강·돌봄과 같은 전통적인 노인지원 정책뿐 아니라, 고용지원 등 중장년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할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연령규범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총 7개 중 5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0.0%가 동의하는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령별 과업 수행과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적정한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 가족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비혼 및 저출산 현상과는 대비되는 인식을 나타냈다. 본 연령규범은 가족 관련 발달과업을 이미 수행하거나 관련이 없는 인구 집단(노인, 유자녀, 기혼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인구 집단 간 갈등이나 사회적 스

트레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 취업, 승진 그리고 직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하였으며, 청년(젊은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대부분의 연령규범에 대해 나이가 많을수록, 중산층보다는 상위 또는 하위 경제수준에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농어촌 지역에서 일정하게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대도시에는 다양한 경제수준의 응답자가 고루 거주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하·하 경제수준 응답자 비중이 높은 반면, 중소도시에는 중산층이 더 집약되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구 집단별 특성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노인에 관한 연령규범, 특히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다’라는 문항에는 50.0% 정도 동의하여 노인의 자기개발에는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절반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취업, 직장에서의 인정, 사회적 인정, 가족 돌봄에 대한 인정, 이혼, 및 재혼의 6가지 영역에 대해 노인과 청년이 각각 연령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과 청년차별 실태 모두 취업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취업 영역의 경우 고용진입 또는 구직의 어려움(노인차별 문항 약 88.0%)이 고용 후 능력 및 성과에 대한 인정(노인차별 문항 약 70.0%)에 대한 차별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가권익위원회(2011)에 진정된 고용차별 건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채용 또는 모집 단계에서 발생한 차별 진정 사건이 고용관계 중 또는 종료 시 차별 진정 사건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은정, 2017에서 재인용), 지은정(2017)의 연구에

서도 고용 진입-유지-종결의 과정 중 고용진입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러한 일자리 관련 차별은 연령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차별 형태 중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항에는 모두 절반 미만이 동의하여, 사회·가정·직장에서의 기여 및 인정 부문보다는 연령차별이 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에서 노인차별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청년차별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에 비해 약 11.0%포인트(가정 내 돌봄)에서 18.0%포인트(이혼) 정도 높게 나타나,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현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차별 실태 전 문항에 대해 중년·노년층에서 장년층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차별 실태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이혼 및 재혼 문항 제외). 이는 노인 또는 청년들이 본인 또는 동 연령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인지하여 내재적 낙인(internalized stigma), 스트레스 및 낮은 자존감, 타인 기피 등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와 연령차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차별 역시 연령규범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또는 농어촌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경제·사회적 인정 관련 청년차별실태에 대해서는 특히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예상 밖 결과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청년층의 취업·직장·사회통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 연령통합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 개발 시 연령 외의 다양한 인구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세대 간 갈등

연령구분, 연령차별에 대해 연령별 인식이 매우 달랐던 것과 달리,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부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직장·사회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는 경제수준, 지역을 제외한 여러 인구 특성과 상관없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세대갈등의 주요 이유로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노인층-청년층이 살아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 약 70.0%를 차지하여,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노인층에서 높았으며,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별로 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 내 세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거의 절반(약 44.0%)에 이르는 응답자가 부모-자식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젊은 층에서는 부모 세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노년층에서는 자식 세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 가족 내 세대갈등 역시 연령별로 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은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조사 응답자의 약 77.0%가 동의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를 젊은 층의 부양 부담 증가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82.1%를 차지하였으며, 노인인구(고령 근로자)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일자리 부족,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각각 약 50.0%, 56.0%가 동의하였다. 이는 앞으로 노인인구(고령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연령통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와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몇몇 세대 간 갈등 문항에 대해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노인이 가정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과 노인과 젊은 사람의 교류 기회가 감소한다는 의견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의하는 응답률이 높아져, 노인이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30대 젊은 층에서는 노인인구 증가로 선거에서 젊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응답자가 56.0%로 조사되어, 정치적으로는 젊은 층이 소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의 일자리, 직장에서의 업무, 그리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에 대한 의견에는 연령별 동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전 연령대가 이러한 세대갈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정책 각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약 90.0%의 응답자가 노인 정책, 아동 정책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아동 정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생애주기별 정책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장년 정책의 경우 약 60.0%가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생애주기별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필요 응답률을 보였지만, 각각의 정책 분야에 대해 약 60.0% 이상이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각 생애주기별 정책에 대해 다른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주관적 사회계층 또는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청년, 중장년 및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상위 사회계층·경제수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아동 정책의 경우에는 하위 사회계층·경제수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 지역별로는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정책 모두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 중에서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생애주기별 정책 시행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 정책의 경우 연령별 정책 필요성 중 가장 높은 필요도를 나타낸 반면, 약 64.0%가 노인 정책이 ‘매우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라고 답해(36.0%가 불충분하다고 응답) 충분 정도 또한 높다고 조사되었다. 중장년, 청년, 아동 정책은 약 56.0~59.0%의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불충분 의사를 나타내었다. 중장년 정책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으나, 관련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하위 사회계층·경제수준, 이혼/별거 응답자의 경우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정책과 노인 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청년 정책은 연령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7%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본인 또는 부모의 소득기준(37.4%) 및 졸업, 취직 등 생애과정(35.6%)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 정책 역시 소득기준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0%로 가장 많았고, 연령(22.0%)과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20.6%), 고용 상태(16.9%)가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정책의 경우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고, 지역,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여부, 주관적 사회계층 및 경제수준, 혼인 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도 큰 것으로 보여, 대상자 선정 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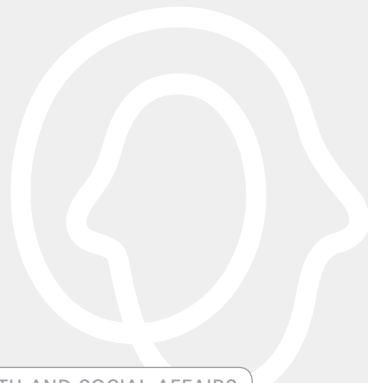
별 정책에 맞추어 연령 외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특정 세대의 지원 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현금수당, 대중교통 감면(면제), 주택지원, 고용지원의 4가지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금수당이 세대갈등을 유발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세 분야 정책이 30.0% 내외로 세대갈등 유발에 동의하는 응답률을 나타냈다. 분야별 정책의 세대갈등 유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져, 모든 정책에 대해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에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에서 더욱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또는 주택지원 정책 외 현금수당과 같은 전국 단위 정책 또한 지역별로 세대갈등 유발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였다. 또한 주관적 사회계층·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특정 세대 지원정책이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은 연령대별 정책의 필요성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추가 납세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장년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1%가 추가 납세 의향이 전혀 또는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아동 정책의 경우 ‘많다’는 의견이 ‘거의 없다’는 의견보다 근소하게 앞서, 응답자의 약 2명 중 1명은 아동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 납세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의견보다는 ‘많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별 정책은 정책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서 추가 납세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인 정책의 경우

40~60대, 중장년 정책의 경우 30~50대, 청년 정책의 경우 20~30대, 아동 정책의 경우 30~40대에서 추가 납세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40.3%가 청년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이 '많다' 또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전체 평균 28.7%),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와 지원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비슷하게 30대의 아동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 비율(56.1%)도 전체 평균(47.6%)에 비해 약 10.0%포인트 높게 나타나,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할 가능성이 있는 30대의 아동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모든 연령별 정책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주관적 사회계층·경제수준이 중위 이상인 경우 특히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고용 및 경제상황이 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납세 의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제7장

결론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제2절 조사의 함의 및 한계

제 7 장 결론

제1절 주요 조사 결과

1. 인구 변동에 대한 인식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규모의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대한 사회문제로서의 인식,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인구 변동 현상 중 저출산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인구 규모의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화, 고령화 현상의 순으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모든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해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9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모두 응답자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하며, 저출산 현상보다 고령화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 효과성에 대해 저출산 정책은 56.5%, 고령화 정책은 80.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됨으로 인해 국민들이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고령화 정책보다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 변동 현상에 관하여 국민들이 인식한 심각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저출산 현상은 두 조사에서 86.8%와 87.0%가 사회문제로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고령화 현상은 92.7%, 91.0%,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85.9%, 87.1%로 나타났다(변수정, 이소영, 이윤경, 조성호, 김세진, 2018;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주보혜, 김세진, 2019). 즉, 이번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사회문제로서 심각하다는 비율은 저출산과 인구 규모 감소에서 높아졌으며, 고령화는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표 7-1〉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단위: %)

	사회문제로 인식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식	정책 효과성
저출산 현상	94.4	85.8	56.5
고령화 현상	91.2	87.7	80.5
인구 규모 감소	94.1	-	-
수도권 인구 집중화	92.7	-	-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가족 관련 인식과 가치관

가. 가족 기능과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정서적 기능 49.1%, 사회화 기능 26.2%라고 응답했으며, 도구적 기능인 경제적 기능, 출산을 통한 재생산 기능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며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가족 기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표 7-2〉 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

(단위: %)

가족 기능	%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정서적 기능)	49.1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사회화 기능)	26.2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 (재생산 기능)	10.1
아동 및 노인 등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 (돌봄 기능)	5.7
결혼을 통해 남녀 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성적 기능)	4.7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과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기능 (경제적 기능)	4.3
계	1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가족 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육아, 의사결정권,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 책임,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에서의 가족 내 성역할과 책임에 대한 생각은 육아에 대한 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으며, 가족의 의사결정권, 가사노동, 경제적 부양 책임에서의 성평등 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중심의 가족의 법적 대리인에 대한 생각은 성평등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 내 역할과 책임에서 의사결정권, 재산권의 공동 권리, 경제적 부양 책임, 육아, 가사노동 순으로 성평등한 현실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가족 내 역할에서 성평등 인식은 높은 반면, 실제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한다. 가족의 의사결정권에서는 가치관과 현실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현실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달성되었다. 또한 재산권 동등 권리는 부부의 법적 재산권 법제화 등으로 인식뿐 아니라 실제로 달성되어 많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와 육아, 남성의 경제활동의 분리는 성평등 의식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표 7-3〉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인식과 현실에 대한 생각 차이

(단위: %)

특성	가치관	현실
육아	80.9	55.6
가족의 의사결정권	77.7	77.3
가사노동	76.4	47.7
경제적 부양 책임	75.4	59.4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74.0	-
재산권 동등권리	-	70.7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인식과 현실에 대한 판단은 성별과 세대 간에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성평등 인식의 성별 차이는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분명하며, 여성이 더 성평등 의식이 높다. 가사노동과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는 성별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각각 약 2.8%포인트, 3.0%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반면 경제적 부양 책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은 성평등 의식을 갖고 있다. 세대 간의 인식 차이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젊은 세대는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부양의 경우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영역으로 조사되며 이 밖에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4〉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인식과 현실에 대한 생각 차이(성별)

(단위: %)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성별 차이		남성	여성
육아	가치관	80.5	81.4
	현실	59.0	52.4
가족의 의사결정권	가치관	76.6	78.9
	현실	79.2	75.4
가사노동	가치관	75.0	77.8
	현실	50.3	45.2
경제적 부양 책임	가치관	75.8	75.0
	현실	59.2	59.6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가치관	72.4	75.4
	현실	-	-
재산권 동등권리	가치관	-	-
	현실	72.3	69.1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표 7-5〉 가족 내 역할에서의 성평등 인식과 현실에 대한 생각 차이(연령별)

(단위: %)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연령별 차이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육아	가치관	80.9	86.3	85.2	84.1	80.0	77.5	70.0
	현실	55.7	58.6	57.0	55.9	53.4	53.6	55.2
가족의 의사결정권	가치관	77.7	82.9	80.7	78.6	78.0	74.0	71.4
	현실	77.3	76.7	77.7	79.0	77.5	76.0	76.8
가사노동	가치관	76.4	81.3	79.8	80.1	76.1	72.1	66.4
	현실	47.7	51.0	51.1	48.8	42.9	46.9	46.7
경제적 부양 책임	가치관	75.4	79.3	79.6	78.5	73.3	66.8	62.4
	현실	59.4	61.5	59.6	60.1	57.9	57.5	60.6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	가치관	74.0	80.8	77.5	75.6	82.8	69.0	65.0
	현실	-	-	-	-	-	-	-
재산권 동등권리	가치관	-	-	-	-	-	-	-
	현실	70.7	73.1	73.8	71.5	69.6	68.7	67.9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나. 결혼과 가족 구성에 대한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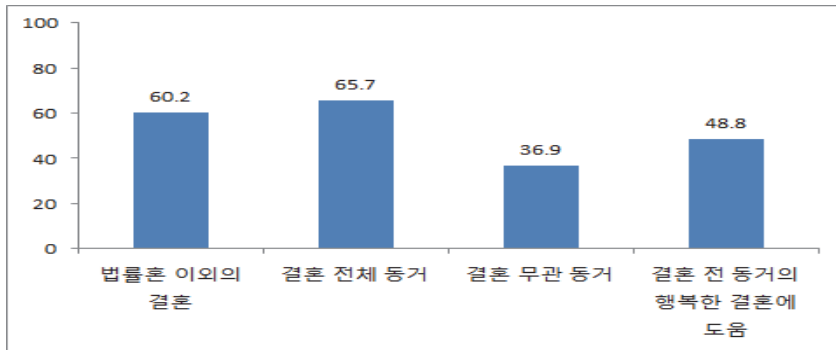
결혼, 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거주) 형태에 대한 주요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남녀 성인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혼제도만 다루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0%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나며, 또한 법적 혼인제도 바깥에 있는 ‘동거’에 대해 결혼을 전제한 동거는 65.0% 이상이 동의하지만, 결혼과 무관한 동거는 40.0% 미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결혼 전 동거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보면, 약 49.0%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을 전제한 동거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높아졌지만, 그 동거 과정이 결혼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그리고 여전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까지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1] 법적 결혼과 그 외의 다양한 가구 형태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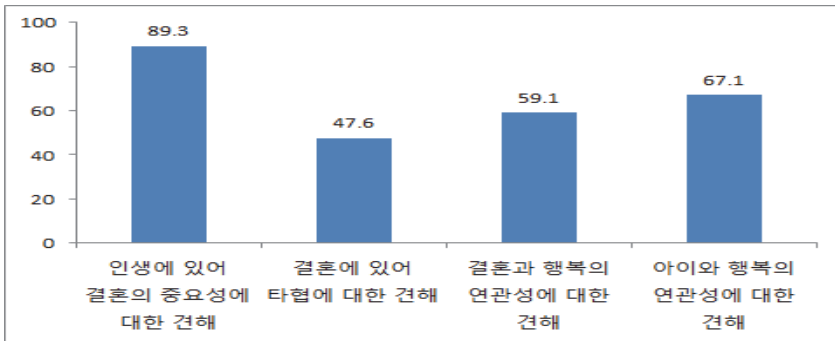
인생에서 결혼과 자녀의 가치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 이전까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결혼은 인생에 반드시 한번은 거치는 과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다. 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인생에서 결혼을 잘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약 90.0%로 나타났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6%,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60.0%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인다. 20대는 절반 이하가 이 견해에 동의해 70.0% 이상이 동의하는 70세 이상 그룹과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데 동의 비율이 더 많아 젊은 층 위주로 생각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결혼은 하는 편이 더 낫고 아이도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가 국민 전체적으로는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2] 결혼과 자녀의 인생에서의 가치와 행복과의 연관성에 대한 생각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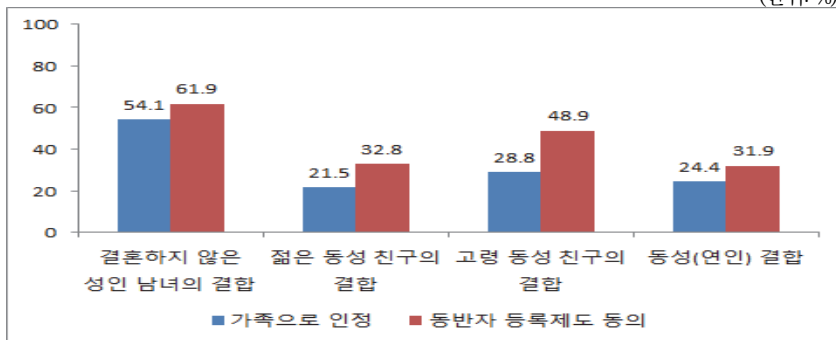
다양한 성인 남녀의 구성원 간 결합에 대한 가족 인정 범위 및 동반자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에서는 성별, 연령별 결합에 따라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달랐으며, 동반자 등록제를 통한 제도적 보호에 대한 생각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동거에 대한 수용 정도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과반이 가족

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동반자 등록제도에 대해 60.0% 이상이 찬성하였다. 젊은 동성 친구의 결합이나 고령 동성 친구의 결합은 30.0%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젊은 동성 친구에 대한 결합은 약 33.0%, 고령 친구 결합은 약 50.0%가 동반자 등록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호해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반면 동성 커플(연인) 결합에 대해서는 25.0% 미만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반자 등록제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은 30.0% 이상이 동의하여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도보다 제도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 수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3] 성별에 의한 다양한 결합 방식에 대한 가족 인정 및 동반자 등록제도 동의

(단위: %)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다. 이상적 가족과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전통적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과 가족원 내의 역할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적 가족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즉, 외벌이가족에 대한 응답도 높았으나 맞벌이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 가족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에서 여전히 가정 내 여성과 남성의 우선시하는 역할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자녀의 핵가족의 모습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표 7-6〉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가족	이상적 이다	약간 이상적 이다	매우 이상적 이다	평균
1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사는 가족	63.0	48.7	14.3	2.74
2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71.9	53.8	18.1	2.87
3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35.0	31.4	3.5	2.32
4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75.6	54.2	21.4	2.95
5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19.0	17.7	1.3	2.11
6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15.4	14.0	1.3	2.02
7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38.5	35.8	2.7	2.35
8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26.2	24.5	1.7	2.18
9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47.5	44.1	3.4	2.46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 중 우리 사회에서 가장 편견이 많은 가족은 동성 커플(연인) 가족이었고, 그 다음이 미혼모/부 가족, 한부모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동성 커플(연인) 가족은 그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미혼모/부 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분명히 기르고 있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까지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표 7-7〉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정도

(단위: %, 점)

가족		편견이 없다	전혀 편견이 없다	별로 편견이 없다	편견이 있다	약간 편견이 있다	매우 편견이 있다	평균
1	이혼이나 사별로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35.6	5.2	30.4	64.4	57.2	7.1	2.66
2	이혼이나 사별로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38.9	5.8	33.1	61.1	49.6	11.5	2.67
3	미혼인 여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 하는 가족	23.3	2.7	20.6	76.7	46.9	29.8	3.04
4	미혼인 남성 혼자 아이를 기르며 생활 하는 가족	22.5	2.6	19.9	77.5	48.9	28.6	3.04
5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기르며 생활하는 가족	44.7	5.8	38.9	55.3	48.4	6.9	2.56
6	아이가 없는 가족	60.0	11.4	48.6	40.0	35.2	4.8	2.33
7	아이를 입양한 가족	57.2	11.5	45.7	42.8	38.1	4.7	2.36
8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56.2	11.0	45.2	43.8	38.8	5.0	2.38
9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가족	55.3	10.9	44.4	44.7	39.9	4.8	2.39
10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가족	41.1	4.8	36.3	58.9	50.9	8.0	2.62
11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가족	18.8	2.2	16.6	81.2	44.0	37.2	3.16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2) 평균은 4점 평균이며 산술평균으로 계산

3. 연령과 세대 관련 인식과 가치관

가. 생애주기별 연령기준 및 연령규범에 대한 가치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정책은 역연령을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애주기별 연령기준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국민이 아동 또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상한선은 각각 평균 11.2세, 청년은 30.8세이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하한선은 평균 69.2세로 나타났다. 아동은 학령

기상 초등 학년기, 청년은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는 시기와 유사하며, 노인기 또한 최근 경제활동을 중지하는 시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나. 연령규범 및 연령차별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할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연령규범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총 7개 중 5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0.0%가 동의하는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령별 과업 수행과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적정한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 가족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비혼 및 저출산 현상과는 대비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연령규범(연령대별 기대되는 역할, 행동)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특성	소계	전혀 그렇지 않다		소계	그런 편이다		계(명)
		0.5	8.7		64.8	26.0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 연령규범	9.2	0.5	8.7	90.8	64.8	26.0	100.0 (8,000)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연령규범	13.7	0.6	13.1	86.3	54.1	32.2	100.0 (8,000)
직장 내 연령에 맞는 역할규범	14.6	0.7	13.9	85.4	62.8	22.6	100.0 (8,000)
노인의 사회적 역할규범 (지식, 기술전수)	26.0	1.4	24.6	74.1	61.0	13.1	100.0 (8,000)
노인에 대한 연령 고정관념 (새로운 직업, 기술 습득 부적합한 나이)	49.9	7.0	42.9	50.1	41.3	8.8	100.0 (8,000)
청년에 대한 연령 고정관념 (진취적, 자기개발)	11.5	0.7	10.8	88.5	56.6	31.9	100.0 (8,000)
청년에 대한 연령 고정관념 (고생도 의미있는 경험)	18.1	1.4	16.7	81.9	60.7	21.2	100.0 (8,000)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또한 직장, 취업, 승진 그리고 직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동의하였으며, 청년(젊은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대부분 동의하였다. 대부분의 연령규범에 대해 나이가 많을수록, 중산층보다는 상위 또는 하위 경제수준에서,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농어촌 지역에서 일정하게 동의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노인과 청년에 대한 연령차별 또는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취업, 직장에서의 인정, 사회적 인정, 가족 돌봄에 대한 인정, 이혼 및 재혼의 6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과 청년차별 실태 모두 취업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약 88.0%가 노인은 능력에 맞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였고, 약 79.0%가 청년 일자리 차별 실태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반면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항에는 모두 절반 미만이 동의하여, 사회·가정·직장에서의 기여 및 인정 부분보다는 연령차별이 덜 두드러졌다. 본 조사에서 노인차별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청년차별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보다 약 11.0%포인트(가정 내 돌봄)에서 18.0%포인트(이혼) 정도 높게 나타나,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현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노인과 청년(젊은 사람)의 상황별 차별과 고정관념

(단위: %)

특성	노인	청년(젊은 사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87.6	78.5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대우	71.1	54.6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인정	66.4	53.3
가족 내 돌봄 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	70.4	61.0
이혼에 대한 허용	49.9	31.6
재혼에 대한 허용	44.3	26.9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다. 세대 관계

인구 변화로 인해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고령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 일자리 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2.1%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고, 직장 내에서도 고령자 증가가 젊은 사람에게 업무 부담을 주며 전체적 성과에도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55.7%, 선거에서도 젊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율이 52.2%로 나타났다. 고령화는 세대 간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역할로 구분되어 세대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표 7-10〉 노인과 젊은 사람의 세대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특성	동의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50.3
직장에서 고령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젊은 사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직장의 전체적인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5.7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52.2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	82.1
노인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59.8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	76.5

주: 1) 전체 응답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함.

제2절 조사의 함의 및 한계

인구 변동이라는 실제 현상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그로 인한 행위의 변화는 인구 변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변동, 즉,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고령인구 및 고령화율의 증가, 향후 예견되는 인구 감소 현상은 출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며, 이는 다시 연령구분과 세대갈등 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본 연구의 주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 정책의 방향성 및 대응과 관련된 함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인구 변화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동의 수준이 높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언론과 국가의 정책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규모 감소,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화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함으로써 이들이 미칠 미래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기존처럼 경제적 측면과 사회보장 부담 증가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진단과 공론화가 필요로 할 것이다. 인구 변동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이 높다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위한 사회 개혁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기존 인구 정책이 출산 억제 또는 장려하는 것이었다면, 향후 인구 정책은 인구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지역 인구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변화 완화’ 정책은 현재의 출생아 수 급감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출산과 가족 형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자발적 선택에 대한 사

회적 제약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과업이다. 따라서 인구 대응 정책에서 국민의 출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출산과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들 조사 결과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가 핵심적 발견이라고 본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가치관과 현실의 괴리, 사회 구성원별 가치관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역할 및 책임에 대해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의식수준 만큼 가정 내 성평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가족의 구성에 대한 생각도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넘어 유연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적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통적 가족에 대한 지향점이 나타났다. 즉, 다양한 가족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희망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경향은 가족의 변화에 대해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20대는 가족의 변화에 수용 정도가 높아 세대 차이를 많이 보였다. 동반자 등록제의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응답이 나온 동성 커플에 대한 견해에서 20대는 약 43.0%, 80세 이상은 약 20.0%로 동성 커플의 제도적 보호에 대해 20대가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 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아직까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인구 정책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수용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구 변화로 인해 연령별 구성비가 변화할 것이며 고정화된 연령규범은 연령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연령규범에 대한 국민의 가치는 전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생애주기별 도달해야 할 역할의 도달시점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 노년기의 생애주기가 과거에 비해 길어졌다. 즉,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연령에 대한 전통적 인식, 가치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규범에 고정관념과 세대 간 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가 현재와 달라지는 미래 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준보다는 연령이 개개인의 선택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끼리 어울릴 수 있는 연령통합적 사회로 도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 변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인구 변동 현상과 관련된 가족 가치관, 연령 및 세대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밝히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020년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사원 교육, 조사과정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 가구 방문을 통한 가구원 면접조사는 방문을 통해 장시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의 거부 반응이 높아 초기 접촉을 통한 응답자 발굴, 이들에 대한 비대면

조사(조사표를 주고, 찾아가는 방식) 실시, 조사표 회수 및 자료 확인을 위한 재방문을 통해 접촉시간을 최소화하여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 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방식의 혼합이 이루어졌다. 추후 조사 방법의 차이에 따른 응답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여 향후 타 조사에서 조사 방법 차이에 따른 조사 설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년간의 연구기간 동안 조사 설계와 조사 진행, 조사 분석을 수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여기본적 분석에 그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가족, 연령과 세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기존 연구와의 변화뿐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조사 문항을 통해 국민의 생각에 대한 경험적 결과가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대한 예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구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국내문헌〉

- 강홍렬, 장혜경, 김혜영, 김영란, 최민영, 전미경, ... 윤성호. (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가족기능 변화와 미래 가족 전망-**.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3.
- 공선희. (2009).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족양립과 저출산**, 이슈분석.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공선희. (2013). 노인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 변화와 정책 욕구. **한국사회학**, 47(1), 277-312.
- 국가인권위원회. (2011). **201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권복순. (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5-37.
- 권소영, 강시은, 엄세원, 박지수, 이재림. (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 권중돈, 손의성. (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81-106.
-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임란, 박소현, 정희수. (2012).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4차(201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KReIS) 분석보고서**.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경신. (2002). 노년기 여성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된 변인. **한국노년학연구**, 11(1), 63-86.
- 김규원. (1995). 가족의 관계 역동성과 문제의식: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 김기현, 하형성, 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예, 송영숙. (2012).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303-311.
- 김복순. (2007).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5-51.
- 김수정, 조효진. (2016). 미취학 자녀를 둔 X세대 남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과 세계**, 40(1), 157-188.
- 김승권, 전광희, 김민자, 이연구, 김유경, 서문희, 조애저. (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옥. (2014).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6), 421-442.
- 김은정, 심준섭. (2016).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30(4), 323-347.
-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9(4), 1291-1306.
- 김은정, 강은나, 변수정, 이상정, 임정미, 장인수, 이주연. (20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원경, 윤진. (1991). 성인 노인기의 주관적 연령지각에 따른 심리적 적응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57-168.
- 김주현. (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53-75.
-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24.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 김솔이. (201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45-72.
- 김지유, 조희선. (2014). 대학생의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123-143.
-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영. (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17(1), 115-146.
- 김혜영, 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문지선. (2017). 부부의 성역할 태도로 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51(2), 191-232.
-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 박경숙, 김주현, 이상림, 최인희, 손정인. (2009). **2009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박경숙, 서이중, 장세훈. (2012). **세대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박민자. (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재홍. (2010).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권력·이념·문화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종우. (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Ageism)와 노인문제. **경북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원, 11, 51-68.

박주희. (2016).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4)**, 21-35.

배광일, 김경신. (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3(3)**, 239-266.

배혜원. (2017). 기혼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51(7)**, 86-100.

백주희. (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국제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39-251.

변수정, 이소영, 이윤경, 조성호, 김세진. (2018).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승영, 김은정. (2010). 여대생의 가족 가치관을 통해 살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성별, 세대별 하위집단 간 가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4(4)**, 169-200.

송현주, 이은영, 임란, 김호진. (2014).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5차(2013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6).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 임란, 왕승현, 이은영. (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제7차(201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심미혜, Yu Mi. Endo. (2013). 한국인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의식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365-385.

오은영, 추주희. (2020). 청년층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11(1)**, 1217-1231.

우해봉, 신화연, 박인화, 김선희. (2014).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2020).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79(3), 23-36.
- 유계숙. (2010). 유교적 근로관과 성역할 태도가 일·가족지향성과 가족친화제도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91-108.
- 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윤민재. (2017).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21, 8(5), 831-850.
- 원숙연. (2005).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修辭)와 현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188.
- 원숙연. (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141-171.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319-339.
- 원영희, 이금룡, 김옥, 최혜지, 한은주. (2006).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원영희, 최혜지, 김주현, 김성호, 김지혜. (2017).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금룡. (2006).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143-159.
- 이미숙. (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161.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상록, 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세대 간 복지태도 차이 및 세대영향의 분석. **사회과학연구**, 29(3), 433-458.
- 이상림, 강정한, 박원호, 신난희, 신인철, 최인희, ... 김술이. (2016).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수연, 최인희, 김인순. (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순미. (2013). 가족중심주의와 개인화 사이의 한국 가족: 가족주의 및 성별에 따른 세대관계 잠재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3), 1-36.
- 이연숙, 김하늬, 이정우. (2016). 남녀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유형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109-140.
- 이은희. (200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99-119.
- 이종원, 한영근, 유한구, 채창균, 오승근, 김윤나. (2016).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진숙, 최원석. (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 가족양립갈등 경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1), 169-198.
-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2018).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
- 임정빈, 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여성학 강의**. 서울: 학지사.
- 임정숙, 정세미, 정순돌. (2019). 중고령자의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9(4), 173-203.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7.).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1>에서 2020. 12. 9. 인출.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황남희, 이선희, 김주현, 정순돌. (2015).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 ...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선, 박수미. (2007). 세대간 차별의식의 사회화. **가족과 문화**, 19(2), 121-138.
- 정순돌, 기지혜, 이은진, 최혜지. (2015).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의사회연구**, 35(2), 380-404.
-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 (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 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17(2), 5-23.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진단 및 대응방안(III), 사회통합 국민인식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조사 연구(V)-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희진. (2003). [연속기획/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구조8-노인] 나이 들, 늙음 그리고 성별. **당대비평**, 338-351.
- 조성남, 윤옥경. (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 103-135.
- 조성희, 김경미. (2016). 노년기의 차별 및 배제 경험에 대한 인식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3), 359-387.
- 조숙, 정혜정, 이주연. (201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25-49.

- 지은정.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선영. (2020).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유석. (2014). 세대간 연대의식의 기반: 가족주의 연대. **한국인구학**, 37(4), 61-87.
- 최은영, 조성은, 오영삼, 장희수, 김영선. (2017). 노년기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와의 관계: 연령집단별 분석. **보건사회연구**, 37(1), 181-215.
- 통계청. (2015). **사회조사**.
- _____. (2017). **사회조사**.
- _____. (2019a). **사회조사**.
- _____. (2019b).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보도자료**. (2019.3.2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73873&ord=8에서 2020. 12. 9. 인출.
- _____. (2020).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추계인구.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4&themeId=D01에서 2020. 12. 9.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
- 한국행정연구원. (각 연도). **사회통합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공표용 보고서)**.
- 한정란. (2004).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 24, 197-210.
- 행정안전부. (2020). **7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0. 8. 19. 인출.
- 허석재. (2017). 세대와 생애주기에 따른 이념 변화: 세계가치관 조사 한국자료 분석(1990~2010). **한국정치학회보**, 51(1), 181-205.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 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 홍성희. (2020). 20-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1), 1-19.
- 홍지아. (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신여성〉과 EBS〈부모〉가 제시하는 모성의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8(1), 205-228.

〈국외문헌〉

- Butler, R. (2005). Ageism: Looking back over my shoulder. *Generations*, 29(3), 84-86.
- Bytheway, B. (2005). Ageism and age categor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61-374.
- Chang, K. S., & Song, M. Y.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 Cherry, K. E., & Palmore, E. B.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A measure of self-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10), 849-861.
- Crompton, R. (2001). Gender Restructuring, Employment and Caring.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8(3), 266-291.
- Elvin-Nowak, Y., & Thomsson, H. (2001). Motherhood as idea and practice: A discursive understanding of employed mothers in Sweden. *Gender & Society*, 15(3), 407-428.
- European Commission. (2009).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alytical Report. *Flash Eurobarometer Series*, 269.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9(1), 56-66.
- Hamamura, T.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3-24.
- Hobson, B., Lewin, J., & Slim, B. (Eds.). (2002). *Contested concepts in gender and social politics*. Edward Elgar Publishing.
- Iversen, T. N., Larsen, L., & Solem, P. E. (2009). A conceptual analysis of ageism. *Nordic Psychology*, 61(3), 4-22.
- Jones, G. W. (2007).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453-478.
- Kleinspehn-Ammerlahn, A., Kotter-Grühn, D., & Smith, J. (2008). Self-perceptions of aging: Do subjective age and satisfaction with aging change during old ag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3(6), 377-385.
- Kotter-Grühn, D., Kornadt, A. E., & Stephan, Y. (2016). Looking beyond chronological age: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in the study of subjective age. *Gerontology*, 62(1), 86-93.
-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wis, J. (2001). The decline of the male-breadwinner model: Implications for work and car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8(2), 152-169.
- O' Connor, J. S., Orloff, A. S., &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mond, M. W.,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4), 744-758.
- Palmore, E. B.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Raymo, J. M., Park, H., Xie, Y., & Yeung, W. J. J. (2015). Marriage and Family in East Asia: Continu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 471-492.
- Rosencranz, H. A., & McNevin, T. E. (1969).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1), 55-59.
- Sainsbury, D. (E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UK: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ettersten, R. A. (2003). Age structuring and the rhythm of the life course. In Mortimer J. T., & Shanahan M. J.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81-98). Handbooks of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Boston: Springer.

부록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록 1] 조사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 인구 불균형 등의 인구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을 파악하여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조사가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흥식

책임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 인구정책연구실 이윤경 연구위원 진화영 연구원(☎ 044-287-8339)	수행 기관	칸타코리아 퍼블릭본부 담당자 : 연구1본부 조인휘 과장 실사 최아름 과장(☎ 02-6276-7631)
------------------	--	------------------	--

일련번호	□□ - □□□□ - □□	행정구역 코드	□□ - □□□□ - □□	
조사일시	2020년 □□ 월 □□ 일 □□ 시 □□ 분 부터 (□□ 분 동안)		조사표본	① 원표본 ② 대체표본
주소	시·도	시·군	구	읍면동 도로명 + 건물번호 지번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① 휴대폰 번호 : - -			
	② 집 전화번호 : - -			
면접원 이름			면접원 ID	
Supervisor			[검증결과] 검증원 : _____	

4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내용	동의함
■ 본인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일반 국민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생산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참여 완료 후 답례품(1만원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 함 2020년 월 일 조사대상자 : _____	

A. 인구현상 및 대응에 대한 인식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A1.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문제가 아니다 ② 별로 문제가 아니다
③ 다소 문제이다 ④ 매우 문제이다

문A2.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 현상이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②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③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④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문A3. 귀하는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정책(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아동수당 등)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효과가 없다 ② 별로 효과가 없다
③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④ 매우 효과가 있다

문A4. 귀하는 향후 출생아 수 감소(저출산)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경제적 불안정, 주거마련 어려움 해소 등)
② 출산과 양육(교육비 포함)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③ 어린이집과 같은 육아 시설을 늘리고 좋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④ 일을 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사회적 문화를 변화시키는 정책
⑤ 법률 결혼 이외에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정책
⑥ 가정과 사회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⑦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A5.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문제가 아니다 ② 별로 문제가 아니다
③ 다소 문제이다 ④ 매우 문제이다

문A6.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귀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②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③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④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문A7. 귀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효과가 없다 ② 별로 효과가 없다
③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④ 매우 효과가 있다

4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문A8. 귀하는 향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예: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 ② 노년기 의료보장 정책(예: 건강보험에서의 노인 의료보장)
- ③ 노년기 돌봄 정책(예: 노인장기요양보험)
- ④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예: 고령자 고용지원금)
- ⑤ 노후 여가활동 지원 정책(예: 평생교육, 사회참여 등)
- ⑥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조성 정책(예: 노인주택 개조, 저상버스 등)
- ⑦ 노인과 다른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는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와 제도 마련
- ⑧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A9. 귀하는 향후 아동과 노인의 돌봄, 청년과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가족, 개인의 책임이 어떻게 분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각각에 대한 책임 분담 비율의 총합은 10이 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를 참고하여 기록해 주세요.

	항목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
예시		3	3	2	2	10
	항목	정부	기업	가족	개인	계
1	아동 돌봄					10
2	청년 소득보장					10
3	노인 돌봄					10
4	노인 소득보장					10

문A10. 귀하는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 ②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 사회보장 부담 증가
- ③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자원 감소 등 국방력 약화
- ④ 청년, 중장년, 노인세대 간 사회갈등 증가
- 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사회갈등 증가
- ⑥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
- ⑦ 인구밀도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
- ⑧ 진학(대학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 감소
- ⑨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인구 규모와 지역 간 분포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A11. 우리 사회는 2020~2030년 사이에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문제가 아니다 ② 별로 문제가 아니다
③ 다소 문제이다 ④ 매우 문제이다

문A12. 우리 사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문제가 아니다 ② 별로 문제가 아니다
③ 다소 문제이다 ④ 매우 문제이다

문A13.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 또는 군)의 인구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편이다 ② 많은 편이다
③ 적은 편이다(부족하다) ④ 매우 적은 편이다(매우 부족하다)

문A1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해 살기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하다 → (문A14-1로 이동) ② 부적절한 편이다 → (문A14-1로 이동)
③ 적절한 편이다 ④ 매우 적절하다

문A14-1. (문A14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려 정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②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③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어린이집, 교육환경 등)
④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주택, 교통 등)
⑤ 일자리가 부족해서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A15.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하다 → (문A15-1로 이동) ② 부적절한 편이다 → (문A15-1로 이동)
③ 적절한 편이다 ④ 매우 적절하다

문A15-1. (문A15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노년 세대가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②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서
③ 노인 돌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노인요양원, 노인주간보호 등)
④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부족해서(주택, 교통 등)
⑤ 일자리가 부족해서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B. 연령규범 및 세대 가치관

지금부터 연령 집단의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B1. 아동, 청년, 노인의 연령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서 귀하가 세대 구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B1-1. 아들은 몇 세 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세 까지

문B1-2. 청년은 몇 세 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세 까지

문B1-3. 노인은 몇 세 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세 부터

문B2. 귀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기준(부모 또는 본인) ② 연령
③ 생애과정(출업, 진학, 취직 등) ④ 가족 구성 형태(1인 가구, 부모동거 등)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B3. 귀하는 노인에 대한 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기준 ② 연령
- ③ 가능 상태(신체적, 인지적) ④ 고용 상태(퇴직 또는 재취업 여부 등)
- ⑤ 가족 구성 형태(1인 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 등)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지금부터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연령구분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입니다.
연령차별은 특정 연령층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거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B4. 귀하는 아래 제시된 연령대별 기대되는 역할, 행동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4-1.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결혼, 자녀 출산 등(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문B4-2.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연령에 진학, 취업, 승진 등 진로·생애경력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문B4-3. 직장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	②	③	④
문B4-4. 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기술이나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문B4-5. 노인은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이다	①	②	③	④
문B4-6. 청년은 더 진취적으로 자기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B4-7. 젊은 때는 다소 고생스러운 생활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B5. 아래 항목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령차별 실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아래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노인, 젊은 사람 각각을 대상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B5-1. 귀하는 **노인**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5-1-1. 노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B5-1-2. 노인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B5-1-3. 노인은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문B5-1-4. 노인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손자녀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 받는다	①	②	③	④
문B5-1-5. 노인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문B5-1-6. 노인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B5-2. 귀하는 **젊은 사람**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5-2-1. 젊은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B5-2-2. 젊은 사람은 성과에 비해 직장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B5-2-3. 젊은 사람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문B5-2-4. 젊은 사람이 가족 내에서 하는 돌봄 활동(자녀 양육, 부모 돌봄, 간병 등)은 낮게 평가 받는다	①	②	③	④
문B5-2-5. 젊은 사람은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사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문B5-2-6.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지금부터 세대 간의 입장, 의견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B6. 귀하는 우리 사회의 직장과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 (문B6-1로 이동) ④ 매우 그렇다 → (문B6-1로 이동)

문B6-1. (문B6의 ③, ④ 응답자만) 귀하는 우리 사회의 직장과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②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③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
④ 노인층과 청년층이 살아 온 경험이 매우 다르기 때문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B7.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 (문B7-1로 이동)

④ 매우 그렇다 → (문B7-1로 이동)

문B7-1. (문B7의 ③, ④ 응답자만)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자식 세대에게 강요하기 때문

②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③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

④ 부모와 자식 세대 모두 저마다의 고충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B8. 다음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8-1. 노인은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④	⑤
문B8-2. 노인과 젊은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④	⑤
문B8-3. 노인들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①	②	④	⑤
문B8-4. 직장에서 고령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젊은 사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직장의 전체적인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④	⑤
문B8-5.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①	②	④	⑤
문B8-6.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	①	②	④	⑤

지금부터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B9. 귀하는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각각에 대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문B9-1. 노인	①	②	③	④
문B9-2. 중장년	①	②	③	④
문B9-3. 청년	①	②	③	④
문B9-4. 아동	①	②	③	④

문B10. 귀하는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각각에 대해 현재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문B10-1. 노인	①	②	③	④
문B10-2. 중장년	①	②	③	④
문B10-3. 청년	①	②	③	④
문B10-4. 아동	①	②	③	④

문B11. 다음은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제도나 사업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제도들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B11-1. 현금수당(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①	②	③	④
문B11-2. 대중교통 요금 감면 또는 면제(아동, 청소년, 노인)	①	②	③	④
문B11-3. 주택지원(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	①	②	③	④
문B11-4. 고용지원(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중장년 고용장려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①	②	③	④

문B12.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귀하가 세금을 더 낼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항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많다	매우 많다
문B12-1. 노인 정책	①	②	③	④
문B12-2. 중장년 정책	①	②	③	④
문B12-3. 청년 정책	①	②	③	④
문B12-4. 아동 정책	①	②	③	④

C. 결혼 및 가족 가치관

지금부터 가족의 기능과 관련된 생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C1. 귀하는 다음 가족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족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② 결혼을 통해 남녀 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③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유지하는 기능
④ 자녀 양육과 교육을 통해 자녀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⑤ 아동 및 노인 등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기능
⑥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과 자산을 함께 공유하는 기능
⑦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C2. 귀하는 다음의 성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문C2-1.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C2-2.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C2-3. '경제적 부양책임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C2-4. '가족의 법적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C2-5.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①	②	③	④

4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문C3. 귀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 내 성평등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문C3-1. 남녀가 육아를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C3-2.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C3-3. 남녀가 경제적 부양책임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C3-4. 남녀가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C3-5.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C4. 귀하는 다음의 자녀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문C4-1.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까지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4-2. 부모는 미혼 자녀가 독립을 원할 경우 주거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4-3. 부모는 미혼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4-4.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4-5.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4-6.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후에 손자녀 돌봄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5. 귀하는 다음의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문C5-1.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5-2.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5-3. 자식은 노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5-4. 자식은 노부모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C5-5. 자식은 노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지금부터 결혼과 가족 형성 및 구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C6. 귀하는 결혼제도와 동거에 관련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문C6-1.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	①	②	③	④
문C6-2. 결혼을 전제로 성인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살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문C6-3. 결혼과 무관하게 성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문C6-4.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①	②	③	④

문C7. 귀하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문C7-1. 인생에서 결혼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문C7-2. 기대에 못 미치는 상대라도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낫다	①	②	③	④
문C7-3. 대체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문C7-4. 대체로 아이가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문C8.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입양하여 기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여성, 남성 관계없이 절대 안 된다
- ② 여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 ③ 남성은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 ④ 여성, 남성 모두 배우자 없이 아이를 입양해도 된다

문C9.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와 결혼한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지원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 ②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 ③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더 지원해야 한다

문C10. 귀하는 다음의 경우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C10-1.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0-2. 젊은 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0-3. 고령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0-4.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1. 다음은 '동반자 등록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반자 등록제' 형식의 제도를 마련해 다음과 같은 가구와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반자 등록제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으로만 이성 둘이 가족이 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동반자 등록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둘이 함께 가족처럼 사는 경우 상대방을 동반자로 등록하여 응급 시 보호자가 되어주거나 서로 돌봄, 보호 또는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 등 가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문C11-1.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1-2. 젊은 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1-3. 고령층 동성 친구 둘이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1-4. 동성 커플(연인)이 함께 사는 경우	①	②	③	④

문C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가족이 한국 사회의 이상적인 가족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음 가족이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	별로 이상적이지 않다	약간 이상적이다	매우 이상적이다
문C12-1.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사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2.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3.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4.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5. 엄마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6.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르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7. 남성은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8. 여성은 일을 하고 남성은 가사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①	②	③	④
문C12-9.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가족	①	②	③	④

4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문6. 귀하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문7.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동거/사실혼 ③ 법률혼(유배우) ④ 이혼/별거 ⑤ 사별

문8.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 (문8-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9로 이동)

문8-1. (문8의 ① 응답자만) 자녀가 있다면 몇 명입니까? □□명

문8-2. (문8의 ① 응답자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9. 귀하의 가구 총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명

문9-1. 귀하는 어떤 가구형태로 살고 계신가요?
 ① 1세대 가구(1인 가구 포함) ② 2세대 가구
 ③ 3세대 이상 가구 ④ 비친족 가구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사후 검증용 전화조사표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사후검증용 전화조사표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칸타코리아 조사원 ○○○입니다. 저희 칸타코리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저출산고령화, 지역 인구 불균형 등의 인구변동 현상을 둘러싼 국민의 인식과 관련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데이터 검증 차원에서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SQ. 본인 확인 및 통화 가능여부 확인 [응답자 성명 보여주기] ① 전화 통화 가능 (☞ 문1로) ② 검증거절/통화불가 (☞ 설문 종료) ③ 본인아님/다른사람 (☞ 설문 종료) 문1. ○○님께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조사’라는 설문 조사를 하셨습니까? ① 예 (☞ 문2로) ② 아니오 (☞ 설문 종료) 문2. 성별 (묻지 않고 전화 목소리로 확인) ① 맞다 ② 다르다 문3. 00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응답 내용 확인 : ○○○○년) ① 맞다 ② 다르다 문4. 귀하는 어떤 가구 형태로 살고 계신가요? ① 1세대 가구(1인 가구 포함) ② 2세대 가구 ③ 3세대 이상 가구 ④ 비친족 가구 ⑤ 기타() 문5. 저희 조사원을 만나서 설문 조사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나요? (분) 문6. 설문조사 면접원의 복장이나 태도(또는 조사원의 말투나 태도) 등 조사 진행자의 성실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불만족 ② 보통 ③ 만족 마지막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록 3]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연번	이름	소속기관
1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남석인	연세대학교
3	송유진	동아대학교
4	양난주	대구대학교
5	엄기욱	군산대학교
6	염지혜	중원대학교
7	윤홍식	인하대학교
8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9	이금룡	상명대학교
10	이민홍	동의대학교
11	이진숙	대구대학교
12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13	최유석	한림대학교
14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16	한정란	한서대학교
17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 회원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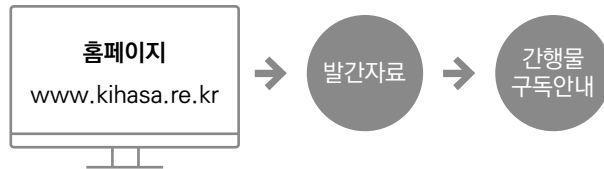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